

연구총서 01-32

•

김정일 연구:
리더쉽과 사상(I)

통 일 연 구 원

- 목 차 -

제 1 부 리더쉽

I. 통치스타일과 정치체계의 운용	1
1. 서 론	1
2. 통치스타일의 이념형	2
3. 김정일의 통치스타일	6
4. 정치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	18
5. 결 론	24
II. 집권과정	26
1. 서 론	26
2. 집권 과정	27
3. 김정일 집권과정의 특징	41
4. 결 론	48
III. 리더쉽	50
1. 서 론	50
2. 연구 방법 및 이론	51
3. 김정일 리더쉽의 정당성 문제	55
4. 김정일 리더쉽의 실체	60
5. 결 론	74

제 2 부 사 상

IV. 사회주의론	79
1. 서론	79
2. 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완전승리’ 접근론	80
3. 90년대 초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인식	84
4.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사회주의 옹호 고수를 위한 대책	89
5.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97
6. 결 론	99
V. 인간관	101
1. 서 론	101
2. 사람위주의 철학사상	104
3. 김정일의 인간관	107
4. 결 론	126
VI. 민족관	128
1. 서 론	128
2. 민족·민족주의에 관한 서구의 역사성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관	130
3. 김정일 민족관의 내용	134
4. 김정일 민족관의 특징	147
5. 결 론	152
VII. 대외관	154
1. 서 론	154
2. 대외 인식의 제약 구조	155
3. 1960년대	159
4. 1970년대	163

5. 1980년대	168
6. 1990년대	173
VIII. 세계질서관	181
1. 서 론	181
2. 제국주의론에 입각한 세계질서 인식	183
3. 세계질서의 기본단위로서의 민족국가와 국제적 연대	189
4. 탈냉전과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	193
5. 결 론	204
IX. 대남관	207
1. 서 론	207
2. 김정일 대남관	209
3. 결 론	233
X. 경제발전관	236
1. 서 론	236
2. 경제발전 ‘속도’와 ‘균형’의 문제	237
3. ‘선행경제부문’ 발전론과 불균형 성장 노선	243
4. 계획경제체계에 의한 경제관리	247
5. 자급적 경제발전 노선	251
6.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할	253
7. 결론: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모색	257
XI. 대외무역관	261
1. 서 론	261
2.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의 시대별 변화	262
3. 주요 이슈별 인식의 변화상 종합	276

XII. 노동관	281
1. 서 론	281
2. 사회주의 사회와 노동	283
3. 『주체의 노동관』의 본질과 특성	288
4. 『주체의 노동관』의 쟁점:정신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 대체	298
5. 결론을 대신하여: ‘주체의 노동관’과 그 한계	306
XIII 세대·가족관	309
1. 서 론	309
2. 북한 가족의 특성	311
3. 김정일의 가족관 및 세대관	323
4. 결 론	338
XIV. 과학기술관	340
1. 서 론	340
2.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사	342
3. 김정일 과학기술관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352
4.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	356
5. 기술발전이 지체된 원인에 대한 인식	358
6. 기술혁신의 방식에 대한 인식: 대중동원 방식 선호	361
7.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361
8. 결 론	366
XV. 역사관	369
1. 서 론	369
2. 주체사상과 역사관	370
3. 김정일의 역사관: 주체사관	377

4. 김정일의 역사관과 체제정당화	383
5.결 론	388
XVI. 언론관	390
1. 서 론	390
2. 언론의 기능	393
3. 언론매체별 역할	399
4. 결 론	413
XVII. 환경관	415
1. 서 론	415
2. 김정일의 환경문제 기본인식	418
3. 김정일의 환경정책	425
4. 김정일 환경관의 특성	433
5.결 론	441
XVIII. 문학예술론	443
1. 서 론	443
2. 주체의 문예관	445
3. 주체의 문예이론	448
4. 문학예술 창작의 기본과제	455
5. 문학예술 창작의 기본원칙	461
6. 결 론	469

제 1 부 리더쉽

I. 통치스타일과 정치체계의 운용

김 성 철(선임연구위원)

1. 서 론

일반적으로 정치지도자는 체계의 제도 및 환경의 제약 속에서 행동하는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비민주적 체계에서는 전자가 후자의 제약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거나 후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훨씬 크다. 즉, 비민주적 정치지도자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주체들 사이의 전반적 권위관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이념을 창출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이 비민주적 체계를 연구할 때 정치지도자의 통치스타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통치는 북한사회 내부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초반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어 당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임명되어 군부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집권은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력은 이 과정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며 2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일면을 보여주었다.

김일성이 없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통치는 북한사회와 남북한 관계에 더 직접적이고 심대할 것이라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김정일은 북한의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서 그의 의지, 판단, 행동은 모두 북한의 현재와 장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그의 통치스타일은

2 김정일 연구: 리더십과 사상(I)

남북한 관계의 현실에 중대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생전시의 김정일이 아닌 현 북한 최고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통치스타일과 이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올바른 북한 이해는 물론이고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일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그의 병리적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거시적 측면과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즉, 개인과 정치체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논리 비약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일 개인의 중요성만큼이나 그와 정치체제 전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정치체제의 운용과 연결시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통치스타일의 이념형

정치지도자의 통치스타일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정치지도자의 통치스타일을 논할 때, 조지 부처(Alexander L. George & Juliette L. George)가 미국 정치지도자들의 이른바 경영스타일(management style)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모델을 빠뜨릴 수 없다. 조지 부처에 의하면, 성년기에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정치 행태에 대한 설명을 위해 통치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¹⁾ 즉,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통치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지도자의 동기와 일반대중의 정당화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1) Alexander L. George and Juliette L. George, *Presidential Personality and Performance*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8), p.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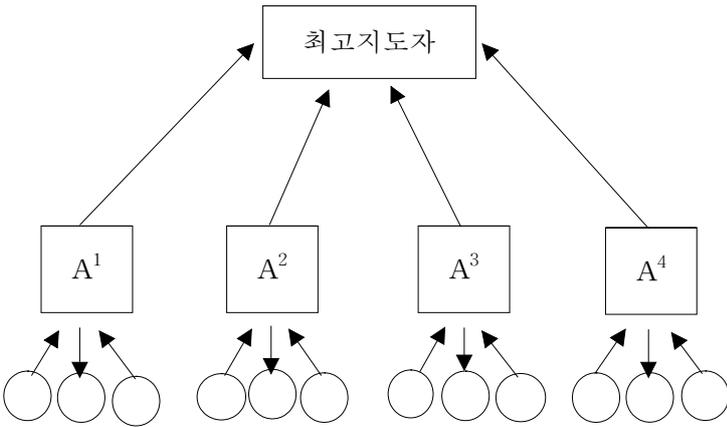
조지 부처의 논의는 주로 관료 및 참모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주의 모델(formalistic model), 경쟁적 모델(competitive model), 집체적 모델(collegial model) 등이 있다.

첫째, 형식주의 모델은 정책결정의 절차가 명확하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위계서열이 엄격하다는 의미에서 가장 질서 지위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는 참모와 관료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삼으면서 보고를 받음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판단을 들을 수 있지만, 이들 사이의 공개된 토론이나 협의가 불충분할 수 있다. 즉, 최고지도자는 위계서열에 따른 채널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지만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몫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에게 최종 정책결정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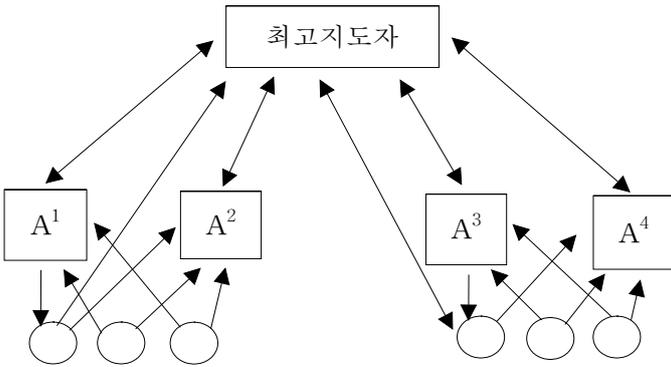
둘째, 경쟁적 모델은 참모와 관료들이 자유롭게 의견과 판단을 개진하도록 자극하는데 비중을 둔다. 이를 위해 경쟁적 모델은 공식 조직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최고지도자에 이르는 채널을 다양화시켜 놓는다. 여기서 최고지도자는 공식 조직을 뛰어넘어 일정한 과제를 중복적으로 내려주는 반면, 참모 및 관료들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문제에 대한 파악과 해결책을 최고지도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최고지도자는 이것들을 선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결정 업무가 과부하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그림 1> 통치스타일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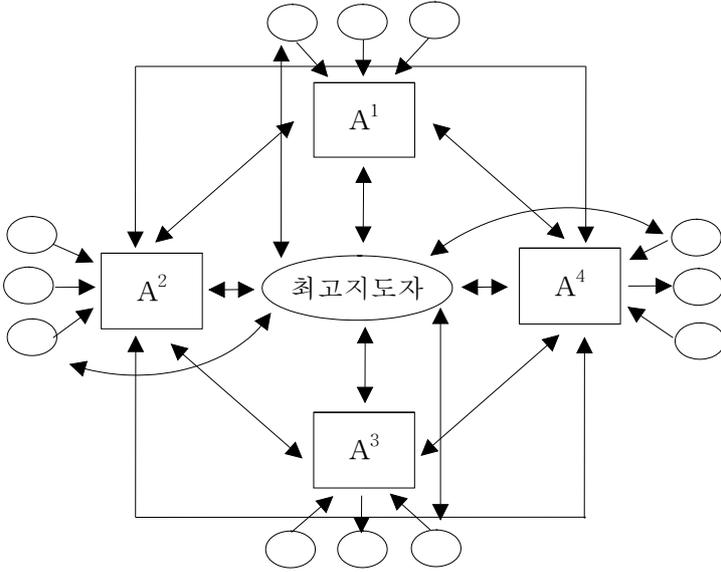
[1] 형식주의적 모델



[2] 경쟁적 모델



[3] 집체적 모델



셋째, 집체적 모델은 위의 두 가지 모델의 장점을 취하는 동시에 취약점을 극복하려고 한다. 최고지도자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참모와 관료들 간의 다양한 견해를 가능한 한 조정하고 종합하여 문제 해결에 최대한 근접하게 하는 팀을 구성한다. 각 참모와 관료는 개인으로서 최고지도자에게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창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참모와 관료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일반론자로서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집체적 모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쟁과 다양성이라는 이점을 살리면서도, 참모와 관료들이 최고 지도자의 관점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편협한 결정을 회

피하도록 만든다.

주목할 것은 이상 세 가지 모델들은 통치스타일에 관한 이념형이며, 실제 정치지도자의 통치스타일은 정확히 한가지 모델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현실에 존재하는 정치지도자의 통치스타일은 이같은 이념형의 변형이거나 혼합형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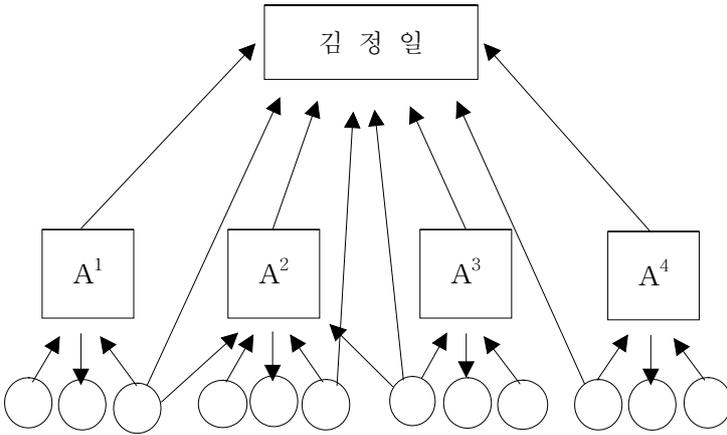
3. 김정일의 통치스타일

1. 형식주의 모델과 경쟁적 모델의 혼용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형식주의 모델과 경쟁적 모델의 혼용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형식주의 모델의 특징을 보여 준다. 김정일은 노동당, 인민군, 내각, 공안기구 등을 별도로 장악하고 정보를 취합하면서도 이들 사이에는 정보의 흐름이나 핵심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삼가게 한다. 그의 지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내려지며 그 자신에 의해 직접 점검된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조정이 있으며 협의도 있다. 그러나 지침에 따른 일상적 업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특별한 임무를 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일면 경쟁적 모델의 특성도 보여준다. 그는 각 기구의 최고 직책의 소유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그는 차계선 또는 차차계선의 직책을 가진 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임무도 주고 보고도 받는다. 따라서 공식적인 직책상의 서열이 실질적인 서열과 다르기도 하며 심지어는 뒤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민무력상인 김일철은 실질적 서열에 있어서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나 총참모장인 김영춘보다 결코 높지 않다.²⁾ 김정일은 오히려 조명록과 김영춘에게 나름의 임무

를 주고 관리한다. 김정일은 이렇게 위계와 경쟁을 혼용한 통치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김정일의 통치스타일 모델



김정일의 혼용적 통치스타일은 상당부분 그의 성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확일적이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 여기는 동시에 매사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처리하는 바, 공개된 토론이나 의견교환보다는 조직과 기구를 활용하여 엘리트층과 사회저변을 통제하며 당, 정, 군의 각 보고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같은 성향은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의 종합과 판단이 모두 최고지도자인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형식주의 통치스타일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김정일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여 국정

2) 국가정보원이 1999년 10월 1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북한 권력서열에서 조명록은 3위, 김영춘은 11위, 김일철은 12위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1999.10.16.

8 김정일 연구: 리더쉽과 사상(I)

에 관여하는 동시에 완전한 권력독점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김정일은 노동당과 군대의 각 위계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식주의 통치스타일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김정일의 또 다른 성향은 일정 정도 경쟁적 통치스타일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성에 결핍에서 비롯된 신뢰감 구축 장애는 의혹, 불신감, 경쟁심, 질투심 등을 낳고 권력독점에 대한 불안감 또는 초조감은 경쟁을 위주로 한 통치스타일을 택하게 만든다. 또한 호기심이 많아 매우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애정과 증오가 교차하는 성향 때문에 경쟁과 견제를 기초로 하는 통치스타일을 선호한다. 김정일은 실제로 각 기구의 최고직책의 보유자 이외에도 자신의 심복으로 그 하위직책의 간부를 직접 관리하거나 공식 기구의 경계를 뛰어넘어 일정한 임무를 중복적으로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이 경쟁적 통치스타일의 요소를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김정일의 “적극적” 성격이 경쟁적 통치스타일을 일부 취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겠다. 김정일은 끊임없이 권력을 지향하는 동시에 자의적 권위 행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바, 엘리트들로 하여금 언제나 충성경쟁을 유도한다. 이것이 김정일이 통치스타일로서 경쟁적 요소를 취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또 주목할 것은 김정일의 정당화 기반도 미약하나마 통치스타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전이를 통해 정당성을 모색하였는 바, 그는 주변의 핵심 엘리트들이나 당, 정, 군의 각종 기구를 통해 국정을 다루는 형식주의적 모델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상화된 카리스마는 주로 제도적 직책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일반대중 및 엘리트층과의 내적 일체감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권력 유지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따라서 언제나 엘리트들 사이에서 견제와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은 주로 형식주의적 모델에 경쟁적 모델이 가미된 통치스타일을 구사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쟁적 모델의 요소로서, 여기저기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은 최근 심각한 경제침체와 식량난으로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범죄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권력기구 내에서도 현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자, 국가안전보위부가 사회전반의 공안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내 보위사령부로 하여금 군대내는 물론 국가안전보위부의 대상영역에도 관여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교관들의 망명이 점증하자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도 보위사령부에서 나간다고 한다.³⁾ 또한 인민무력상 김일철이 공식적으로 인민군의 고위 직책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정치국장 조명록과 총참모장 김영춘이 서열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3자간에 견제와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즉,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모델의 요소는 기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엘리트들 사이에서 고유의 영역과 직책을 넘어서는 견제와 경쟁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유의할 것은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서는 집체적 모델의 요소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집체적 모델은 최고지도자의 권위의 정당성이 공정한 선거에 의해 근거한 민주적 정치체계에서 주로 나타나며, 권력이 분산되어 정책결정이 정치국과 같은 기구에서 집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지도체제의 사회주의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이다. 다시 말해,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체계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카리스마의 예외적 자질이 매우 높고 혁명적인 언행으로 일반대중의 내적 자아와 일체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지도자

3) “국가정보원장 퇴임후 최초 인터뷰,” 『월간조선』, 1999년 9월호, p. 111.

는 약간의 집체적 모델의 요소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처럼 카리스마가 제도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집체적 모델의 요소가 곧 권력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쉽사리 택할 수 없는 대안일 것이다.

2. 통치스타일의 특징

가. 당·군의 분할통치

형식주의 및 경쟁적 통치스타일의 혼용과 관련해서 김정일은 통치의 전형적인 전술인 분할통치(divide and rule)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먼저 김정일이 집권을 연장하고 직책에 따른 권위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 분할통치하는 행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김정일의 분할통치 행태는 스탈린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스탈린은 권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과정에서는 공산당에 최고의 권한을 주면서 활용하지만, 일단 자신의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권력의 누수와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 공산당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를 통해서도 권위를 행사하였다. 김정일도 1990년대 들어서, 특히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에 스탈린의 행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일은 승계구도를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또는 김일성의 후광 밑에서 노동당의 조직지도부를 활용하여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우선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중앙당으로부터 지방당으로 내려가는 모든 지시와 문서가 김정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당 조직을 위에서 아래까지 철저히 장악하였다.⁴⁾ 여

4)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III』(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60~1.

기서 중앙당의 조직지도부는 사전 승인의 절차를 전담하였으며, 각급 간부의 직무를 규범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한 「당 사업 지도서」를 통해 간부들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철저히 차단하였다.⁵⁾

그러나 김정일은 김일성이 매우 연로해진 이후에는 노동당을 통해서서는 물론이고 인민군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통해 권력을 강화해나갔다. 그는 1991년 12월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취임하였고, 1992년 4월 공화국 원수에 임명되었으며,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김정일은 당 조직을 통하지 않고서도 군 직책을 통해 인민군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써 군사적 리더쉽과 관련한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더욱이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노동당의 공식기구의 역할을 무시한데다 일부 간부들을 숙청하고 사적인 채널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서는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보호를 위해 군 직책을 더욱 강화하였는 바, 국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장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제고시킨 데서 드러난다. 김일성이 주석직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현행 헌법하의 국방위원장의 위상은 훨씬 높아졌다. 이는 사회주의 대변혁과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비상체제하의 권위구조의 재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스탈린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국가방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이를 중심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다룬 것과 매우 흡사하다.

김정일의 군 직책 강화와 권력 확장에 비례해서 노동당의 중요한 집단적 정책결정 기구인 정치국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의 전반적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

5)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53~4.

도 그렇다. 김정일은 정치국을 비롯한 중앙당 기구의 활성화가 권력의 분산 또는 누수를 가져와 자신의 유일적 지배를 저해하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자신의 권력 보호 차원에서 노동당 고위간부들이 중앙기구를 운용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앙당 차원에서 비서국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국이 사실상 기능 마비된 상태에서 비서국은 노동당을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 것이다.⁶⁾ 현재 비서국은 노동당 전반, 인민군, 사회조직을 관장하는 수많은 부서가 있으며, 이것들을 비서들이 기능에 따라 몇 개씩 묶어 관리하고 있다. 이는 모든 조직을 직접 관리하려는 김정일의 의도에도 맞는 구도이다.

물론 김정일이 노동당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당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 즉 정책적 지도 기능과 사회통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정책적 지도 기능은 현저하게 추락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통제 기능은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의 하위조직은 어떤 다른 정보 및 안전 기구보다도 광범위하게 사회기층 단위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사회통제를 위해서 노동당조직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⁷⁾ 다시 말해,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노동당의 통제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인민군의 전반적 역할 강화를 실질적으로 군대의 권력강화란 차원보다는 분할과 견제를 통한 권력기구 운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현지지도에서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

6) 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조직과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9년 12월 2~4일, p. 9.

7) 노동당의 통제 기능은 주로 당생활총화, 지도·검열, 입당 및 인사권 등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 1권 1호 (1997), pp. 17~37.

철해, 박재경 등 군부의 고위인사들을 대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노동당내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집단적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이들이 집단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중앙당의 운영에 군부가 깊숙이 개입할 우려가 있으며, 중앙당은 결국 군부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렇게 당과 군에 대한 분할통치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나. 조직의 직접 장악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서 나타나는 분할통치와 직접통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는 분할통치를 통해 국정운영에 있어서 경쟁적 요소를 살리면서 동시에 직접통치를 통해 각 조직을 개별적으로 장악한다. 양자는 정권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결코 서로 모순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조직에 대한 그의 직접 장악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간 권력승계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김정일의 개인적 권력욕 또는 조직 장악에 대한 욕구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밀하게 말해, 그가 조직 장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김정일은 정권에 대한 집요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모성에 결핍에서 비롯된 타인에 대한 신뢰성 구축의 장애는 그로 하여금 순종적이거나 규율에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보다는 자기 보호의 욕구를 부추겼다. 또한 김성애와의 관계 속에서 이같은 성향은 더욱 강화되었음에 틀림없다. 결국 김정일은 가능한 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활용하여 권력조직을 장악하고 이로써 정권에 대한 집착을 현실화

시켜 나갔던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 조직장악에 대한 관심은 김일성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김일성의 후광을 업고 공적인 자원과 인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그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조직을 직접 장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혜택을 김정일은 자신의 조직장악에도 활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김정일은 김일성대학 재학시절에 대학 당위원회 소속이면서도 노동당 중앙의 주요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당 정치위원회 회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해 정치위원회, 내각회의, 최고인민회의, 군 계통의 군사간부회의 등 중요한 회의에 대개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이처럼 김정일이 학창시절에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아들이 아니어서는 불가능한 일로서 그의 조직 장악력을 높여 주었다.

셋째, 직책에 따른 카리스마 또는 직책 자체가 그로 하여금 조직 장악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주었다. 일상화된 카리스마는 초인적인 능력보다는 제도를 통해 얻어진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의 위상이 보장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31세인 1973년에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중앙당 업무 특히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책에 따른 카리스마는 정권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못하며, 이에 정치지도자는 보다 높은 직책과 확고한 지위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자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김정일은 바로 이런 점에서 최고위의 직책을 원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장악은 그의 정권욕과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8) 중앙일보사, 「김정일」, p. 67.

주목할 것은 김정일이 조직을 장악하는 방식이다. 김정일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조직에 대해 검열을 실시함으로써 접근해 간다. 그는 (1) 검열을 통해 조직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2)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제고시키며, (3)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를 내리고 이것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면서 조직 장악을 마무리한다.

여기서는 대남사업 분야에 대한 조직장악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⁹⁾ 김정일이 대남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은 1975년 6월부터이다. 즉, 그가 1973년 후계자로서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의 직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남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동안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단지 당시 대남비서였던 김중린과 관련분야 간부들이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6년 6월부터 김정일은 대남사업에 대해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마련하기 위해 연락부, 문화부, 조사부에 대해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검열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는 검열을 통해 인사·조직문제, 사업활동 등에 대해 파악하고 동시에 기존 조직의 일상성과 연속성을 뒤흔들어 조직과 간부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 주었다. 당시 검열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비서국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검열 요원들은 조직지도부 검열과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이 검열에서는 해방후 30년간의 대남공작사업 전반을 뒤집는 작업이었다.

김정일이 참석한 당 총화보고에서 대남사업의 결함, 착오,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토론을 통해 대남사업 관련 간부들뿐만 아니라 비서인 김중린까지 모든 간부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김정일은 여기서 그동안의 대남사업이 영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

9)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pp. 176~193.

라고 지시하였으며, 사업수행에 있어서 당의 결정과 김일성의 교시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공명주의와 독단주의, 관료주의가 작용했다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김정일은 검열과 총화를 통해 대남부서들을 뒤흔들어 놓고 이를 통해 자신의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 그는 대남비서인 김중린을 대남비서와 정치국 위원에서 해임하고 대남비서제를 폐지하고, 조직개편과 인사조치를 통해 대폭 물갈이하였다. 즉, 검열과 총화를 통해 김정일은 대남사업을 직접 장악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한 것이 김정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의 조직 장악력은 김일성 사망 후 다른 사회주의에서와 같은 권력투쟁 없이 그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기초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에 대한 김정일의 직접 장악은 분할통치와 함께 그의 통치스타일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에게 있어서 분할통치가 권력기반의 고차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전술인 반면에, 조직장악은 권력기반의 저변에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 과시적 및 파격적 행태

김정일은 간혹 과시적 스타일을 내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정일의 김일성 3년상 지키기,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 대형 조형물의 설치,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시 경로우대의 제스처 등은 변화무쌍한 과시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7-8월의 러시아 방문 때 기차여행 등에서 그의 과시적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신의 정권 안정성과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그의 자아 방어 메커니즘으로서의 치환에 의해

나타난 것인 동시에,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카리스마적 이미지를 조장·부각하고 집권을 정당화하려는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은 기본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행동하는 스타일이지만, 직책에 따른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공고화하기 위해 가끔 과시적 통치스타일을 적절히 배합하기도 한다.

김정일의 이러한 과시적 스타일은 일반 주민에게 매우 대담한 정치 지도자로 각인시키는데 기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후 주민들은 이른바 지도자를 잃었다는 심리적 위기의식 속에서 표류하는 복종심(*free floating obedience*)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해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은 이것을 지도자-대중간의 일체화된 관계를 조장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런 과정은 또한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가치박탈에 따른 자아 방어 메커니즘으로서의 치환(置換)이었으며, 주민들은 오랜 자아포기에 의해 “명령기대 심리”¹⁰⁾를 갖게된 상태에서 과시적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특수성을 강조해온 고맥락적 문화(*high-context culture*)¹¹⁾를 가진 북한에서 가능한 일이다.

또한 김정일은 과격적 스타일의 요소도 보인다. 이는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될 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은데서 잘 드러난다. 그는 노동당 조선인민군 대표회, 도·직할시 대표회, 성, 중앙 및 도당 기능을 수행하는 당 조직들의 대표회에서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뒤, 1997년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연명으로 최종 추대를 선포하는 방식을 택하게 했다. 그의 과격적인 스타일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 때

10) 백상창, 『김일성의 정신분석』(서울: 등대출판사, 1980), pp. 186~7.

11) 고맥락적 문화란 행위와 인식의 고유성과 상황 및 조건에 따른 차이점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 David Matsumoto, *Culture and Psycholog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6), p. 51.

도 일반의 예상을 깨고 국가 주식제를 폐지했으며 자신의 국방위원장 직책을 실제적 국가수반으로 규정한 점에서도 나타난다.¹²⁾ 또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 영접, 의장대의 사열 등은 남북한 분단상황을 놓고 볼 때 김정일 통치스타일의 파격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치스타일상의 파격적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김정일 정권의 존속을 도모하고 자의적 권위 행사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탈린의 스타일과 흡사하다. 스탈린은 공산당의 중앙위원회는 물론이고 정치국의 의사를 무시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중에는 특히 국가방위위원회가 정치국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도록 만들었다. 더욱이 1939년의 18차 공산당대회가 열린 지 13년만에 열린 1952년 19차 공산당대회에서는 조직국과 정치국을 완전히 해체하고, 대신 중앙위원회 최고간부회의(Presidium of the Central Committee)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 수준의 정책결정 기구가 아니었는 바, 이는 35인의 위원과 후보 위원들이 모두 2류 인물들로 채워진 점에서 알 수 있다.¹³⁾

4. 정치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

1. 김정일의 과부하된 의사결정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이 북한의 정치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의사결정이 김정일

12) 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p. 15.

13) 로버트 맥닐, 이병규 역, 『볼셰비키 전통』(서울: 사계절, 1983), pp. 150~1.

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과부하(overload)에 걸려있다는 점이다.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비민주적 정치체계에서 과부하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현 정치체계는 특별히 그의 독특한 통치스타일과 결부되어 의사결정의 과부하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형식주의 및 경쟁 모델의 혼합형으로서, 정권 유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의 권위에 버금가는 제2인자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한다. 이러한 통치스타일에 의하면 “권한의 위임”과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198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통과된 수정 헌법에서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 사이에 권력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또는 김정일이 지닌 권한의 일부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과 내각 총리인 홍성남에게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 권위관계 구조(formal structure of authority relations)가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다시 말해, 수정 헌법에서의 실질적 권위관계 구조는 권력분할도 아니며 권한의 위임도 아니라는 분석이 옳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권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권한의 위임이나 권력분할의 여지를 남기는 권위관계 구조를 부정하게 되었다. 이같은 권위관계 구조하에서의 의사결정은 자연스럽게 김정일에게 집중되기 마련이었다. 김정일 주변의 핵심 엘리트들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에서 최소한의 권한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질만한 어떤 제안을 김정일에게 올리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다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혁신적 문제해결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먼저 김정일에게 의사결정이 과부하 되는 현상은 그의 공문처리에

서 드러난다. 그는 노동당, 내각,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권력, 행정, 공간기구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문건을 전부 읽고 결재하는 바, 자신의 참모나 개인 비서에게 넘기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일주일에 접하는 문건의 분량은 대략 500쪽 이상으로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또 의사결정이 그에게 과부하 되는 현상은 1995년 평양내 미국측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일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북·미 핵합의) 당시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하는 것 이외에도 실무자 회담을 통해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기로 합의하였다. 1995년 중에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실무자 회담이 진행될 때, 미국은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평양소재 전 동독대사관을 사무소 예정지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관청이 평양에 주재하는 것을 주저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개인적 의사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외교부가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를 고민 중일 때, 김정일은 설치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후, 영향평가, 재검토, 동의, 재검토, 부정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여기서 드러난 것은 김정일이 매우 치밀하고 심사숙고하는 한편 과도한 의사결정의 집중에 따른 결단 지연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권에 대한 집착은 이상과 같은 의사결정의 과부하를 낳고, 이것은 다시 단독결정에서 비롯되는 결정의 번복 또는 과도한 심사숙고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

14) 고영환(전 북한 외교관)과의 면담, 1999. 6. 15.

15) 현성일(전 북한 외교관)과의 면담, 1999. 12. 2.

2. 수평적 의사소통 결여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형식주의 모델과 경쟁적 모델을 따름으로써 수평적 의사소통은 부재하게 된다. 형식주의든 경쟁적이든 모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에게 보고가 집중되며, 참모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정일은 다양한 견해를 듣게 될 수는 있지만, 이들 사이의 견해차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와 그 견해차를 뛰어넘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김정일의 통치스타일로 인한 수평적 의사소통의 결여는 그의 군사 직책의 수여와 함께 그가 노동당은 물론이고 인민군에 대해서도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김정일은 1991년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2년 공화국 원수,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일련의 직책을 차지하면서, 그의 권위행사는 노동당뿐만 아니라 인민군을 포함한 전 분야의 권력기구에 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주요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노동당의 각종 기구, 즉 정치국, 비서국,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등을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에 직접 지시와 집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황장엽의 증언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국제정세와 관련된 군대내 정치교육 문제에 대해서 노동당내 국제부와 국제비서의 의견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민군 총정치국에 직접 지시를 내리게 된다.

특히 정치국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중앙당 차원에서 고위 엘리트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기회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김일성 생전에는 정치국이 의사결정 및 집행의 기능을 일부나마 수행했다. 비록 집체적 모델의 전형을 따르는 통치스타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김일성은 정치국에서 자신의 노선과 의도를 표출하였고 형식적이거나 동의된 의사결정으로 공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것은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미지 속에 카리스마를 구현한 김일성에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와 매우 대조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정치국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평적 의사소통의 결여는 참여와 설득에 바탕한 의사결정 대신에 수동적 동의에 기초한 정책의 집행만을 낳고 있다. 노동당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예전처럼 의사와 약사의 역할분담을 하면서¹⁶⁾ 조직 및 사회통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의사소통의 결여로 통제만 존재할 뿐 참여의식의 부재와 정권에 대한 정체감의 결여를 초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3. 혁신적 문제해결 불능

김정일에의 의사결정 과부하와 의사소통의 부재는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의 상실을 수반하게 된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일과 고위 엘리트들의 책임회피적 성향은 결코 혁신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북한의 언론매체에서 인용되는 김정일의 발언, 즉 “나에게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혁신적 접근을 저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개혁·개방” 용어에 대한 거부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상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고위 엘리트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담론을 억제하는

16)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관계를 “조직부는 의사와 같고 선전선동부는 약제사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양대 부서가 각종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선전선동을 대응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협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220.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장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변화를 내포하는 담론은 불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변화에 대한 담론의 불가능과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와 개념의 부재는 결국 내투입(withinput)¹⁷⁾의 부재로 인한 정치체계의 경화현상(ossification)을 낳게 된다. 정치체계는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따른 투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체계 내부 당국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견과 대응 의식에 바탕한 내투입에 의해 자생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체계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내투입에 의해 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변화를 통해 존속해나가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사회로부터의 요구 투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투입마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지체(retardation of adaptive process)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난과 경제침체로 인해 사적 영역이 팽창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 의식은 거의 소멸한 상태이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¹⁸⁾ 그러나 북한에서 개혁·개방과 같은 요구가 사회로부터 체계에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변화에 대한 내투입이 부재한 상황이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변화에 대한 요구의 투입이 체계의 안과 밖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의사결정이 집중된 정치체계의 경화현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뿐이다.

17) 내투입 개념에 대해서는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p. 54~6.

18)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35~8.

물론 북한이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체제란 마치 유기체와 같아서 환경에 대한 일정한 적응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게 되면 존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도 하나의 개방체계로서 생존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체제의 적응정도는 국제적 및 사회적 변화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8년 9월 수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고(제24조) 거주·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제75조) 내용 등은 이미 발생한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이며, 내투입에 의한 혁신적 변화의 추구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하는 등 일부 외교정책에 있어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향후 대미외교는 미지수인 채로 남아있다.

요약하자면,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정권 유지에 머물러 있는 나머지 혁신적 문제 해결에 상응하는 내투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체제의 적응지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체제의 적응지체 현상은 정치와 경제·사회 사이의 괴리를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5. 결 론

정치지도자의 행위는 비용과 효용을 따지는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는 자신이 성장한 배경 및 현재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 고착화된 스타일과의 종합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주목할 것은 이상에서 분석한 통치스타일을 지닌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정치체제가 거시적·장기적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지체(retardation of adaptive process)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지속적 안정을

보장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의사결정의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고, 관료기구 및 간부들 사이에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차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내투입의 부재로 인한 정치체계의 경화 현상으로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체계의 적응지체는 곧 기회 상실을 의미한다. 대외관계 특히 대미관계에서 이같은 현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미간의 대화는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의 예상 결과에 대한 지나친 타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 나머지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데는 실패하였다. 때로는 과격적으로 보이는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치밀한 타산에만 의존한 나머지 다른 한편으로 혁신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2001년 9월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테러사건 때 북한이 미국의 반테러 외교에 대해 동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데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테러사건 이후 외교정책 추진과정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과 함께 반테러를 안보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기존의 테러지원국가 리스트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테러범의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선언하였다. 반면 미국은 과거 테러국가 또는 테러지원국가의 이름으로 갈등관계에 놓였다 할지라도 반테러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미국은 이들을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끌어안을 태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에게는 대미외교의 태도 여하에 따라 테러지원국가의 '명예'를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활용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통치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

II. 집권과정

최 진 욱(선임연구위원)

1. 서 론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은 경제난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은 1998년 헌법개정과 함께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동시에 북한의 절대권력자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과 함께 북한을 공동 통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김정일의 집권과정을 조선노동당에 근무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공식승계한 1998년까지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정권의 향후 안정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김정일의 집권과정은 기반조성단계, 기반확대단계, 실질적 집권행사단계, 공식승계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노동당에 맡을 들여 놓은 1964년부터 1974년 초까지다. 이 단계에서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전원회의에서 당비서로 선출되어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였으며 당권장악을 위한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제2단계는 1974년 2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정치위원으로 선출되고 후계자로 지명되면서부터 1980년까지로 이 기간중 김정일은 당내기반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후계자의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

이다. 제3단계는 1980년 10월 10일 제6차당대회에서 김정일이 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 중앙군사위원회에 선출되어 공개적으로 2인자 위치에 오르면서부터 1990년까지다. 이 기간중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김일성과 함께 당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4단계는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군권을 장악하고 공식승계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2. 집권 과정

1. 기반조성단계(1964~1974)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던 1964년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배속되어 지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서는 유일사상체계확립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고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반대하던 당내 갑산파가 대거 숙청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정일은 당비서국 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중앙기관담당 책임지도원으로서 숙청대상자의 죄행을 조사하여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등 숙청을 주도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유일사상체계확립을 명분으로 후속숙청작업을 주도하며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

제4기 15차전원회의 이후 김정일은 당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에서 선전선동부 문학예술지도과장으로 옮기면서부터 사상사업에 전념하기

1)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310.

시작하였다. 갑산파가 숙청된지 한달 후 김정일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의 담화에서 주동분자들을 제거하였다고 하여 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 특히 김정일은 수정주의자의 병폐가 문화예술부문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문을 철저히 장악하고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하였다.³⁾ 실제로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 이후 김정일의 담화와 연설은 문화예술부문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에 의하면 김정일은 1967년 5월 30일의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시작으로 1973년 3월까지 총42건의 연설 중 35건(83.3%)을 문화예술부문에 할당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제4기 15차 전원회의 이후 전국의 「당력사연구실」을 「김일성동지혁명연구실」로 재편하고 「김일성동지혁명연구실도록」을 편찬하는 등 사상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위상을 높여갔다.

실제로 1968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에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부모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김정일위상의 변화를 암시하였으며, 이후 김일성 가계의 항일혁명투쟁이 소개되는 전기 등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혁명의 혈통을 이어 받았음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김정일승계구도의 초석이 되었으며 이후 혁명혈통에 대한 중요성이 수시로 강조되었다. 스즈키 마사유키는 김일성의 후계문제가 처

2)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1967.6.15),” 「김정일 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30.

3) 김정일은 학습지인 「향토사」, 예술영화인 「일편단심」, 노래인 「나비쌍쌍, 제비쌍쌍」 등 유일사상체계를 훼손한 작품들의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문화예술부문에서 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 행위를 비난하였다. 위의 글, pp. 232~236.

음으로 심각하게 고려된 것은 제4기 15차전원회의 후인 이 때쯤부터 라고 주장하고 있다.⁴⁾

1969년 초 김정일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진급하면서 위상을 높였으며, 1956년 이래 형성되기 시작한 수령제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제4기 15차전원회의 이후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을 김일성 개인 숭배와 연관시키며, 수령이 당을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라는 구호가 1968년 들어서면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자”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즉 김정일은 1960년대 후반 유일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일지도체계확립을 추진하면서, 유일지도체계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혁명적 수령관을 제시하였다.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와 입장으로서는, 혁명적 수령관에 따르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녀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 력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⁵⁾ 따라서 수령의 영도가 있어야만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전진되며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령을 절대화하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무조건 받들고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

혁명적 수령관이 정착되어 가면서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논리적으로 수령이 존재하는 한 수령의 후계자는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⁶⁾ 또한 후계자문제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의 임표 모반사건은 후계자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4) 스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106.

5)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pp. 602~603.

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327.

1971년 3월 모택동의 공식적인 후계자 임표가 비밀쿠데타계획을 실천에 옮기다가 실패하고 비행기로 도주하다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임표사건은 김일성의 오랜 권력투쟁의 경험과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등의 기억과 어우러져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후계자로서의 첫번째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세대교체 분위기는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김일성은 1971년 후계자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여 세대교체를 언급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를 암시하였다. 김일성은 1971년 6월 24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6차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혁명위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⁷⁾ 김일성이 말한 혁명위업의 완수란 “조국이 통일되고 사회주의 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한 다음에도 공산주의를 완전히 건설”하는 것이었다.

세대교체론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추진력을 얻으면서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각급 당조직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1973년 2월 김일성이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한 직후 당중앙위원회에서 직접 3대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당조직과 함께 3대혁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공장, 기업소에 나가는 3대혁명소조는 대체로 20~30명이 한 조가 되었으나 규모가 큰 공장, 기업의 경우는 50명이 한 조가 되기도 하였다.⁸⁾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의 파견목적이 간부들을 일깨워주고 도와주는 것이며 투쟁대상이 간부들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와 같

7) 김일성,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1971.6.24),” 『김일성 저작집 2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204.

8)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1975.3.3),” 『김일성 저작집 3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07.

은 낡은 사상임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1973년 4월 당문학예술부장으로 진급한데 이어,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전원회의에서 조직 및 사상담당비서로 선출됨으로써 당의 핵심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의 조직과 사상부문을 한 사람이 전담한 것은 노동당 역사상 전례없는 파격적인 조치로서 김정일은 당권장악을 위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초반 당조직비서이던 김영주가 후계자로 인식되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며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한지 불과 9년만의 일로서 그의 나이 31세였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중 김정일은 조직사업과 사상사업(특히 문화예술부문)을 지휘하면서 당권장악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중 김정일의 공식적인 지위는 당비서까지 진출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2. 기반확대단계(1974~1980)

김정일의 집권과정에 있어서 1974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은 기반확대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중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후계자 지위를 획득하고 후계자로서 그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비밀리에 추진된 승계작업의 결과 김정일은 1974년 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로동신문』은 그를 ‘당중앙’으로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추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김정일은 당중앙으로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후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의 지도를 뒷받침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으며,⁹⁾ 이를 위하여 김정일은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문제를 내세웠다.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 즉 김정일 지도체제수립의 정당성을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두었다. 김정일은 “우리 당에 있어서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은 당안에 유일적 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⁰⁾

또한 김정일은 자신의 의사를 김일성의 의사와 동일시하여 당사업과 활동을 자신의 통제하에 집중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당규율의 확립을 도모하였으며, 나아가 유일적 지도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후계체제의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를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체제”라고 정의하였다. 김정일이 후계자지명 직후 유일적 지도체제를 내세운 것은 김일성의 권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으며,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은 곧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다.¹¹⁾ 김일성 역시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지원하는데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다. 김일성은 당조직 일꾼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서한에서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는 것은 당대열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면서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을 촉구하였다.¹²⁾

9) 스희지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p. 108~109.

10)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73.

11) 스희지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 109.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확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를 강화시켰다. 김정일은 우선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중앙당으로부터 지방조직으로 내려가는 모든 지시와 문서가 김정일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당조직을 위에서 아래까지 철저히 장악하려 하였다. 사전승인의 실무적인 절차는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당정책의 해설, 지도위주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 등을 취급하는 당사업은 그 성격상 성과가 당장 들어나지 않고 사업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간부들의 월권 가능성이 잠복되어 있다고 보고, 김일성과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¹²⁾ 예컨대,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로 하여금 각급 간부의 직무를 규범화하고 상세한 업무 절차를 규정한 『당사업지도서』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간부들의 월권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간부들의 “관료주의, 행정대행주의, 세도를 막고, 사람이 바뀌어도 부서의 직능이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김일성과 자신의 지시를 제외하고는 간부들의 자의적 권한확대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였으나, 직능의 세부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상부가 직능 이외의 지시를 하면 하부에서 접수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김정일은 간부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모든 간부의 선발·임명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이동·해임, 간부교육의 절차·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간부사업지도서』를 새로이 만들어 간부사업의 제도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간부사업지도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기

12)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5), p. 95.

13)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김정일: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139.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김일성과 김정일 이외에는 다른 간부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재량권이 제한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재편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확립하고 간부들의 월권을 견제하면서 인사권을 독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선전선동부를 통한 사상사업의 장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¹⁴⁾ 후계자지명 직후인 1974년 2월 19일 김정일은 ‘전국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언하였다. 동 연설에서 김정일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것이 당 사상사업의 출발점이어야 하며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1974년 4월 14일 ‘온사회 김일성주의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제시하였다.¹⁵⁾ 이 중 가장 핵심인 10항은 ‘김일성동지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임을 되풀이 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속에서 해석하려는 ‘편향’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강조하였다.¹⁶⁾ 즉 김일성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시대적

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를 보면 1974년부터 특히 사상 사업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연설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91~124.

16) 김정일,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1976.10.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73.

제약성을 뛰어 넘는 완성된 공산주의이론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의 불명확성과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으로 김정일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일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김정일은 주체사상해석의 최고권위자가 될 수 있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권력기반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기제로서 대중동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우선 지금까지 김일성이 지도하던 3대혁명소조운동을 자신이 직접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김정일이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혁명소조들은 주로 혁명사상이 강한 당의 젊은 인텔리들로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당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김정일의 지지기반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사상, 문화, 기술 분야에서 낙후된 부분을 일소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실질적 목적은 각급 생산단위, 행정기관, 문화기관, 학교 등에 당정책관철과 당간부들의 낡은 사상개조라는 명분하에 혁명소조를 파견함으로써 김정일의 영향력과 이미지가 전체사회에 확산될 수 있었다.¹⁷⁾ 이밖에도 김정일은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등을 주도하였다.

후계자 지명 후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의 최대 걸림돌은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 일파였다. 김성애는 1969년 2월 여성동맹 위원장에 임명된 후 김성애여사로 호칭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특히 1971년 1월 김일성이 “김성애의 얘기는 내 얘기와 같다”고 말함으로써 2인자와 같은 권한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1974년 6월 평양시 당 전원회의에서 김성애와 측근들이 대거 몰락하게 된다. 김성애의 동생 김성갑(해군사령부 정치위원)과 김성호(황해북도 당

17)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294.

비서)가 숙청되었으며, 김성에 자신은 여맹위원장 자리는 간신히 유지 하였으나, 이후 월권행위가 엄격히 규제되면서 활동범위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후 김성애와 그 형제, 자식들은 ‘결가지’라 하여 철저히 견제되어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져 갔다.

김정일은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1978년에 이르면 당중앙위원회 부장, 당비서, 당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한 독자적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치국원 정도만 김일성과 상의하였다. 1970년대 김정일의 집권과정에 있어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첨병역할을 하면서, 이들 부서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증대되었다. 특히 조직지도부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하여 간부사업, 검열사업 등을 총괄지도하게 되는 등 조직의 확대와 함께 당의 핵심부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또한 김정일은 1970년대 중반부터 당내 유일적 지도체제확립을 발판으로 권력기반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군과 정무원, 그리고 대남사업 분야까지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3. 실질적 당권행사단계(1980~1990)

1970년대 말에 이미 당내 인사권을 폭넓게 행사하던 김정일은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 이르러서는 정치국 정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권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른다. 김정일은 1970년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당권을 장악하였지만, 공개적으로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1980년 개최된 제6차당대회에서 공개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즉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미 공식적인 후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김정일이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2인자로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며 실질적인 당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 승계작업과 관련하여 제6차 당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정치국으로 대체되었으며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부활되었다는 것이다. 1966년에 설치되었으나 김일성의 유일체제하에서 유명무실한 존재였던 상무위원회를 부활시킨 것은 김정일을 상무위원에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무위원으로는 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옥, 김정일 등 5명이 선출되었으나 병약한 김일이나 기술관료출신인 이종옥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였으며 오진우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선봉장이었다. 따라서 상무위원회 설치의 실질적으로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무위원회, 비서국과 군사위원회에 모두 선출된 사람은 김일성을 제외하고는 김정일 뿐으로, 단순한 후계자의 위치를 넘어서 실질적 통치자로서의 김정일의 위상이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이 공개적인 후계자로 전면에 나서면서 『로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들은 1960년대 말 이후 북한사회의 중요한 사업들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찬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1981년 6월부터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호칭 대신에 공개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세대에 두 사람의 지도자를 함께 받들게 된 조선 인민의 무한한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김정일에 대한 위상강화가 김일성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1982년 김정일의 생일이 정식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1986년에는 김일성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1982년부터 김정일을 찬양하는 출판물이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김정일의 저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의 전기 『인민의 지도자』(1982)와 『김정일 지도자』(1984)는 모두 이 시기에 출간되었다. 아울러 김정일의 출생과 관련하여 혁명사적지가 조성되고 김정일 저작에 대한 대중학

습이 전개되었다. 1984년부터 김정일의 백두산 밀영 출생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2월 16일 백두산 밀영(고향집)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1988년 11월 15일 백두산 밀영을 내려다 보는 봉우리를 정일봉이라 이름 붙이고, 정일봉이라는 글자를 새겨 제막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들어서 김정일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광범위해졌으며, 무엇보다 활동의 격이 김일성의 수준에 버금가게 격상되었다. 김정일은 최고통치권자나 할 수 있는 외국의 국가원수를 접견하거나 김일성만이 행하였던 현지실무지도를 1981년부터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정일의 실무지도에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나 정무원 총리 이종옥 혹은 강성산 등이 수행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실감케 하였다. 김일성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1980년대 중반 북한정치체제에서는 ‘김정일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1986년 5월 31일 마침내 김일성은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 기념연설에서 김정일의 후계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혔다.¹⁸⁾ 북한정치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통치시대’를 거쳐 김일성이 ‘반은퇴’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¹⁹⁾

4. 공식승계 단계(1990~1998)

김정일은 1990년대 들어서 당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2인자의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특히 군을 통솔하기 위한 주요 직책을 장악하였다. 김정일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서 선출된데 이어서,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

18)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태백 편집부 편, 『주체사상 연구』(서울: 태백, 1989), pp. 161~163.

19) 김학준, 『북한50년사』(서울: 동아출판사, 1995), pp. 326~376.

으며, 1992년 4월 20일에는 원수로 취임함으로써 김일성 유고를 대비한 김정일의 군권장악을 확립하였다. 특히 1992년 개정헌법은 국방위원장직을 국가주석직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승계하기 전에 국방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실제로 김정일은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1991년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그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²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애도와 이에 대한 자신의 배려를 이유로 공식적인 승계를 지연시키며 ‘유훈통치’를 하였다. 김정일은 유훈통치기간중 이상화작업과 김일성의 카리스마 전이 등을 통해 김일성이 누렸던 권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령 중심제 정치체제인 북한에서 당 총비서나 국가주석에 취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령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버이 수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고 지도자 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이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일시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김정일의 천재성을 부각시키는 등 이상화작업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예컨대 김정일의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통치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면모도 과시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즉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전 내세운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더욱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광폭정치란 “기본군중 뿐만 아니라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는 정치”라고 정의하면서,²¹⁾ 인민을 계급출신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폭넓은 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²⁾

20) 전용석,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원천,” 『근로자』, 제10호 (1991), p. 31.

21) 『로동신문』, 1994.1.28.

22) 북한은 전체주민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포섭계층으로 분류하고 의식주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군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을 통치하면서 일종의 과도기적 군사비상체제를 가동시켰으며, 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켜나갔다. 특히 97년부터 ‘선군정치’ 구호를 내세우며 북한의 당면한 체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으로,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특유의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정헌법은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더욱이 국방위원장 추대사에서 김영남은 국방위원장을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밝힘으로써 국방위원장이 실질적 국가최고지도자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4.25)을 국가명절로 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제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인민군대 따라 배우기 운동’ 등 사회전체에 군사적 기풍이 강조되고,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대 혹은 군관련 행사에 빈번히 참석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차수 조명록(3위)을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이 20위내에 포함되는 등 군부 엘리트들이 상위권력 서열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1997년 10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와 공동으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격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배급 등 사회적 혜택을 차별화하는 계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3. 김정일 집권과정의 특징

김정일의 집권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되어 왔으나, 각 단계를 관통하는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일이 집권과정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중앙집권적 조직체제의 확립, 측근인물의 당지도부 포진과 권위획득 노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중앙집권적 조직체제의 확립

김정일 집권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집권적 관리체제의 확립이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되기 전부터 당규약을 개정하고 당조직을 부단히 개편함으로써 모든 당사업과 조직이 자신의 유일적 통제하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조직강화의 작업으로는 우선 1970년 개최된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비서국의 위상강화를 들 수 있다. 1966년 개최된 제2차 대표자회에서 신설된 비서국은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과 일상적인 당사업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김정일 후계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제5차 당대회에서 비서국은 “간부문제, 대내문제 및 그밖의 당면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비서국 위상강화의 정치적 의도는 김정일의 당권장악에 있어서 혁명1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정치국보다는 당의 일상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국을 이용하여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또한 제5차 당대회에서는 중앙집권제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킨 당규약이 채택되었다. 즉 당규약에는 “당 단체는 당의 정책과 노선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

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당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계통적 지도 검열 및 하급 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는 수정된 조항이 추가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후계자로 지명된 후 중앙집권적 당조직정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일은 “당사업과 당활동에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은 레외없이 당중앙의 유일적 결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하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복종하는 강철 같은 중앙집권적 규율은 전당의 사업과 활동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으로, 확고한 규범으로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²³⁾ 즉 김정일이 말하는 유일적 지도체제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를 의미한다.

김정일은 위상이 강화된 비서국내에서 특히 조직지도부를 개편, 강화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조직을 확립하여 왔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를 당의 ‘심장부서’ 혹은 ‘기본부서’로 간주하고 조직지도부가 “당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모두가 한사람 같이 움직이는 철통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워나가야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 지도체제를 튼튼히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⁴⁾ 김정일은 “아래당조직들의 실태와 부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다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야”한다고 강조하였다.²⁵⁾ 구체적으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지방조직으로 내려보내는 지도서와 지시, 그리고 지도소조의 파견까지도 반드시 김

23)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173.

24) 위의 글, p. 174.

25)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60.

일성과 자신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사업이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직능을 규정한 「당사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를 제외한 간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으며, 인사에 있어서도 간부의 선발·임명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이동·해임, 간부교육의 절차·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간부사업지도서」를 만들어 간부들의 인사재량권을 제한하였다. 더욱이 김정일은 간부의 최우선 자격조건을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간부인사에 대한 김정일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후 추진된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와 유일적 결론에 따르는 당사업과 활동의 기풍확립작업은 당내에 중앙집권적 규율을 정착시켜갔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가 부활되고 김정일이 상무위원에 선출된 것은 당내 중앙집권적 원칙이 당핵심부서에도 적용되었음을 의미하였다.

2. 핵심세력 구축

김정일 집권과정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김정일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측근들을 핵심세력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간부사업의 목표를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두고, 간부의 선발·배치에 있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중요한 간부의 표징으로 삼아왔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조금이라도 결여된 사람은 간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혁명에 대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시련이 닥치면 금방 변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혁명적 절개를 지키며 일편단심 수령에 충실한 사람들을 간부로 선발배치하여야 간부대열을 김일성주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다.²⁶⁾

이와 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중요한 간부의 표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간부사업에서는 성분이 중요시 된다. 성분이 간부의 표징이 되는 이유는 성분이 좋은 사람이 성분이 나쁜 사람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간부 표징에 맞는 대상은 한국전쟁시기와 그후 혁명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지난날의 노동자, 고농, 빈농의 아들딸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노동과정에서 단련되었거나 착취를 받아본 사람들, 제대군인들과 영예군인들 가운데서 사상이 견실한 사람들이다.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 보다는 봉건적 신분제도에 의한 인사제도는 북한의 당·정간부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김정일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즉 지연, 혈연, 학연 등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일투사 유자녀, 전쟁유자녀 등 혁명가계혈통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으로 북한의 엘리트들은 고도의 동질감과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당의 중앙집권적 지도체제확립 과정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등과 같은 당 지도부와 기층조직에 대한 물갈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수의 기존인물들이 탈락하고 새로운 인물이 대거 부상하였다. 특히 1980년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는 10년전인 5차 당대회와 비교하여 혁명2세대로서 김정일의 측근세력이 대거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당지도부에 대한 물갈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당내에 구축하여 나갔다. 특히 김정일은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

26)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5. 6.13),”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49.

금 당의 핵심부서를 장악하게 하였으며, 비서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당비서를 중심으로 한 핵심세력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김정일의 친인척, 근무연고자, 혹은 승계과정에서의 공신들로서 김정일의 측근세력들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친인척으로는 당비서 김종린, 김용순, 검열부장 김정희,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장성택 등이 친인척이다. 특히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은 능력과 충성심이 뛰어난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 친인척 못지 않게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룹은 한때 김정일과 함께 근무하면서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당비서인 김기남, 김국태, 전병호는 조직지도부 혹은 선전선동부에서 김정일과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에 헌신한 일등공신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은 친인척이나 과거 개인적 인연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핵심세력으로 육성 당의 요직에 포진시킴으로써 당권장악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핵심 측근들을 특히 당권장악의 교두보인 비서국에 포진시켰으며, 이들은 대부분 당권장악을 위한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출신들로서 비서국을 중심으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3. 권위 획득

권력승계는 후계자로 지명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행사하였던 권력과 권위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²⁷⁾ 수령중심적 정치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를 획득하는 요체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도 집

27) 양승환, “북한의 권력승계정치와 체제 및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3): 북한체제 및 정책변화 전망 분야』(서울: 통일원, 1993), p. 163.

권과정에 있어서 김일성의 직위를 승계하는 작업 못지 않게 수령의 지위획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일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찍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였고 이상화작업을 전개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카리스마 전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완벽성과 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없는 내용에 관한 한 자신이 해석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다.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과정에서 후계자 자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출생관련 신화가 창조되고 효성과 천재성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우선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김정일의 출생을 항일혁명의 전통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김정일전기에 의하면 김정일은 “항일혁명투쟁을 벌이시며 구국성전을 이끄시던 전설적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항일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과 여성의 몸으로 손에 총창을 쥐시고 조국광복의 성전에 나서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아드님”이다.²⁸⁾ 즉 단순히 수령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항일투쟁의 영장 김일성과 여성영웅 김정숙의 아들로서 혁명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의 출생장소를 백두산의 항일유격대 밀영이라고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의 출생시점과 장소는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강조되었다. 또한 김정일은 조선사람들이 시조 단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정일의 생일을 1982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한데 이어, 1986년에는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 하였다. 1987년 김정일이 출생하였다는 백두산 밀영(고향집)이 일반에 공개되

28) 탁진 외, 『김정일 지도자 제1부』(동경: 동방사, 1984), p. 5.

고, 1988년 백두산 밀영을 내려다 보는 봉우리를 「정일봉」이라 이름을 붙이고, 「정일봉」을 혁명사적지로 지정하였으며 「김정일화」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이 김정일의 출생을 온 사회에 알리기 위해 ‘백두산에 김일성장군 계승인 탄생’ 등의 구호를 새겼다는 소나무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기도 하였다.

4. 선군정치

김정일의 집권과정은 마지막 단계에서 군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군에 의존하였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군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정일은 당총비서 취임(97.10)을 계기로,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통치방식을 내세운 것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97년 10월 7일 중앙방송 정론을 통해 김정일이 ‘경제사정이 아무리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후로(先軍後勞)하라’고 한 것에서 공식화되었으나, 94년 7월 김일성사후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을 통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원인이 노동계급의 중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총대중시 선군혁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군사적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외세가 북한을 얹잡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믿고 있으며, 대외협상에서 식량 등 더 많은 것을 양보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강성대국」과 같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구호를 통해 대외적으로 북한의 위세를 떨치는 데는 군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를 앞두고 있었던 ‘위성발사’가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군정치의 등장배경은 경제회생에 있어서 군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국가의 명령체계가 이완되고 당·국가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건설에 군의 참여는 불가피하였다. 북한은 ‘인민군대 따라배우기’운동을 전체사회에 보급하는 등 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뛰어 들어 무조건 해내는 결사관철의 정신,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판을 크게 벌리는 대담성, 무슨 일이나 모가 나게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해나가는 간진 일본새, 이것이 우리가 인민군군인들에게서 본 받아야 할 투쟁기풍이다”고 말하고 있다.

4. 결 론

김정일의 집권과정은 30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를 통하여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인물장악에도 치중하여 과거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근무시 함께 일하며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인물과 친인척들을 현재 비서국 등 당핵심부서에 포진시킴으로써 자신의 인맥을 형성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획득을 중시하여 수령의 지위확보에 전념하였다.

김정일의 집권과정과 그 특징을 볼 때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정치적 안정은 극심한 경제난과 체제내 잠복해 있는 불안정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수령제 사회인 북한에서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불안정 요인이다. 앞으로 북한자체의 논리에 의해서도 김일성의 후계자였던 김정일 만한 ‘정통성’있는 후계자를 발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

권력자 김정일의 유고는 북한체제를 극도의 혼란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정일은 98년 공식승계한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당조직의 정상화를 통한 제도적 통치를 복원하지 않고 인적 통치에 의존함으로써 김정일의 유고시 권력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군의 유일한 통제자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유고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체제를 통제·감독하며 이끌었던 당으로부터 자율성이 강화된 군이 당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북한체제의 잠재적 불안정 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체제의 중단기적인 안정성과 함께 장기적인 불안정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Ⅲ. 리더쉽

전 현 준(선임연구위원)

1. 서 론

북한의 절대적 지도자였던 ‘수령’ 김일성은 1998년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직책 생략)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미 1967년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 수령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공식후계자로 내정되었다.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을 보좌하여 북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1986년 ‘사회정치생명체론’을 내놓음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을 완성하였다.

1989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그럭저럭’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세계사적 변화인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체제적 위기를 맞기 시작하였다.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주민들의 이탈도 확대되었다. 아울러 핵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 압력은 북한체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하였다. 김일성 사망과 함께 ‘북한붕괴론’이 풍미하였다. 자연스럽게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김정일의 국가경영 능력 여부로 모아졌다. 김일성이 없는 북한을 김정일이 어느 정도 잘 이끌고 갈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5년부터는 연이은 자연재해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주민동요도 그에 비례하여 심해졌다. 체제 및 정권 유지를 위해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정신’을 정치구호로 내걸고 주민의 단합과 인내를 촉구하였다.

김정일은 강력한 통제장치와 효율적인 주민통합을 통해 체제붕괴 위기를 넘겼다. 이후 그는 일면 우기극복의 자신감과 일면 국민에 대한 비전제시용으로 1998년 ‘강성대국’론을 제시하고 헌법수정을 통해 주식제를 폐지한 대신 자신은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및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남한 및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일의 리더쉽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일이 리더쉽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여 경제난을 비롯한 각종 난관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령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의문이다. 또한 북한체제의 변화, 김정일 정권의 향방, 김정일의 리더쉽 안정도 등도 주요한 관심사들이다.¹⁾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김정일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2. 연구 방법 및 이론

1. 리더쉽 특성 이론과 지배유형

어떤 리더가 리더쉽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리더가

1) 김정일에 대한 백과전서적 분석은 이찬행, 『김정일』(서울: 백산서당, 2001) 참조.

리더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리더가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추종자들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리더가 목적지도달시까지 추종자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물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리더가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을 때 추종자들은 리더에게 반항하여 일탈할 것이고 결국 목표달성은 좌절될 것이며 리더자신까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리더십을 “정당성을 보유한 리더가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정신적·물질적 수단을 동원, 추종자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기술과 활동”²⁾이라고 조작적(operational)으로 정의하려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김정일 리더십 고찰을 위해 리더십 특성(traits)이론을 원용하려 한다. 이 이론의 대표자는 스톡딜(R. M. Stogdill)이다.³⁾

고대로부터 1940년대까지는 권력유지의 근간으로서 지도자의 특성이 중요시되었다. 특성이론은 지도자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독특한 특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류는 특정 지도자의 특성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러나 자질론이라 불려지는 이 연구방법은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그 이유는 리더와 비리더의 구별을 위한 명확한 측정방법이 없고 리더의 독특한 능력도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최고리더 개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체제를 분석

2) 리더십에 대한 개념규정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규정에 대해서는 Ralph M. Stogdill, *Handbook of Leadership* (New York: The Free Press, 1974), pp. 8~16; James M. Burns,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8), pp. 18~23; 朴乃會, 『現代리더십論』(서울: 法文社, 1993), p. 21; 吳允晉, 『리더십론』(서울: 日善出版社, 1994), pp. 21~22; 金명훈, 『리더십論』(서울: 大旺社, 1980), pp. 101~09.

3) 朴乃會, 『現代리더십論』, pp. 58~59.

하는 데는 유용한 방법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체제처럼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리더십을 분석하는데는 이 이론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스스로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수령체제는 맑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변용이다. 과도기적 국가형태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독재를 정당화한다. 이 때 계급독재의 효율성은 리더십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 즉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리더의 등장은 계급독재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북한은 수령의 지위를 확립하고 혁명의 지도자인 수령의 역할을 거의 절대시한다. 따라서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 리더십 연구는 리더 개인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간주하고 있는 리더십 특성이론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⁴⁾

한편 막스 베버(Max Weber)는 정치적 정당성 도출의 이상형으로서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등 세 가지의 정당한 지배유형을 들고 있다. 베버는 위의 세 가지의 지배유형은 이상적 형태일뿐 시기와 장소에 따라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다.⁵⁾ 따라서 북한의 지배형태도 이 세 가지가 약간씩 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임은 당연하다.

베버의 전통적 지배 유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지배는 기존의 질서와 지배권력이 신성하다는 신념을 근거로 한 지배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의 지배가 행하여지는

4) 스톡달은 피지배자들이 보유하지 못한 리더의 주요 특성요인으로 6가지를 들고 있다. 즉, 신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적 능력, 개성, 과업수행요인, 사회관계요인 등이다. Stogdill, *Handbook of Leadership*, pp. 74~75.

5) Reinhard Bendix, *Max Weber*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62), p. 329; 黃山德, 「막스 베버」(서울: 瑞文堂, 1977), p. 134.

단체는 ‘정과 신의로 뭉쳐진 단체’이다. 전통적 지배에 있어서는 명령하는 자는 수장이나 주인이 되고 복종하는 자들은 신민, 백성이 되며 그리고 행정간부는 신료가 된다. 이 같은 전통적 지배의 순수형은 가부장제이다. 가부장제란 가족공동체안에서 볼 수 있는 효성 즉, 피에 대한 복종을 미덕으로 삼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명령자의 인격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의 태도를 가장 중시한다.

또한 가부장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명령자와 복종자 사이에 주종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다같은 동료이고 수장은 다만 동배 중에서 수석인 자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지배권을 가지는 경우인데 베버는 이것을 제1차적 가부장제라고 불렀다. 둘째는 가산제(patrimonialism)이고 이것은 신분적 가산제와 가산관료제로 나뉜다.⁶⁾ 북한의 경우, 가부장제 중 가산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산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군주의 국가에 대한 개인재산화가 북한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가산제의 특징은 첫째, 수장의 명령권 내지는 지배권은 수장의 강대한 사권이 되고 있다. 둘째, 가산제는 반드시 관리간부가 필요한데, 인적 기구로는 군대나 무신이 중요시 되고 물질 수단은 수장이 전부 점유한다. 가산제하의 관료는 크게 가산관료제와 신분적 가산제로 대별되는데 북한은 가산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가산관료제 즉 가부장적 가산제 국가라 볼 수 있을 것이다.⁷⁾

한편 대체로 전통적 지배가 행사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후계자를 내정하고 후계수업을 진행해 왔다. 이것은 세습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현재 북한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6)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성환, “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미,” 유석춘 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서울: 나남, 1992), pp. 359~88과 Reinhard Bendix, *Max Weber*, pp. 334~360 참조.

7) 자세한 내용은 黃山德, 『막스 베버』, pp. 142~180 참조.

3. 김정일 리더쉽의 정당성 문제

1. 북한의 정치문화적 특징

김정일 리더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정도로 지배자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도자의 정당성 여부는 그 국가의 정치문화적 전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된다.⁸⁾ 즉 철저히 선거에 의해서 지배의 정당성이 창출되는 국가도 있고, 세습제에 의해 지배의 정당성이 창출되는 국가들도 있으며 세습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왕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성격의 국가인가? 북한은 가부장제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신민형 정치문화를 소유한 국가라 할 수 있다.⁹⁾ 즉 북한은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아버지로, 노동당을 어머니로 대비하는 등 국가를 하나의 커다란 ‘대가정’으로 상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유교적 가산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민들은 ‘아버지 수령’에게 효성과 충성을 다하고 수령은 자식인 인민들에게 ‘육친적 배려’를 함으로써 ‘사회주의 대가정’인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북한적 정치문화의 특징이다.¹⁰⁾

8)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8), p. 30.

9) 徐載鎭·金台鎰, 『北韓住民의 人性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14; 崔星, “首領體系의 形成過程과 構造의 作動메카니즘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93.12), pp. 191~92.

10)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 1.3),”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104~07.

2. '수령 후계자'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 보유 여부

북한에서 최고 리더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지위를 이양받아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북한이 수령지위를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수령은 정신적 역할을 하고 따라서 수령의 전수는 북한인민들의 정신세계의 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양 곧, '신내림'은 수령 김일성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영적' 작업이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수령의 지위를 이양받는 것이 제도적 최고지위를 이양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이 당 총비서를 비롯한 최고지위를 점유한다고 해서 곧 수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령은 '최고뇌수'로서 인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총비서 등의 지위를 점유하지 않고 수령의 지위를 점유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수령권위 획득을 위해서는 제도화된 최고지위 획득 또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김정일은 1997년 당총비서에 추대되었고 1998년에 주석에 버금가는 국방위원장에 재취임함으로써 '제도화된 수령'의 지위를 점유, 정치적 정당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과정

김일성은 1960년대부터 세습을 비밀리에 준비하다가¹¹⁾ 1974년 김정

11) 북한의 선전자료들은 김정일이 이미 1960년대 초 김정일이 김일성대학 재학시절부터 후계자로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암시를 1967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만경대혁명학원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하겠습니까”고 강조하

일을 당내에서 후계자로 내정하였고 1980년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즉 김일성은 세습왕으로 김정일을 지명하였고 이것은 북한체제가 ‘김씨왕조’체제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내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지위를 공고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¹²⁾을 수정보완하여, 수령에 대한 ‘대를

였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이 1947년에 이미 발언한 바 있었지만 이것을 재차 강조한 것은 후계구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성,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1967.10.11),”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21.

- 12) 「10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 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나가야 한다.”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01~24.

그런데 이 「10대원칙」은 이미 김영주가 조직비서시절에 만들었다.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p. 133. 이와 관련 김정일은 1974년 2월 19일 문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최근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을 위한 10대원칙이라는 말도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라는 말을 하여 「10대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은' 충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대를 잇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김일성은 1986년 “노동계급의 당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워야 합니다”¹³⁾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품격과 자질이란 사상, 정신, 도덕적 풍모와 소질, 능력 등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특징을 말한다. 즉 북한은 수령후계자의 품격과 자질로서 첫째, 후계자는 수령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사상감정을 지녀야 하고, 둘째, 수령의 후계자는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지녀야 하며, 셋째, 후계자는 충실성과 예지, 영도력과 덕성을 그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지녀야 하며 이러한 품격과 자질을 빠짐없이 완전히 겸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따라서 만일 어떤 후계자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한다면 그 후계자는 그 지위와 역할에서 본질상 수령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¹⁵⁾

한편 북한은 후계자 문제의 요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⁶⁾ 즉 첫째, 후계자는 전민중적 추대에 기초해서 선출해야 하며, 둘째, 새세대의 인물을 선출해야 하고, 셋째, 수령생존시에 선출해야 한다 등이

「10대원칙」이 이미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974.2.1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13.

13)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87)』(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87), p. 64.

14)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출판사미상, 1989), p. 36.

15) 북한은 “우리의 수령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中央放送』, 1994.8.8.

16)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p. 45~52.

다. 따라서 탁월한 자질을 갖춘 수령의 후계자는 자기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민족의 번영과 민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사상정신적, 물질문화적 재산으로 될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그것으로하여 민중속에서 공인된 지도자로 추대되게 된다. 북한은 김정일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보유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김정일 후계자 옹립에 대한 민중의 절절한 염원은 전국 각지로부터 매일같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쇄도하는 편지, 청원서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든 김정일은 마침내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 비서로, 1974년 2월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사실상의 수령후계자가 되었다.¹⁷⁾

17) 제8차 전원회의는 원래 사회주의 대건설방침을 토의한 회의였는데 기본문제에 대한 토의가 끝나자 항일빨치산출신의 한 원로정치인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다른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김정일비서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자고 하였다는 것이다. 해방전 김일성과 항일운동을 하였고 해방후에는 김일성과 건당, 건국, 건군의 사업에서 투쟁했던 노전사들이 김일성의 수고를 덜어주고 김일성의 위업을 계승할 자를 모색중 탁월한 자질과 고상한 품모, 인민의 열망을 갖춘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제의가 회의참가자들의 전원찬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혁명 1세대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주장이다.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pp. 110~111.

4. 김정일 리더쉽의 실체

1. 강제기구의 장악

북한은 당, 국가, 사회 중 당이 전권을 장악하여 국가와 사회를 운영해 가는 당우위국가로서 당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최고 리더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도 없는 국가이다. 즉 북한 내에서 조선노동당의 지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1998년 수정된 ‘김일성헌법’ 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란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당의 영도는 수령후계자 김정일의 영도를 의미한다.

이처럼 수령의 ‘사당’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을 장악하지 않고는 누구도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대학 졸업 후 당관료로서 후계수업을 시작하였고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에는 수령의 유일지도체계 확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강화와 이를 통한 당·정·군 관료들의 장악에 착수하였다.

당은 정치국과 비서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비서국이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고¹⁸⁾ 그 중에서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가장 중요한 전문부서이다.¹⁹⁾ 후

18) 당규약 제26조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비서국은 당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관료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19) 김정일은 “조직부는 조직권을 틀어쥐고있는 당의 심장부서입니다. 조직부는 어디까지나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

계자인 김정일이 조직지도부장을 직접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부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조직지도부는 김일성·김정일을 제외한 모든 당기구와 관료들을 통제해 왔다. 즉 조직지도부는 정치국과 비서국은 물론 군부, 행정부 등을 예외없이 감시·통제하여 왔다.²⁰⁾

따라서 조선노동당은 스탈린 시대의 공산당²¹⁾보다 더 통제적이고 위압적이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이 두 부서는 체제 및 권력유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김정일은 그동안 조직지도부를 통해 당·정·군 엘리트 및 인민들의 신체적 통제를, 선전선동부를 통해 이들의 정신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후계자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

스카치폴(T. Skocpol)은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국가중심적 국가의 개념을 논하고 있다. 즉 그는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국제적인 정치·경제체제의 압력 아래에서 이에 대응하는 농촌공동체, 국가구조, 엘리트 조직의 형태에 따라 혁명의 성패가 판가름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국가가 정통성을 상실한 후에도 강제적 조직이 여전히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국가는 계속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대중을 기반으로 한 내부봉기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는데 기본을 두고 사업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여 조직부의 기능이 당을 통제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5.6.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54.

20) 조직지도부는 당권력서열까지 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서는 행사의 성격 즉, 주관부처가 당이나, 군부·행정부냐에 따라 서열을 정한다.

21) 스탈린의 당이론에 대해서는 李容弼, 『共產主義理論批判』(서울: 大旺社, 1982), pp. 236~38 참조.

아울러 그는 강제적 조직의 구조, 국가기구 내에서의 강제적 조직의 위치, 강제적 조직과 계급세력 및 정치적으로 동원된 집단과의 관련 등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혁명상황에 처하여 있는 국가를 분석하는 데에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하였다.²²⁾

이러한 논리에서 김정일이 북한의 강제기구인 군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호위사령부 등을 통제하는 당조직지도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리더쉽 발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조직지도부는 당중앙위 최고실무지도기구로서 실질적인 당 조직, 정치사업의 총참모부이다. 조직지도부는 김부자 유일지배체제의 직접 담당기관으로서 이 기구의 지시에 의해 당중앙위가 움직이고 북한체제가 작동되어 왔다. 당중앙위 정치국은 명목상 당최고기구일 뿐 당정책입안에는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치국은 상징기구이고 비서국 내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당총비서 바로 밑에 조직비서와 선전선동비서가 있고 그 아래로 각 부문담당비서들이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비서와 선전선동비서와 각 부문담당비서간의 권력차는 실제에 있어서 1계급차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조직비서는 후계자이며 ‘준수령’인 김정일이 직접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지위이기 때문이다.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1~13과까지 나뉘어져 있고 각 과가 국가의 주요 부서를 맡아 감시·통제·인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9, 10, 13과는 폭압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검열기구, 군 등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보고체계는 ‘3선(당조직계통·행정계통·보위부계통)·3일 보고·통보체계’와 ‘김정일직보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군대의 ‘3선·3일 통보체계’는 당조직계

22)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32.

통(정치부)·참모부계통·군대보위부계통이다. 즉 전당·전군·전국의 모든 단위와 부문의 기관·기업소 등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은 조직비서인 김정일에게 집중보고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²³⁾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가 된 이후 그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부심하였다. 김정일은 1967년부터 추진해 왔던 ‘유일사상체계확립’이 어느 정도 달성되자²⁴⁾ 1973년부터 1974년 사이에 ‘유일지도체제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모든 문건이 하급기관으로 하달되기 전에 자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²⁵⁾ 그리고 그는 1974년 4월 당원들에게만 배포된 비밀문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발표, 형식적이었던 유일지도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였다. 이 문건은 매우 역사적인 것으로서 김정일 후계자문제가 명시된 최초의 것이었다.²⁶⁾ 이후 김정일은 1974년 10월 비밀리에 개최된 당 제5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유일지도체제 확립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정치위원 겸 조직사상담당 비서로서 비밀보고를 하였다. 김정일은 보고를 통해 첫째,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의 전당적 실천, 둘째, 당내부사업지도서 작성, 셋째, 당조직·기구의 부서 및 직능의 조정

23)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p. 152.

24) 북한은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4조)”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주체사상이 유일 지배이데올로기임을 분명히 하였다.

25)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아래당조직들에 내려보내는 지도서와 지시는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과 나의 비준을 받은 다음에 내려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수령님과 나의 승인이 없이는 어떠한 문건도 아래에 마음대로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고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결재 이전에 자신에게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사업 통제를 본격화하였다.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60~61.

26) 『10대원칙』 제10항 참조. 『10대원칙』은 註) 11번 참조.

등 3대과업을 내놓았다.²⁷⁾

김정일은 김일성 유일지도체제확립을 전당·전군·전국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천해 갔다. 우선 당의 전당조직 내에 유일지도체제를 확고히 한 이후 군대에 대한 유일지도체제를 세웠고 뒤이어 정권·행정·경제 등 부문과 대외·대남 부문에 유일지도체제를 세우는 단계와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당·전군·전국적으로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유일지도체제 확립의 첫 단계와 과정이 되는 당조직정비는 1973년 9월부터 1974년 중반까지, 군대 내부에 대해서는 1974년 후반부터 1975년 중반까지, 그 이후 1976년 중반까지는 정권·행정·경제·교육·과학 부문과 대외·대남 부문에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²⁸⁾

김정일이 김일성 유일지도체제확립에서 기본 중심문제로 제기한 것은 우선 당조직기구 체계의 개편과 함께 당사업에서 기본핵으로 되는 당·군·국가 간부사업체계를 재정비·수립하는 문제, 당사업지도검열체계의 정비, 당간부대열의 정화, 지도이론과 방침·방식의 침투, 간부·당원들의 당조직생활과 그의 지도체계의 정비강화, 당홍보사업체계의 정비수립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증차대한 문제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김정일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점은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일원화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는 문제였다. 따라서 김정일이 당내 유일지도체계확립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최우선과제는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위시한 당조직기구들을 상황에 맞춰 정비·개편하고 간부사업체계를 정비·보강하는 것이었다.²⁹⁾ 즉 그는 당사업의 기본

27) 中央日報社, 『金正日』(서울: 中央日報社, 1994), p. 94.

28)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p. 142.

29)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에서는 앞으로 도, 시, 군 당기구를 한 20~30% 정도 줄여 생산단위의 초급당을 강화할데 대하여 연구해보아야 하겠습니까”라고 강조하고 당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976.2.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52.

핵심이 되고 있는 당·군·정 간부의 선발기준 및 임명과 노동해임·양성 훈련의 절차와 질서문제 등을 규정한 것을 기본내용으로 간부사업을 실시하는 데 우선적 관심을 집중하였다.³⁰⁾

우선 당조직지도부가 당·정·군 전반에 걸친 간부문제를 총괄적으로 장악·관장할 수 있도록 조직지도부의 기구를 개편하고 간부사업체계를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종래에는 간부문제를 당간부부의 지도하에 각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 취급하고 있던 것을 조직지도부가 직접 총괄적으로 장악·관장할 수 있도록 기구를 신설했다. 즉 김정일은 모든 간부문제를 조직지도부에 집중시키고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인 자신의 직접적인 지도·통제하에 간부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간부사업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간부의 선발임명의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 노동해임, 교육훈련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간부사업지도서를 직접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했다. 당내 경제부서를 제외한 부서에는 간부과를 신설하고 조직지도부 해당 간부담당과와 협동하에 산하 경제·교육·과학·문화·예술·언론·보도·출판 부문의 간부문제를 사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임명결정권은 조직비서에게 집중시켰다.

이때 간부로서 충원요건은 충성심이었다.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조금이라도 결여된 사람은 간부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³¹⁾라고 말하여 충성심이 제1요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체제관리에 들어가면 당성이나 충성심이 아닌 전문성에

30) 이 내용은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에서 필자가 추출하였음.

31) 김정일,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54;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49.

의해 관료들이 충원된다는 가설은 북한에는 맞지 않는다.³²⁾ 오늘날 북한의 관료들은 김정일에 대한 철저한 충성파들로서 당·정·군에 걸쳐 중첩적으로 지위를 보유하여 김정일체제를 지탱하고 있다.³³⁾

당조직지도부는 유일지도체제 확립과정에서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다. 특히 김정일에게 반대하는 친·인척들에 대한 탄압은 가혹한 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와 삼촌 김영주를 권력 전면에서 퇴장시켰다. 그는 김성애를 퇴진시키기 위해 「평양시당」과 「중앙여맹」에 조직지도부 및 호위국 검열원을 파견하여 김성애 측근의 월권행위를 철저히 파악, 김일성에게 보고해 그녀를 몰락시켰다.³⁴⁾ 이외에도 간부와 인민들에 대한 탄압은 매우 가혹하게 진행되었고 수많은 피압 박민들이 발생하였다.³⁵⁾

32) 田溶憲, “北韓政治體制的變化에 關한 研究”(高麗大學校大學院 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91.6), p. 210. 전용헌은 여기에서 북한의 체제 관리기를 1970.10~1980.10까지로 잡고 있다. 한편 도홍렬 교수는 북한이 향후에는 당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2중관료’를 충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都興烈, “엘리트 形成과 循環,” 도홍렬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 246.

33) 자세한 내용은 全賢俊 外,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참조.

34)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20여명의 검열원들이 1973년 말부터 약 5개월 동안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인 김성갑(김성애의 친동생)의 평양시 당시질의 비리를 쫓다. 또한 여맹사업을 검열해 김성애의 측근들의 비행을 쫓다. 그 내용을 보고받은 김일성은 즉시 평양시 당전원회의를 소집했고, 즉석에서 김성갑과 김성호(황해북도 당비서)를 비판했다. 평양시 당전원회의와 「여맹」전원회의를 통해 김성애 측근들은 철직되었고 김성애는 「여맹」위원장 지위는 유지하였으나 이후 일체의 공식활동은 중지되었다. 中央日報社, 『金正日』, pp. 100~101. 그러나 이들은 1994년에 복권된다.

35) 북한은 1972년부터 당중재교부사업을 벌여 10만명 이상의 당원을 축출하였으나 이후에도 당원들에 대한 충성심 심의는 계속되었다.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3), p. 313. 현재 북한의 계층분포는 핵심계층 약 25%, 동요계층 약 55%, 적대계층 약 20% 정도

한편 김정일은 조직지도부 사업에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공포분위기였다.³⁶⁾ 이와 함께 조직지도부의 임무를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직지도부의 임무는 첫째, 지방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사업의 강화, 둘째, 중앙기관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 및 간부 사업에 대한 역점, 셋째,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재토의사업 등이다.³⁷⁾

또한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무엇보다 우선해서 일반인민들을 지도해 가는 간부들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총화제도’³⁸⁾를 강화하였다. 그가 총화제도를 강화한 이유는 그동안 당간부들의 나태와 무식, 형식주의 등에 대해 심한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³⁹⁾ 아울러 김정일은 당원들이 당생활강화와 혁명과업을 성공적으

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인권의 虛와 實』(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pp. 26~31.

- 36) 김정일은 “무엇보다도 조직지도부일군들은 계급적 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계에 어긋나는 자그마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까. 조직지도부는 어느 부서보다도 계급적 날을 날카롭게 세워야 합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당사상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67.
- 37) 김정일, “당사상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73~74.
- 38) 총화제도란 일종의 반성회로서 총화기간 즉, 1일, 2일, 3일, 1주일, 1개월, 1년 등 일정기간내에 처리한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 시시비비를 가려 상호비판하고 반성하는 제도이다.
- 39) 김정일은 “지난 시기 우리 당조직들은 간부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합은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엮어매놓고 일상적으로 장악통제하면서 실속있게 도와줄데 대한 당의 요구를 옳게 관철하지 못한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간부들의 학습과 당생활을 강하게 통제하며 그들에 대한 개별교양체계를 옳게 세워야 합니다.”고 말하였다.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1973.8.2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89.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방법으로서 당생활총화제도 개선을 내세웠다. 그 이유는 첫째, 김정일은 1956~58년 사이에 청산된 것으로 알았던 ‘반당 반혁명종파분자’들이 잔존해 있음을 파악하였고, 둘째, 그는 당생활총화도 사전준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앉아 자기업무에 대해서 형식적인 ‘총화’만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김정일은 실질적인 권력의 2인자가 되자 당정비에 착수하였다. 그는 당원들의 나태를 추방하기 위해 일체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철저한 ‘총화’계획을 수립하였다. 김정일은 당원들의 당생활 강화를 위해 새로운 ‘2일 및 주 당생활총화제도’를 만들었다. 그는 우선적으로 문학예술부문 당조직들에 대해 이것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문학예술부문 일꾼들이 인테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넓은 사상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당시만해도 일반인민들의 문맹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부문 종사자들의 학력수준은 높았다. 따라서 이들은 불평불만이 많았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작품 속에도 그대로 형상화되었다. 즉 김정일의 판단대로 문학예술부문에는 ‘반당 반혁명종파분자,’ ‘부르조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⁴⁰⁾

이러한 조직생활의 결과에 대해 김정일은 당원들이 첫째,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하는 혁명적 기풍과 집단주의적이고 공산

40) 김정일은 “반당종파분자들은 작가들로하여금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박혀 글을 쓰게 한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가들 속에 자유주의를 조장시키고 그들을 현실에서 유리시켜 옳은 글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음흉한 작간이었습니다.”고 말하였다. 김정일,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1974.12.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283.

주의적인 생활기풍이 생겼고, 둘째, 문학예술분야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여 모든 문제를 당조직을 통해 해결해 가는 기풍이 생겼으며, 셋째, 사업상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까지 당조직에 보고하여 해결하였고, 넷째, 문학예술분야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이 높아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양되어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4대혁명가극을 창조하였다⁴¹⁾고 평가하였다.

결국 오늘날 조직지도부는 수령을 제외한 모든 당·정·군·인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총화’를 통해 감시·통제하는 초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지도부는 매제인 장성택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비롯한 김정일 충성파들로만 구성된 김정일 리더쉽 공고화를 위한 최첨병 기구이다.

2. 김정일의 업무 성과

김정일은 다양한 부문에서 리더쉽을 발휘, 정치통합을 이루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첫째, 김정일은 실사구시적 정책선택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을 당 및 국가의 중심가치체계(central value system)로 유지하고 있다.⁴²⁾ ‘현존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사회주의 이념은 사실상 사라졌으나 사회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한 주체사상은 북한내에서 여전히 김정일·관료·인민의 사고를 규정하는 규범이 되고 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

41)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1973. 8.2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p. 455.

42) 『평양방송』, 2000.8.8. “우리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

의 뇌수로 규정하고 있는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사망 이후에도 수령 후계자에게로 전수되었다.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으로 규정되는 준봉(conformity)은 김정일이 정상회담과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시 무소불위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념적 근거이다. 따라서 “장군님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명제는 단순한 충성심의 발로에서 도출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북한주민들의 삶이요, 생활양식이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남쪽을 방문한 북한이산가족들이 하나같이 ‘장군님 은 덕’이라고 말하는 것도 북한의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하등의 무리가 없다. 사회주의대가정론, 육친적 배려가 주요 덕목으로 토착화된 북한에서 ‘아버이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이다.

둘째, 김정일은 당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노동당은 경제난과 ‘선군정치’⁴³⁾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를 이끌어 가는 막강한 조직이다. 노동당은 수령 김일성과 수령후계자 김정일의 노선을 충실히 집행하는 전위집단이다. 분명한 것은 노동당이 인민의 이익보다는 김정일의 의사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김정일의 어떤 지시는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당원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개인사업을 거부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충실성을 발휘하는 등 ‘以身作則’함으로써 아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⁴⁴⁾ 희생이 큰 만큼 주민들의 당원들에 대한 비판은 커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황장엽씨의 망명, 서관희의 ‘무능,’ 최용해의 ‘부패’ 등 고위 당관료들의 일탈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당과 당원들은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보이고 있고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함으로써 국가보위의 첨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우

43) 이 용어는 1998년 10월 20일부터 사용되고 있다. 의미는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이다. 『중앙방송』, 1998.10.20.

44)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중접경지역 현장조사 보고서』(2000년 7월 9일~16일), p. 33.

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우위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해 군을 위무하는 한편, 각종 감시기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및 경제난 심화 이후 북한군의 역할은 국방이외에 경제건설, 사회치안 유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노동강도가 저하됨으로써 급하고 중요한 건설현장에 군돌격대는 물론 일반병사들까지 투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경의선 착공)날짜가 합의만 되면 우리는 38선 분계선 2개사단 3만5천명을 빼내 즉시 착공하겠습니다"⁴⁵⁾라고 말하여 군의 경제적 역할을 확인함과 함께 군통제의 자신감을 과시하였다.

아울러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이동이 심화되면서 인민보안성만으로는 치안유지가 어려워지자 중요 기업소나 협동농장, 국경이나 도로 등에 대한 경비를 군이 담당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의 역할 증대가 김정일은 물론 노동당의 영도체계를 훼손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군의 역할은 노동당의 영도를 더욱 잘 보존하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군은 '수령과 당의 군대'이고, 군장교들은 모두 군인이기 전에 당원이다. 그들은 당과 군대 중 하나를 택하라면 당을 택할 것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기반은 '군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⁴⁷⁾ 그러나 북한군은 軍한당위원회, 군총치국, 군보위사령부 등을 통해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음으로 인해 일체의 이탈행위가 봉쇄당하고 있다.

넷째, 김정일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경제난 해결에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는 식량난을 비롯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

45) 『중앙일보』, 2000.8.14. '방북언론사장단-김위원장대화록'

46)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중접경지역 현장조사 보고서』, 앞의 책, p. 11. 무산시의 경우 1994년부터 군인들이 협동농장 농사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47) 『한겨레신문』, 2000.8.14.

난, 생필품난 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비록 1996~97년기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통한 내핍과 외부원조를 통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각 경제주체들은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모든 경제난의 원인은 외화난에서 비롯된다.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의 활로는 외화를 주고 식량, 원자재, 원유 등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외화사정은 ‘주식 펀드(fund: 자금)’⁴⁸⁾외에는 완전고갈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일반 노동자, 농민, 하급간부 등에 대한 식량증양공급은 1995년 이후 거의 중지된 상태이고 식량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며칠분만 배급되고 있다.⁴⁹⁾ 이로 인해 일반 인민들은 물론 하급 전사들까지 식량자급에 나서고 있다. 정부차원의 식량난 해결 노력은 감자농사 장려, 토지정리 사업 확대, 연합기업소 해체,⁵⁰⁾ 외부원조 확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년에도 약 137만여 톤의 식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⁵¹⁾ 또한 공장가동률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⁵²⁾ 가동중인 공장도 전력난으로 인해 수시로 가동이 중지되

48) 북한에는 노력펀드, 기술자펀드, 문화펀드, 주택펀드, 농기계펀드, 상(장관)펀드, 총리펀드 등 수없이 많은 펀드가 있다. 펀드는 각 분야에 배정된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식펀드’도 그 중 하나인 바, 김정일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다만 액수는 수억달러로 추정되거나 미상이다.

49) 식량배급 중단 시기와 관련 탈북자들의 거의 일치된 증언은 1994년 하반기부터 1995년 초순경이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중접경지역 현장조사 보고서」, 앞의 책, p. 38.

50) 현재까지 약 44개의 연합기업소가 일반공장으로 전환되었다. 김영운, “북한공장기업소 조직개편,” 『北韓』 통권 339호(2000.3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2000), pp. 88~99.

51) 세계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은 2001년도 북한식량부족량은 137만톤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통일부 인도지원국도 동일한 통계를 내놓았음. 통일부 인도지원국, [2001년 FAO/WFP 곡물작황평가 보고서], 2001.11.1.

52) 최원기·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일』(서울: 김영사, 2000), p. 258.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최대관심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석탄이나 수자원 확보로 모아지고 있다.

다섯째, 김정일은 경제난으로 인한 아사자⁵³⁾ 발생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1995년 이후 연인원 최소한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자에는 순수 아사자와 합병증 사망자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이다.⁵⁴⁾ 아사자 발생은 주민들의 정부불신과 개인차원의 물품매매 필요성을 제기시켰다. 주민들은 관료들을 비판하고 생존을 위해 각종 물품이나 공장기자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개인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김정일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⁵⁵⁾ 경제난은 총화사업에 대한 불참이나 태만을 야기하였고 농민시장의 암시장화를 촉진시켰다.⁵⁶⁾ 개인주의 사조도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김정일은 2001년에 들어서 경제난 해결을 위해 1월 4일 ‘새로운 관점’을 강조⁵⁷⁾하고, 1월 15일부터는 중국의 대표적인 개방지구인 상하이 푸둥(浦東)지구를 방문함으로써 관료들의 의식전환을 시도하는 한편, 자본주의교육을 위해 400여명 이상의 증견

53) 북한 아사자의 대부분은 1997~98년 사이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대홍수로 인해 식량배급이 완전 중단되었고 장티프스 등 전염병이 만연하여 많은 사상자가 났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중집경지역 현장조사 보고서」, 앞의 책, p. 40. 아사자 숫자에 대해 강정구교수는 1995.8~1998.5월까지 약 351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강정구, “북한식량난과 사회변화,” 강정구·법륜, 『민족의 희망찾기』(서울: 정토출판, 1999), p. 23.

54) 황장엽시의 주장. 조선일보사,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서울: 조선일보사, 2001), p. 106.

55) 경남대 북한대학원, 「조중집경지역 현장조사 보고서」, 위의 책, p. 47.

56) 이에 대해서는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33~42 참조.

57) 『로동신문』, 2001.1.4.

간부들을 해외에 파견하였다.

5. 결 론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의문의 주된 내용은 그가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북한과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김정일 리더십을 고찰하기 위해 스톡딜(Stogdill)의 리더십 특성이론을 원용하여 첫째, 그의 리더십은 정당성이 있는가? 둘째, 그는 엘리트 및 강제기구를 효율적으로 장악하고 있는가? 셋째, 그는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로 베버의 3가지 지배유형론 중 전통적 지배방법을 원용하여 김정일 리더십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전통적 지배는 오랜 전통이나 관습이 통치자의 지배에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여 준다. 즉 장기간의 전통과 관습때문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국민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지배하에서는 전통 그 자체가 최고의 권위이다. 그런데 전통적 지배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가부장제이다. 가부장제란 가족공동체안에서 가장에 대한 효성과 무조건적인 헌신, 복종이 미덕이 되는 제도이다. 그리고 가부장은 세습이 되어 진다. 가부장제 중 동양사회에 맞는 형태는 가산제이다. 가산제는 군주가 국가를 개인재산처럼 취급하는 제도이다.

수령을 어버이로, 국가를 '대가정'으로 치환하여 충성과 효성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유교적 가부장제 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서 지배의 정당성은 가산제처럼 가장인 김일성의 장자인 김정일로의 세습에서 도출된다. 이러한 관행에 입각하여 김정일은 1974년 당내에서, 1980년 당내·외적으로 수령의 후계자가 되었으며 현재 그는 북한의 최고권력자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은 전통적 방식의 정당성획득 양식을 띄고 있고 북한인민들의 신민적 정치문화는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과 외부정보 유입 증가로 북한인민들의 자의식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김정일의 정당성을 훼손할만큼 강한 것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요소인 인정, 의리, 연고, 예절을 주요 덕목으로 삼고 있는 북한인민들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있는 김정일에 도전하는 행위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김정일의 엘리트 및 강제기구 장악력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군부 등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최고강제기구인 당조직지도부 장악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당조직지도부는 당자체 뿐만 아니라 군부·내각·사회단체 등을 감시·통제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다. 김정일은 당중심국가인 북한에서 1974년부터 당관료로 등장하여 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당권장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고 1980년에는 공식적인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후계자가 된 이후 당·정·군, 대내·외 분야에 걸쳐 폭넓은 리더쉽을 행사하였다.

그는 1974년 이후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지던 당조직사업을 각종 ‘총화’제도를 통해 당조직지도부로 일원화시켰고 이를 통해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당관료들이

비판을 받았고 철직과 ‘당적 지도’를 받았다. 그 결과로 알려진 것처럼 수많은 북한의 고위관료들이 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었다.

결국 김정일은 당조직지도부 장악을 통해 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을 통제하고 또한 이들은 관료와 인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유일지도체제를 확립, 체제유지를 위한 리더쉽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안정유지와는 달리 김정일은 주민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식량난 해결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권위를 훼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는 경제난 해결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원조 획득, 분조관리제 변화, 농민시장 묵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IT산업육성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 경제난은 단기간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난 해결 여부는 김정일 리더쉽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독립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2 부 사상

IV. 사회주의론

박 형 중(선임연구원)

1. 서 론

북한은 1967년부터 소련 및 중국과 사회주의론을 차별화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차별화 이유는 중소 이념 분쟁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북한의 독자 노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식 사회주의론은 198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김정일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론을 재정립했다. 그 계기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소련·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사회주의론의 두 번에 걸친 수정의 계기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 사회주의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로운 사회주의론에서 김정일은 소련·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사회주의를 아직도 ‘옹호고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는 과거 북한의 사회주의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그 이론을 재정립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론이다. 북한의 전통적 사회주의론이 중소의 사회주의론과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맑스-레닌주의적인 논리체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었다면, 1990년대 김정일의 ‘우리식 사회주의’론은 한층 주체사상식 논리체계와 어휘를 구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김정일의 여러 문건을 중심으로 김정일이 발전시킨 사회주의론의 내용을 알아본다.

2. 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완전승리’ 접근론

김정일은 1991년 ‘우리식 사회주의’¹⁾론에 대해 언급할 때까지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론 전개는 하지 않았다. 이를 볼 때, 김정일의 사회주의 관념은 김일성에 의하여 1967년 정립된 북한식 ‘사회주의 과도기’론과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67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²⁾라는 글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단계)론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 목적은 첫째, ‘우경기회주의’(소련) 및 ‘좌경기회주의’(중국)과 구별되며, 둘째,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척하기 위해서, 셋째,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한 경우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차별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김일성 논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도기’의 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와 둘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지속성 문제였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게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라 간주했다. 김일성은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 나라 또는 일부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였을 때”라도 “세계에 자본주의가 아직 남아있는”

1)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 선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0~80.

2)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3) (통일연구원 XML 원문자료).

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제정된 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중의 하나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1986년 김일성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라는 논문에서, 북한 사회주의의 단계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로 이해하고, 당면 목표로서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목표로 내걸고 있었다.³⁾ 김일성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임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과도기에 해결하여야 할 우선적인 과업은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가 섰다고 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는 사상, 기술, 문화적 낙후성,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 물질기술적 토대의 취약성,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의 저급성,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 외부적대세력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파괴 압해 책동의 지속 등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에 들어선다는 것인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어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며,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 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라고 정의되었다. 김일성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

3)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86년 12월 30일, 「김일성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통일연구원 XML 원문자료.

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가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인 요구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북한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완전승리’ 접근론과 함께, 김정일도 1987년 9월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가자』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과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현대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역사발전과정을 사회주의 승리의 역사’로 간주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투쟁은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으로서, 새 것이 승리하고 낡은 것이 멸망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어길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여야 하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화하여 당의 둘째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이 ‘사회주의 동방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확신에 찬 입장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김정일은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수정주의, 개량주의가 범람하여 혁명과 건설에 큰 해독을 끼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비롯한 나쁜 사상독소와 ‘날나리풍’의 침습을 허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⁵⁾

4)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9월 25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2~47.

5) 김정일, “선전일군들은 정책적대를 세우고 일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1987년 12월 15일, 『김정일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99.

물론 위에서 언급된 문헌에 나타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김정일의 1992년 논문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 내이자』⁶⁾이다. 이 논문이 쓰여진 90년대 초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했고, 북한 자체로서는 사회주의권과의 무역 단절에 의해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일층 심화되는 단계였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논문은 당시의 북한을 마치 ‘사회주의 천국’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안정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치료받을 걱정, 공부할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을 비롯한 온갖 걱정을 모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아침에 평양시를 한바퀴 돌아보았는데 누구라 없이 웃을 화려하고 단정하게 입고 거리길이 미여질 정도로 오고갔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동산이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은 꽃다발을 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습니다. 남조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인민들이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과 신심도 가지지 못하고 궁핍과 불안, 고통 속에서 설을 쇠지만 우리 인민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인민생활문제를 원만히 풀지 못하였지만 생산과 건설을 더 잘하여 전체 인민이 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 살게 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⁷⁾

6)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59.

7)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p. 259.

3. 90년대 초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인식

김정일이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하여 최초로 본격적으로 언급하면서, 대책을 제시한 것은 1989년 6월의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자」⁸⁾에서 였다. 그 후 특히 90년대 초, 김정일은 수 차례에 걸쳐 “쏘련을 비롯한 일부 구라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의 총로선의 정당성을 론증”⁹⁾하고 있다. 주요 문헌들로서는 1990년의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1992년의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4년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러 논문에 나타나는 기본 논지는 최초 논문인 1989년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자」에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수정주의, 개량주의자들이 개혁, 개편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좌절을 추진한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수정주의, 개량주의라는 용어와 함께 ‘현대사회민주주의’를 거론하고 있다. 이는 주로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김정일은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은 ‘<새로운 사고방식>, <민주주의>, <다당제>, <정치적 다원주의>, <공개성과 개방>,’

8) 김정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책임비서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9일, 12일, 『김정일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42~392.

9) 김정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4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1.

<개편과 개혁>, 또는 <제3의 길>을 떠벌이면서 사회주의를 변질시켜 자본주의에 평화적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사회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거부하면서 <행정-관료식 사회주의> 대신에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떠벌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⁰⁾

김정일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하고 또는 붕괴한 주요한 원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당이 변질된 것'을 지적했다. 김정일은 "계급적 원수들과의 대결전에서 적지 않은 사회주의나라 로동계급의 당들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 주되는 원인"은 "이 나라 당들이 옳은 당건설 이론을 가지지 못하고 당을 튼튼히 꾸리지 못한 데 있다"고 보았다.¹¹⁾ 즉, "맑스-레닌주의 당건설 이론이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적지 않은 당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교조주의적으로 매달리다보니 당 건설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변천되는 시대와 전진하는 혁명이 요구에 맞는 전투력있는 당을 건설할 수 없었다"¹²⁾는 것이다. 이를 기화로, "현대수정주의가 로동계급의 당을 변질의 길로 이끌어갔다"는 것이다.¹³⁾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실례로 들

10) 김정일,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5월 30일, 『김정일 선집 제10권』, pp. 108~113.

11)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0월 10일, 『김정일 선집 제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78.

12)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p. 278.

13)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p. 279.

고 있다. 첫째, 노동계급의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은 것, 둘째, 당의 노동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면서 <전인민적당>에 관한 이론을 들고 나와 당을 계급적으로 변질시킨 것, 셋째, 노동계급의 당의 사상적 전일성을 부인하고 당안에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마구 끌어들이으로써 당의 사상적 기초를 허물은 것, 넷째, 당안에 중앙집권적 규율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당을 조직적으로 약화시킨 것, 즉,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당의 본성에 어긋나게 당을 행정기관화, 권력 기관화함으로써 그 대중적 기반을 약화시킨 것, 다섯째,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하지 않고 물질적 자극을 절대화하면서 물질생활 한 면만 내세운 것, 여섯째, 특히 근본원인은 당의 영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며, 일곱째,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사대주의를 한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수정주의 비판’과 ‘당변질론’은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1991년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이다』와 1992년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 로선』을 거치면서, 김정일의 사회주의 붕괴 분석에서 주체사상식 논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그는 위의 1992년 논문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한 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을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 한데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 한데 있다”고 보고 있다.¹⁴⁾ 즉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주체의 역할을 높

14)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김정일 선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77.

어나가는 것”¹⁵⁾인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건설을 어떤 원리에 의거하여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을 영도하는 당들이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였으나, 이 과제가 잘못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선행한 공산주의 이론은 역사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한성을 보지 못하고 교조주의적으로 적용하거나, 다른 편으로 맑스주의 혁명적 진수를 부정하고 수정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오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일부 나라들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경제건설만 내밀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지 않았다¹⁷⁾는 것이다. 둘째, 이들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인민적인 정치방식을 확립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못함으로써 인민들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키고 대중의 창발성이 높ی 발양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일부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정권은 섰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낡은 사회의 그 주인인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특정한 사람들의 사업으로 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관료주의가 자라나 사람들의 창발성을 억제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으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⁸⁾ 경제적 차원에서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를 지도관리하는데서 경제기술적지도와 행정식방법, 물질적자극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관리에서 관료

15)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77.

16)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77.

17)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80.

18)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81.

주의를 부식시키고 사람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 본위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잔재를 조장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다.¹⁹⁾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또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질적 차이를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이다.²⁰⁾ 즉,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고 로동계급적 립장이 확고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주성된 난관 앞에서 동요하고 포기하는 데로 나아갔”²¹⁾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과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와 경제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데로 나아갔”는 데, “이러한 수정주의정책의 결과로 사회가 점차 변질되어갔으며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므로써 사회주의의 변질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는 것이다.²²⁾

이밖에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으로, “사회주의 나라 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²³⁾

김정일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원인을 “제국주의자들

19) 김정일,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창립 45돛을 맞는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7월 1일, 『김정일 선집 제11권』, p. 347.

20)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81.

21)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83.

22)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83.

23)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84.

과 반혁명세력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우경 기회주의 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로도 보고 있다.²⁴⁾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질식시키기 위하여 일찍부터 침략과 압력, 봉쇄와 회유를 비롯한 갖은 파괴책동을 직접 감행하는 한편 공산주의운동 및 노동운동의 상층에서 나타난 혁명의 타락분자, 변절자들을 저들의 앞잡이로 리용하여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이라고 한다. 즉,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운동에서 일어난 사상적 혼란과 우여곡절은 다 그 상층에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⁵⁾

4.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사회주의 옹호 고수를 위한 대책

김정일은 여러 국가에서 사회주의 집권당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의해 되돌아 간 것은 “인류역사의 전반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일시적 현상”²⁶⁾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 책동은 전면적인 과탄을 면할 수 없을 것”²⁷⁾으로 간주했다. 또한 “지금 자본주의복귀의

24)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김정일 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51.

25)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p. 351.

26) 김정일,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년 10월 10일, 『김정일 선집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72.

27)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길에 들어선 나라들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파산, 사회적 혼란을 겪고있으며 완전히 무정부상태에 빠지고있”는 데, “날로 심화되어가는 이 위기는 그 어떤 자본주의적처방도,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도 멈춰 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²⁸⁾ 그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복귀의 길을 걷고있는 일부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사회주의 리념과 사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반증하여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²⁹⁾

김정일이 ‘사회주의 집권당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로의 복귀’라는 사태로부터 이끌어낸 교훈은, “새로운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재건하며 사회주의 위업을 양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는 것이었다.³⁰⁾ 그 ‘절박한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 기초 위에 올려 세우는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김정일이 사회주의론을 ‘새로운 과학적 기초’에서 세운다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과거 맑스-레닌주의적 논리구조와 어휘(예를 들어, 사회주의 과도기, 완전승리, 프로레타리아 독재 등)를 기초로 했던 사회주의론을 주체사상식 논리구조와 어휘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작업은 1991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시작되어 1994년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일단락되고 있으며,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론으로 정식화되고 있다.

김정일의 말을 빌리자면, ‘새로운 과학적 기초’는 “선행한 사회주의

연설, 『김정일 선집 제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93.

28)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p. 293.

29) 김정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4일, 『김정일 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1.

30)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75.

학설의 역사적 제한성을 극복하며,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외곡과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김정일에 의하면, 이러한 ‘역사적 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이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어 있었다. 즉, 김일성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적운동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 올려 세웠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밝혀진 바에 따르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며, 북한의 ‘사회주의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라는 것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두 요새인,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는 데, 여기에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³¹⁾

김정일은 사회주의 옹호 고수를 위한 대책을 이미 제시한 원인 분석 내용과 결부하여 크게 보아 이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휘하는 것, 둘째, ‘당의 강화’이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은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론에 잘 나타나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31)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1994년 11월 1일, 『김정일 선집 14권』, p. 463.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보았다.³²⁾ 이러한 근본 방도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잘 체현되어 있는 바, 이는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서, 북한 사회주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이라는 것이었다.³³⁾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원칙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주장했다. 첫째, 우리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둘째, 우리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 떠 세운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인데, 이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고 간주되었다.³⁴⁾ 즉, 정치생활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생활에서는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에서도 주인’이며,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 관리도 인민대중 자신에 의하여, 창조적 노동생활, 유족한 물질생활, 생산력 발전을 위한 넓은 길’이라는 것이다. 사상문화 생활에서³⁵⁾ ‘인민대중은 정신문화적 재부의 창조자와 향유자로서, 고상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로동

32)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77.

33)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 선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0~80.

34)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p. 53.

35)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p. 65.

계급 혁명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사람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상혁명’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³⁶⁾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옳은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당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한다. 수령은 영도의 중심이며, 수령의 영도는 로동계급의 당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공고성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 역량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 성격과 그 령도적 역할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당과 관련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즉, ‘당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하며,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 단결해야하고, 당 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며, 당의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본성에 맞는 사업방법과 작풍을 세워,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인민대중에 복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주체의 혁명적 당 건설의 기본 원칙’³⁷⁾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둘째, 당을 근로하는 인민의 대중적 당으로 건설한다. 셋째,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한다. 넷째,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한다. 다섯째,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당을 꾸린다. 여섯째,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의 기본 임무로서, 온사회를 사상적으로 개조하기 위해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운다. 이를 위해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이 균중도 책임지고 교양하며, 균중속에서 정치사업을 널리 벌려야 한

36)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p. 70.

37)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년 10월 10일, 『김정일 선집 제14권』, p. 185.

다. 군중교양의 기본방법은 해설과 설복이며, 특히 청소년 교양에 힘을 넣어야 한다. 일곱째, 온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한다. 여덟째, 혁명과 건설에 대한 혁명적 당의 령도는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로 되어야 한다. 아홉째,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한다는 등이다.

‘당의 강화’와 함께,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 내이기’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을 ‘당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당사업의 근본 목표는 ‘온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³⁸⁾ 이를 위해 첫째,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둘째,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해야 하는 데,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 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하며, 복잡한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야 한다. 특히 복잡 군중을 포함한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려면 일군들이 우리 당의 광폭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당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척결해야 한다. 넷째, 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이밖에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잘하는 것,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당의 강화,’ ‘당사업’의 강화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상사업’의 강화였다. 김정일은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이 남긴 가장 심각한 교훈은 사회주의의 변질이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채 말아 먹게 된다’고 보았다.³⁹⁾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38)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 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48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라고 보면서, 사상 사업의 기본입무를 ‘온 사회를 사회주의사상으로 일색화 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사상사업은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집단주의, 그 집단주의의 최고표현이자,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서 당에 대한 충실성을 교육해야 했다. 이밖에도 주체의 혁명전통,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고상한 집단주의 도덕품성 등을 교양하면서, 비사회주의적 사상요소, 수정주의와의 투쟁도 벌여야 했다.

사상교양과 관련하여 보다 방어적 조치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자유화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 있고 남과 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적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이 악랄하고 교활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서 ‘자유화 바람 차단’은 특별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하여서는 “모기장을 든 든히 쳐야” 하는 데, 특히 청년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적들의 자유화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⁴⁰⁾ ‘자유화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의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도 강조되고 있다.⁴¹⁾

경제와 관련해서는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이 요구되었다.⁴²⁾ 김정일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 원리로서,

39)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1995년 6월 19일,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8.

40)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p. 266.

41)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제12권」, p. 288.

42) 김정일,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선로

첫째,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것, 둘째, 정치적 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것, 셋째,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 것, 넷째,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사회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을 다 같이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즉,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함으로써, 개인주의, 리기주의에 반대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며, 국가에 의한 경제의 통일적인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⁴³⁾

김정일은 1995년부터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무엇보다도 인민군대를 강화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이 때부터 이른바 ‘선군정치’론을 펴기 시작했다.⁴⁴⁾ 그는 1997년경 이를 더욱 강조하는 가운데, “교훈은 군대를 강화하는가 강화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졌지만 우리에게 는 강력한 인민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그 어떤 광풍이 불어 와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뜻에서, 김정일은 “우리 당은 우리의 혁명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는 한편 나라가 처한 침예한 정세에 대처하여 군사를 국

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김정일 선집 제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36~378.

43) 김정일,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p. 345.

44) 김정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

45)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55.

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우리의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고 평가하면서, “전군이 우리 당을 옹위하고 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었습니다”고 칭찬했다.⁴⁶⁾

5.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김정일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붕괴, 북한식 사회주의의 개념정의 자체를 논문의 주요 주제로 다룬 것은 1994년 11월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1995~1997년 말까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의 시기와 그 이후 김정일은 ‘사회주의’론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보다 실무적이고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초반 사회주의 붕괴 충격기에 김정일이 ‘사회주의 옹호 고수’론과 주체사상식 논리체계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정립하는 단순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고 있다. 김정일은 90년대 초반, 그리고 ‘고난의 행군’기의 여러 모색을 종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차원에서, 또한 덜 현학적이고 실무적 차원에서 국가 목표로 이른바 ‘강성대국’론을 제기하고 있다.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이 1997년 9월 조선노동당 총비서 취임 직전에 언급되기 시작하고, 1998년 10월 헌법 개정 직전인 1998년 8월경부터 국가목표로 제시되었

46) 김정일,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전당 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7년 1월 24일,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76.

다.⁴⁷⁾

김정일은 1999년 1월 1일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논문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로 개념 정의하면서,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앞날의 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⁴⁸⁾ 그는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목표로 경제강국건설을 제시하면서, 그 돌파구는 전기문제와 식량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방공업 강화, 인민생활문제 해결, 기념비적 건설의 촉진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며 국방공업은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군사와 국방공업을 떠나서는 경제강국도 건설할 수 없으며 나라와 인민의 안녕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벌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운지 오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인민생활문제를 빨리 풀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첫째, 경공업부문에 자금을 대주어 천과 신발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공장들을 추켜 세워 필수소비품문제를 풀도록 할 것, 둘째, 보건부문에 돈을 대주어 상비약을 비롯한 약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장건 55뚝을 경축하기 위한 기념비적 건설을 잘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평양시 건설에 힘

47) ‘주체의 강성대국’이라는 용어가 『로동신문』, 1997.7.22 사설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론이 국가전략 목표로 제시되었다.

48)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8(1999)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52~464.

을 기울여 ‘혁명의 수도’로 더욱 웅장 화려하게 꾸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강성대국 건설의 여러 원칙도 제시했다. 첫째, ‘자력갱생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 <개방> 바람에 끌려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강성대국건설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부대인 로동계급, 농업생산의 직접 담당자인 농업근로자, 강성대국 건설의 돌격대인 청년, 추동력인 과학기술 등의 고조를 이루어 내야 했다. 셋째, 혁명의 계급적 지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 것, 넷째,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할 것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행정대행 현상을 없애고, 경제사령부로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옹기 실현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군의 일본새와 작풍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세도와 관료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앨 것을 지시했다.

6. 결 론

1967년 김일성에 의해 정립된 북한식 사회주의론(과도기론,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은 8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 이론은 보다 분명히 맑스-레닌주의식 논법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의 북한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완전승리’에 거의 접근했다고 하는 낙관론에 입각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종반과 90년대 초 소련·동유럽권의 사회주의 붕괴 및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는, 과거의 사회주의론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제기했다. 이러한 작업은 1991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이다」에서 시작되어 1994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일단락되고 있다.

김정일에 의해서 재정립되는 90년대의 ‘사회주의’론은 과거의 사회주의론과 내용과 강조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여 준다. 첫째, 김정일의 사회주의론은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도 사회주의 그 자체가 옹호 고수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집중해 있다. 둘째, 김정일의 사회주의론은 과도기론이나 사회주의 완전승리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의 여러 ‘철학적’ 내용과 결합시켜 보여주고 있다. 셋째, 과거의 사회주의론이 사회주의 단계 구분과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면, 김정일의 사회주의론은 ‘사회주의’ 그 자체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방법과 원칙, 예를 들어 ‘당을 강화할 것,’ ‘인민군대를 강화할 것,’ ‘사상사업을 앞세울 것’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정일은 1994년 11월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후로 사회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등장한 것이 1998년 이후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이다. 이 이론의 특징 중의 하나는 -1992년 문헌까지도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 사회주의를 이미 ‘인민이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나라’로 규정하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V. 인간관

조 민(선임연구위원)

1. 서 론

1. 주체사상의 창시

김정일은 김일성 탄생 70돏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년 3월 31일)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내용을 가장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의 보다 발전되고 체계화된 논리체계로 김정일의 노작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세계 철학사에 있어서 주체사상의 ‘독창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류의 염원과 철학사상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었다고 한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역사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다. 주체사상은 역사발전과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된 것으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이 멀리 전진하고 역사발전에서 새로운 전황이 일어나고 있던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김정일은 “수령님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

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인류역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습니다”고 하였다.¹⁾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사상이 요구되는 바, 주체사상은 또한 조선혁명의 실천적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었다는 말이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어 나올 수 없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시대적, 역사적 조건에 기초하고 혁명투쟁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며 오랜 기간의 투쟁 속에서 진리성이 검증되고 내용이 풍부화됨으로써 전일적인 사상이론체계로 완성되게 된다. 김일성에 의해 창시된 주체사상은 김정일에 의해 끊임없이 심화 발전되고 완성되어 인류철학사상의 최고정화로, 시대와 인류를 향도하는 지도사상으로 되게 되었다고 한다.

2. 주체사상의 본질 및 진수

주체사상의 내용과 구성체계는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사상의 내용은 주체사상의 본질, 주체사상의 진수, 주체사상의 구성체계로 구분된다. 주체사상의 구성체계는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주체사상의 본질

주체사상의 본질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

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김정일선집 7』(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45.

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라는 데에 주체사상의 본질이 있다.²⁾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밝힌 혁명학설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을 밝히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진로를 밝히는 사상이라는데 주체사상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운명개척에서 사람, 인민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사상,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 인민대중의 주인된 지위, 주인된 역할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체사상의 진수

주체사상의 진수는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데 있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주체사상의 진수”이며 여기에 주체사상의 혁명적 본질이 있다.³⁾ 주체사상의 진수는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즉 운명의 주인은 인간자신이다. 그 어떤 하느님이나 신의 계시를 따라야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인간의 운명이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객관적 제조건이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은 인간자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진수이고 핵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

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9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448.

3) 김일성, “가나정부기관지 《가나타임스》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1년 10월 8일)”, 『김일성저작집 36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을 밝힘으로써 다른 여타의 철학사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독창성을 명백히 하고 모든 내용과 구성체계를 사람중심 논리에 기반하여 전개하고 있다.⁴⁾

본고에서는 「김정일선집」 가운데, 인간관을 밝힐 수 있는 문건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90.5.30),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1996.7.26) 등의 논문을 통해 김정일의 인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람위주의 철학사상

무릇 철학사상은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간관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철학사상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 주체사상도 이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주체사상은 모든 철학사상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인간관 즉, 인간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여타의 철학사상과 구별되는 논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해명함으로써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과학적으로 근거지어 준다고 한

4) 주체사상에서 쓰이는 ‘주체’라는 개념은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주체’ 개념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을 표현하는 철학적 술어이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뜻,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뜻을 철학적으로 집약화하고 일반화하여 쓰는 개념이다. 따라서 ‘주체’라는 개념은 이전의 철학자들이 논의하여온 ‘비아(非我)’, ‘객체(객체)’, ‘객관’과 같은 개념과 대립된 개념으로 써왔던 ‘자아(自我)’, ‘주관’, ‘주체’(담당자)라는 개념과는 뜻이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조성박, 『주체사상』(평양출판사, 주체88(1999)년), p. 13.

다. 사람이 왜 세계의 주인으로 되며 세계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해답을 주려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즉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해명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 사람위주의 철학사상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의 면모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인간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힌 사상이라는데 주체사상의 근본 특징이 있다.

김일성은 일찍이 “주체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사상입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철학사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데에서 나타나 있다.⁵⁾

그렇다면 왜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고 하는가?

첫째, 주체사상이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계의 모든 문제를 고찰하고 대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자연과 사회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계를 고찰하고 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물질을 중심에 놓고 세계와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철학이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저서 『신성가족』에서 ‘물질은 모든 변화의 주체’라고 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세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주관주의나 세계를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객관주의와도 무관하다.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는 것은 주관주의를 배격하고 유물변증법적 입장과 방법을 전제로 하면서도 세계의 주인

5) 김일성, “가나정부기관지 《가나타임스》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1년 10월 8일),” 『김일성저작집 36권』.

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찰하고 해결해 나가는 입장이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 쓰이는 ‘사람위주’, ‘사람중심’이라는 개념은 ‘인간본위’(인본주의), ‘인간중심’(인간중심주의)이라는 개념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인간본위’는 사람을 신에게 예속된 존재로 보며 신앙심만을 인간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종교적 견해에 대치하여 현실적인 인간을 긍정하고 지상에서의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인간중심’이라는 개념은 인간문제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고 인간문제의 해명을 목적으로 삼는 견해 또는 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세계의 모든 변화발전이 모두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관념론적 견해이다.⁶⁾

둘째, 주체사상이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철학사상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운명개척에서 제기되는 세계관적 문제들을 해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사람위주, 사람중심의 철학으로 되었다.

이렇듯 주체사상은 세계와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는데 기초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밝혀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사람의 운명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람위주의 철학임을 강조한다.

6) 조성박, 앞의 책, p. 18.

3. 김정일의 인간관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일찍이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다고 한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사람위주의 철학적 원리로, 주체사상은 새시대의 세계관을 밝힌 것으로 그 초석을 이루는 철학적 원리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철학사상은 대개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아왔다.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원리는 물질의 일차성, 존재의 일차성에 관해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밝히고자 한 철학사상이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에 관한 문제는 선행철학들에서도 수많은 논의되어 왔지만 대부분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떠나 순수 인간에 대한 추상적인 견해에 머물러 있었으나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마르크스주의에 의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

서 제기되고 해명되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면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새롭게 밝혔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 해명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사회적 인간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천명한 것은 세계관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게 한 철학적 발견임을 강조한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 다시말하여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세계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라는 사상은 관념론이나 형이상학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관념론이 세계와 사람의 운명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비주의에 귀착된다면 형이상학은 세계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며 따라서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宿命론에 귀착된다.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상은 신비주의와宿命론을 부인한 유물론적, 변증법적 입장을 전제로 한다.

주체사상은 물질세계발전의 최고산물인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원리를 독창적으로 정식화함으로써 세계관의 초석을 새롭게 밝혔다고 한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세계관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상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세계관이 있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힌 것은 없었다고 하면서, 세계를 관념이나 정신의 세계로 보는 관념론자들은 더 말할 것 없고 지난 시기 세계를 물질의 세계로 본 유물론자들도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였던 것을 주체사상에 의해 비로소 온전히 해명되었다는 주장이다.⁷⁾

주체사상은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종래와는 달리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변화발전에 대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였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주체의 관점과 입장은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식 활동, 실천활동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가 된다고 한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지금까지 오랜 역사적 기간을 통하여 사람에 대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으나 올바른 해답이 주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시기의 사람에 대한 이해는 주로 정신적 존재로 보는 견해와 물질적 존재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단순히 자연적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순수 정신적 존재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도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 존재라는데 다른 생물학적 존재들과 구별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마르크스철학은 사람의 본질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규정했다. 마르크스철학이 사람의 본질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규정한 것은 사람을 순수 정신적 존재로 보거나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비과학적 견해를 타파하는데서 역사적 공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철학은 사람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아니다. 주체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온갖 그릇되고 비과학적인 견해, 불충분한 견해를 극복하고 과학적이고 완벽한 견해를 확립하였다고 한다.⁸⁾

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앞의 책, pp. 206~207.

8) 조성박, 앞의 책, pp.49~50.

2. 사람의 본질적 특성

그러면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에 대한 견해이다.⁹⁾

수령님께서서는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사람도 물론 물질적존재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물질적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이며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입니다. 사람은 자연계에서 벗어어나올 때 벌써 특출한 존재로 등장하였습니다. 생명을 가진 다른 모든 물질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지만 사람은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여 자기에게 복무하게 만듦으로써 생존하며 발전하는것입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사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해명을 주시였습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속성입니다. 세계에서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며 자기의 목적을 실현해나갑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오직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입니다.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사회적 존재라는 규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하나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김일성은 인간의 본질을 자주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앞의 책, p. 150.

근본입장으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인데 이것은 결국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고 하였다.¹⁰⁾ 이처럼 아직 이 단계에서는 인간 본질을 창조성과 의식성을 포함한 것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창조적 입장’과 ‘사상의식의 강화’ 라는 방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인간 본질을 자주성에 입각한 단일 차원의 이론을 확대 발전시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세 가지 속성을 인간 본질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확립한 주체철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 본질적 특성을 이루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란 무엇인가? 이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

① 자주성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측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간다.

10) 김일성, “오스트랄리아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4년 11월 4일),” 『김일성저작집 29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한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자주성은 자유와 독자성을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자유는 자주성을 실현한 상태를 말한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가 실현되면 즉, 자주성이 실현되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따라서 자주성이라는 개념은 자유라는 개념과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차이가 있다. 자주성은 자유라는 개념보다 폭이 넓은 개념이다.

자주성이란 개념은 독자성이라는 개념과도 공통성과 차이점이 있다. 독자성이란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자기 판단과 결심에 따라 해결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독자성이라는 개념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자주성이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자주성은 단순히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하려 하지 않는 성질과 함께 온갖 예속을 반대하고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성질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자주성이란 개념은 독자성이란 개념보다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주체사상에서 밝힌 자주성이란 개념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자유라는 개념과 독자성이라는 개념을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보다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독창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¹¹⁾

이러한 자주성은 사람의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첫째, 자주성은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자연의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다스리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

11) 조성박, 앞의 책, p. 56.

한다. 사람이 자연의 보다 깊고 넓은 영역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요구에 맞게 이용하는 것은 자주성이 실현되는 구체적 표현이다.

자주성은 또한 사람이 생산수단을 더욱더 풍족하게 생산하고 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서 나타난다. 사람은 자연을 개조하여 식의주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획득하고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연에 대한 지배와 개조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수단을 만들어내어 자연을 개조하는 노동활동을 더욱 보람차게 한다. 이는 사람이 자연에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개조하여 길들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자주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자주성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온갖 사회적 예속을 반대하고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성질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여 자주성은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얽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해 나가는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자주성은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와 예속,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반대하는데서 나타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려고 하는데서 표현된다.

자주성은 또한 사람이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인식하고 사회생활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도 표현된다. 사람은 사회발전법칙에 맞게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정신문화적, 물질적 부를 창조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꾸려나간다.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낡고 부패한 사회적 관계가 끊임없이 새롭고 선진적인 사회적 관계로 교체되고 사회의 정신적 및 물질적 부가 부단히 창조되어 사회생활이 발전해온 사실들은 사람이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해온 과정이었음을 실증해준다.

세계, 자주성은 인간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낮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높은 사상의식 수준과 문화수준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서 나타난다. 사람은 부단히 자신을 개조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적인 존재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에게 예속되어 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살아나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사람은 자주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존엄있는 존재로 된다.

② 창조성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존재,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이다. 창조성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로, 사람은 창조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창조적 존재이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에 말하는 창조성이란 무엇인가? 김정일은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창조성으로 하여 사람은 낮은 것을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 것으로 개변시켜나갑니다”고 밝혔다.¹²⁾ 창조성이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창조성은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의 성질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사람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창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명물질 일반의 활동에

1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앞의 책, p. 151.

는 합목적성은 있으나 목적의식성은 없다. 곤충을 잡기 위해 줄을 늘이는 거미의 활동이나 먹이를 저장하는 다람쥐의 활동은 생존을 위한 합목적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본능적인 행위일 뿐이지 목적의식적인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리 머리 속에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목적을 세우고 이 목적에 맞게 새것을 구상하고 설계하며 그 다음에 실천활동을 벌인다. 이는 사람이 목적의식성을 고유한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창조성은 또한 낡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만들어내는 성질로 표현된다. 또한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개조를 변화된 조건과 실정에 맞게, 자기의 처지에 맞게 해나가는 성질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사람은 모든 일을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성질은 창조적 활동의 주요한 측면을 이룬다. 이처럼 창조성은 자주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의식성

사람은 의식성을 가진 존재,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이다. 자주성, 창조성과 함께 의식성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이다. 사람은 의식성을 가진 존재, 의식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의식적인 존재이다.

김정일은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갑니다”라고 밝혔다.¹³⁾ 이처럼 의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성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사람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또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자기자신을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의식성은 사람의 이러한 활동을 규제하는 속성이다. 의식성은 우선 사람이 자주적 요구에 맞게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활동에서 표현된다. 자기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세계를 목적의식적으로 대하며 자기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는 것은 사람뿐이다.

의식성은 또한 인식과 실천 활동에서 발휘되는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하는 성질로 표현된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활동에서의 성공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투쟁력을 가지는가에 달려 있다. 강한 의지와 투쟁력을 가질 때에만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의식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간직하고 있음을 실증해준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의식성에 의하여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에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게 된다고 한다. 즉,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곧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유일한 개조자로 된다는 데에 주체사상의 인간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이 세 속성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1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앞의 책, p. 152.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다같이 사람의 본질적 속성을 이루면서도 서로 다른 측면을 표현한다. 자주성은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사람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즉, 자주성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을 반대하고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어나가는 사람의 생활과 활동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창조성은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즉,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이로운 것으로 개변시켜나가는 사람의 생활과 활동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의식성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람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즉, 사상의식에 위해서 규제되는 사람의 인식과 실천활동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다같이 사람의 속성으로서 사람의 존재와 활동에서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발현된다. 사람은 자주성이 있어야 창조성을 발현할 수 있고, 창조성을 발휘해야 자주성을 지킬 수 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에 의해 보장된다. 즉,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을 전제로 하며 또 그에 의하여 보장된다. 자주성은 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속성이며 자주적인 활동은 의식적인 성질을 띤다. 그러므로 의식성은 자주성의 전제로 되며 자주성을 보장한다. 창조성도 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속성이며 창조적 활동은 의식적인 성질을 띤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규제적 작용이 없이는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창조적으로 개조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식성은 창조성의 전제로 그것을 보장한다.

의식성이 자주성과 창조성의 전제로 되고 그것을 보장한다면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을 안받침한다. 사람의 사상의식은 사회적 실천에 기초하여 형성되는만큼 의식성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식성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제

로 하면서 또한 그에 의하여 안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에 의하면 사람의 활동과정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현과정이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은 사람의 존재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사람은 사회적 존재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적 속성이라고 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성질은 물질적 존재일 반이나 생명물질 일반이 가지는 자연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만이 가지는 속성 즉,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회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자연계에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사회적 속성이다. 사람이 사회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즉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된다.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람이 자연적 집단을 이루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집단은 결코 고립된 개인들의 기계적인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적 집단을 이루지 못하면 사회적 존재로 될 수 없다. 사회적 관계는 사람들을 사회로 결합시키는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것도 사회적 관계이며 사람과 사회적 재부를 결합시키는 것도 사회적 관계이다. 사회적 관계를 주동적으로 맺고 적극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것은 어디까지

나 사람이다. 사회적 존재의 개념에는 사람밖의 그 어떤 존재도 포함하지 않는다.

주체사상은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성에 대해 ‘우리식 사회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⁴⁾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는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은 그 본성으로부터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여기에 사회적 운동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가 있다는 것이다.

주체철학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역사를 객관적인 물질경제 조건을 위주로 하여 고찰하였던 관계로 사회의 발전을 생산력성격에 의 생산관계의 적응의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 생산방식의 교체의 역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을 확립하면 혁명이 기본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가들이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혁명에 대하여서는 많이 강조하였으나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의 계속혁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원리로써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의 혁명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으면

14) 김정일,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10』(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93~96.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옹계 발양시킬 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사회주의는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인 것만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 뿐 아니라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 활동을 벌리며 자기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나간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적 인간의 활동에서 물질적 생산과 사회경제관계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사회의 발전을 객관적 법칙, 주로 물질경제적조건의 발전법칙에 따르는 자연사적과정으로 보았던 관계로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물론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객관적 법칙에 의거한다. 그러나 사람은 객관적 법칙에 그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동적으로 인식하고 이용한다. 사람은 객관적 법칙을 이용하여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역사적 단계에서의 사람의 세계개조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나 세계를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 능력과 역할은 끊임없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 사회주의는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의식성을 가장 높이 발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식성은 사람의 중요한 속성이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사람의 의식문제를 가지고 진보와 반동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전개되어왔다. 관념론자들은 정신을 물질적 존재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인 것처럼 절대화하고 신비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물론자들은 정신을 신비화하는 관념론을 반대하기 위하여 정신

은 물질세계의 반영이라는 이른바 ‘반영론’을 주장해왔다. 이것은 정신의 신비화를 반대하는 데서는 전진이었으나 의식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 해명으로는 될 수 없었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과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에 능동적인 반작용을 한다는 것을 밝혔으나 사람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해명하지 못하였다.

주체사상은 처음으로 사람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음을 강조한다. 사람의 활동이 일정한 물질적 조건에서 진행되고 의식이 물질세계를 반영하지만 의식의 역할은 물질세계를 반영하고 그에 반작용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의식은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며, 사람의 모든 사고와 활동의 기초에는 사상의식이 놓여있다고 한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객관세계를 주동적으로 인식하고 창조적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3)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사람의 생명은 생명 유기체 일반의 생명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명이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고유한 생명이 다름아닌 자주성이다.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주성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이며 자주성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주체사상은 이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정치적 생명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 수 있게 하는 생명이라고 한다. 김일성은 1970년대에 이미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욱 귀중

함을 역설하였다.¹⁵⁾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그후 김정일에 의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구별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역설하였다.¹⁶⁾ 김정일은 바로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 수령중심주의사상 이른바, ‘수령절대주의사상’을 확립하기에 이른다.¹⁷⁾

15)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마이니찌신보》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2년 9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7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6)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인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48.

17)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앞의 책, 같은 쪽.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라고 하는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때문입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입니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사람의 참다운 가치와 존엄은 육체적 생명을 구중히 여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 민족과 민족을 위해서 참답게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한다. 일정한 사회적 조직, 정치적 조직에 망라되어 수령을 위하여, 사회발전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의의있고 보람있는 사회정치활동을 할 때 인간은 비로소 사회정치적 생명의 소유자로 될 수 있고 참다운 인간적인 가치와 존엄을 지닌다고 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모두 '수령을 위하여' 사회정치활동을 할 때에만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4)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

주체사상에 의하면 북한의 사회주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집단주의적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은 사회적 집단 속에서만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집단주의를 본성적 요구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집단주의에 기초해서만 높이 발양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사람이 사회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보람있게 살기 위한 요구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개인’과 ‘인민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속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인간의 개인적 존재의 의미는 크지 않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인 힘으로써만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할 수 있고 자주성을 원만히 실현해 나갈 수 있기에, 사회적 운동의 힘있는 주체는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단합된 인민대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적 집단의 의사를 대표하는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지적으로 굳게 결속된 일심단결에 기초하여 발양된다”는 점에 집단주의의 특성이 있다.¹⁸⁾

주체사상은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라고 한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북한의 체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이념이며 혁명적 기치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다시 한번 사람의 본질에 대해 해명하는 가운데, 이 문제는 단순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회정치적 문제임을 강조하였다.¹⁹⁾

김정일은 사람은 순수 정신적 존재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도 아니며,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라는데 다른 생물학적 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한다. 그

18) 김정일,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선집 10』, pp. 99~100.

19)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1994년 11월 1일), 『김정일선집 13』, pp. 464~65.

런데 여기서 사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의 차별성이 주목을 끈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가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한 것은 사람을 순수 정신적 존재로 보거나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비과학적, 반동적 견해를 타파하는 데서 역사적 공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한 것은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으로는 되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으로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올바르게 밝혀질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주체철학에 사람이 유일한 사회적 존재, 사회적 관계를 주동적으로 맺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존재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제한성이 극복되고 사회적 존재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확립되었다고 한다.²⁰⁾

이러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기초이며, 사회주의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집단주의 사상이라는 논지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누가 누구를 하는 투쟁은 다름아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의 투쟁이며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개인주의에 비한 집단주의의 우월성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승패는 집단주의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복한은 집단주의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기치아래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한 집단주의도덕을 숭고한 도덕적 품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당에 대한 충실성은 집단주의의 최고표현이며 그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한다.²¹⁾

20)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앞의 책, pp. 465~66.

4. 결 론

주체사상 체계는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철학적 원리는 주체사상이 밝힌 철학의 근본문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람이 본질적 특성,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역사 원리는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그리고 ‘사회역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그리고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등의 네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첫째,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둘째,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등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본고에서는 주체사상의 전반적 체계에 가운데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된 김정일의 인간관을 살펴보았다. 이는 인간관이야말로 특정한 철학사상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특히 김정일은 주체철학은 고유한 원리들로 전개되고 체계화된 독창적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말하자면 김정일은 주체철학이 철학사상 발전에서 이룩한 역사적 공적은 마르크스 유물변증법을 발전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 원리들을 밝혀놓았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주체철학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초와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주는 노동당의 혁명철학이며 정치철학이라 수

21)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 pp. 63~64.

있다. 따라서 주체철학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는 순수 철학이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상과 관점, 입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당의 사상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견결히 옹호하며 그것을 혁명적 신념으로 만들어 주체철학을 옳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선전하도록 하여야”²²⁾한다는 데에서 주체철학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은 사회의 발전은 정치에 의하여 향도되며 사회발전의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치의 원리적 기초를 밝혀주는 철학이 바로 주체철학임을 역설하고 있다.

22) 김정일,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리론잡지 <근로자>에 준 담화 1996년 7월 26일), 『김정일선집 14』, p. 201.

VI. 민족관

김창근(책임연구원)

1. 서론

북한에서 김정일의 민족관은 현재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의 민족이론’으로 논리화·체계화되어 있다. 그의 민족관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민족 개념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로 통치원리화되어 있다. 이는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의한 민족적 동기의 강조, ‘우리식 사회주의가 곧 김정일식 사회주의’라는 논리, ‘수령의 품이 곧 민족의 품’이라는 등식화, ‘민족대단결’ 원칙의 부각을 통해 ‘민족통일이 곧 조국통일이자 애국하는 길’이라는 도식 등으로 특징화되어 있다.

반면 김일성은 부르조아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민족이라는 구실로 정당화한다며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에게 민족주의는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뿐아니라 자기 나라자체의 민족적리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리익에도 배치”¹⁾되는 것이었다. 그는 민족주의가 민족이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사회주의권 단결을 해친다고 보았다.

김정일의 문헌에서 민족·민족주의가 흔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둘의 발생사적 성격은 다르다. 민족은 사회·역사적 실체로서 지역과 개별 민족 단위에 따라 역사성을 달리하고 있지만, 민족주

1) 김일성,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7년 12월 5일),” 『김일성저작집 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410.

의는 근대 서구 역사에서 ‘만들어진’ 지배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1차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구자들은 민족을 가장 뿌리깊은 공동체를 만드는 집단으로 보았으며 민족이 민족주의를 낳게 되는 것으로 여겼다. 1차대전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민족문제는 근대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비롯된 근대적 현상으로 이해되었으며 민족주의는 유럽의 시민혁명 이후의 근대의 산물로 간주되었다. 이후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민족주의는 이념이나 신조의 형태로서 사회를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규명되기에 이르렀다. 민족주의는 근대국가형성과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근대화의 이데올로기로 파악되었으며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든 것으로 이해되었다.²⁾

북한의 경우 민족주의는 사회주의국가를 공고히 하는 지배이데올로기 역할을 했다. 물론 김정일이 강조하는 조선의 시조로서의 단군, 피줄·언어·지역의 공통성, 유구한 역사·문화와 같은 선민족 혹은 原민족적 요소 등은 북한 민족주의가 형성·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조건과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김정일이 강조하고 있는 종속적 유대나 집단적 의식의 상태는 민족주의의 원초적 재질일 뿐이라는 점이다. 선민족 혹은 原민족적인 종속적 유대나 역사적 특수성을 근거로 근대 이전에 북한에서 민족이 존재했다는 주장은 민족주의 인식의 비약에 해당한다.³⁾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일의 문헌에 나타나 있는 민족·민족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과 사고를 규명하는데 있다. 원전을 중심으로 그의 민족

2)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서울: 나남출판, 1998), pp. 169~170.

3)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서(서)울(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9~12; ____, “민족주의의(의) 형성과(과) 전개과정(에) 관한(관한) 일고,”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p. 3.

관의 내용과 특징을 서술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자료는 최근 출판되었고 김정일의 민족관을 집대성해 놓고 있는 조성박, 『김정일민족관』(평양: 평양출판사, 1999)을 중심으로 삼고 그외 필요한 부분은 『김정일선집』의 내용을 인용하기로 한다.

2장에서는 민족·민족주의에 관한 서구의 역사성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관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김정일 민족관의 내용을, 4장에서는 김정일 민족관의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민족이 사회·역사적 실체이자 동적 현상이며 민족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 민족관의 특징은 지배전략의 산물이라는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3장에 소개할 김정일 민족관의 내용이 자칫 ‘고정된’ 틀 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4장은 김정일 민족관의 내용이 대내외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2. 민족·민족주의에 관한 서구의 역사성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관

역사적으로 서구에서의 민족·민족주의는 16세기 초에서 18세기 말까지의 절대왕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대두되면서 생겨났다. 정치적 저항은 자본주의와 시민계급이 성숙하면서 등장한 산업자본가들이 노동자·농민과 함께 봉건적 사회질서의 변혁을 외치면서 시민혁명으로 이어졌다. 민족·민족주의가 근대적 정치이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시민혁명에 의해서였으며 시민혁명의 전형이 된 1789년의 프랑스혁명은 그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⁴⁾ 프랑스혁명 이후 민족주의는 스

4) 최갑수, “서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제36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논문(1993.5.21~22, 한양대학교), pp. 20~25.

스로 민족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통일과 독립, 자유와 발전을 추진시키려는 사상 내지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민족은 근대라는 사회·역사를 지나면서 결집된 실체이며, 민족주의는 민족운동이 표방하는 정치적 신조로서 ‘만들어진 지배이데올로기’⁵⁾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어떠한 이데올로기와도 결합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 ‘이차적 이데올로기’⁶⁾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갖게 된 것은 이후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계급과의 관계,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등장, 3세계의 대두, 자본주의의 세계체계화 추세 등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민족·민족주의는 정반대의 내용을 갖는 이념이 되기도 했으며 이념이 실천되는 조건에 의해 민족주의의 성격이 규정되기도 했다. 최근 민족·민족주의는 탈민족화·탈민족주의화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그 이념적 기능과 역할이 쇠퇴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⁷⁾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역사와 정치·사회적 현상들을 계급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실천의 문제를 논했다. 민족문제는 계급에 비해 부차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계급투쟁에 종속되었다. 마르크스·엔겔스는 민족을 근대 부르조아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화시키면서 나타난 사회역사적 발전의 산물로 인식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성립으로 형성된 민족의 운명은 자본주의의 운명과 동일시되었다. 그들은 민족 상호간의 착취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제거없이는 민족간의 결속은 불가능하며, ‘본성상 특별한 민족

5)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pp. 178~179.

6) 최갑수, “서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p. 20.

7) Eric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182~183.

적 이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롤레타리아만이 민족적 차이와 적대감을 '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⁸⁾

레닌은 러시아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시킨 현실주의자이며 실천가로서 민족문제가 지닌 전략적 가치에 보다 주목했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계급적 억압없이' 행동함으로써 민족간의 융합을 가져다 줄 것이며, 모든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되면 민족간의 갈등이나 불신은 국가소멸과 함께 없어질 것이고 필연적인 민족의 통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⁹⁾ 그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족자결권을 위해 투쟁해야 하며 억압하는 민족의 노동자들과 억압받는 민족의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중심으로 단결·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⁰⁾ 그러나 유의할 것은 "승리한 사회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따라서 제민족의 완전 평등 뿐만 아니라 민족자결권, 즉 자유로운 정치적 독립권을 실현해야 한다"¹¹⁾며 레닌이 민족자결을 '승리한 사회주의'의 종속개념으로 놓았다는 점이다.

민족문제가 사회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스탈린에 의해서였다. 그는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면서 소련사회주의를 완성해야 하는 대내외적 필요에 의해 슬라브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중앙집권적 사회주의정책을 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를 견지하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대러시아민족주의'를 고양시켰고 국가의 소멸보다는 소련이라는 국가를 강화시키는 기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8)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문제』(서울: 까치, 1989), pp. 30~31.

9) 레닌,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 Karl Mark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민족해방이론의 주체적 정립을 위하여』(서울: 나라사랑, 1989), p. 203, ____,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위의 책, pp. 218~220; ____, "마르크스주의의 회화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위의 책, pp. 300~307.

10) 레닌,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 위의 책, p. 204.

11) 위의 글, p. 200.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배격하면서도 민족국가나 국가주의를 통해 계급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¹²⁾

스탈린은 “민족이란 공통의 문화에 나타나는 심리적 성격 및 언어, 지역, 경제적 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안정된 공동체”라고 정의했다.¹³⁾ 그는 언어, 영토, 경제생활, 공통의 문화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면 민족이 아니라고 엄격히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소연방내 소수민족의 독자성과 자치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민족은 단순한 역사적 범주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흥기라는 특정시대에 속한 역사적 범주이다. 봉건주의의 폐지와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은 동시에 민족형성 과정이기도 하였다”¹⁴⁾며 민족을 자본주의의 산물로 인식했다. 그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을 ‘부르조아민족’이라 부르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멸망하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소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부르조아민족의 운명이 자본주의의 운명과 일치한다고 해서 민족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부르조아민족 이외에 사회주의민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사회주의민족은 바로 새로운 소비에트민족이며 자본주의가 청산된 후 낡은 부르조아민족들을 사회주의 정신으로 개조하기 위해 발생·발전된 것이라고 했다.¹⁵⁾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민족문제를 도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계급성을 앞세웠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계급의 범주가 민족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 사회주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프롤레타리아

12) J. H. 카우츠키(Kautsky), “공산주의의 민족주의화,” 차기벽 편, 『민족주의』, pp. 252~285.

13) 스탈린,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Karl Mark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p. 320.

14) 위의 글, p. 324.

15) 스탈린, “민족문제와 레닌주의,” Karl Mark 외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pp. 371~373.

국제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계급문제 해결을 국가주의를 통해 모색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내용면에서 일국사회주의국가와 다름이 없었고 국가소멸론은 커녕 오히려 국가가 강화되었으며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정치적 참여는 정치적 동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¹⁶⁾ 1980년대 말 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소수민족이 제기하고 있는 인종주의·분리주의도 계급이 민족을 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정일 민족관의 내용

1. 민족에 대한 기본인식

1) 민족의 개념 및 형성과 발전

김정일에 의하면 민족은 나라와 함께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 집단으로서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의 공동체”¹⁷⁾이다. 그는 “민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¹⁸⁾라고 한다. 그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도 “한 피줄을 이어받고 고유한 우리말을 쓰며 조선의 미풍양속을 존중하고 우리 조선사람의 넋을 간직하고 있는 조선민족”이라고 강조한다.¹⁹⁾

김정일은 자본주의 발생과 결부시켜 민족의 형성과 소멸을 논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견해가 북한 실정에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조선

16) J. H. 카우츠키, “공산주의의 민족주의화,” pp. 252~285.

17)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7.

18) 조성박, 『김정일민족관』(평양: 평양출판사, 1999), pp. 17~18.

19) 위의 책, p. 21.

민족은 예로부터 한 강토안에서 한 피줄을 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왔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²⁰⁾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생명²¹⁾이라며 자주성의 실현 여하를 강조한다. 그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민족들의 발전과정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병합되는것이 아니라 매개 민족들이 문명하고 힘 있는 민족으로 발전하며 자기의 고유한 생활과 력사를 자유롭게 창조해 나가면서 완전한 평등과 자원성의 원칙에서 민족들사이의 협조와 련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과정²²⁾이라고 지적한다. 김정일은 이러한 민족발전론을 근거로 남한은 미국의 지배를 청산하고 자주적·자립적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2) 민족과 인간·계급·제도와와의 연관성

김정일은 민족의 생명 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고 본다. 그는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수없이 결합되어 있다”며 “사회적인간은 계급과 계층의 성원인 동시에 민족의 성원이며 계급성과 함께 민족성을 가진다”고 한다.²³⁾ 아울러 그는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 가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인민대중의 자주성

20) 위의 책, p. 23.

21)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63.

22)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12.

23) 위의 글, p. 308.

이 실현될수 없다”²⁴⁾고 한다.

김정일은 “계급과 계층도 민족의 한 구성부분이고 개인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것만큼 계급해방문제는 민족문제, 민족의 자주성을 이룩하는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²⁵⁾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민족과 계급은 모두 사회적 집단이지만 민족은 계급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집단이며, 따라서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민족은 영원하지만 계급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로서 간주된다. 아울러 사회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면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지만 민족이 이어오는 혈통은 대를 이어 존속하고 민족집단은 고유 민족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주장한다.²⁶⁾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계급적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이다...민족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²⁷⁾라고 한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 재부가 사회의 이익과 민족공동의 발전에 제대로 쓰일 수 없고 민족적 단합을 이룰 수 없다고 본다.²⁸⁾

3) 민족문제의 본질과 민족의 사활적 문제

김정일은 민족문제의 본질로서 자주성을 강조한다. 그는 “자주성을

24) 위의 글, p. 308.

25)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p. 73.

26)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73~82.

27)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p. 310~311.

28) 위의 글, p. 311.

지니는가 못가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²⁹⁾된다고 본다. 북한에서 자주성이란 “자기의 존엄을 유지하고 자기의 자주권을 지키려 하며 그 어떤 외적인 지배와 간섭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자립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려는 근본의 성질”³⁰⁾을 의미한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는 슬로건은 민족자주성의 리념을 구현한 민족의 생존방식, 투쟁방식을 명시한것”이며 “우리 식이란 곧 민족주체의 투쟁방식이며 조선식”이라고 강조된다.³¹⁾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은 애국애족이 되지만 자주성을 외세에 맡기고 외세의존의 길로 나가는 것은 매국배족이 된다.³²⁾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은 “우리나라의 민족문제는 일찍이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빚어지고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로서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과제”³³⁾라며 민족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인식한다. 그의 관점에서 남한의 민족문제는 ‘반미민족해방혁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미군철수와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의 청산이 최대 과제가 되는 것이다.³⁴⁾

김정일은 민족의 사활적 문제로서 주체성의 견지와 민족성의 고수를 강조한다. 그는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것은 자기 민

29)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p. 63.

30)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29.

31) 위의 책, p. 36.

32) 위의 책, p. 44.

33)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p. 72.

34)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46~49.

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고 지적한다.³⁵⁾ 그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구현하는 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원칙적 요구”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주체성 견지를 통해 “언제나 우리 혁명, 우리 민족의 운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복종시켜 풀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하나가 되어 왔다고 평가한다. 또한 그는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렸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 분야에 구현”하였으며 “민족적 단결의 중요한 기초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민족성에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³⁶⁾고 본다.

4) 민족주의와 민족자주이념

김정일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애국애족이라는 공통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민족주의에 제한성이 있다고 하여 그 진보적측면을 무시하고 배척하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³⁷⁾ 신흥부르조아지들이 민족주의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외세와 반동의 책동으로 남한에서 민족성이 짓밟히고 사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민족이익을 옹호하는 이

35)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 307.

36) 위의 글, pp. 312~314, 315~316, 317, 315.

37)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 316.

념으로서의 참다운 민족주의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다.³⁸⁾

김정일은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민족주의일반이 아니라”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본성을 가리우고 정당화하는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들과 궤변들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³⁹⁾ 특히 그가 지적하는 것은 민족이기주의, 민족배타주의, 부르췌아민족주의, 인종론, 지정학,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제국주의자들의 《일체화론》 등이다.⁴⁰⁾ 김정일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비민족주의’를 타파하고 남북한이 ‘민족자주이념’에 기초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자주이념’은 김정일이 정의한 ‘새로운개념’이며,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민족자신이라는 정신이고 사상이다”고 설명된다.⁴¹⁾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북한은 한국변혁운동의 기본과제는 ‘민족적해방’의 문제이며, 그것은 김정일의 ‘민족자주이념’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민족자주원칙

1) 조선민족의 우수성: 김일성민족

김정일이 유구한 역사, 한 피줄, 하나의 언어와 문화·전통, 근면·진실하고 재능있는 민족성 등을 내세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지 만⁴²⁾ 가장 중요하게 그가 내세우는 민족의 우수성은 ‘수령을 모신 김

38)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98~99.

39)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p. 316, 331.

40)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114~122.

41) 위의 책, pp. 122, 107~109.

일성민족’이라는 데 있다. 이는 김정일 민족관에서 ‘핵을 이루는 사상’이라고 강조된다.⁴³⁾ 김정일은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지금 해외동포들은 조선 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더욱 잘하여야 합니다”⁴⁴⁾고 강조한다. 북한은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자기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라며 김정일이 1912년을 주체연호로 제정하고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 태양민족으로 되도록 한 것을 충효심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⁴⁵⁾

2) 조선민족제일주의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⁴⁶⁾이라고 설명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첫째, 세계제일의 위대한 수령, 위대한 지도자를 모신 긍지와 자부심, 둘째,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 셋째, 한 세기에 두 제국주의(일제와

42)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46~448.

43)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197.

44)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28.

45)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204~205.

46)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p. 444.

미제를 비롯한 16개 나라)를 타파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넷째, 훌륭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민족이 누리는 끝없는 행복 등의 내용으로 강조된다.⁴⁷⁾

3) 민족자주원칙

김정일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서 주체사상 무장, 민족자주원칙의 구현, 민족의 주체적 역량 강화, 반민족세력의 척결 등을 강조한다.⁴⁸⁾ 그는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나가자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야 합니다”⁴⁹⁾며 주체사상을 정신적 지주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기본요구이다”⁵⁰⁾라며 민족자주원칙의 구현을 강조한다. 민족자주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문제를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할 것, 외세의 압력과 간섭을 배격할 것, 창조적으로 자기운명을 개척할 것 등이 강조된다.⁵¹⁾

김정일은 “주체적역량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담보이다”⁵²⁾라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 주체적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민족적 단결 및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 둘째, 자립적 민족

47)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210~215.

48) 위의 책, pp. 217~250.

49)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p. 434.

50)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 322.

51)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226~233.

52)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 324.

경제 건설과 민족주체의 방위력 강화 및 발전된 과학기술 등이 강조되고 있다.⁵³⁾ 또한 그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곧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⁵⁴⁾이라며 반민족적 세력의 척결을 강조한다.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 및 시대매국, 민족반역과 같은 지배층의 속성이 주요 투쟁대상이며 남한의 ‘반미자주화 투쟁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선차적 과제로 된다’고 주장한다.⁵⁵⁾

4) 민족간 관계발전의 기초

김정일은 민족간 관계발전의 기초는 ‘자주성’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성을 서로 존중할 때 공정한 국제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진실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⁵⁶⁾고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어느 민족도 자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둘째, 모든 민족이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짓밟고 억누르지 말아야 하며, 셋째, 대국주의와 사대주의를 다같이 반대해야 된다고 한다.⁵⁷⁾

김정일은 “세계혁명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입니다”⁵⁸⁾고 지적한다. 그는 ‘참다운 애국자만이 참다운 국제주의자로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⁵⁹⁾

53)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237~238.

54)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 329.

55)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245~250.

56)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02.

57)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253~259.

58)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43~444.

59)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265.

그에게 ‘온 세계의 자주화’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이 없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이를 위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빨럭불가담운동의 역할을 높이고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된다고 한다.⁶⁰⁾

3. 민족지도에 대한 수령 지위의 절대화

1) 수령의 위대성

김정일은 “우리 민족의 위대성은 곧 우리 수령, 우리 당의 위대성”⁶¹⁾에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를 김정일의 ‘독창적인 민족관’이라고 칭한다.⁶²⁾ 김정일은 “자주의 길로 나가는 민족의 운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다”며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민족이 나아갈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고 민족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에게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망국노의 생활을 한 것은 바로 탁월한 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이라고 한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인민대중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민족”⁶³⁾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김정일이 민족의 어버이로 숭상받는 첫째 이유는 김일성의

60) 위의 책, pp. 266~267.

61)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p. 454.

62)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153~154.

63)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p. 449.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민족의 최고뇌수로서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영원히 가능케 하는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민족의 심장 속에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이유는 김정일이 민족의 위대성이 수령의 위대성에 있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민족의 품이 곧 수령의 품’이라는 금언의 명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⁶⁴⁾

민족지도에 대한 수령 지위의 절대성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김일성이 밝혀주었다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를 강조한다. 수령은 바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이자 생명의 중심이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⁶⁵⁾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2) 민족적 지도이념의 중요성

김정일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처럼 민족의 위대성도 무엇보다 그 민족의 지도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⁶⁶⁾며 민족적 지도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가 지칭하는 민족지도이념은 주체사상과 민족자주사상이다.⁶⁷⁾

64)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157.

65)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p. 44~449.

66) 위의 글, p. 444.

67)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 178.

4.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

1) 조국통일관

“김정일 민족관의 모든 내용은 조국통일로 지향되고 있으며, 통일의 진로를 밝히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⁶⁸⁾고 한다. 그의 조국통일관은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는 신념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⁶⁹⁾ 그의 조국통일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⁷⁰⁾

첫째, 조국통일의 본의에 대한 정립이다. 김정일은 “조국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성업이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민족적 화합과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외세에 의하여 빼앗긴 민족적자주권을 회복하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민족적 화합과 단합을 실현하는 일이 곧 조국통일”이라고 본다.

둘째, 조선은 하나이며 반드시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입니다. «조선은 하나!» 이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고 강조한다.

셋째, 조국통일문제가 곧 민족통일문제라고 한다. 김정일은 “조국통일은 계급적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성격의 문제”라고 본다.

넷째, 조국통일 3대헌장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김일성이 천명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3대헌장, 3대기둥으로 규정했다. 북

68) 위의 책, p. 271.

69) 위의 책, p. 272.

70) 위의 책, pp. 272~279.

한은 3대현장을 민족주체의 힘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그리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남과 북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통일을 가장 빠른 시일안에 이룩할 수 있는 원칙과 방도를 명시하고 있는 민족통일의 대현장이라고 강조한다.

2) 민족대단결

김정일의 조국통일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사상이라고 한다.⁷¹⁾ 김정일은 김일성이 내놓은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⁷²⁾이라고 한다.

김정일은 민족대단결을 위한 5대원칙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⁷³⁾ 그것은 첫째,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 둘째, 애국애족의 기치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 셋째,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남북관계 개선, 넷째,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및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 다섯째, 남북 및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왕래·접촉·대화하여 연대연합 강화 등이다.

71) 위의 책, p. 279.

72)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13.

73) 위의 글, pp. 419~427.

4. 김정일 민족관의 특징

1. 대외적 저항 및 대내적 전체주의적 단결 추구: ‘민족은 전체, 계급은 부분’

김정일 민족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은 대외적으로 저항하고 외적 요소를 배척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전체주의적 단결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관에서 민족이 정치·계급발전의 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던 것과 달리 김정일은 민족적 입장과 계급적 관점을 융합한 민족 개념을 정치·사회·문화적 동원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그에게 민족은 ‘전체’이며 계급은 민족의 하위개념 혹은 ‘부분’적으로 간주된다.

김정일 민족관의 이러한 특징은 개개인에게는 반자유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의 민족관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자기방어와 해방에 중점을 둠으로써 대외적인 독립과 자주에 치중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⁷⁴⁾ 또한 그의 민족관은 식민주의의 지속적인 위협을 강조하거나 조작하여 사회적 긴장을 외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내적인 단결을 추구하려는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⁷⁵⁾ 그러한 성격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강화, 민족대단결의 논리 강조, 수령의 민족지도 절대화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 있다.

74) 한스 쿤(Hans Kohn), “민족주의와 열린 사회,” 차기벽 편, 『민족주의원론』(서울: 한길사, 1990), pp. 49~54.

75) 존 카우츠키, “저개발국의 민족주의,” 위의 책, pp. 129~157.

2.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강화: ‘우리식 사회주의는 곧 김정일식 사회주의’

김정일 민족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다른 특징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에 민족주의를 결합한 통치이념화를 이루고 있으며 민족논리를 수령의 ‘우리식 사회주의’ 영도와 연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가 곧 김정일식 사회주의이며 김정일식은 조선식’⁷⁶⁾이라고 등식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정세와 관련이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른 국제적 고립의 심화 속에서 김정일은 체제유지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의도는 수령 영도의 철칙을 재삼 강조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민족문화적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권 붕괴와 북한의 경우를 차별화하려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세습체제를 공고화하며 ‘전민족대단결’ 원칙을 통해 남한과의 현상유지적 공존을 추구한 것이다.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는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 보다 훨씬 강하게 민족개념을 부각한 것이다. 그것은 민족이 세계사회주의의 완성된 단위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이 이를 실현하여 ‘사회주의의 모범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논리로써 조선민족의 긍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수령을 가진 조선민족의 차별성에 있다는 논리에도 나타나 있다. 김정일은 북한에게 닥친 대내외적 ‘바람’ 앞에서 민족 논리를 조선민족제일주의나 우리식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민족주

76) 조성박, 『김정일민족관』, pp. 226~233.

의적 사회주의로 통치이념화하였으며 그 토대를 여전히 수령과 주체 사상에 두고 있는 것이다.

3. 민족대단결의 논리 강조: ‘민족통일이 곧 조국통일이자 애국하는 길’

김정일 민족관에서 보이는 또다른 특징은 민족대단결 논리의 강조이다. 김정일이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강화하면서 통일원칙과 민족적 동기를 연결지은 논리가 민족대단결이다. 민족대단결 논리의 근본은 ‘민족통일이 곧 조국통일이며 이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점이다. 김정일에게 조선통일문제는 곧 민족통일문제이다. 이는 조선통일의 걸림돌이 미제국주의와 사대매국·민족반역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남한 지배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나 통일원칙과 관련하여 민족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민족대단결의 경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972년의 일이다. 당시 김일성은 남북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자주 및 평화와 함께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밝혔으며,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조선로동당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의 3대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했다.

1990년대 들어서 민족대단결의 논리는 당시의 대내외 정세를 반영하면서 민족적 정서에 더욱 호소되었다.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담화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⁷⁷⁾ 이후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논리는 김일성

77)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1991년 8월 1

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해 체계화되어 나타났다. 전민족대단결의 목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과,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라고 밝혀 있다.⁷⁸⁾

김정일은 민족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의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 혹은 3대기둥으로 규정했으며, 1998년 4월 남북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했다. 이 방침은 김정일이 통일과 관련하여 처음 밝힌 원칙으로 주목받았지만, 그것은 과거 김일성이 언급했던 것을 재정리한 것에 불과했다.

민족대단결의 논리가 김정일 민족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통일과 관련하여 민족주의 정서를 더욱 표면화·활성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남공세의 축을 민족중심으로 분명히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서 강조해 왔던 자주권 확립의 문제를 민족통일 혹은 조국통일의 관점 속에 녹여내고 있으며 사회주의 애국심을 민족주의로 포장하여 통일의 도구적 논리로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민족관에서 ‘조선통일문제는 민족통일문제’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대매국과 민족반역은 민족의 속성이 아니고 남한 지배층의 속성’이라고 주장된다. 그에게 있어 ‘조선은 하나’라는 기치에 가장 장

일), 『김일성저작집 4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67.

78) 김일성,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김일성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61~162.

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미제국주의와 그에 속박되어 자주성을 잃고 있는 남한의 지배층이다. 그리하여 민족에 충실하는 것이 조선의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애국하는 길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에게 민족통일 혹은 조국통일의 문제는 자주권 확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4. 수령에 의한 민족 영도의 절대성 지속: ‘수령의 품이 곧 민족의 품’

김정일 민족관에서 보이는 또다른 특징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민족을 영도하는 절대적 권위가 수령에게 부여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수령의 품이 곧 민족의 품’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되어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기초하여 민족 발전에 있어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하고 있다.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나라와 민족이 번영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수령의 올바른 영도야말로 민족의 자주성 실현의 결정적 담보이며 김일성·김정일 수령의 영도가 곧 올바른 지도라는 도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의 민족관에는 김정일에 의한 민족 영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민족관은 주체사상에서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민족, 그리고 수령 영도의 절대성 사이의 논리적 괴리를 메워주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결국 수령 영도의 무오류성·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인해 민족의 생명이 자주성에 있다기 보다는 ‘민족의 생명이 곧 수령 김정일의 영도’라는 등식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일의 민족관에서 자주성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결국 우리식 사회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보조적·상징적 수단일 가능성이 크게 된다.

5. 결 론

김정일 민족관은 현재 ‘주체의 민족관’으로 논리화·체계화되어 북한의 민족이론으로 세워져 있다. 그의 민족관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징은 대외적으로는 저항하고 내부적으로는 전체주의적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김정일에게 민족은 ‘전체’이며 계급은 하위개념 혹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그의 민족관은 내적으로는 반자유주의적이고 배타적 경향을 띤다.

김정일의 민족관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은 수령에 의한 민족 영도를 절대화하고 있는 점이다. 그는 ‘수령의 품이 곧 민족의 품’이라고 못박고 있다. 김정일 민족관의 또다른 핵심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의 부각이다. 그 논리는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로 표현되고 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는 곧 김정일식 사회주의’로 등식화되고 있다. 김정일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는 남북관계에서는 민족대단결 원칙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민족대단결 원칙은 ‘민족통일이 곧 조국통일이자 애국하는 길’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내부결속과 대남공세 및 해외선전 등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김정일은 철저히 주체사상의 맥락에서 그의 민족관을 구현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민족주의를 사회주의 속에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이론에서 흔히 부수적으로 취급되던 민족주의의 역할을 최대화하고 있다. 김정일의 민족관은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의 몰락 앞에서 사회주의의 이념적 공백을 메워나갔다. 계속되는 경제난, 내부체제 모순의 표면화, 외교적 고립 속에서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를 위해 주체사상은 본격적으로 민족주의적 옷을 껴입게 된 것이다. 수령의 민족 영도라는 철칙 역시 주체사상에서 강조하였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다를 바가 없다. ‘주체의 민족관’이라는 표현도 그만큼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김정일 민족관이 체제유지 논리와 결합되고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인식을 강화하고 군사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위기가 대두될수록 민족주의 강화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주의의 기반이 될 소지가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분단체제 극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김정일의 민족관은 남북한 체제공존과 연방제 추진 및 남북교류·협력 논리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민족·민족문제를 보는 김정일의 기본관점은 배타적이고 이념적 인식에서 시작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통치, 냉전질서하에서의 해방과 분단 및 전쟁 등의 경험이 김정일 민족관의 바탕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분단체제 극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의 민족관은 프랑스혁명을 지나면서 싹튼 서구의 개념과 같은 민주주의적·민중주의적 원리를 키워나가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김정일 민족관은 그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VII. 대외관

박 영 호(선임연구위원)

1. 서 론

국제연합(UN)의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각종의 정부 및 비정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외부세계와의 거래(transaction) 활동은 다른 나라들과 정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통상적인 국가 수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거나 또는 편향된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며, 그 원인을 두고 북한의 외교적 한계라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제약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21세기의 시작을 전후하여 북한이 외교적 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¹⁾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즉 개인, 역할, 정부, 사회, 그리고 체제이다.²⁾ 그 중에서 정책결정자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이 북한 만

1) 2001년 6월 30일 현재 북한이 국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수는 150개국에 달하며 이 중에는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한다.

2) James 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북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최고지도자 개인의 영향력이 정치와 체제 그리고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제이다. 북한의 개인지배(personal rule) 체제는 봉건 영주, 독재자, 예언자, 폭압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³⁾ 또한 “주체사상”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정치와 경제는 물론 일상 생활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이데올로기정치체제(ideocracy)⁴⁾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관계는 최고지도자 개인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외교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미치는 개인적 수준의 요인 변수들은 결정자의 성격, 심리적 성향, 재능, 기존 경험, 가치관,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등 정책결정자 개인적 차원의 모든 속성을 포함한다.⁵⁾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의 이름으로 출간된 많은 문헌을 통해 그의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외 인식의 제약 구조

당, 국가,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의 대외활동의 기본틀을

in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80).

3) 이와 같은 속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Robert H. Jackson and Carl G. Rosberg, *Personal Rule in Black Africa: Prince, Autocrat, Prophet, Tyran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p. 77~82를 참조.

4) 이데올로기정치체제는 일원론적 이데올로기의 제반 교리에 준거하여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Jaroslav Piekakiewicz and Alfred Wayne Penn, *Politics of Ideocracy*(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p. 25.

5) 유승익, “외교 정책 결정 과정과 구조,” 구분학 외, 『세계외교정책론』(서울: 을유문화사, 1995), pp. 126~127.

구성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당 규약과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북한의 대외관계의 원칙이 담겨져 있다. 즉 북한 노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계급과 그 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자주성 및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대 제국주의 및 지배주의’라는 이분법적 국제정세 인식은 1997년 6월 19일자 김정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⁶⁾에도 나타나 있다. 그는 국제정세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역량과 지배주의 사이의 첨예한 대결” 상황으로 보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사회주의 나라들과 뿔럭불가담 나라들,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의 단결,”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17조는 “자주, 평화, 친선은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친선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

6)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306~333.

극 지지성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전 헌법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과 단결”이라는 규정에서 수정된 것이다.

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이유(raison d'être)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헌이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생명체’ 논리로서 유일 지배체제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합리화하고 있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때로는 당 규약이나 헌법을 초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라는 북한 헌법 전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혁명’의 계승자로서 김정일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원리를 통해 외부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연합되어 있는것만큼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역시 국제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하여 독립과 자주권을 짓밟히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어제날의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은 력사적 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전선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불평등하고 모순에 찬 세계질서를 마사버릴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전개되어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통하여 그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임

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류사회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영영 끝장내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사회와 자연의 주인,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완전히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⁷⁾

이와 같은 김정일의 인식의 구조들은 1995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당 일군들과의 대화에서 말했다는 ‘조선인’과 ‘미국인’의 관계를 빗댄 이야기에 그대도 투영되어 있다. 즉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 와 있던 미국선교사가 조선소년이 떨어진 사과를 한 알 주어 먹었다고 하여 그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⁸⁾ 북한의 국력 성장을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북한이 인식하는 “제국주의자”에 대한 반감이 담겨져 있다.

북한에서 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북한체제 수립 이후 권력 투쟁 및 확립 과정에서의 김일성의 의지의 반영이었던 것처럼 김정일의 인간과 사물,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틀도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이 확립한 절대군주의 봉건적 왕조의 “황태자”로서 아버지의 “예언자적”⁹⁾

7)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62~163.

8)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제14권』, p. 3.

9) 개인지배체제 유형의 하나로서 예언자적 통치는 통치자가 기존 체제와는 전혀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제시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이상향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와 동반하는데, 실제로 예언자적

사고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 “예언자”가 남겨 놓은 유산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치·사회적 질서를 세우는 새로운 “예언자”는 될 수 없다.

3. 1960년대

1960년대는 북한이 전후 복구사업에서 벗어나 사회주의경제발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동서 냉전구조 아래서 1955년 4월에 출범한 비동맹회의가 회원국의 증가로 다소 세력을 뻗치던 시기이기도 하다. 냉전구조가 굳어지면서 사회주의진영에 치중하였던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동맹회의국가와의 외교적 유대를 넓히기 시작하였다.

1961년 9월에 열린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국가와의 단결, 제국주의진영에 대한 반대투쟁,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였다.¹⁰⁾ 또한 국내적으로 북한은 “3대혁명역량 강화”를 내세우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체제의 제도화를 이루고 1인 독재 유일지배체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던 시기였다. 김정일 자신은 막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서 당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신출내기였다. 김정일의 대외관을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공식적 문헌은 1965년 아버지 김일성을 수행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후 행한 당 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의 담화¹¹⁾이다. 이 문헌에 나타

통치를 이끌어 가는 힘은 통치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중요하다. Robert H. Jackson and Carl G. Rosberg, *Personal Rule in Black Africa: Prince, Autocrat, Prophet, Tyran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 79.

10) 『김일성 저작선집 제3권』, pp. 194~197.

11) “신흥 세력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 (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난 김정일의 대외관은 당시 북한의 대내외적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첫째, 김정일은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의 조성과 신생국가들과의 반제연대를 강화하는 의미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대외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대외관계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신흥세력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늘이고 국제적범위에서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여러 신생독립국가들의 등장을 식민지민족해방투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비동맹운동을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진보적운동”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등장하고 비동맹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이 여러 방식을 통한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무너져가는 식민지지배자의 지위를 고수하며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로골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위협공갈과 회유기만, 전복과괴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신생독립국가들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있으며 이른바 《원조》의 미명으로 이 나라들의 경제

한 담화, 1965년 5월 9일), 『김정일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91~100.

명맥을 틀어쥐려 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 썩어빠진 부르주아 문화와 생활양식을 침투시키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생독립국가들의 자주권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에서의 새 사회 건설은 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습니다”고 하여 일찍이 김정일은 서방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신생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서 ‘호상관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신생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자주권의 존중,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 령토완정은 나라들 사이의 호상관계를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며 이 원칙이 견지되는 조건에서만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신생국들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나감으로써 상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신흥세력나라들에는 경제문화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연부원만 보더라도 신흥세력나라들은 막대한 량의 원유를 비롯하여 세계 원료, 연료 자원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교류하고 잘 협조한다면 능히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신생국가와의 관계 발전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며, 결국 경제 강국에 대한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대외관계의 원칙으로서 자주성, 내정 불간섭, 상호평등을 내세웠지만 그의 인식의 저변에는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즉 강대국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있다. 선전선동을 위한 영화의 창작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격을 묘사하라고 주장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작품에서는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고 투쟁에 적극 참가하는 중산층출신인물의 전형적 성격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산층이 혁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옳바로 밝힐 수 있습니다. 특히 식민지나라에서 인테리를 비롯한 중산층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민족적 멸시를 받기 때문에 반제적인 혁명성을 가지며 혁명의 동력으로 됩니다”¹²⁾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은 외부로부터의 사상적 침투에 대한 경계로 이어진다. “지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핵공갈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을 위협하는 한편 부르췌아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고있는 부르췌아문학예술은 온갖 패륜패덕과 색정, 살륙과 강탈, 비애와 절망을 고취하면서 이른바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도덕적 타락분자로 굴러떨어지게 하며 반혁명으로 부추기는 엄중한 해독작용을 합니다”¹³⁾라면서 문화적 침투를 경계하고 있다.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정을 보면서 북한 내에서 강조된 자유화 바람 또는 자본주의의 문화적 침투에 대한 경계는 이미 1960년대에 젊은 김정일의 머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의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강조한 그의 담화에도 나타난다.¹⁴⁾ 그는 “다른 나라를 불의에 침공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쓰는

12) “인간 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전형을 깊이있게 실현할데 대하여,”(작가들과 한 담화 1967년 2월 10일) 『김정일선집 제1권』, p. 187.

13)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당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선집 제1권』, p.274.

14)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조

상투적인 전쟁수법입니다. 이것은 세계전쟁력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이 그러하였고 소련에 대한 파쑈독일의 침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조선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삼켜 보려고 불의에 침공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투준비를 강조하였다.

4.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환경은 미·소간의 데탕트로 점차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한편,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이탈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한의 통치자들이 모두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세계적 화해조류에 부응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1971년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남북한은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최초의 합의 문건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는 불리하게 전변”되고 있고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이 날로 양양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⁵⁾ 이를 위하여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주도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인민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에 북한은 제3세계에 대한 외교에 더욱 많은 힘을 쏟았다.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군사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2월 2일), 『김정일선집 제1권』, p.323.

15) 김일성, “국제혁명 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 대회자료집』 제3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65~66.

김정일도 그의 아버지 김일성과 같은 국제정세 인식을 보여 주었다. 즉 그는 1970년대를 “혁명하는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 보람찬 혁명의 시대”라고 하면서 시대정신을 남한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조선혁명의 완성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으로서 보았다.¹⁶⁾

김정일은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된 상황을 보고 국제정세가 북한의 혁명에 더욱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혁명에의 준비를 촉구하였다. 즉 “오늘 국내외정세는 우리 혁명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더욱 다그칠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웰남에서 쫓겨난 미제와 외토리 괴뢰의 신세가 된 박정희 매국도당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면서 지금 전쟁준비를 미친 듯이 다그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있으며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습니다”¹⁷⁾고 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혁명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적국’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군사적 경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는 김정일이 3대혁명을 주도하면서 당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시기이며, 또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이상화 작업을 주도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대외관계에서도 표출하고 있다.

16)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하여야 한다,” 1970년 6월 18일, 『김정일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93~101.

17)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부부장 협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2일), 『김정일선집 제5권』. p. 101.

“오늘 우리 당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은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세계 혁명가들과 인민들 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려는 세계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지향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세계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우리의 성과와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계속 찾아오고 있으며 우리 대표단을 자기네 나라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을 널리 선전하고 우리의 혁명투쟁경험을 배워주어야 합니다.”¹⁸⁾

그러면서도 그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간판 밑에 《원조》요 뭐요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지만 결코 그들의 침략적 본성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절대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적들이 덤벼들 때에는 맞받아 나아가 적들을 단매에 때려 부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고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어느 때든지 적들이 달려들면 싸울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¹⁹⁾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김정일에게서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는 언급이 등장한다. 1970년대 후반의 국제정세는 바로 북한의 동

18) “현시기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8월 22일), 『김정일선집 제6권』, p. 127.

19)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9월 10일), 『김정일선집 제6권』, p. 312.

맹국인 중국에서 1978년부터 덩샤오핑의 주도하에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됨으로써 동유럽 사회주의의 변화의 물결이 아시아 사회주의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979년 12월 19일에 발표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를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내부 와해 책동’으로 강변하면서도 그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정세 변화를 우려하였다.

“우리는 지난해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지!》는 구호를 내놓고 이것을 당의 중요한 전략적 방침으로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의 정세발전은 우리 당의 이 구호가 아주 정당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와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침략책동을 감행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 로골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도 매우 복잡하며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일부 나라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수정주의길로 나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그릇된 로선을 다른 나라들에까지 내리먹이려 하고있습니다.”²⁰⁾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김정일은 대외관계 부문 담당자들에 대하여 북한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외적 자세를 갖출 것을 독려하였다.

“현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합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은 신생독립국가들을 자기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넣기 위한

20)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12월 19일), 『김정일선집 제6권』, p. 354.

쟁탈전을 치렬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가 열강들에게 먹히우거나 룡락당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나가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제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대외활동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어떤 정황속에서도 우리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건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은 대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하여 재여보고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은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우리 인민의 존엄을 유린하려 드는지 대하여서는 건결히 맞서 투쟁해야 하며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은 대외사업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려 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것과 같은 사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주체를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이 자기를 지켜보며 보살펴주고있다는것을 육감으로 느끼면서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외사업을 하면 지혜도 생기고 배심도 든든해질것입니다.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은 자기 수령과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자기 제도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대외활동을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원칙적으로 벌려나가야 하겠습니까.”²¹⁾

요컨대 김정일은 중국에서조차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의 사회주의 변화를 보면서, 이를 자본주의 강대국이 사회주의를 “먹으려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정책에 충실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1)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1월 6일), 『김정일선집 제6권』, p. 370.

5. 1980년대

김정일의 사고와 정신은 1982년 3월 31에 나온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²²⁾ 그의 대외관도 마찬가지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속에는 바로 김정일이 보는 바깥세계와 그 세계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상에서의 주체를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으로 정의하면서 “자기의 것에 정통”,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 “민족문화 발전”과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의 향상, “사대주의 배격” 등을 강조하면서 결국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를 반대하여야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상의 자주는 우리 민족, 조선 민족을 강조하면서 배타적인 자주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자주가 대외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자주성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됩니다.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것입니다. 자주권은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세계에는 큰 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입니다.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성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됩니다. 자기 나라 혁명을 떠나서 세계혁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주성을 떠난 국제

22)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 p. 143.

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계속 나가며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빨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 단결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협조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외관계에서 자주권과 평등권을 고수할 것이며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960년대에 신생국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듯이, 사회주의국가 및 신생국가간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이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경제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결국 대외 경제관계에서 ‘제국주의국가들’에 대한 신흥국가들간의 경제적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자연부원을 지키며 소수 자본주의렬강들이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과 인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약탈하던 낡은 경제질서를 끝장내고 공정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무진장한 인적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과 인민들이 경제기술적 협조를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킬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짧은 기간에 경제적 자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는 국방에서의 자위로 이어진다. 즉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언제나 준비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할 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 수 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방에서도 형제 나라들과 벗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보위해줄 것을 남에게 의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이며 자체의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외부의 원조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방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자기 인민의 힘과 자체의 방위력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정일의 “주체사상” 틀 속의 대외관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주의체제의 급격한 전환이 발생하자 매우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은 사회주의진영의 변동을 “국제무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반 사태를 분석하여보면 비단 우리 혁명 뿐 아니라 세계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자본주의세계를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경제적으로 자기의 통제 밑에 넣게 된” 미국의 “제국주의적” 힘이 강해진 탓으로 돌렸다.²³⁾

23)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9월 25일. 『김정일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2~47.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세계제국주의가 결탁하는 방향에서 재조직화됨으로써 과멸에 직면하였던 자본주의는 되살아나게 되었으며 경제기술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서로 결탁되었을 뿐아니라 그들의 통치수법과 약탈방법도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이것이 또한 현대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국가들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즉 “털어놓고 말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새 사회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데서 좌우경적인 편향도 범하였습니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과정에도 편향이 나타났지만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과 건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심각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력사적조건이 서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 호상간의 관계문제를 처리하는데서도 일련의 엄중한 편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위기가 결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투쟁” 즉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원만히 준비되지 못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사상적 문제를 근본 이유로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변명하고 김정일은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혁명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련합된 힘으로 사회주의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반대해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혁명적립장을 고수하고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반제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하며 민족리기주의를 반대하고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는 동지적관계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현대제국주의는 사회주의의 원수일뿐아니라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입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야 반제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분렬, 리간 책동을 짓부시고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세계 모든 반제자주적력량이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서방의 사상문화적 영향으로부터의 우려를 다음과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고 적들이 우리 내부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²⁴⁾

24)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월 11일), 『김정일선집 제 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8.

6. 1990년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체제의 존립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그 원인을 규정하고 사상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나온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론이다.

김정일은 1991년 5월 5일 발표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지배와 예속, 불평등을 반대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자주성,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 등을 국제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다시금 강조하였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큰 민족과 작은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과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국제적 협조를 강화해나가는 것은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 줍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련합된 세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국제적인 반제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 책동을 파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면서도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제3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물심량면의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²⁵⁾

25)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0.

그리고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침투에 따른 결과로서 보고, 자본주의 경제와의 협력이나 강대국의 경제적 원조는 예의 “제국주의의 책동”으로 인식하는 적대적인 대외관을 보여주었다.

“제국주의자들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에 자본주의적시장경제를 강요하고 경제적 침투를 감행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놓음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 봉쇄나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백방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지만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책동은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1992년 1월 3일에 발표된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

“최근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었으며 얼마전에는 쏘련이 해체되어 자기 존재를 끝마쳤습니다. 이러한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것처럼 떠돌고있습니다. 이것은 사태의 진상을 오히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속에서 사상적 혼란을 일으키고있으며 세계혁명발전예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있습니다. 오늘 조성된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기초우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양양으로 이끌어어나가는것은

절박한 역사적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²⁶⁾

김정일은 사회주의가 몰락한 원인을 맑스주의의 사회주의제도 건설 후 방향성 제시 미비 등 여러 가지로 들면서 “사회주의나라 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라고 대외관계의 오류가 있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건설하게 되며 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책임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관철해나가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매개 나라 당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다른 나라 당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위업은 매개 나라인민의 민족적 위업인 동시에 국제적 위업입니다. 매개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은 자기의 자주성을 지킬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나라 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동지적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테두리 속에서 사회주의당들 사이의 협력이 평등과 자주성에 입각하지 않아서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강대국의 압력과 수정주의의 결과로서 인식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 안에는 큰 나라 당과 작은 나라 당도 있고 력사가 오랜 당과 그렇지 못한 당도 있습니다. 큰 나라 당은 작은 나라 당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공동의 위업수행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 당일수록 국제공

26)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제12권』, p. 275.

산주의운동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더 큰 책임을 자각하여야 하며 형제 당들을 사심 없이 도와주고 공동위업수행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응당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큰 나라 당들이 대국주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당들 사이에는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를 받는 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이 있고 매개 나라 당들이 그 지부로서 활동하던 시기는 지난 간지 오래입니다. 사회주의나라 당들은 마땅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동지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겠으나 지난 기간 일부 사회주의 나라 당들은 국제당이 있을 때의 낡은 관계의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습니다. 어떤 나라 당은 자기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앙》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 당들에 이래라저래라 하고 지시하면서 자기의 그릇된 로선을 따르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나라들의 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협조관계가 심히 약화되었으며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와 맞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나라 당들은 주체성이 없이 대국주의적 압력에 굴복하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큰 나라가 수정주의를 할 때 같이 수정주의를 하고 또 남이 《개혁》과 《개편》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련과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런쇄적으로 좌절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는 대외관계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그대로 재론하면서 “제국주의자와 반동들의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 할 것을 강조하였다.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공화국정권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화국정권은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

외활동원칙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관계를 맺거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맺고 그것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당이 제시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오늘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를 고수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로 되는 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모든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과국정권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어 1993년 3월 1일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²⁷⁾에서는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북한체제의 위기감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외부로부터 포위되어 있다는 ‘피포위’ 인식이 드러난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전례 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의를 훼손하는 궤변이 수없이 류포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원수들은 사회주의를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고 비방하면서 바로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27) “사회주의에 대한 훼손은 허용될수 없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김정일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50.

가 좌절된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는 비난은 지구상에 사회주의가 출현한 첫날부터 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벌려온 반사회주의적 악선전과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는 비인간적인 사회인 것처럼 떠벌여 왔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선전을 표현만 바꾸어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는 비난이다.”

또한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붕괴를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우경기회주의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이라고 보았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질식시키기 위하여 일찍부터 침략과 압력, 봉쇄와 회유를 비롯한 갖은 파괴책동을 직접 감행하는 한편 공산주의운동 및 로동운동의 상층에서 나타난 혁명의 타락분자, 변절자들을 저들의 앞잡이로 리용하여 왔다.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운동에서 일어난 사상적 혼란과 우여곡절은 다 그 상층에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주의가 강대한 물질적인 역량으로 전환된 역사적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내부와해전략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전략에 따라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이 전례없이 심해지는 가운데 사회주의가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는 비난도 생겨났다.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는 비난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전략의 산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실로 사회주의를 허물어버리는 범죄행위가 례외없이 제국주의자들의 지지와 조종 밑에 감행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데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사회주의에 대한

어중이떠중이들의 온갖 훼방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용감성을 발휘하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고 강변하고 있다.

1997년 6월 19일에 발표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²⁸⁾에서 나타난 김정일의 대외관은 보다 강력한 투쟁관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 세계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투쟁을 가로막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으나 어떠한 힘도 자주에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을 돌려세울 수 없다.”

동시에 김정일은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적 단결과 런대성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관계이며 그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이 보장되고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우에서만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 이것이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참다운 국제주의적 관계”라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요약해서 말하면,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김정일의 대외관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 없이 “자주성” “주체성”을 대외관계의 중심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

28)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06.

나 그 자주성, 주체성은 세계를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세계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러한 그의 대외관은 1960년대 그가 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생각으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III. 세계질서관

김 수 압(책임연구원)

1. 서 론

일반적으로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강대국과 비교하여 체계변수, 즉 대외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로부터 압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의 대외행위를 결정하는 데는 현실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체제의 속성으로 인해 최고통치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 ‘유일영도체제’로 김일성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김일성 사후 후계구도에 따라 이러한 절대적인 지위는 김정일이 승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세계질서관은 김정일의 인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김정일이 세계질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질서관 예측가능한 체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세계질서는 국가의 대외행위와 관련된 기대구조의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이러한 예측가능한 기대구조의 체계라는 정의를 원용할 때 김정일의 경우 현실역학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사발전단계상 사회주의의 중국적 승리와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이 라는 2가지 관점에서 기대구조의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자는 각

1) 이상우,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장래,”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나남, 1992).

행위자 혹은 세력들간의 역학관계라는 현실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세계 질서관을 지칭한다.²⁾ 그리고 후자는 세계질서를 제국주의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회주의 일반의 인식 틀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 하여 세계질서를 인식하는 경우, 김정일의 세계질서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국주의 내부 상황의 변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세력내부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대립구도 이외에 제3세계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에 따른 세계질서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냉전질서의 와해에 따라 세계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탈냉전적인 세계질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군사력이 힘의 주된 요소로 작동하고 있던 시대에 역학관계의 분포 양태를 기준으로 세계질서의 역학관계의 유형을 세력균형체제, 이완된 양극체제, 경직된 양극체제, 보편적 단일국제체제, 위계적 단일국제체제, 전단위 거부권 보유체제의 6가지로 유형화한 카플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pp. 1~146.

2. 제국주의론에 입각한 세계질서 인식

1. 냉전적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

가. '자본의 국제화'와 세계질서의 변화

북한은 사회주의 일반적인 인식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구도로 세계질서의 역학관계가 형성되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사전에서는 레닌의 제국주의 개념을 수용하여 “착취와 약탈, 침략과 전쟁을 주된 생존수단으로 삼으며 독점이 지배하는 마지막 단계의 자본주의”³⁾라고 제국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형이 국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현실세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의 국제화’에 따라 자본주의 열강간의 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자본주의 열강들이 상품시장과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에 따라 파괴적인 무장충돌과 전쟁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 열강들이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결탁하게 되었으며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결사적으로 물고 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로 넘어간 것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적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40여 년 동안 170여 차례의 크

3)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575;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090.

고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에는 한번도 전쟁이 없었으며 오히려 군사 불력을 통하여 자본주의 열강들의 군사적 결탁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서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이상에서 보듯이 이념에 기반 한 냉전적인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의 국제화를 기반으로 제국주의열강간에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나.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

냉전이라는 세계질서의 역학구도가 형성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제1, 2차 대전의 결과 미국이 막대한 이득을 보아 경제적, 군사적으로 자본주의세계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독점자본가들로서는 엄청나게 확장된 군수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막대한 잉여자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사활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들은 군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명분 하에 사회주의국가들을 반대하고 국제긴장을 격화시키는 ‘랭전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트루먼주의’였다는 것이다.⁵⁾

김정일은 냉전적인 세계질서 형성을 독점자본가들의 이해라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군사적인

4) 김정일, “반제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9월 25일” 『김정일선집 제9권』, p. 24. 김병식,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전반적 위기』(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참조.

5) 김정일, “반제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p. 23.

차원의 군축과 평화에 대하여 ‘완화’와 ‘대화’를 앞세운 간섭책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와 ‘군축’을 제안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군비를 확장하고 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완화’와 ‘대화’를 명분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책동과 전복음모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제국주의가 존속하는 한 경제적 측면에 입각한 이해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침략적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전쟁의 위험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간판 밑에 ‘원조’를 떠들어대고 있지만 결코 침략적 본성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⁷⁾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안전보장’과 ‘이권의 상호 보호’라는 논리를 내세워 주요자원시대와 군사·전략적 요충지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침략무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협조’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3세계국가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장악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원조’와 ‘협조’는 약육강식의 낡은 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국들에 대한 지배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한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⁹⁾

이상에서 보듯이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탈이라는 침략적 본성의 불변으로 인해 제국주의가 존속하는 한 평화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

6)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10월 12일,” 『김정일선집 제9권』, p. 295.

7) 김정일,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9월 10일,” 『김정일선집 제6권』, p. 314.

8)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칼 맑스 탄생 165돐 및 서거 100돐에 즈음 하여 발표한 논문 1983년 5월 3일,” 『김정일선집 제7권』, p. 455.

9)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p. 295.

없다는 것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세계질서에 대한 김정일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2. 제3세계의 정치세력화와 신식민주의적 침탈 방식

가. 신생독립국과 ‘빨리불가담운동’: 제3세계의 정치세력화

냉전질서의 형성과 더불어 김정일은 전후 세계질서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으로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여 100여 개의 신생독립국들이 탄생한 사실을 들고 있다. 이들 신생독립국들이 세계인구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생독립국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1961년부터 ‘빨리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개최하면서 세력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빨리불가담운동’은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⁰⁾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이라는 세질질서 인식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제3세계의 등장으로 1980년대가 되면 ‘자주성’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세계가 대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추가된다. 제국주의에 의하여 독립과 자주권을 짓밟히고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지난 날의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은 역사적 처지와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따라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

10) 김정일,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자: 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5월 9일,” 『김정일선집 제1권』, pp. 91~100.

의 투쟁전선에 결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연합되어 있듯이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역시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자주성을 지키려는 세력들의 연합과 제국주의세력의 연합이 대립되는 구도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질서가 자주세력 대 제국주의 세력의 대결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출이라는 당위적 차원의 논의로 연결되고 있다. 즉,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출을 위한 국제주의는 자주권과 평등권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또한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자주적인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빨리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빨리불가담운동’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 운동인데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키고 서로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¹²⁾ 따라서 지배와 예속이라는 세계질서를 타파하고 평등과 정의,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이라는 당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성의 원칙에서 사회주의국가 및 ‘빨리불가담’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1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제7권』, pp. 162, 180~181.

12)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p. 455.

13) “위대한 당의 평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당보(로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청년보(로동청년)공동사설, 1995.1.1

나. 신식민주의와 침탈방식의 질적 변화

김정일은 세계질서의 현실적인 역학관계와 제국주의가 세계질서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의 질적 변화라는 2가지 관점에 기반하여 세계질서를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라는 경제적 환원론의 관점에서 신생독립국의 등장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 기도를 설명하고 있다. 자본의 국제화를 매개로 미국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서로 결탁하면서 통치수법과 약탈방법이 더욱 교활하게 변한 것이 현대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주장한다.¹⁴⁾

사회주의 역량의 급격한 성장, 노동운동, 민족해방운동으로 위기를 맞게 된 제국주의는 위협요인에 대응하여 세계질서 상의 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해 침탈수단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노동귀족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자본주의적 착취를 은폐하고 실업과 빈궁으로 인한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제국주의의 생명선은 식민지를 약탈하는 것인데, 식민지체계가 붕괴되어 예전과 같이 강압적 방법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고 약탈할 수 없게 되자 신생 독립국과 발전도상국들의 자주권을 명목상 인정해주고 이른바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와 약탈을 감행하는 신식민주의적 방법을 고안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경쟁하던 예전과는 달리 공모하고 결탁하여 ‘원조’를 미끼로 신생독립국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시킴으로써 손쉽게 상품시장과 원료자원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¹⁵⁾

이상에서 보듯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국주의가 침탈하는 방식에

14)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p. 24.

15)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pp. 24~25.

서는 변화가 있지만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정일의 세계질서에 대한 기본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신식민주의적 수탈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있지만 제국주의자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발전도상국들을 신식민주의적 방법으로 착취하고 약탈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버리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여 발전도상국들을 경제·기술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3. 세계질서의 기본단위로서의 민족국가와 국제적 연대

1. 기본단위로서의 나라와 민족: 주체성과 민족성

김정일은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구도로 세계질서를 인식하고 있지만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를 민족국가로 설정하면서 주권(주체성)과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간은 계급성과 함께 민족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확립된 고유한 문화와 전

16) 김정일,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314.

17)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p. 29.

통이 있으므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이상에서 보듯이 김정일에 있어서 세계질서는 ‘계급적 속성’과 ‘민족’이라는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계급적 속성에 기반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자본주의)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에게 있어 세계질서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민족과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지향하여 연대성을 주장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세계질서의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건설하게 되며,”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관철해나가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매개 나라 당의 신성한 권리”라는 것이다.

계급적 속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민족이라는 단위가 갖는 의의에 대하여 김정일은 사회주의 태동 초창기와 현 시대 상황의 질적 변화라는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다. 유물사관의 견지에서 선 선행이론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자본주의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면 민족 자체가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각각의 나라와 민족들 내부에 혁명의 주체적 역량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반대해나가는 투쟁에서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문제였던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는 노동계급에게 조국이 없다는 선행이론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안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려는 기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나라와 민족들이 주체성을

18)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제14권』, p. 308.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기본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인민의 요구와 민족적 특성,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하는 것을 마치 국제주의와 배치되는 것처럼 여겨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민족적 기반과 지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⁹⁾

2. 민족성과 국제적 연대의 양립가능성

김정일은 세계질서를 설명하면서 민족에 기반한 자주성을 핵심요소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회주의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연대와의 양립가능성이 핵심적인 고민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양자가 모순·대립관계가 아닌 양립 가능하고 조화될 수 있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다른 나라 당들과의 국제적연대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위업은 매개 나라 인민의 민족적위업인 동시에 국제적위업입니다. 매개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은 자기의 자주성을 지킬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나라 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동지적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도 지니고있습니다.”²⁰⁾

민족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주

19)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p. 310~311.

20)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제12권』, p. 282.

의와 모순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인민의 지지기반을 상실하여 사회주의가 좌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틀어쥐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벌려나가는 우리 시대에 와서는 나라와 민족들이 주체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절실한 요구”인데, 일부 나라에서 자기 인민의 요구와 민족적 특성,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하는 것을 마치 국제주의와 배치되는 것처럼 여겨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민족적 기반과 지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¹⁾

개별민족국가와 사회주의에 기반한 국제주의와의 양립가능성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양립가능성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이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것처럼 떠벌이고 있지만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애국애족’이라는 공통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민족주의에 제한성이 있다고 하여 그 진보적 측면을 무시하고 배척하면 민족적 단합을 이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민족주의 일반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너울을 쓰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이며 민족이기주의, 민족배타주의라는 것이다.²²⁾

또한 김정일은 사회주의 내부에서의 대국주의가 주체성과 국제주의가 양립하는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국주의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을

21)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 310.

22)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 316.

‘민족주의’나 ‘고립주의’라고 비방하면서 압력을 가하여 왔지만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 왔다.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내정에 간섭하면서 대국주의자들이 ‘통합경제’를 강요하여 왔지만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걸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주체성과 국제주의를 대립관계로 보고 주체성을 말살하려는 그릇된 대국주의가 있어 왔지만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여 왔다는 것이다.²³⁾

4. 탈냉전과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

1. 탈냉전적 역학관계의 변화와 평화

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질서재편에 대한 인식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구도로 세계질서를 파악하는 기본틀 자체는 변하지 않는 가운데 김정일은 냉전기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역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짐에 따라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역량관계가 착잡하게 얽혀있다”고 탈냉전적 세계질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²⁴⁾ 그런데 냉전기와는 달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책동으로 인해 일부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고 사회가 전면적으로 파산 당하면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²⁵⁾ 특히 소련이

23)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p. 313~315.

24)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 306.

25) 김정일,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2월 27

해체된 것은 제국주의자와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⁶⁾

김정일은 제국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세력의 약화라는 탈냉전적 세계역학관계 재편현상이 ‘사상적’인 측면에 원인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의 좌절은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결국 사회주의가 송두리째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⁷⁾ 특히 사상의 변질은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질서, 역학관계의 재편은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한 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은 사회주의나라 당 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²⁸⁾ 자주성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가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에 대항할 수 있는 기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 내부의 대국주의로 인하여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세계질서의 역학관계가 재편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부에는 당의 대소와 힘의 우열이 존재하고 큰 힘을 가진 당이 공동위업의 수행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국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 사이의 관계에는 상하관계, 지도를 하는 당과 지도를 받는 당이 없이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동지적으로

일,” 『김정일선집 제10권』, p.

26) 김정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4일,” 『김정일선집 제13권』, pp. 10~11.

27)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1995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p. 48.

28)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82.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회주의나라 당들은 국제당이 있을 때의 낡은 관계의 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앙’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 당들에 자기의 그릇된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고 내부분쟁에 간섭하는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의 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협조관계가 약화되어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와 맞설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나라 당들은 주체성이 없이 대국주의적 압력에 굴복하여 큰 나라가 수정주의를 할 때 같이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개혁’과 ‘개편’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소련과 동구라과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연쇄적으로 좌절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김정일은 사회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역사발전의 기본방향이 변할 수 없다는 당위론으로 대응논리를 구사하고 있다.³⁰⁾

나. ‘평화적 이행’ 전략과 세계질서의 재편 기도

김정일은 신식민주의적 침탈방식의 연장선상에서 탈냉전기 제국주의가 세계질서의 재편을 기도하는 방식에 대하여 ‘평화적 이행전략’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평화적 이행전략은 먼저 사상·문화적 침투방식들을 들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반동적 부르조아 문화를 침투시켜 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

29)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p. 283~284.

30)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75.

살하고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는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³¹⁾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현혹된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관료화된 사회라고 비방하면서 자본주의사회가 사람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해주는 사회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복귀의 길에 들어선 국가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란 찾아볼 수 없다고 인권과의 연계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 구 소련과 자본주의가 복귀된 구라과국가들에서 자유란 부자들의 자유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자유밖에 없다는 사실이 좋은 예라는 것이다.³²⁾

또한 ‘원조’와 ‘협력’을 평화적 이행전략의 또 다른 방식의 하나로 들고 있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를 걸면서 자본주의 복귀소동을 벌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착취계급의 ‘선의’나 ‘계급협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혁명을 망치는 지름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³³⁾ 침략과 약탈이 변하지 않는 본성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이나 백을 빼앗아가기 위한 약탈과 예속의 울가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³⁴⁾ 즉, 계급적 속성과의 연관 속에서 평화적 이행전략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원조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먼저,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는 경제부문에 ‘원조’를 집중시키는 수법으로 ‘원조’를 받는

31)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92.

32) 김정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제13권』, pp. 10~11.

33)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1994년11월1일,” 『김정일선집 제13권』, pp. 459~460.

34)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 막고 경제적 부속물로 만들고 있다. 둘째, 서방금융기구들은 ‘차관’을 미끼로 발전도상국들에게 사영화, 민족화폐의 평가절하, ‘다당제’, ‘민주화’, ‘인권보장’ 등을 요구함으로써 ‘원조’를 이용하여 발전도상국들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있다. 셋째, 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과학기술협조’에 대해 떠들면서 과학기술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자신들의 ‘과학기술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³⁵⁾

끝으로 ‘제3의 길’을 평화적 이행전략의 또 다른 방식으로 들고 있다.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추구하는 부르조아 복귀주의자들은 대지주, 자본가와 같은 계급적 원수들을 비롯하여 상이한 정치세력과 유파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3의 길’을 주창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3의 길’을 위한 ‘개편’을 내세우는 현대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도 상이한 주의주장을 내세우는 다양한 유파가 있지만 ‘개편’을 부르짖으면서 ‘제3의 길’을 꿈꾸는 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을 집행하는 혁명의 추악한 배신자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⁶⁾

2. 세계화: ‘세계의 일체화’론

가. ‘세계의 일체화론’

김정일은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가 미국에 의하여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부르조아 인종론과 민족배타주의를 침략적인 세계주의와 결합시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35) 『로동신문』, 2001.7.22.

36)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성 1990년 10월 10일,” 『김정일선집 제10권』, p. 285.

사상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민족국가와 자립적 민족경제 및 민족문화를 부정하고 ‘세계국가’와 ‘세계적인 경제’, ‘국적 없는 문화’를 제창하는 세계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 다국적기업의 착취를 정당화하는데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³⁷⁾ 다시 말해 세계정치에서는 역사적으로 파멸로 입증된 ‘인종론’, ‘세계주의’와 같은 반동이론들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⁸⁾

그런데 김정일이 1997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세계의 ‘일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세계질서상의 새로운 현상을 개념화한 이후 북한의 문건에서는 ‘일체화’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 김정일의 문건에 기반한 「로동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세계의 일체화론이라는 김정일의 탈냉전기 세계질서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의 ‘일체화’ 흐름은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형태의 책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세계의 ‘일체화’는 전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고 모든 민족을 예속시키고 동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족간에 연계와 교류가 밀접해짐에 따라 공통성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상황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세계의 ‘일체화’란 있을 수 없

37)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9년 12월 28일, 「김정일선집 제9권」, p. 445.

38)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p. 329~333.

다고 반박하고 있다.³⁹⁾

이러한 세계 일체화론은 ‘세계문화창조’라는 간판 밑에 사상·문화적 침투에 열을 올리고 있다⁴⁰⁾는 주장에서 보듯이 사상·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강하다. 세계의 일체화론은 ‘세계개방사회’론인데, ‘세계개방사회’론은 개별 국가기구들의 권한을 줄이고 세계전반을 포괄하는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 그 통제 밑에 일체 행동규범들을 새롭게 제정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개방사회’론의 제창자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방사회’로 나아가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방사회’가 서방식 가치관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사회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의 ‘일체화’ 책동이 도처에서 규탄 받고 있는 현실을 회피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계개방사회’나 세계의 ‘일체화 흐름’은 전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⁴¹⁾

민족문화의 말살이라는 문화적 측면의 일체화와 더불어 세계화는 정치질서라는 측면에서도 이해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분쟁문제해결의 ‘국제화’는 ‘세계화’ 책동의 연장이며 세계에 자신들의 정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무력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²⁾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주체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그것이 자신의 체제에 가져

39)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p. 329~333.

40)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배격하자,” 『로동신문』 및 『근로자』 공동문설, 1999.6.1.

41) 『로동신문』, 2001.3.29.

42) 『로동신문』, 2000.8.31.

을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결과론에 집착하여 인식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한에서 세계화로 인해 미풍양속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생활이 미국화되고 있다고 그러한 부정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⁴³⁾

이와 같이 일체화를 기도하는 세계질서에 대응되는 세계질서의 상으로 김정일은 자주화된 세계질서를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주화된 세계’란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없는 세계로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주성에 기반한 자주화된 세계는 사회주의이념에 기반한 혁명적 당들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연대성이 강화된 세계를 말한다고 주장한다.⁴⁴⁾

나. 경제적 세계화 관점에서의 일체화론

세계의 일체화는 경제적 세계화의 관점에서도 이해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책동은 냉전종식 이후 제국주의자들이 매달리고 있는 새로운 지배주의적 수법으로 냉전종식 후 세계가 ‘일체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경제도 ‘세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는 다른 나라들의 민족경제를 말살하고 경제적 예속화를 노린 것이며 세계경제생활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경제의 ‘세계화’는 새로운 서방식 세계경제질서를 수립하고 세계경제생활을 자신들의 세계지

43)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pp. 331~332.

44) 김정일,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년 10월 10일,” 『김정일선집 제13권』, p. 201.

배목적에 맞게 주도하며 무제한적인 국제적 착취와 약탈을 감행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⁴⁵⁾

‘세계화’는 발전도상국들의 번영발전을 위한 ‘명처방’이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경제지배전략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⁴⁶⁾ 따라서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의 간판 밑에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세계화의 본질로 인해 유엔무역개발회의 제10차 대회, 제30차 세계경제연단 등 국제회의와 회담에서 미국과 서방이 제기하는 ‘세계화’가 전 세계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⁸⁾ ‘세계화’는 발전도상국들의 재정금융, 무역 등의 분야를 파괴하고 있으며 경제의 군사화를 통하여 시장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물가를 올리고 통화팽창을 확산시키며 실업을 낳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⁹⁾ 이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계화’의 길로 나간다면 발전도상나라들은 자기의 고유한 경제방식과 구조를 상실 당하고 서방국가들의 완전한 경제식민지로 전략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⁵⁰⁾

45) 『로동신문』, 1998.8.8.

46) 『로동신문』, 2000.8.31.

47) 김정일,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돛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주제87(1998)년 4월 18일,” 『김정일선집 제4권』, pp. 417~418.

48) 『로동신문』, 2000.2.29.

49) 『로동신문』, 2000.7.11.

50) 『로동신문』, 2000.8.31.

다. 인권의 관점에서의 세계화

김정일은 인권이 제국주의의 침략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인권을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구실 하에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정당화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⁵¹⁾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 수 없는데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인권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다”라는 강도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⁵²⁾

이와 같은 인권을 매개로 한 세계질서관은 냉전의 종식이라는 세계질서상의 역학관계의 재편에 대한 인식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세력균형의 파괴가 초래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 범위에서 패권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우위’와 ‘자유화’를 명분으로 침략과 약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식민주의적 국제질서를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주권 위에 ‘인권’과 ‘자유’를 올려놓으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는 외세의 간섭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서방나라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가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결핍’에서 발생한다고 떠들면서 ‘세계화’ 책동에 ‘인도주의’적인 외피를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를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분칠하여 강행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인권’과 ‘자유화’ 문제는 ‘세계화’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증진하

51)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p. 477.

52)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2001.6.24.

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³⁾ 다시 말해 세계화는 신식민주의적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도이기 때문에 세계화를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포장하여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⁴⁾

라. '세계의 일체화'와 미국의 '1극세계' 기도

지배주의 전략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제창하는 세계화의 목적은 미국을 세계의 '유일한 지도자'로 만들고 미국과 그에 종속된 자본주의 열강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신식민주의적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회유기만 등의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미국의 '확대전략'이 기본적인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⁵⁾ 냉전시대 힘에 의한 동서대결로 진통을 겪던 미국은 소련의 붕괴에 따른 냉전종식 후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⁵⁶⁾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좌절에 대해 냉전에서의 승리로 과신하면서 민주주의와 안정을 보장하고 세계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란 서방식민주주의를 의미하며 '새로운 세계질서'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세계질서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자본주의만이 지배하는 미국중심의 '1극세계'로 재편하여 모든 지역문제를 미국의 지휘하에

53) 『로동신문』, 2000.1.12.

54) 『로동신문』, 2001.1.12.

55) 『로동신문』, 2000.6.16.

56) 『로동신문』, 2000.12.30.

해결되는 세계질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즉, 힘의 정책, 전쟁전략으로 세계자주역량을 말살하고 전세계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는 1극세계로 만들어 무제한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미국의 총체적 전략목표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1극세계란 세계의 미국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일체화'의 흐름과 미국의 방식, 질서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몬로주의', '마샬안'과 같은 것들을 재현하려는 것은 미국식 방식 및 법과 질서로 세계를 지배하여 세계의 미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책동의 하나라는 것이다.⁵⁷⁾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자처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기도하려는 미국에 대해 문명관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문명'을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미국의 문명이 인류문명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미국식 문명의 세계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전세계를 미국식 '문명'으로 '일체화'하여 미국의 독점적 지배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⁵⁸⁾ 미국식 문명의 일체화라는 의도에서 미국은 미국식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들의 정치제도, 정치생활을 미국화하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⁹⁾

5. 결 론

김정일은 세계질서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기본요소는 국가(민족)와 계급에 기반 한 사회주의의 2가지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57) 『로동신문』, 1998.3.22; 1998.10.27; 2001.4.19.

58) 『로동신문』, 1998.12.23.

59) 『로동신문』, 1998.12.23.

계급적 속성을 지닌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성과 민족성의 견지가 세계질서에서 우선시 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역사발전상 세계질서는 이러한 민족국가를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제주의와 민족국가간에 대립·모순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양립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회주의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건설하게 되는데 국제주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적 특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민의 지지기반을 상실하여 사회주의가 좌절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주체성과 민족성은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질서 형성에 발전적인 동인을 제공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이 설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질서의 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국주의세력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 세계질서의 역학관계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자주세력의 대립구도가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김정일의 세계질서관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론에 기반하고 있어 경제환원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제국주의가 정치·군사적인 측면의 질서형성의 기본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질서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대립구도라는 관점에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 2차대전후 자본의 국제화에 따라 제국주의열강이 상호 대립되는 관계에서 상호 결탁하여 사회주의와 대립함으로써 이념에 입각한 냉전질서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립구도에 신생독립국이 비동맹운동으로 정치세력화함으로써 중층적인 세계질서가 형성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세력화한 제3세계에 대하여 직접통치를 하던 식민지시대의 수법으로는 침탈할 수 없기 때

문에 주권을 명목상으로 인정해주고 원조 등을 통하여 지배하는 신식 민주주의적 침탈방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침탈방식의 변화에서 보듯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정일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어 탈냉전적으로 세계질서의 역학관계가 재편되면서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에 기반한 세계질서관이 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과는 달리 세계를 ‘일체화’시키려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세계의 일체화’로 개념화하고 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세계의 일체화가 기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일체화’란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형태의 책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배주의 전략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제창하는 세계화의 목적은 미국을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만들어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려는 책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세계질서란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자본주의만이 지배하는 미국중심의 1극세계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가장 보편적인 세계기구인 유엔마저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는 미국의 1극화 기도에 대하여 다극화를 지향하는 세력간의 대결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IX. 대 남 관

허 문 영(선임연구위원)

1. 서 론

냉전기 북한은 우리 민족의 분단원인으로서 ‘미군의 남한 강점과 식민지통치 지속’을 주장하였다.¹⁾ 그리고 이 같은 분단 원인을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도로서 북한은 ‘미제국주의로부터 민족해방’과 ‘괴뢰·파쇼정권에 대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제시하였다.²⁾ 북한은 통일문제를 분단된 민족사회를 재통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제’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³⁾ 민족해방을 통해 ‘민족적 모순’을 해결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면 남한에서 ‘인민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남북한 인민정부간에 평화적 협상을 통하여 통일이 가능하며, 비로소 ‘전조선혁명’은 완성되는 것으로 북한은 간주하였다.

한편 2000년 6월 남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단 55년과 한국전쟁 50년만에 평양에서 만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은 9시간 이상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민족

1) 『김일성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389.

2)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3~18.

3) 『김일성저작선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 479~480.

의 염원을 담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남북한은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에 합의하였고,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한관계 변화와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평가들이 경쟁하고 있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낙관론자들은 북한이 광범위한 변혁의 한 가운데 있으며 앞으로 기본전략을 바꾸고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인 바,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협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높으며 따라서 남북한관계는 순조롭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회의론자들은 김정일이 결코 개방을 원하지 않고 있는 바, 장거리 공격력(미사일) 증강을 통해 정권유지에 주력할 것이며 따라서 남북한관계는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와 전망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관 변화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로제나우(James N. Rosenau)에 따르면 북한과 같이 국가의 크기가 작고,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 폐쇄체제인 나라에서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개인변수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체제·정부·사회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⁴⁾ 브레처(Michael Brecher) 또한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정세인식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⁵⁾ 객관적 환경이 정책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정책결정자의 인식을 통해 심

4) James 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Y.: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80), pp. 128~133.

5) Michael Brecher,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 Setting, Image, Process* (London: Oxford Univ.Press, 1972), pp. 2~14.

리적 환경으로 전환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최고정책결정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남관을 분석하되, 과거 김일성시대 북한이 갖고 있던 대남관으로부터의 변화여부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관은 크게 2부문, 남한을 어떻게 보고있는가와 통일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가로 구성할 수 있다. 남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남한사회와 남한정부 그리고 ‘남조선혁명의 주요 동력’ 규정에 대한 변화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통일문제의 본질과 통일 원칙·전략·방법 그리고 대남정책의 변화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근본문제’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쟁점인 ‘주한미군·국가보안법·연방제’문제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김정일 대남관

『김정일선집』 제1권에서 제14권 사이에 간행된 김정일의 통일관련 주요 문건은 크게 6가지를 들 수 있다.⁶⁾ 이 문건들의 주요 내용을

-
- 6) ①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4월 27일)”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81~90
- ②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함 담화 1972년 7월 14일),” 『김정일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406~418.
- ③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9월 9일), 『김정일선집 7』
- ④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1997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306~333.

발표시기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64년 남한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자, 1965년 4월 김정일은 당 중앙위 일군들과의 담화⁷⁾를 통해 반정부투쟁이 반미자주화 및 조국통일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남한 주민들에게 민족자주의식과 혁명투쟁의식을 제고하여야 조국통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같은 의식들을 고취하기 위해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한 주민들에게 적극 선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김일성 저작물과 혁명전통자료 그리고 반미자주화·조국통일 전략전술방침 해설물 보급과 김일성 전기 편찬을 제시하였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인 7월 14일 김정일은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⁸⁾에서 남북대화에 임한 남한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후,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더불어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남한이 ‘남북공동성명에 수표한 것은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얻자는 기본목적’이 있으며, ‘반동적 통일체제를 더욱 강화해보려는 음흉한 목적도 추구’하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를 남한의 ‘지연전술’과 ‘양면전술’로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

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 (1997년 8월 4일), 「김정일선집 14」, pp. 340~359.

⑥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주제87(1998)년 4월 18일) 「김정일선집 14」, pp. 412~427.

7)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pp. 81~90.

8)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찰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김정일선집 2」, pp. 406~418.

석'으로 평가하고, 자주의 실천적 조치로 미군철수와 일본군국주의 재침책동 저지로,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남북불가침협정 체결, 미군 철수, 무력 축소, 군사적 충돌방지장치 마련을, 민족대단결을 위한 실천조치로 남한의 비상사태 철폐, 정당사회단체 활동자유 보장, 반공법·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내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야'하는 바, 정치협상을 발전시킬 것과 다목적 협상을 통해 전민족적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 그리고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왕래·접촉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당원과 근로자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주목하는 동시에 선전강화를 주장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일은 1982년 9월 9일 국가창건기념일을 맞이하여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⁹⁾를 통해 국경절의 의미를 '공화국 창건을 선포한 날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자주독립국가의 첫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한 날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자신은 70세가 된 김일성을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받들어 모시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며,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은 '조국통일은 수령님께서 제일 심려하시는 문제'인 바 '수령님대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만이 애국자이며 혁명가'로 규정하고, '일군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조국통일과 잇닿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김정일선집 7』, pp. 244~251

김일성 사후 1997년 6월부터 김정일은 통일과 관련된 일련의 ‘로작’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일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원칙과 입장 그리고 정책기조를 살펴볼 수 있다. 1997년 6월 19일에 발표한 ‘로작’¹⁰⁾을 통해 김정일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을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근본원칙’임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그는 ‘로동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선행리론의 사상’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대국주의와 사대주의 즉 외세의존 사상 배격’ 차원에서 ‘주체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부르쵸아 민족주의·민족이기주의·민족배타주의가 문제’일 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애국 애족이라는 공통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민족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이 ‘연대성’과 ‘계급성’ 대신 ‘주체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김일성 사망이후 내부 체제결속과 안정화에 성공한 북한이 향후 이데올로기보다 실리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대남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연이어 동년 8월 4일에 발표한 ‘로작’¹¹⁾을 통해 김정일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로서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일성 시대인 19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채택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종합화하여 헌장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이를 ‘나라의 통일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

10)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4」, pp. 306~333.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선집 14」, pp. 340~359

침을 마련'한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그는 「조국통일 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로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것'과 이를 위해 '민족자주의 원칙·전민족대단결·애국 애족애민의 광폭정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유관국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특별히 대남관계에서는 '당국자들이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켜 볼 것'임을, 대미관계에서는 '백년숙적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정상화를 바라고 있음'을, 대일관계에서는 '적대시정책을 버리면 우호적으로 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일성 사망이후 내부체제 정비를 거의 완료한 김정일은 경제난과 외교난을 풀기 위해 대남 및 대서방 관계개선 의사를 적극 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7년 10월 총비서에 취임한 김정일은 1998년 2월 한국의 김대중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관망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1998년 4월 18일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돛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김정일은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발표하였다.¹²⁾ 5대방침은 ①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② 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단결하며 ③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④ 외세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투쟁하며 ⑤ 남·북·해외동포가 내왕·접촉·대화·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김정일이 당 총비서에 취임한 이후 최초로 나온 대남·통일관련 문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여기서 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남·해외동포들간의 내왕·접촉·대화·연대연합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대남관계와 대외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다시한번 시사하였다. 또한 그는 비록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기초하고 있으나,

12)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 선집 14」, pp. 412~427.

보다 담대하게 통일전선의 대상을 ‘남조선의 집권 상층이나 여당,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 까지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 대해 ‘선행 통치자’ 또는 ‘역대 통치자’와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향후 남북대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 남한관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대남인식은 공격적 성향으로부터 점차 방어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북한은 한국을 무력통일 대상(’50년대)에서 내부전복(혁명)통일 대상(’60년대와 ’70년대), 경쟁적 통일 대상(’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일체제’를 위협하는 흡수통일 주체 또는 공존통일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가. 남한 및 남한정부 성격: 식민지성 지속과 김대중 정부 차별화

남한에 대한 성격규정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미제의 식민지, 핵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냉전적인 대결 인식을 지속하였다.¹³⁾ 그러나 김정일은 김영삼 정부를 ‘역대 군부독재정권’¹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김대중 정부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로 호칭하면서, ‘선행 통치자’ 또는 ‘역대 통치자’와 구별하였다.¹⁵⁾

북한은 「정당단체 연합회의」(’98.2.18)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

13)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5.15),” 「김정일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63~276.

14) 「로동신문」, 1994.8.21; 「로동신문」, 1994.9.21

15) 「김정일선집 14」, p. 424.

유화정책을 기대하는 편지를 채택하였고, 김정일 『서한』(’98.4.18)을 통해 다시 한번 대북 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서한』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였을 뿐 아니라, ‘반통일적인 법률과 기구 폐지’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구사함으로써 종전 『8·4 로작』(’97)의 국가보안법 철폐, 『’98 공동사설』¹⁶⁾의 ‘콘크리트 장벽 철폐·국가보안법 폐지·안기부 해체’ 등과 같은 직설법적 주장과 달리 유화적 자세를 보여 주었다.

나. 남한 사회성격 : 식민지 반봉건사회에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전환

김정일은 남한사회 성격을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였던 과거와 달리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은 남한 공업의 실상을 조립품 공업으로 인식하고, 남북한 국력경쟁에 있어 북한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신하였다.¹⁷⁾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은 남한이 북한보다 낙후된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시위하려는 미제의 경제적, 정치적 기지’로서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북한보다 번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⁸⁾ 그리고 1990년대 초반 김정일은 남한경제가 북한경제에 비해 훨씬 발전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

16) 『로동신문』 1998.1.1.

17) “국산화, 국산화 하는데 엔진 개발, 남조선 아이들, 남조선 사람들이라는 건 오토바이 하더라도 엔진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 뭐 그저 다 조립품이란 말입니다. 그래 자기네 국산화라는 그거 40%인데 조립해 가지고 선전을 어떡하나 국산화다. 우린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 공정다 보여주라,” 김정일, 최은희·신상옥 면담, 1984.8.4.

18)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1987년 9월 25일),” 『김정일선집 9』, pp. 44~45. 한편 김정일은 북한을 ‘사회주의 동방초소’로 규정하였다.

위적 조작'의 산물이라고 거듭 부정하였다.¹⁹⁾

남한의 정세와 관련, 김정일은 남한의 민주화 운동·통일 운동이 모두 북한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²⁰⁾ 1988년을 전후한 남한의 정치적 격동을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²¹⁾

그리고 김정일은 1980년대 초반에 남북관계를 '북과 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인 동시에 심각한 경제전'으로 규정하고, 체제경쟁에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이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상대적 열세의 부진함을 보이자, 김정일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 아직 유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남 체제경쟁적 우월성을 사회심리적·도덕적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다. '남조선혁명'의 주요 동력: 통일전선 대상의 확대

김정일은 당 총비서로 취임한(1997.10.8) 이후 발표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서 김일성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보다 통일전선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광폭정치'를 언급하며,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것'임을 강조하였다.²²⁾

19)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5), 「김정일 선집 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64.

20)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1988.10.12)," 「김정일선집 9」, p. 307.

21)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1988.5.15)," 「김정일선집 9」, p. 264.

2. 통일관

가. 통일문제 본질과 성격: 전조선혁명론과 하나의 조선론 지속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은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조선)혁명의 당면한 지상의 과업’으로 제시하였다.²³⁾ 또한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은 ‘조국통일은 수령님께서 제일 심려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령님대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은 하나’이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는 ‘모든 일꾼들이 언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며 일해야’ 하며, ‘당사업’, ‘경제사업’, ‘대외사업’ 모두가 ‘조국통일’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이 같은 입장을 김정일은 1990년대에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²⁵⁾

22)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 14』, p. 422.

23)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 (도당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1월1일),” 『김정일선집 5』, p. 233.

24) 『김정일선집 7』, p. 245.

25)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최대의 소원이며 우리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입니다. … 우리는 어떻게 하나 1990년대를 조국통일의 연대가 되게 하여야 하며 수령님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2』, p. 263.

나. 통일원칙 : 「조국통일 3대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방침」 제시

통일원칙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김일성시대의 통일정책을 고수할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김정일은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재강조하고, 이를 통일의 강령적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²⁶⁾ 또한 그는 「민족대단결 5대방침」²⁷⁾을 새로 제시함으로써 김일성시대 통일정책의 계승·심화발전을 시사하였다. 「2·3 대남편지」의 경우에도 북한은 한·미 공조 파기,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한총련」 등 친북·이적단체 활동 보장 등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선행실천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 통일전략 : 남조선혁명과 공산화통일 전략 명목상 지속과 현실적 약화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의 통일관은 김정일 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로동당 규약을 보면 “...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립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당규약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1961.9.18, 1970.11, 1980.11)되었으나, 최종목적(공산주의사회 건설)은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26) 「김정일선집 14」, pp. 343~344.

27) ①민족자주의 원칙 ②애국애족의 온민족 단결 ③북남관계 개선 ④외세·반통일세력 반대 ⑤내왕·접촉·대화·연합 강화 등 「김정일선집 14」, pp. 412~427.

다만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북한 지도부는 1980년대 중반까지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점차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정책은 남한정부와 주민들간의 괴리상태를 전제로 한 ‘체제전복’적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의 확산을 통한 ‘체제약화’적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 발표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군비축소 주장문건²⁸⁾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입장이 냉전기와 달리 수세적 차원에서 공존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대남 우세적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김정일은 남북교류가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 합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²⁹⁾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북한은 ‘먹고 먹히우는’ 방식의 통일을 지양하고,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한 바탕에서 연방제식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적 미군철수’와 ‘단계적 감축’ 등도 수용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은 냉전기에 ‘남조선 혁명론’이나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에 기초하여 공세적 통일을 추진하던 모습으로부터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군비축소 등 수세적 공존에 점차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 대책에 대하여,” 1988.11;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990.5;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각종 문거; “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993.4.7.

29) “우리에 남북교류에서 첫번째가 뭔가 하면 우선 문화교류다, 문화합작이다. 그렇게 하는데 내 타산이, 내 타산이 그렇습니다.” 최은희·신상옥, 『내레 김정일입니다』, p. 94.

라. 통일방법 : 평화적 방법 강조과 비평화적 방법 준비

김정일은 통일방법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³⁰⁾ 그러나 그는 동시에 비평화적 방법에 대한 준비도 처절히 추진해야 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였다.³¹⁾

또한 그는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화있는 대결’정책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사상사업 강화 및 사회주의제도 우월성 발양에 주력할 것³²⁾과 생산의 자동화를 통한 경제발전³³⁾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할 때에는 부르쥬아 사상

30) “지난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벌려온 기만적인 <남침>소동과 우리에게 대한 악선전으로 하여 세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당의 자주적 평화통일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려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른 아닌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2』, pp. 417~418.

31)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 우리의 군사력이 강해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조선과의 대화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조국통일의 위업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전법을 완성할 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군사지휘관을 더 많이 키워내자(김일성군사대학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2월 8일),” 『김정일선집 3』, p. 17. “특히 원썩들을 쳐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혁명전쟁을 우리 힘으로 끝까지 순행하여야 한다는 관점으로 군인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안의 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군단(군중,병중), 사(려)단 정치부 선전선동부장회의 및 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9년 2월 14일),” 『김정일선집 6』, p. 245.; 『김정일선집 5』, p. 234.

32) 『김정일선집 2』, pp. 415~416.

33) “생산을 자동화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1월 28일),” 『김정일선집 3』, pp. 3~4.

이 침습할 수 있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야'함을 강조하였다.³⁴⁾ 또한 그는 '앞으로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도 당의 정치사상적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이 같은 관점을 김정일은 1990년대에도 지속하였다. 그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이 평화분위기에 들뜨는 것을 경계하였다. 동시에 그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민군대 강화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다.³⁶⁾

34) 『김정일선집 2』, pp. 415~416.

35) “당조직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1월 10일),” 『김정일선집 6』, p. 157.

36) “인민군대는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 있어야 합니다. 남조선반동들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7.4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잉크도 마르기전에 북침소동에 매달린것처럼 임의의 시각에 그것을 파기하고 무력침공을 감행할수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잠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전투태세에 있어야 합니다.”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2』, p. 272.; “승냥이의 본성이 변할수 없는것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있고 아직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조건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잠시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올해에도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묶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4』, p. 3.

마. 대남정책 : 갈등적 공존에서 경쟁적 공존으로 전환 그리고 협력적 공존 모색

1990년대 후반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 추대에 즈음하여, 김정일은 대외개방 지향적 모습과 대남 유화적 태도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연대성 강화보다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의식하여 주체성 강화를 강조하고,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계급성보다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민족성을 강조하였다.³⁷⁾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정당단체 연합회의」(‘98.2.18)를 통해 신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기대하는 편지를 채택하였고, 「김정일 서한」(98.4)³⁸⁾을 통해 다시 한번 대북 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99.2.3)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이산가족 고통해소 문제, 교류협력 촉진 문제 등을 기본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을 하반기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대남편지를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동시에 남한과의 교류협력에서 나타날 후유증을 막기 위한 「모기장 개방」론을³⁹⁾ 이미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 6월 북한은 드디어 남북정상회담을 받아 들이고,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북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크게 3가

37) 「김정일선집 14」, pp. 306~333.

38) 「김정일선집 14」, pp. 412 ~451.

39)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자본주의의 포위속에 있는것만큼 사회주의제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하여서는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합니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절대로 적들의 자유화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2」, p. 266: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1994년 5월 24일),”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11~412.

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 강화용이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의 영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공고화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이미지를 '통일지도자'로서, 그리고 전 세계에 생중계된 공항영접과 환송을 통해 '평화지도자'로서, 북한 경제난을 타개하는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지도자'로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대남방송을 통해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호칭한 바 있다.

둘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적 실리 확보용이다. 북한의 임시변통 자원조달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난을 국제지원과 벼랑끝 외교를 통한 식량지원 강요정책과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를 통해 임시 변통해 왔다. 그러나 국제기구 및 중국의 원조 피로와 벼랑끝 외교의 역기능으로 인해 북한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해외원조가 격감될 경우, 김정일의 권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북한은 단·장기 대책 차원에서 남북 대화에 임하여,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으로부터 최대한의 실리를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외관계 개선용이다. 대미관계에 있어, 북한은 경제적 실리 획득과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기간 중에 있는 미국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일관계에 있어, 북한은 일본인 납치 및 미사일 개발문제 등으로 수교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지를 선전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미·일 협상에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을 민족적 영도자로 부각시키는 한편,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경제회생의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대미·일 관계 정상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그 내용에 있어 비록 근본적 변화⁴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나, 현상적 변화⁴¹⁾ 또는 전술적 변화는 넘어선 전략적 변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 성격에 있어 과거 갈등적 공존에서 경쟁적 공존을 거쳐 협력적 공존의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⁴²⁾

3. 주요 쟁점

1970년대 초반 김일성은 「조국통일 3대원칙」, 즉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⁴³⁾ 자주의 원칙은 주한미군 철수로, 평화통일의 원칙은 연방제 통일방안 합의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정치과제 또는 ‘근본문제’⁴⁴⁾로 각각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직후 김정일 또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근본문제’ 해결방안으로서 강조하였다.⁴⁵⁾

40)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 당 규약 전문에서 적화통일 조항 삭제

41) 현상적 변화(superficial change): 내부 개혁 없는 대외개방 정책 추진

42) 허문영, 「한반도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9~11.

43) 「김일성저작집 3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345.

44) 한호석, “근본문제해결의 길을 열어놓은 평양회담,”(2000.8.12); “칠천만 민족에게 통일의 신심을 안겨준 평양회담(2000.7.20)” ; “평양회담을 보는 새로운 시각(2000.7. 13),” [http://www. onekorea.org /research/000812.htm](http://www.onekorea.org/research/000812.htm)

45)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입니다. … 조국통일 3대원칙

가. 자주: 주한미군 즉각·강제 철거론에서 단계·자진 철수론으로

냉전기 북한은 자주 원칙과 관련하여, 외세 의존과 간섭 배제와 사대주의 철거 반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그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⁴⁶⁾ 그 중 핵심사안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중 전 시기를 거쳐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다만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한국전쟁 이전 시기에는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군대의 동시철거 대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6개월이내 철거 대상으로, 70년대에는 평화협정체결 이후 철거 대상으로, 80년대 후반(1987)에는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으로서 단계적·점진적 철수의 대상으로, 90년대 초반(1990)에는 남북군축에 상응하는 비율로의 단계적 철수 대상으로, 90년대 초·중반(1992)이후부터는 통일 전까지 철수의사 표명·통일이후 단계적 철수의 대상으로 제기되었다.⁴⁷⁾

또한 북한은 주한미군을 조국통일의 근본적 장애물로서만 아니라, 북한체제에 위협을 주는 제1차적 군사·안보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은 70년대 중반에 「조미 평화협정」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제의하였고, 80년대에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평화지대 창설」과 「다국적 군축협상」, 「포괄적 평화방안」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수립 등을 제의함으로써 안보상 두려

이야말로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김정일 선집 2」, p. 409.

46)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며 통일문제해결에서 온갖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일성저작집 2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598.

47) 허문영, 「북한의 대미국정책 변화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47~48.

움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평화협정안은 1955년 8·15 경축사에서 김일성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제의한데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북한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 연설을 통해 ‘북남평화협정’체결을 제의하였고,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북남평화협정’ 체결을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자, 북한은 남북한간에 불가침 및 화해·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1994년 4월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관계자들을 일방 철수시키면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과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원 칙>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은 주한미군 철수를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자는데 대하여 동의한 것만큼 우리는 미군 철거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가야 합니다”고 말함으로써 미군철거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⁴⁸⁾ 이는 북한이 1945년 국토분단이후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견지해오고 있는 불변의 원칙이며 부동의 전략목표다.

48) 『김정일선집 2』, pp. 409~410.

<전 략>⁴⁹⁾

김정일은 주한미군 철수협상 주체는 북한과 미국임을 주장하면서, 철수시기와 관련하여 연방제 통일이전까지 주한미군 완전철거를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김일성 주석도 “미국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북과 남이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과정에 철수하여도 좋고 그 전에 철수하면 더욱 좋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⁵⁰⁾

김정일은 주한미군 철수 방법과 관련, 강제 철거 대신 자진 철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전쟁을 해서라도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겠다는 해방전쟁전략을 줄곧 견지해왔는데, 이것은 주한미군 강제철거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미 정치회담을 통하여 미국의 한반도 무력주둔정책을 스스로 바꾸게 만들고 결국 미국 정부가 스스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만든다는 자진철수 유도론을 ‘최선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⁵¹⁾

그는 또한 주한미군 철수과정으로서 즉각 철거 대신 단계적 철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단계에 맞춰 미국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래 북한은 주한미군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49) 한호석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론, 자진철수 유도론, 중립화론, 중·일 견제론은 1990년대 이후 김정일의 통일정책 원칙과 전략에서 파생되었던 다양한 전술로 설명한다. 한호석, 앞의글.

50) “민족올림픽위원회 협회 위원장인 메히꼬출판회사 위원장 겸 사장일행과 한 담화(1991년 6월 5일)”, 『김일성저작집 4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46.

51) “그 동안 미군더러 나라가고 했지만 그들이 당장 나가겠습니까. 우선 미국 스스로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단에 책임이 있는 만큼 통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날 닉슨도 카터도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문제는 우선 그들 스스로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향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김정일위원장과 문명자 기자와의 대담,” 『월간 말』, 2000년 8월호, p. 60.

1990년 미국 부시행정부가 아시아 주둔 미군의 세 단계 감축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적극 대응하는 전술적 방도의 변화차원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제시하였던 것이다.⁵²⁾ 예컨대 북한은 1992년 1월 뉴욕에서 열렸던 김용순-캐터 정치회담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전술적 변화를 미국 정부당국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무튼 1990년 미국 부시행정부가 먼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남북 긴장이 일시적이거나 완화·해소되는 길이 열렸지만, 지금은 남북이 평양회담 이후에 남북 사이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단계적 자진철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동북아정세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동북아 세력균형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않고 진행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은 주한미군의 중·일견제론과 관련하여 “지금 미국이 우리를 걸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속심은 우리보다도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려는 데 있습니다”⁵³⁾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주한미군 문제가 동북

52) “우리가 럽방제 조국통일을 주장하지만 지금 당장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다 몰아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북과 남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우리가 남조선을 <적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한 조건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명분이 없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는데 우리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하지 않겠으면 단계적으로라도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북과 남의 군대가 각각 10만 명 정도로 축소될 때에는 완전히 철수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족은 누구나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재미교포 녀류기자와 한 담화 1994.4.21),” 「김일성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407~408.

53) “재미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 재미교포들과 한 담화, 1993년 3월 11일,” 「김일성저작집 44」, p. 138.

아지역의 세력균형 문제와 결부되어있음을 인정하는 논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총비서의 세력균형론은 주한미군 용인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 자진철수론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⁴⁾

마지막으로 김정일은 주한미군 철수가 남북 군비감축과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⁵⁾ 그리고 김정일은 이와 같이 안정적 철수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 이전에라도 그 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은 북한을 적대하고 남한을 지배하는 무력이 아니라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중립적 성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민족대단결: 국가보안법 조건부 폐지

냉전기 김일성은 민족대단결 원칙과 관련,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할 것’과 이를 위해 남북한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정책 포기 등을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 실천 과제로서 반공법·국가보안법 철폐를 통한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제시하였다.⁵⁶⁾

54) 한호석은 김 대통령의 세력균형론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정당화 논리인 반면, 김 총비서의 세력균형론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고 당면현실 속에서 균형자 역할, 안전판 기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논리로서 단계적 자진철수론으로 본다. 한호석, 앞의 글.

55) “전쟁의 화근인 미제 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킨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 쌍방이 정세를 침체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 데 대하여 선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빈 말로 되고 말 것입니다.” 『김정일선집 2』, p. 411.

56) “털어놓고 말하여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반공>소

한편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배석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던 공식회담에서 논의되었다. 6월 14일 평양회담에서 김정일 총비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보안법 폐지는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북한도 노동당 규약 전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다.⁵⁷⁾ 김대중 대통령이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의 일부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김정일 총비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7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 노동당 규약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김정일 총비서는 제7차 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연방제 통일 실현과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로 당 규약의 전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 평화통일 : 「낮은 단계(느슨한) 연방제」 강조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총선 통일’에서 ‘연방제 통일’로 변화하였다. 연방제 내용 또한 과도적 조치에서 최종형태로 그리고 다시 국가연합적 단계 도입의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까지 주로 「남북총선을 통한 통일정부수립」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960년대 초반부터는 「연방제」 방안(흡수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방제」도 1960·70년대의 총선을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 및 「고려연방제」 방안(패권적 합작통일 방안)에서 1980년대의 통일국가 최종형태로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동등적 연방통일 방안)으로

등을 그만두며 남조선에서 각당, 각파들과 각계 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29』, pp. 598~599.

57)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2000.6.20).

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느슨한 연방제의 수정적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공존지향적 통일방안/체제수호적 분단관리방안)을 새로 제시하였다.⁵⁸⁾

북한의 연방제는 1960년대 초반에 처음 제기되었으나,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어 왔다. 북한의 연방제는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주도권을 전제로 한 통일지향적 대남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총체적 국력차원에서 남한의 우위가 확실해지며 국제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자 북한은 공존지향적 대남정책 차원에서 연방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나타난 통일방안 문제에서 핵심내용은 남과 북이 두 개의 주권국가로 상호인정한 양국관계에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단계를 밟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에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단계를 밟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김정일 총비서는 평양회담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설명한 뒤에 이 방안을 합의하자고 제의했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은 남북이 별도로 행사하는 것이 연합제안”이라고 말하면서 연합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사이의 차이점을 따져보아야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김정일 총비서는 양자의 형식적 공통성(내용적 공통성이 아니라)을 인정하기로 합의했

58)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신년사(1991.1.1.)』 『김일성저작집 4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3.

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일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는 개념을 6.15 남북공동선언에 포함시켰던 이유로서 한호석은 3가지를 들고 있다.⁵⁹⁾ 하나는 연방제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기존의 연방제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도 “협의를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어떤 새로운 연방제안으로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대체방안이 아니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에 대한 합의를 더 쉽게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협의방편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나오는 지역자치정부라는 개념은 국가연합(또는 남북연합)의 두 단독정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함으로써 국가연합 방식은 애초부터 일체 논하지 않았다.

셋째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의 뜻은 중앙정부 보다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나오는 지역자치정부에 부여하는 권한 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나오는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서 나오는 “더 많은 권한”이란 외교권과 군사권을 뜻한다.

59) 한호석, “근본문제해결의 길을 열어놓은 평양회담,”(2000.8.12)

<http://www.onekorea.org/research/000812.htm>

3.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때, 김정일은 냉전기에 남한에 대한 자신감과 북한주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의지를 표출하였으나, 탈냉전기에 들어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와 대남 공존지향적 자세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⁶⁰⁾

남한에 대한 성격규정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미제의 식민지’로 보는 냉전적 대결인식을 지속하였으나,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자’로 호칭하면서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한 남한사회성격과 관련해서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한 것을 인정하되, 여전히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는 ‘남조선혁명에 기초한 조국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나, ‘민족대단결’의 기치하에 통일전선의 대상을 김일성 시대보다 확대 제시하였다. 이 같은 김정일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에 갖고 있던 남한관인 흡수통일의 주체 또는 공존통일의 대상으로의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는 ‘전조선혁명론과 하나의 조선론’을 지속하는 모습을 김정일은 보여주었다. 통일원칙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

60) “남조선 당국자들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속셈은 다 른데 있지 않다. 그들은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민족내부 문제인 통일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남이 하는 방식대로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편승하여 우리에게 대한 개방유도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흡수통합, 승공통일을 이룩해 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여 90년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가자,” 『로동신문』, 1992.7.4.

다. 김일성 시대에 이미 제시되었던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제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는 김일성시대의 통일정책을 고수할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방법과 관련해서도 평화적 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평화적 방법이 요구될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며, 동시에 체제수호를 위해서도 군사력 강화는 필수과제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3대혁명역량 즉 국제·북한 내부·남한의 3방면 정세가 모두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일은 대남정책에 있어 갈등적 공존을 넘어서 경쟁적 공존 또는 협력적 공존까지 지향할 가능성이 높음도 예견케 하였다.

김정일은 또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유연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자주와 관련, 주한미군 철수는 즉각·강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냉전기의 주장과 달리 북한과 미국사이의 협상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남북 군비감축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미국이 자진해서 철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족대단결과 관련,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함을 김정일은 주장하나, 과거와 달리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의 변화에 연계한 조건부 폐지를 새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화통일과 관련해서는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바 있었던 잠정적으로 느슨한 연방제를 낮은 단계 연방제로 재포장하여 제시함으로써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남북당국이 논의할 수 있는 접착점 마련에 합의하였다.

이 같은 김정일의 대남관 변화는 정권과 체제수호를 위한 전략적 차원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변화는 전

술적 차원의 변화로 전략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근본적 변화로도 상승할 수 있다. 향후 북한 변화의 핵심적 관건은 김정일 위원장이 정권 및 체제유지에 위협감을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 북한 지도부가 정권 및 체제유지에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때, 북한은 스스로 안정적 변화를 이뤄낼 것이다. 그러나 위협감을 느낄 때, 아무리 주변 4국과 남한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해도 북한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 주안점은 북한의 변화가 아니라, 21세기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에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북한이 체제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때, 북한은 스스로 안정적 변화를 이뤄내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서광이 비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X. 경제발전관

오 승 렬(선임연구위원)

1. 서 론

북한은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노선과 경제운영체제, 그리고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정책적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나, 북한의 정책적 변화는 상황적 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에 직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표면상의 ‘강경’과 이면의 ‘유연’이라는 괴리 속에서 점차 상황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실용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정권의 개혁 지향적 이니셔티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북한경제의 상황적 변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동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에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도해 왔으며,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현상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경제개혁·개방노선을 공표하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노정해 왔다. 또한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적 정치 권력이 가지는 정책변화상의 제약요인과 정책변화 경험의 한계 등은 북한의 변화가 아직은 ‘체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변화'에 비중을 두는 견해와 '지속'적 특성을 더욱 중시하는 관점이 혼재해 왔다. 그러나 변화와 지속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증거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판단은 시사(時事)적이며 주관적인 양상을 보여왔다. 북한 경제체제 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서 경제발전 전략에 관한 북한지도부의 이념적 이론적 논거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과 관련된 김정일의 주요 관점은 ① 경제발전 '속도'와 '균형'의 문제, ② '선행경제부문' 발전론과 불균형 성장 노선, ③ 계획경제 체제에 의한 경제관리, ④ 자급적 경제발전 노선, ⑤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할, ⑥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모색으로 나누어 평가해 볼 수 있다.

2. 경제발전 '속도'와 '균형'의 문제

경제발전에 관한 김정일의 관점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계획적 경제관리와 중공업우선적 발전전략, 그리고 자급적 경제기반 구축을 그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이는 김일성 시대부터 강조되었던 경제관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전 시기의 경제발전관과 크게 대비되는 김정일의 독자적인 경제발전관은 명확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을 위시한 북한지도부의 경제발전관의 한계는 곧 북한체제 개혁과 개방의 지연을 의미하며,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원 동원을 통한 생산력 발전 자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우선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에 숨어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모든 부문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¹⁾

사회주의제도는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줍니다.²⁾

경제발전에 관한 북한 지도부의 기본적 시각은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균형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여기에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균형’의 의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에서 핵심적 이론틀로 제시되고 있는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경제발전 속도의 유지를 위한 물자공급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균형의 특징은 그의 부분적, 일시적 성격에 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은 재생산의 모순과 그의 폭발이 주기적 인 것이 되므로 언제나 전진과 퇴보, 상승과 하강의 경기순환적 불안 정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력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도 한면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부익부, 빈익빈》의 광극분화를 심화시키고 계급적모순을 격화시키는것과 함께 독점자본가들로 하여금 독점적고물리윤의 일부를 계급적모순을 무마시키는데 리용할 가능성도 증대시킨다.³⁾

1)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201.

2)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p. 31,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평양: 1992), p. 365에서 재인용.

3)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65.

김정일 역시 자본주의가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 인식을 하고 있다. 즉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계급의 소외와 자본계급간의 상호경쟁으로 인한 독점자본주의화가 결국 필연적으로 혁명을 촉발한다는 마르크스의 관점과는 상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계급의 계산된 전술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의지는 약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에서 다같이 혁명의 의지에 따라서 진정한 사회주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혁명 의지에 따라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력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체제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이건 발전하지 못한 나라이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잘한다면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력사적 현실은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들에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먼저 승리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⁴⁾

북한 사회주의경제에서 생산 성장속도와 균형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제발전의 기본요소인 것이다. 일정한 계획 수행기간에 달성해야 할 경제발전의 목표는 생산 성장속도로 나타나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구조, 물질적 조건 보장을 위한 계획적 일치성이 바로 ‘균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속도와 균형이 다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

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p.465.

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관점은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수령님께서는 당 제4차대회보고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은 그자체에 목적인 있는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이라고 하시면서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에 합리적이며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⁶⁾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균형을 절대화하는 경우에는 생산 성장 속도를 현실적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하는 문제와 ‘예비’를 전사회적으로 남김없이 동원하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성장속도만 절대화하면서 주관적으로 높은 속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균형이 파괴되어 생산성장 속도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민경제발전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계획적발전이란 곧 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의미하며 경제발전의 균형성을 떠나서는 계획경제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⁷⁾

정권초기에 생산수단 소유제도의 사회주의 개조를 완료한 북한은 스탈린식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개발계획을 채택했는데, 짧은 시간내에 자립적 북한 경제의 건설과 공업화를 이룩하기 위해 중공업부문의 투자에 치중했으며, 국방과 경제건설을 병행한다는 기치 하에 거대한 군

5)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령역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과 범주 1』(평양: 1992), pp. 307~308.

6)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평양: 1992), pp. 315~316.

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2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321.

산 복합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과 경공업 및 운송 에너지 등 사회간접시설 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즉 경제성장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원자재 공급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된 농업과 경공업이 희생되었으며, 실물생산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균형성장이 저해되었던 것이다. 소비부문의 확대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김정일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건설도 매개 나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국가적범위에서 통일적인 계획밑에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도 국가를 단위로 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빈것만큼 분배한다고 하면서 공장, 기업소별로 번건을 나누어 먹어가지고서는 인민경제를 통일적으로 전망성있게 발전시킬 수 없으며 또 기관본위주의를 조장시켜 사회주의사회의 통일적발전을 저해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⁸⁾

북한은 1957~1961년 동안 계획되었던 5개년 계획의 주요목표를 ‘속도’에 있어서 앞당겨 1960년에 완성했다는 판단 하에 1961년에는 제1차 7개년 계획에 착수했으나,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이미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잉태되고 있었다. 5개년 계획의 조기 달성은 오로지 사회주의 동맹국가들로부터의 원조와 전시동원체제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주로 주요 부문의 양적 목표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이미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사회주의 동맹국으로부터의 원조는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미 실행되었던 원조 역시 북한 관련부문의 원자재 공급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중화학 공업용 설비 위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한은 생산원자재 역시 주로 중국과 구소련의 지원에 의존했기 때문에 동맹국으로부터

8) 김정일,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평양: 1992), p. 321에서 재인용.

터의 원조감소는 북한의 전 산업분야에 심각한 불균형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북한은 1956~58년 동안 농업부문의 집단화 과정에서 공업 건설로 인한 농업용 공업원료의 공급증가와 대중동원 및 기상여건의 호전 등 요인에 힘입어 농업생산량을 연평균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으나, 농업부문의 집단화 역시 인센티브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농업부문의 집단화가 일단락 된 직후인 1958년 9월에 이미 대중의 자발적 노동참여를 강조하는 ‘천리마 운동’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표-1> 북한경제의 성장률 변화 추이

(단위: %)

1954~56	57~61	61~70	71~75	76~80	81~85	86~89	90~94	95~98	99~2000
30.1	20.9	7.5	10.4	4.1	4.3	2.4	-4.5	-4.1	3.8

자료: 1954~1989년 성장률: Jeffries, I.,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A Guide* (London: Loutledge Publishing, 1993), p. 197; 1990~2000년 성장률: 한국은행, 『북한 GNP(GDP) 추정결과』, 각년도.

특히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걸쳐 북한과 소련의 정치적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소련으로부터의 군사 및 경제원조가 격감하고, 또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의 진행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어려워지자 북한은 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급속한 공업화와 국방력 증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의 제1차 7개년 계획은 이러한 북한이 처한 상황의 변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자립적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중공업분야의 건설에 착수함과 동시에 그를 위한 물질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분야의 ‘칭산리’ 방식과 공업분야의 ‘대안’ 체제라는 자원 동원

을 위한 경영방식을 착안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중공업 분야의 건설을 우선적 목표로 한 무리한 자립경제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북한경제로 하여금 내연적 성장보다는 외연적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80년대와 90년대에 겪게 되는 어려움의 근원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3. ‘선행경제부문’ 발전론과 불균형 성장 노선

북한의 경제이론은 은 재생산의 지속적인 반복과 확대를 위해서는 부문간에 정확한 ‘균형’이 필요하고, 이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행경제부문의 우선적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균형이란 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확정된 경제발전의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생산수단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자재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석탄, 전력, 금속 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다른부문에 앞세워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9)

1960년대 초, 중소분쟁 악화 및 사회주의 동맹국들로부터의 원조 감소와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독립적인 경제 및 군사체계 건립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1차 7개년 계획이래 자급적 중공업 및 군수산업 체계 건설을 위해 대부분의 가용자원을 투입하게 되었다. <표-2>에서

9)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평양: 1992), p. 366.

보듯이 1965년의 경우 전체 정부투자 중 66.7%가 산업부문에 투자되었고, 그 중 87.3%가 중공업부문에 투자되었으며, 이와 같이 편중된 투자구조는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자급적 중공업체계 건설을 위한 편중된 투자구조는 북한과 같이 에너지 및 생산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경제에 심각한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더욱이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체계 하에서 중공업분야 내에서의 투자 역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의사결정권자들의 기호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치의 비효율성을 가중시켰다. 즉 광범위한 중공업 영역에 대한 동시적 투자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비특화(非特化)에 의한 투자비용 증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생산단위 역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게되었다.

자본집약적인 중공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는 필연적으로 소비재 공업 및 농업과 사회간접자본 부문이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재원을 흡수하였고,¹⁰⁾ 불균형한 투자구조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북한은 경제 전반에 걸친 부족현상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중공업체계의 건설 역시 물자부족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재 공급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중점 건설항목을 지정하여 자원을 집중 동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타 분야의 물자 부족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즉 북한지도부의 선행경제부문 발전전략은 오히려 수요와 공급사이의 균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언급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10) J. Kornai는 결핍형 경제하에서 생산재 부문과 소비재 부문은 같은 투입재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재부문의 결핍은 소비재 부문의 결핍을 가져온다고 파악하였다. Kornai, J., *Economics of Shortage*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ch. 14.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 당이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가운데서 어느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힘을 집중하며 거기에 다른부문들의 발전을 어떻게 결합시켜나가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해답을 주는 가장 정확한 경제건설전략입니다.¹¹⁾

<표-2>에서 보듯이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중공업 부문 중 석탄 및 기타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게 되어 여타 기계 및 야금 부문에 대한 투자증대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1964년의 경우 전체 공업부문에 대한 총 투자 중 45.6%가 전력 및 석탄과 기타 광업산업 부문에 투입되었다. 체제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원자재 부족현상은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는 곧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한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자족적 중공업체계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야금 및 기계부문은 오히려 투자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원사용의 비효율성과 석탄 및 기타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수요 증대, 그리고 여타 중공업부문의 상대적 투자부족으로 인해 북한은 자족적 공업체계 건립을 위하여 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결핍현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게 되었다.

11)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평양: 1992), p. 344.

<표-2> 정부투자중 산업별 비중 추이(1961~70)

(단위: %)

구 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9	1970
전체산업	58.1	55.8	56.0	65.0	66.7	56.6	-
중 공 업	69.7	63.7	68.2	73.8	87.3	-	80.7
전 기	11.1	12.9	14.6	11.5	-	-	-
석 탄	9.9	9.9	12.6	14.7	-	-	-
광 업	16.3	15.7	17.5	19.4	-	-	-
야 금	6.2	5.0	5.8	6.1	-	-	-
기 계	9.1	7.4	10.1	11.1	-	-	-
경 공 업	30.3	36.3	32.8	26.2	12.7	-	19.3

주: 전체산업 비중은 (전체산업 투자/정부투자) x 100

중공업, 경공업 비중은 (중공업, 경공업/전체산업 투자) x 100

전기, 석탄, 광업, 야금, 기계 등은 중공업투자 중 해당 부문의 비중

자료: 『조선중앙년감』(1963, 1964, 1965); 『로동신문』(1970.11.10). Bon-Hak Koo,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p. 116 에서 부분적으로 재인용.

북한경제의 불균형은 군사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1967-1971년 동안은 북한자체 발표에 따르더라도 국방비가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처했다. 북한은 점차 악화되어 가는 산업간의 불균형과 부족현상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중공업 및 군수산업부문을 조정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점차 기념비적 산업설비 및 조형물 건축에 재정지출 및 물자공급의 중점을 두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여타부문의 부족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와 같은 정책노선을 추구한 결과 북한은 제1차 7개년 계획을 3년 연장하여, 1970년에야 마무리지을 수 있었으며, 이후에 추진된 6개년 계획 (1971~76), 제2차 7개년 계획 (1978~84) 직후에 각각 1년과 2년간의 조정기를 두었고, 제3차 7개년 계획 (1987~93) 이후 새로운 계획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계획기간 완료이후에는 심각한 산업불균형 및 부족현상에 시달려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노선으로 인해 소비재부문은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겪었으나, 북한은 소비재부문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1984년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 운동 등은 지방이나 기업의 내부 유휴자원을 동원하여 소비재 결핍을 보완하려는 소극적 정책이었을 뿐이며, 중앙정부는 결코 소비재부문의 확충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제공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¹²⁾

특히 6개년 계획 완료후인 1977년의 완충기이래 북한은 경제계획의 주요과업으로 수송의 긴장해소, 채취산업의 우선적 발전, 주민생활의 향상 및 독립채산제의 확대, 대외무역의 확대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산업불균형 및 효율성 저하로 인한 경제전반의 부족현상이 심각해 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북한경제체제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부족 증후를 보여왔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그 정도가 점차 악화되어 왔다. 특히 북한경제의 과도한 중앙집중과 이념적 경직성 및 폐쇄성으로 인해 '부족'의 정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구소련 및 동구권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는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시켰던 것이다.

4. 계획경제체계에 의한 경제관리

북한 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함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발전과

12) 제도적 변화란 생산, 가격, 판매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 분권화와 시장 기구에 의한 소비재의 배분 등 1960년대 이후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개혁지향적 정책채택을 의미한다.

관련하여서는 계획경제의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중앙당국에 집중시키고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계획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획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계획화사업을 현실성 있게 바로하여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규률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며 인민경제계획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계획을 현실성이 없게 세우는것은 당과 국가를 속이고 경제에 혼란을 조성하는 범죄행위입니다.¹³⁾

북한에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내각의 각 위원회 및 성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중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김정일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 파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누누히 강조해 왔다.

사회주의는 원래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사회입니다.¹⁴⁾

13)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70.

14)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평양: 1992) p. 336.

인민대중이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주체를 이루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의 역사적현실입니다. 경제건설도 매개나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국가적범위에서 통일적인 계획밑에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도 국가를 단위로 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15)

북한 계획경제의 관리의 원칙으로는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시키는 원칙,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경제관리 방법으로 농업부문의 ‘청산리 방법’과 공업부문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같이 계획경제의 수직적 질서가 안고 있는 관료주의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 중심으로 책임자와 구성원이 균중노선에 입각하여 생산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관리자는 앉아서 명령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상황을 직접 파악하여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모든 국영 공장 기업소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시장가격이 없이 국정가격만이 존재하는 북한에서 기업은 손실과 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계획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초과생산분에 대해서 기업의 관할권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책임경영’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제관리제도 하에서 진정한 책임경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15) 김정일,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평양: 1992) p. 387에서 재인용.

있는 형편이다.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의 결함으로 인해 나타난 구체적 결과는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부족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관측되는 일반적인 특징이며, 그 원인은 체제이념에 의한 발전 전략과 계획경제의 운영상 따르는 비효율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초래한 산업 불균형, 대외경제관계의 결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한 성장전략과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북한주민 생활과 관련된 부문의 발전을 저해했으며, 부단히 자원을 흡수하는 일종의 ‘블랙 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김정일은 이와 같은 계획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계획화사업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므로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계획화사업을 잘할수 없습니다....계획장성사업을 일원화하여야 계획을 세우는데서 당의 정책적 요구와 지방의 창발성, 국가의 중앙집권적규률과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수 있으며 주관주의와 지방분위주의를 없애고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서 당의 령도밑에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를 군중로선과 결합시키는 제도과 질서를 세움으로써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합니다.16)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계획지표가 방대하게 늘어나므로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면 인간이 경

16)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평양: 1992) pp. 388~400.

제의 부속물로 된다고 하는 주장과 같이 허황한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는데 맞게 국가가 경제관리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수준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과학화한다면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으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습니다.¹⁷⁾

5. 자급적 경제발전 노선

북한의 부존자원과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 대외경제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비록 자급적 공업체제 건설을 추구해 왔으나, 원유를 포함한 공업용 원자재 및 생산설비는 구소련, 중국 및 일본 등으로부터의 지원 및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만성적 부족현상과 기술낙후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산업 기술 및 원자재 수입 가능여부는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력갱생을 위한 자급적 경제체제 건설을 경제정책 목표로 삼았으나, 부존자원과 인구 및 경제규모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대외경제의존도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1949~84년 동안 북한이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동맹국과 OECD국가들로부터 받은 총 경제지원규모는 47억 4,849만달러에 달하며, 1946~87년 동안 대소련 무역적자 누적액은 30억 6,850만 달러, 대중국 무역적자 누적액은 20억 8,220만달러에 달한다. 1980년대까지 소련과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적자는 대부분 정치적 협상에 의해 지원적 성격으로 청산되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소련과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는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이 강조했던 자급적 경제체제 구축은 구호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분쟁 이후 1960년대부터 북한이 정책적으로는 내부자원 동원을

17)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김정일 선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75.

통한 자급적 축적 전략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경제 구조의 한계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동맹국에 대한 대외의존적 축적 전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실과는 달리, 김정일은 주요 공업부문의 자급적 경제구조 건설의 당위성을 되풀이 하여 강조해 왔다. 또한 자급적 경제구조 건설의 방법론에서는 ‘내부예비’의 동원방식을 제시하였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자체로 생산보장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본적인것과 많이 쓰이는 것은 될수록 다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기계공업과 금속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 식료공업을 비롯하여 필요한 공업부문들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 . . 모든 것을 극력 아껴쓰고 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어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¹⁸⁾

그러나 북한은 자급적 공업건설 정책에 따라 산업특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비교우위의 개발에 실패했으며, 이는 곧 상품 수출능력의 결여와 무역패턴의 낙후성으로 나타났다. 구소련 및 동구권 변혁 이전 시기에 북한은 주로 구소련으로부터의 지원 및 바터무역에 의존하여 생산원자재 및 생산설비를 확보했으며, 이들 국가의 체제 변혁이후에는 중국의 지원성 수출과¹⁹⁾ 바터형식의 변경무역에 의존하여 주요물자를 조달하였다. 그러나 중국 역시 시장지향적 개혁정책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지원성 교역을 지속하기 힘들어지자, 최근에는 북·중 무역규모의 급속한 감소를 겪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원유 및 곡물 등 필수적인 상품의 수입을 위해

18)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2』(평양: 1992), p. 154.

19) 여기에서 지원성 수출은 국제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적용하거나 청산계정을 활용한 이후 정치적 협상에 의해 이를 탕감해 주는 실질적 지원형태의 수출을 의미한다.

북한경제의 자체수요에 대한 공급도 부족한 석탄, 철강 등 생산재를 수출해야 하는 비효율적 무역구조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는 경제전반의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생산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산업가동률 저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대외무역 부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용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비해 관광사업이나 직접 투자를 위한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업을 하고 자원이나 팔아 돈을 벌어 가지고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관광업을 하면 돈을 좀 벌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외자를 끌어들여 경제를 부흥시켜 보려 하는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것처럼 어려웠던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우리는 관광업이나 외자도입이란 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²⁰⁾

6.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할

북한의 지방경제는 중앙경제기관들에 소속되어 관리·운영되는 중앙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의 국가경제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주로 지방자체의 소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공업과 농촌경리, 수산업, 지방건설과 상업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북한은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중앙경제의 건설과 발전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 김정일은 지방경제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그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언급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경제에 대한 보조적 기능 및 자원동원을

20) 김정일,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변환을 일으키자”,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01.

위한 수단적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다.

나라의 모든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고르게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방침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지방인민들의 여러 가지 물질문화적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빨리 줄일수 있습니다.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방상 견지에서 보아도 좋습니다.²¹⁾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경제정책의 편향성으로 인한 부족현상이 보편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북한경제에서 지방경제는 지방의 유희자원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지방주민을 위한 소비재 공급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자원배분 및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기능과 영역이 분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지방경제는 중앙경제 및 중공업 위주의 자원배분으로 인한 지방주민들의 일상 생활용품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 유희자원이나 대규모 중앙공업의 부산물 등의 활용을 통한 자원동원의 종속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속적 기능의 극대화를 위해 김정일은 지역경제가 자력갱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강도에서 공업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동력문제를 풀고 원료와 자재도 자체로 해결하여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자력갱생입니다. 자력갱생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몇해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고생은 하였지만 고생을 해본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과정에 우리

21)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평양: 1992), p. 370.

일군들과 인민들속에서 자체로 살아 가는 생활력이 강해 졌으며 자력갱생의 참뜻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방, 모든 단위에서 자강도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그 잠재력을 적극 동원하여 있는 밑천을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²²⁾

한편 북한의 예산체계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되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이 합쳐진 전체예산을 국가예산이라 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지방예산제’를 독창적인 제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자체적 정의에 따르면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지방정권기관들이 자체로 벌어서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제힘으로 꾸려나가는 새로운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²³⁾ 이와 관련, 김정일은 지방예산의 자체적 조달과 자원동원적 기능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적 거점’의 설정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지역적거점을 바로 설정하는 것은 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로동계급과 당과 국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전략적문제이다.²⁴⁾

특히 197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5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지방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문헌을 발표한 이후 북한의 지방예산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국가보조금 축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의 수입초과분을 중앙예산에 편입시킬 것을 강조하고, 중앙예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원

22) 김정일,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변환을 일으키자”,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01.

23) 북한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43.

24)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평양: 1992), p. 377.

의 동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지방예산제도의 강화는 지방경제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덜고, 중앙계획에 의해 결정된 중공업 등 주요 부문의 축적을 가속화하려는 북한의 경제정책 노선을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지방유지금’이라 하여 중앙 및 도의 중앙계획 관리하의 기업소들이 결산이윤의 일정비율을 시·군 등 지방예산에 분배함으로써 지방예산을 보조하였으나, 점차 지방예산제도가 지방자원 동원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오히려 지방기업소의 이윤이 중앙예산의 일부로 편입되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 1960년대에 지방재정의 비중이 최고수준에 이른 이래 점차 축소되었으며, 북한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시작한 70년대 말기 이후 중앙재정의 상대적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수입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나, 또 다른 한편 북한이 채택해 온 경제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에너지와 수송, 금속 및 기계 등 중공업 분야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증대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경제 각 부문의 성장 비율의 인위적 조정 등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시도해 왔던 것이다.

<표-3> 북한의 국가예산중 중앙 및 지방예산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년도	1960	1964	1973	1975	1980	1983	1987	1990	1991
중앙	65.5	54.5	83.3	79.9	85.6	84.5	84.5	85.9	87.2
지방	35.5	45.5	16.7	20.1	14.4	15.5	15.5	14.1	12.8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1986), pp. 163~65; 박완신, 『신북한행정론』(서울: 지구문화사, 1995), p. 291.

7. 결론: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모색

북한은 새헌법의 제정(1998. 9)과 함께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던 ‘유훈통치’ 및 과도적 적응기를 마감하고, 김정일체제의 공식적 출범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체제결집 이념으로서 ‘주체적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1999년 4월 제10기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고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중단되었던 예·결산 보고를 부활시킨 것은 계획경제 부문을 정비함으로써 경제운용체계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은 ‘과거로의 회귀’라기 보다는 그 동안 계획경제부문이 마비됨에 따라 계획부문의 물자 등이 농민시장 등 비공식부문으로 지나치게 유출되는 혼란상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 유휴자원의 동원을 통한 비계획부문의 생산 및 유통과 비공식부문 경제는 계속 존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새헌법의 특징은 기존의 계획경제체제를 보완하여 경제적 생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 상업활동 범위의 확대 및 거주·여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각종 경제관련 문헌에서 이익 실현을 통한 경제정책의 효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 북한 경제체제의 경직성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축적 전략의 변화 가능성과 연관지어 볼 때, 헌법 개정 이후 지난 3년간 북한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노선의 획기적 수정이나 본격적인 산업구조 조정 등의 전향적인 정책노선을 실행하기 위한 투자구조 변화는 미미했으며,²⁵⁾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25) 예를 들면, 2000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력과 석탄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

지속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 동안 발표된 신년 공동사설과 경제 관련 보고에서는 전력과 석탄, 금속 등 중공업분야와 철도 및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강조하면서 경공업부문의 소비재는 지방의 예비자원을 동원하여 해결하자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²⁶⁾

북한은 새헌법에서 경제분야 32개 부서를 23개로 통폐합하고 지방 인민위원회와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행정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강구하였다. 농업부문에서 ‘분조’의 규모 축소와 함께 기준을 초과하는 생산물에 대한 생산단위의 자체 처분권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구조의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공업부문의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99년 말부터 공업기업소 관리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한편 대외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등의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수출 증대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려는 정책의지를 표명해 왔다. 1998년 9월 새로 개정된 헌법에서는 대외무역주체에 사회협동단체를 포함함으로써 대외무역을 분권화(제2장 제36조)했으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다양한 기업소유형태(외국인 100%투자기업 등)를 명문화(제2장 제37조)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1998년 9월 이후 수출실적이 저조한 무역상사들을 통폐합하고 경영구조를 단일화·전문화하기 위해 각 부서에 산재한 상사들을 당은 대성, 군은 매봉, 내각은 광명상사 등 대표적인 상사 중심으로 재편성하였다.²⁷⁾

년에 비해 각각 15.4%, 12.3% 증가한 데 비해 농업과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각각 5%, 4%에 그쳐 여전히 중공업 우선의 정책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2000.4.6.

26) 북한 조선중앙방송,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사업(총리 홍성남 보고)」, 2001.4.5.

비현실적 계획과 투자환경 미비 등 나진-선봉 지대 건설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나진-선봉 관련 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제조업부문 위주의 초기 계획과는 달리 나진-선봉의 물류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광 등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획득을 위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식량과 에너지부문에 있어서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⁷⁾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공식문헌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력갱생에 의한 강성대국의 건설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노정해 왔다.

강성대국건설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이 땅우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부족한것도 많고 난관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남에게 의존하여 풀어 나갈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 《개방》 바람에 끌려 들어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개혁》, 《개방》은 망국의 길입니다. 우리는 《개혁》, 《개방》을 추호도 허용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입니다.²⁸⁾

북한은 2001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

27) 전체 무역회사 수를 당초의 300여개에서 120여개로 축소함으로써 1990년대초 증설되었던 무역기관의 통폐합·전문화를 통해 수출입선의 혼란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28) 북한의 식량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국제사회 지원비중이 1995년 5.5%에서 1999년 10.3%로 증가했으며, 북한의 총 곡물 도입량 가운데 지원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33%에서 80%로 증가하였다.

29)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458.

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시대의 전개에 걸맞는 경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강성대국론의 구체적 요소로서 ‘국가경제력’의 개념을 제시했다. 또한 ‘군력’과 ‘정치사상적위력’의 선행조건으로서 ‘경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최근 어느 정도 식량난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은 ‘생존’보다는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 산업 정상화와 산업기술 현대화와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정책 변화를 통한 경제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명분상 중공업 중심의 자립적 경제 건설 노선을 표방하면서도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수출촉진 및 외자유치를 통한 외화 및 기술 획득 등 실리를 확보하려는 과도기의 양면적인 정책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체제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정책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즉 김정일 정권의 공식출범에 따라 김일성의 경제정책 노선과 차별화 된 김정일 노선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노선 변화가 수반할 정치적 부담이 유혼통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정책변화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공식 문헌상에 나타나는 김정일의 경제발전관은 아직 김일성 시대의 잔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식문헌에 나타나는 ‘표면’적 노선과 현실적 정책으로 반영되는 ‘이면’의 실용적 접근 방식 사이의 괴리는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XI. 대외무역관

입 장 태(연구위원)

1. 서 론

김정일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긴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김정일선집」 등, 제한된 문헌을 중심으로 김정일의 대외무역에 대한 사고의 변화와 인식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김정일선집」의 내용이 「김일성저작집」의 아류에 불과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김일성저작집」과 시기적으로 겹치지 않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문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중반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원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만큼 극심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간이었다. 이러한 미묘한 시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를 김정일의 발언들에서 찾아내는 작업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시대별로 변화해온 북한의 대내외 정치·경제상황하에서 김정일의 대외무역에 대한 기본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대외무역의 의미와 역할 및 추진 방식 등과 관련하여 제시된 김정일의 발언들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

나는 이를 중심으로 앞에서 연구·분석된 내용들을 종합하고자 한다.

2.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의 시대별 변화

대외무역에 김정일의 기본인식은 북한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변화해 온 김일성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먼저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김정일 선집」이 기술된 1960년대 중반부터 살펴보자. 1960년대 북한은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면서 그 동안 크게 의지해오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제지원이 삭감되자 비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제3세계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통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대외경제협력이 대외무역의 중요한 목표로 제기된 것이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자본재를 수입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모색하였으나, 석유파동의 와중에 악화된 교역조건 등으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북한의 외채문제는 서방국가와의 교역 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외채문제의 해소와 무역확대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강조하게 된 것은 저개발국가와의 교역확대와 사회주의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이다. 1980년대는 외채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자 하는 북한의 노력이 축약된 합영법의 제정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제한적이거나 대외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주의 시장의 상

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1990년대에는 자본주의 시장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의 고민이 증대되는 시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김정일의 대외무역에 대한 기본인식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960~70년대

1964년 4월의 문헌부터 담고 있는 「김정일선집」에서 1960년대 김정일이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1965년 5월 9일 대외사업부 부문 일군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대외무역의 역할에 대해 간접적으로 밝힌 문헌이 유일하다.¹⁾ 여기에서 김정일은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으로 자주권의 존중,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 령토완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이 이 시기에 강조한 대외무역의 역할 중에서 “무역발전을 통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성을 강화시킨다”²⁾는 정치적 역할에 중점을 두는 발언이다. 논문은 또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 등의 부존자원이 풍부한 신흥세력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준수해야할 원칙으로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을 강조하였다.³⁾

1970년대 중반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외채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
- 1) 김정일,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자(대외사업부 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5월 9일),”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91~100.
 - 2) 리주연, “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토론(조선 로동당 4차대회, 1961.9),”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 II집, pp. 265~75.
 - 3) 김정일, 앞의 글, p. 97.

한 시점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무역이 둔화세를 보이게 된다.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외화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함께 보수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1975년 7월, 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꾼과의 담화에서 김정일은 연·아연 등의 광석 수출을 확대하여 획기적으로 외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공업제품이나 수산물에 외화벌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문은 주민들의 필요에 맞추어 생산하고 대신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유색광물 생산기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한다는 것이다.⁴⁾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자력갱생”이나 “우리 식”이라는 구호를 강조하면서, 선진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통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수입병”으로 비판하기에 이른다. 특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구호가 “당의 가장 중요한 혁명적 구호이며 당사업의 총적방침”이라고 역설하면서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혁명정신”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⁵⁾

또한 우리 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식대로 살아 갈 것이라고 하였다⁶⁾. 그러면

4)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꾼들과 한 담화 1975년 7월 1일),” 『김정일선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68~9.

5) 김정일,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앞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2~4.

6) 김정일,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꾼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2월 25일),” 『김정일선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서 우리 식이란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 즉, ‘주체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⁷⁾

2. 1980년대

김정일의 대외무역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은 198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일성 생일 70주년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1982.3.31)을 통해서 김정일은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⁸⁾ 여기에서 김정일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제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정일은 또한 자력갱생을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하에서 자체적인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 및 자급에 의지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의 빠른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김정일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이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제3세계국가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그들의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1995), p. 203.

7) 김정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12월 19일), 『김정일선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355~6.

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81~6.

9) 김정일, 앞의 글, p. 182.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제고를 염두에 둔 것이다.¹⁰⁾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의 발언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수입 절제를 통한 외화의 절약과 사용된 외화자금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외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¹¹⁾

북한이 합영법을 발표한 1984년 말 이후 김정일의 대외무역 관련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합영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지도부들간에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논의 작업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합영법 발표 직후 김정일은 캄보디아공화국의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대외개방, 관광산업의 확대 및 서방국가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원칙 등을 언급하고 있다.¹²⁾ 먼저 대외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며 우리 나라에 오고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찾아오는것을 환영하며 그들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물론 제국주의 사상문화적침습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음을 부연하고 있다.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취약한 시설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¹³⁾

김정일은 서방나라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에 있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10) 김정일, 앞의 글, p. 185.

11) 김정일, “당경제부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3년 3월 3일),” 『김정일선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411.

12) 김정일, “민주주의감보자 주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년 5월 2일),”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30~3.

13) 김정일, 앞의 글, pp. 23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영법」을 채택”하였음을 강조한 뒤, 서방자본주의국가와의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¹⁴⁾

이 시기에 김정일이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오히려 자력갱생의 원칙은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외국의 선진과학기술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대외무역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은 계속 이어진다. 1986년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김정일은 중앙인민위원회 제7기 제1차회의에서 제기된 대외무역 발전방안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적자립에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나라의 경제적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역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를 반드시 엄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율을 세우라고 역설하는가 하면, 수출과 수입의 기일을 엄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무역의 필요성을 과거와는 달리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가 하면, 대외무역의 확대를 위한 기관·기업소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¹⁶⁾

당이 제시한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과 경공업제일주의,

14) 김정일, 앞의 글, pp. 232~3.

15)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5년 8월 3일),”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49~50.

16)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343~5.

농사제일주의, 수산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방침을 첫자리에 놓고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무역을 하여 원유와 콕스탄, 생고무와 같은 원자재를 들여와야 철강재와 자동차, 트랙또르도 생산하고 경공업공장들을 돌려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도 만들수 있으며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많이 잡을수 있습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적자립에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나라의 경제적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된 나라라도 무역을 하여 여러 나라들과 유무상통하지 않고서는 잘살수 없습니다. 사실상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발전하고 위력해질수록 무역은 늘어나고 대외경제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하는 법입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크지 않은 나라에서는 모든것을 다 자체로 만들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많은것도 있고 전혀 없는것도 있는 조건에서 무역을 하고 유무상통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없습니다. 기관, 기업소들에서 무역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 다른 나라에 주기로 한 수출물자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수입물자를 제때에 사들여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체제전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이에 위기를 느낀 김정일은 불건전한 사상요소의 침투를 경계하여 “모기장”을 잘 쳐야한다고 역설하는가 하면,¹⁷⁾ 예전의 “수입병”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주체성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게 된다.¹⁸⁾ 다만 지난 시기와의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대외무역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소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성과 자립성을

17) 김정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책임비서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9일, 12일),” 『김정일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54~5.

18)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년 12월 28일),” 『김정일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66~7.

강조하면서도 외국의 선진적인 것은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하며, 자본주의사상의 침투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서 ‘모기장’이 갖는 의미는 대외교류·협력을 계속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김정일이 대외교류·협력의 확대가 체제에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199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경제를 지탱해온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된 1990년대에 이르러 북한에게 있어서 대외무역의 확대·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같은 사태에 직면한 김정일이 대외무역에 대해서 발언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대외무역 관련 발언은 과거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김정일의 위상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김정일의 문헌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방안은 수출증대와 외화의 효과적인 이용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외화벌이사업은 생산기지가 있는 사업단위에 국한시킬 것을 요구하였다.¹⁹⁾ 또한 전국경

19) 정무원에서는 외화를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 정무원에서 외화를 잘 회전시켜 확대재생산을 하였던다면 더 많은 외화를 벌었을것입니다. 정무원에서는 외화를 망탕 써버리지 말고 잘 회전시켜 확대재생산을 하는데서 큰 은을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외화벌이도 잘하여야 합니다. 외화벌이는 기지가 있는 단위에서만 하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

공업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경공업부문의 수출증대를 통하여 자체적인 원료와 자재 수요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공무역 및 합영·합작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의 공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이 자체적으로 수출품을 개발하여 자체 자금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²⁰⁾

이어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¹⁾ 이를 위해서 전자공업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분야에서 선진공업국가들과의 합영·합작사업을

과 한 담화 1990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3~4.

- 20) 경공업 원료, 자재를 사오는데 필요한 외화는 질 좋은 경공업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 경공업부문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가공무역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 여유있는 생산능력을 리용하여 나라와 가공무역을 하면 외화도 벌수 있고 모자라는 원료, 자재도 적지 않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여러 나라들과 전망이 좋은 경공업제품에 대한 가공무역을 널리 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 합작도 발전시켜 경공업제품 수출을 늘이며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지방들에서는 외화 벌이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방외화벌이를 통하여 번 외화는 지방공업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절실히 필요한 물자를 사오는데 쓰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방공업부문자체에서도 군마다 한두가지이상의 수출품 생산을 조직하여 외화를 벌리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 무역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적게 생산하는 경공업 원료, 자재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자그마한 지장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0년 6월 2일),” 『김정일선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127~44.
- 21) 김정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10월 28일),” 『김정일선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14~6.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외동포과학자들과의 협동연구와 공동연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 서한에서 김정일은 다른 나라와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은 “철저히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에서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최대한 받아들이되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된 기술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질 것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영·합작의 중요성을 역설한 김정일은 그 동안 합영·합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 행한 연설을 통해서 합영·합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지적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책이 아닌 것이어서 김정일의 합영·합작사업에 대한 이해정도가 매우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이 제기한 합영·합작사업에서의 문제점은 ‘경제적 타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기료와 물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합영·합작사업을 특정 개인과 추진함으로써 자본주의사상이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정일이 제시하는 것은 경제적 계산을 정확히 하여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내야”하며, 합영·합작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기업과 기업간에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 2년이 지난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가진 담화(1994.10.20)에서 김정일은 군(郡)에서 주민생활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이 제시한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 제일주의 방침에 따라 농업

22) 김정일, “당, 국가,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2년 11월 12),”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28~9.

과 지방공업 그리고 외화벌이에 힘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외화벌이 사업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은 “자체적으로 외화벌이 기지를 튼튼하게 꾸려야 한다”면서 외화벌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군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쓰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난의 와중에서 지방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김정일의 대외무역 인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김정일의 기본인식이 잘 나타나 있는 두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김정일의 대외무역에 대한 최근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내용을 담은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1995.2.1)”라는 글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96.4.22)”라는 글이 그것이다.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라는 글을 통해서 김정일은 대외무역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²³⁾ 김정일은 먼저 외화벌이사업에 저마다 나서면서 야기된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대외경제관계는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식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이 지적한 외화벌이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첫째, “여러 단위들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 나 제가꿈 자본가들과 거래하고 외화를 벌어들여 망탕 쓰게 하면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대로 《개혁》, 《개방》이 되고 나라의 경제가 자유화, 자본주의화될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러 단위에서 제품을 제가꿈 내다 팔면 값도 제대로 받을수 없으며,” 셋째, “대외무역을 여러 단위에서 제가꿈 하면 다른

23) 김정일,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2월 1일),”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8~11.

나라에 오가는 사람이 늘어 나게 되고 무질서가 조성될수 있으며 그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는 현상도 나타날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정일이 강조한 방법은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외경제관계를 우리 식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²⁴⁾ 여기에서 언급된 사회주의원칙이란 “대외무역 전반을 국가가 장악하고 모든 대외무역 활동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무역독점’이라는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방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김정일은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제대로 관철하기 위한 다섯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대외활동에서 ‘수지타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여 밑지지 않는 장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둘째는 상품의 가공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품에서 가공제품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는 제품의 질적 향상이다. 대외시장을 개척하고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는 공짜로 외화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에 자본가들처럼 인색한 자들이 없으므로 그들이 무엇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국주의나라들과의 학술대표단교류사업도 경각성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무역부문과 함영

24) 이와 관련 김정일은 “상품을 다른 나라에 내다 파는것도 한몫으로 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것도 한몫으로 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대외경제거래는 대외경제위원회와 국가의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들만 하고 그밖의 개별적기관, 기업소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세대를 비판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양사업도 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김정일은 “변화된 현실적조건에 맞게 무역사업을 개선강화”할 것을 역설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²⁶⁾ 이 문헌의 내용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된 각종 문헌들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등, 김정일의 대외무역에 대한 최근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나 있어 당분간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정책의 방향을 규정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오늘의 조건에서 그에 맞게 무역사업을 개선강화하지 않고서는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할수 없으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킬수 없다”고 밝히면서, 아직까지 “정무원을 비롯한 경제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아직도 지난 시기 사회주의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던 그 본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정일은 구체적인 예로 수출품목이 예전과 똑같이 연과 아연, 마그네샤크링카, 세멘트, 강철 같은 것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들면서 이처럼 국가의 귀중한 자원만 팔아먹는 행태는 국가의 장래와 경제의 장기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⁷⁾

25) “일부 대학졸업생들이 전공부문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무역부문이나 함영부문 같은데 가겠다고 한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기를 먹여 주고 입혀 주고 공부시켜 준 당과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생각보다 제 혼자 잘 살아 보겠다는 생각부터 앞세운다는것을 말하여 줍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상요소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바로 교양하여 그들이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의책 p. 11.

26)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4월 22일),”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164~70.

김정일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손재간을 가지고 품을 들여 만드는 제품의 생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초물제품과 세공품을 제시한 김정일은 일꾼들이 이처럼 작은 것을 많이 생산하여 팔 생각은 하지 않고 큰 것만을 생산하여 팔려하고 있다고 일꾼들의 ‘대작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대작주의’는 전기, 원료, 연료의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유발한다며 “전기와 연료를 적게 쓰고 우리의 원료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나라의 여건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자는 김정일의 ‘주체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하겠다.

둘째, 보세가공무역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 과정에서 “일부 일꾼들이 보세가공무역을 하는 것을 체면이 깎이는 것 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세가공무역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출품 생산의 증대와 대외무역의 발전 및 수출구조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정일은 “우리가 자본주의나라들과 무역을 발전시킨다고 하여 우리 경제의 자립적기초가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경제에 맡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역설하면서,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 만큼 거기에 의거하여 수출품생산을 늘이고 대외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넷째, “세계경제와 자본주의시장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우리 일꾼들은 모르면서도 아는체하고 없으면서도 있는체하면서 세계경제와 자본주의시장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고

27)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김정일은 광물자원은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멘트와 강재는 국내 사용분을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있는데 그래서 안된다”라고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시장을 대상하여 무역을 해야 하는 조건에서 자본주의시장과 세계경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외무역을 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김정일은 자신이 국가계획위원회에 연구소도 설치하고 필요한 연구기관들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도 일꾼들이 필요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경제기관들과 경제연구기관들에서는 변화된 조건에 맞게 연구사업을 잘하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좋은 의견을 많이 제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섯째, 확대재생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외화를 벌면 그것을 밑천으로 수출기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일부 공업부문에서 생산이 증대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도 눈앞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외화를 벌면 설비를 갱신하는 등 공장보수를 잘해야 하며, ‘기술개선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역설하고 있다.

3. 주요 이슈별 인식의 변화상 종합

1. 대외무역의 원칙에 대한 인식

대외무역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평등과 호혜 그리고 유무상통을 강조했으며, 외채문제가 악화되면서 점차 신용준수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다고 1990년대에 와서는 자주성을 지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김정일은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지켜져야 기본원칙으로 자주권의 존중,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 령토완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신

흥세력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평등과 호혜, 그리고 유무상통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²⁸⁾

1980년대, 합영법 발표 이후 김정일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는데, 외국 수반과의 담화를 통해 대외개방과 경제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방자본주의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있어 준수되어야 할 원칙으로 자주 및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²⁹⁾

1990년대 초반에는, 각 부문이 자체적으로 연료, 원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³⁰⁾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에 인하여 악화된 외환사정을 독립채산방식으로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2. 대외무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김정일의 대외무역 역할에 대한 인식은 초기에는 국가간의 유대 강화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을 더 강조하였으나, 점차 경제발전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의 증대가 북한경제의 생존과 연결된 절박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김정일,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자(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5월 9일),”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97.

29) 김정일, “민주주의감보자 주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년 5월 2일),”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32~3.

30)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0년 6월 2일),” 『김정일선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116~160.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김정일은 대외무역을 통한 정치적인 유대 강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교류를 강조하였다.³¹⁾ 또한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경제문제의 해결 방식으로서의 수입 선호 현상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³²⁾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에는, 여전히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국가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국가정책 방향이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역설하는 등 약간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³³⁾ 김정일은 여전히 제3세계 국가(신흥세력국

-
- 31)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을 정치적으로뿐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경제문화적 협조와 교류도 널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교류하는 과정에 친교가 맺어지고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는것처럼 나라들사이에도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야 호상 친밀해지고 리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나라들사이에도 경제문화적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면 서로 부족한것을 보충하고 힘을 합쳐 빨리 발전할수 있으며 정치적단결도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김정일,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자(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5월 9일),”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95.
- 32) 김정일,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33)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85.

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들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면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통한 정치적 입지 강화에 더하여 경제적 실리추구의 속내를 비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김정일은 대외무역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은 경제적 자립성을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할뿐만 아니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한 것이다.³⁴⁾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대외무역의 불가피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대외무역으로 파생된 문제점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특히 사상오염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모기장’을 쳐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김정일이 경제교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3. 대외무역의 방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대외무역의 방법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모순된 점이 발견되고 있다. 다만, 초기에는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자체를 단순하게 생각하였으나 점차 그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김정일은 손쉽게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공업제품이나 수산물 등 외화벌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분야의 생산은 주민들의 수요

34)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44.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대신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유색광물생산기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³⁵⁾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무역, 특히 수출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무역계획 치밀한 수립과 정확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³⁶⁾ 여기에서 김정일은 보다 체계적인 대외 무역의 추진이 필요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은 각 부문에서의 외화벌이사업을 촉구하게 된다. 특히 70년대 중반에만 해도 외면하였던 경공업부문의 수출 증대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가공무역의 확대, 합영·합작사업의 증대를 역설한데 이어,³⁷⁾ 지방에서도 군(郡)마다 한두 가지의 수출품을 생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5)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7월 1일),” 『김정일선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68~9.

36)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44.

37)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0년 6월 2일),” 『김정일선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127~9.

XII. 노동관

이 중 선(책임연구원)

1. 서 론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labor)에 대한 분석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분석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지하듯이 맑스(K. Marx)의 노동가치론의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상품’(commodity)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살아있는 노동’에서 발생한다는 데 있다. 맑스에 따르면 자본축적은 노동자의 지불되지 않은 잉여노동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 자본가와 단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소유한 다수 노동자로 분리되고, 생산된 가치의 대부분을 자본가가 전유함으로써 다수 무산자계급인 노동자들은 계급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는 소멸되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 맑스의 주된 논지이다. 그러나 맑스의 예측과 달리 현실의 역사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지역보다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덜 발전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역으로 사회주의 혁명 이후 서구유럽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전환비용’(cost of transition)을 감수하는 대신 자본과의 ‘계급타협’을 통한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복지국가 건설을 선호하였다.¹⁾

1) Przeworski, Adam.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뷰로웨이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 역시 고단한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대공장과 사회주의 사회의 대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체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²⁾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에 대한 통제(control)와 동의(consent)를 이끌어 내는 문제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사회경제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관점과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실제로 노동자들이 어떤 자세로 노동에 임하고 있는가에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연구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김정일은 '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인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89.11.27)를 통해 「주체의 노동관」에 대한 사상과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있다. 특히 「주체의 노동관」의 본질과 그 확립의 필요성, 주체의 노동관을 세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 노동관」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정일 문헌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주체의 노동관」을 심층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주의 북한사회의 건설과정에서 노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노동에 임하고 있는지,

2) Burawoy, Michael.,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London: Verso, 1985)를 참조.

아울러 주체 노동관이 북한 사회구조 전반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사회주의 사회와 노동

1. 노동의 본질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노동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김일성 『로작용어사전』에 따르면 노동이란 일반적으로 ‘물질문화적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적 활동’을 지칭한다. 즉 노동은 인간사회의 모든 재부를 창조하는 원천이며, 사회생활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은 사회제도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생존의 단순한 수단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이며, 자기 자신의 행복과 사회를 위한 창조적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전체 인민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으로 되며 가장 신성한 것’으로 인식된다.³⁾

이 같은 북한사회의 노동에 대한 성격규정은 김정일의 문헌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김정일에 따르면 ‘노동은 사람이 자기의 생활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벌리는 자연개조활동’으로 정의된다⁴⁾ 특히 김정일은 ‘사람의 노동을 자기의 생활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

3)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 용어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190.

4) 김정일, “노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07.

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의 노동은 동물의 노동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동물은 자연에 있는 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목적 의식적으로 이용한다. 요컨대 사람은 사회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자연을 지배하려는 자주적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을 목적 의식적으로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⁵⁾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나누고 있다.⁶⁾ 북한에서 '정신노동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창조력을 주로 지적인 상태로 지출하면서 벌리는 사람의 활동'으로 규정된다. 반면 '육체노동은 주로 육체적 힘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자연개조 사업에 이바지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정의된다.⁷⁾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육체노동은 정신노

5)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5~7.

6) 북한의 직업분류에 따르면, 북한의 직업은 크게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무원직,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자직,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직 등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고 있다. 사무원직에는 주로 행정일꾼, 과학자, 교수 및 교원, 의사, 기자, 방송인, 작가, 화가, 음악가, 부기원 등이 속하며, 기술직에는 기술자, 기능공, 기관사, 선원, 운전수, 요리사 등이 속하며, 노동직에는 영화배우, 무용수, 체육인, 이·미용사 등 봉사원, 광부 등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이 속한다.

7) 정신노동은 주로 개조하고 변혁하려는 대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며 대상을 개조변혁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와 능률적인 수단을 탐구하는 기능, 사람들에게 사회적 공동노동의 의의를 인식시키고 그들을 조직동원하며 관리하는 기능, 사람들을 사회적 노동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우는 기능, 노동을 결과를 분배하는 기능, 사회를 관리하고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반면에 육체노동은 주로 물질적 부를 직접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동에 의하여 밝혀진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과업 방도와 수단에 따라 물질적 부를 창조한다. 요컨대 육체노동에 의하여 정신노동의 결과가 검증되고 물질적 부로 전환되며 사람들의 자주적 요구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노동은 육체노동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고 그 과학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즉 정신노동의 성과에 기초한 육체노동만이 참으로 목적 의식적인 것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반면 육체노동은 정신노동 앞에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노동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으로서 설정되고 있다.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상호 대립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 대립이 소멸된다고 본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기계의 단순한 부속물로 간주된다. 그들은 교육과 문화에서 배제되게 되고 과학, 기술, 문화는 오직 자본가들과 그들에게 복무하는 인텔리들의 독점물로 되게 된다. 정신노동의 결과는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그들의 지적능력,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데 이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은 사회주의 혁명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⁹⁾

특히 북한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에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전일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은 없지만 그것들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것 역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다그쳐짐에 따라 점차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

8)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9~10.

9) 위의 책, p. 11.

10) 위의 책, p. 12.

2. 노동의 역할과 성격

김정일은 노동의 역할을 ‘모든 물질문화적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¹¹⁾ 노동의 역할에 대한 김정일의 주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으로서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둘째,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으로서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셋째, 노동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김정일은 ‘노동과정에서 사람들은 사상을 단련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며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키워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이처럼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사회혁명과 함께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할 필요성, 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기제로 설정된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농민들은 노동과정을 통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의 불합리성을 느끼게 되며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주의사회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은 사람들로 하

11)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07.

12)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0.

여금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게 하며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단결시키며 사회발전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개조를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¹³⁾

특히 노동이 인간개조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 것은 노동과정에 사람들이 사상을 단련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며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를 키워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사람들은 노동생활과정에 낡은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사상을 가지게 되고, 노동과정에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들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게 되며,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¹⁴⁾

한편 노동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생산관계에 따라 그 성격을 달라진다.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 생산관계가 규정되고 생산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이 규제되며 노동의 성격이 규정된다. 이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착취사회에서는 노동이 착취계급의 치부의 수단, 가혹한 착취의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은 우선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⁵⁾ 김정일은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의 성격에 대해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은 집단적이며 자각적인 성격을 띠게 되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창조적 노동에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¹⁶⁾

13)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14~15.

14) 위의 책, p. 16.

15) 위의 책, p. 18.

16)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과는 일정하게 구별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아직 힘든 노동이 남아있고 노동에서의 본질적 차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이 근로자들의 생활상 제1차적 요구로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생활에서 아직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가 실시되고 있다.¹⁷⁾

3. 「주체의 노동관」의 본질과 특성

1. 「주체의 노동관」의 본질과 내용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노동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노동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말한다.¹⁸⁾ 북한은 노동이 사회경제생활의 기본을 이룬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사람의 활동을 규제하는 결정적 요인이 사상의식인 것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과 태도부터 바로 가져야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노동 활동을 주인답게 벌여나갈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는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어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확립된다고 본다. 북한에서 「주체의 노동관」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지니게 되는 노동에 대한 가장 올바른 공산주의적 관점과 태도로 정의된다. 그러면 「주체의 노동관」은 보다 구체적으

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2.

17)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19.

18) 위의 책, p. 20.

로 노동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 관점과 태도인가.

김정일은 '주체의 노동관'을 "로동의 주인으로서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로동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⁹⁾ 즉 주체의 노동관은 본질에 있어서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자기자신이 노동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노동에 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에 대하는 것이다.²⁰⁾

주체의 노동관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자신이 노동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노동을 대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는 자기자신을 노동의 주인으로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규정하는 근본 척도의 하나로 되고 있다. 또한 자기자신만을 위한 노동을 기본으로 여기는가,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이익을 위한 노동을 기본으로 여기는가 하는 점도 노동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²¹⁾

이러한 근본척도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을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개인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에 대해서는 관점과 고용살이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태도는 생명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태도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한 노동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개인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집단의 이익을

19)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3.

20)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22.

21) 위의 책, p. 23~25.

기본으로 하여 노동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²²⁾

북한의 공식이론은 노동이 참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원천으로 되자면 그것이 사회와 집단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이 ‘고드롭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노동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동은 자신의 일시적인 향락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에 대하는 것은 북한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가장 올바른 관점과 태도로 간주된다.²³⁾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주체의 로동관을 세운다는 것은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⁴⁾ 이처럼 “주체의 로동관을 세운다는 것은 첫째로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겨야 우선 노동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노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을 천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노동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으며, 노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노동

22) 위의 책, p. 26.

23) 위의 책, p. 27.

24)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3.

자들의 경우 노동의 열매가 인민의 소유가 아니라 착취자의 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길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것이다.²⁵⁾ 따라서 북한 사회에서 「주체의 노동관」은 노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듦으로써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동노동에 성실히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 말하는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노동이란 자기자신만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둘째로, 주체의 노동관을 세운다는 것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노동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체의 노동관 확립의 본질적 내용의 다른 하나라고 할 수 있다.²⁷⁾

2. 「주체의 노동관」의 사회적 필요성

그러면 북한사회에서 「주체의 노동관」의 확립과 그것의 사회적 필요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공식이론은 ‘혁명적 노동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해」 「주체의 노동관」을 튼튼히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은 사회에 혁명적 노동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속에 주체의 노동관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⁸⁾ 여기서 혁명적 노동생활이란 한마

25)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28.

26) 위의 책, p. 29.

27) 위의 책, p. 31~32.

28) 김정일, “노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3.

디로 요약하면 집단주의적이며 자각적인 노동생활기풍을 의미한다. 요컨대 ‘혁명적 노동생활기풍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적 노동 규범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는 성실한 일본새’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김정일은 혁명적 노동생활기풍을 노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노동생활기풍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근로자들 속에서 낳은 사상 잔재를 뿌리 빼고 노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북한 사회에 혁명적 노동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 사회에서 혁명적 노동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 속에 주체의 노동관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근로자들 속에 주체의 노동관을 튼튼히 세워야 하는 문제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지적되고 있다.³⁰⁾ 첫째는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품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교시를 통해 “노동하기를 좋아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일하기 좋아하는가 안하는가,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가 안하는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으로 일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혁명화, 공산주의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³¹⁾ 김정일도 “주체의 노동관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²⁾ 이처럼 북

29)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34.

30) 위의 책, p. 36.

31)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26권』, p. 539

한 사회에서 노동하기를 좋아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새로운 인간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가 못 가지는가 하는 것은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중요한 징표로 간주된다. 요컨대 노동을 사랑하며 공동노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이라야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의 노동관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품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²⁾

둘째, 주체의 노동관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온 민족의 절박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에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두뭇, 세뭇 해제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³⁴⁾

셋째, 대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주체의 노동관 정립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근로자들이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32) 김정일, “노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노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7), p. 413.

33)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1), p. 37.

34) 위의 책, p. 39.

하고 있다.³⁵⁾ 제국주의자들이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 이행」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지니고 있다. 즉 북한은 제국주의의 부르조아 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마비시키려고 꾀하고 있다는 ‘반사회주의적 책동’에 맞서기 위해 방안의 하나로서 주체의 로동관을 강조하고 있다.

3. 「주체의 로동관」의 과업과 방도

김정일은 주체의 로동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교양사업, 둘째로 개인주의적 노동 관점과 태도에 대한 사상투쟁의 강화, 셋째로 숨은 노동 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등이 그것이다.³⁶⁾ 김정일은 「주체의 로동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다음의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적 노동의 목적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의 전개이다. 북한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노동의 목적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는 것은 주체의 로동관을 튼튼히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도 “노동에 대한 교양에서 기본은 사회주의적 노동의 목적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³⁷⁾

35)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1.

36) 백진규, 「주체의 로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1.

37)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4~415.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사회와 집단의 강화발전과 룡성변영을 위한 창조적 활동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³⁸⁾ 특히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는 활동으로 간주된다.³⁹⁾

둘째로,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게 하는 문제이다.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는 것은 주체의 노동관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김정일은 “노동에 대한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⁴⁰⁾ 노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자기직업에 대한 영예감을 가졌을 때에는 노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⁴¹⁾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직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 사회에서 직업은 보수나 명예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며 권세와 세도를 위한 수단도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직업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며 어떤 일이든 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의 권세와 치부를 위한 것으로 된다면,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은 사회와 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위한 사회적 분공이며 무슨 일이나 다 나라와 인민을 위한 사업, 자기자신을

38)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4.

39) 위의 책, p. 43.

40) 김정일, “노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5~416.

41)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4.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 요컨대 사회주의 북한 사회에서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무슨 직업이나 다 귀중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직업에 대하여 애착을 느껴야 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노동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⁴²⁾

북한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긍지와 보람은 무슨 직종에서 일하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며 자신의 노동이 조국과 민족의 부강발전과 통성번영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직업과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직업의 근본적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와 함께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⁴³⁾

셋째, 주체의 로동관을 세우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집단주의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⁴⁴⁾ 김정일은 “로동에 대한 교양을 충실성 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과 결부하여 깊이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⁵⁾

사회주의적 노동은 그 자체가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위한 투쟁과

42)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4.

43) 위의 책, p. 48.

44) 위의 책, p. 48.

45)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6.

사회주의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참된 삶과 행복을 꽃피우는 집단주의적이며 애국적인 노동으로 간주된다. 특히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사상이며 도덕품성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사상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참다운 애국주의로 표현된다. 북한사회에서 집단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말로써가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사업과 생활, 집단과 사회주의 조국을 위한 노동활동에서 나타나도록 교육된다. 따라서 오직 집단을 사랑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노동에서 헌신성과 성실성을 높이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⁴⁶⁾

넷째, 주체의 노동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개인주의적인 노동관점과 태도를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로동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로동을 하기 싫어하고 건달을 부리며 자기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개인주의적인 노동관점과 태도를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⁷⁾

북한에서 혁명가의 사업기풍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어렵고 힘든 일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농촌 지도일군들이 농사일에서 이신작착하지 않는 것이나 협동농장원들이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은 다 그들에게 자본주의 사상잔재가 남아 있으며,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서의 혁명적

46) 백진규, 『주체의 노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50.

47)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8.

자각이 부족한데서 나오는 것으로 간주된다.⁴⁸⁾ 따라서 북한은 개인주의적 노동관점과 태도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은 개인주의적 노동관점과 태도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일반적 방법과 개별적 방법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⁴⁹⁾

다섯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우기 운동이다. 김정일은 노동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을 주체의 로동관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서 특히 강조하고 있다.⁵⁰⁾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숨은 영웅들이 발휘하고 있는 혁명적 노동생활 풍모는 안일과 해이, 보수와 침체를 비롯한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일본새를 버리고 사람들을 집단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노력투쟁으로 불러일으키게 하는 긍정감화교양의 행동한 모범으로 간주된다.⁵¹⁾ 이와 함께 북한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데서 중요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다.

4. 「주체의 로동관」의 쟁점: 정신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 테제

「주체의 로동관」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은 하나는 바로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임하게 하는가, 즉 어

48) 백진규, 「주체의 로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53.

49) 위의 책, p. 55.

50)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전국로동행정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 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19.

51) 백진규, 「주체의 로동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56.

떠난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과정 속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바로 여기서 정신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상호관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속도와 균형의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심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이 같은 논쟁과 관련하여 좌·우경 기회주의가 사회주의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김정일은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로 편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정치도덕적 자극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물질적 자극의 의의를 홀시하고 정치도덕적 자극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두 가지 편향에 대해 이론적이나 실천적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고 유해로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²⁾

두 가지 편향에 대한 김정일의 비판은 사회주의 과도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에 입각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로서 결국 사회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김정일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는 낡은 착취사회를 부정하고 태어난 사회로서 자본주의사회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이다. 즉 자본주의사회가 개인주의에 기초한 계급적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사회라면,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의

52) 김정일,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 선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19

본질적 특성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사람들이 사회적 처지와 목적과 이해 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단결하고 동지적으로 협조하는 데 있다고 김정일은 주장하고 있다.⁵³⁾

그러나 문제는 사회주의 사회가 공산주의적 성격과 함께 과도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김정일은 이 같은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이 자본주의 사회(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적 낙후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낡은 사상과 문화의 유물이 남아있고 공산주의적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 발전수준이 높지 못하며, 노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 차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물질문화생활에서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차이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⁵⁴⁾ 이러한 사회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은 근로자들의 노동생활에 반영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 결과에 대한 정치도덕적 관심과 함께 물질적 관심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정일은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정치도덕적 자극이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면 물질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물질적 자극은 과도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⁵⁵⁾ 그러나 김정일은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만 내세우는 견해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을 무시하고 과도적 성격을 위주로 보는데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물질적 자극을 기본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 속에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경제를 빨리 발

53) 위의 글, p. 220

54) 위의 글, p. 220

55) 위의 글, p. 221

전시키는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물질적 자극체계를 경제관리전반에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이윤, 상금, 가격과 같은 경제적 공간들을 경제관리의 기본수단으로 삼아야 하며 기업소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고 이윤이 많이 나는 제품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사회주의경제를 자본주의경제에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반사회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이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수정주의 이론대로 사회주의경제를 관리 운영한다면 사회주의경제와 자본주의경제의 차이가 점차 없어지고 사회주의경제가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변질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⁵⁶⁾

동시에 김정일은 정치도덕적 자극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무시하고 공산주의적 성격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높은 정치적 열의를 가지고 자각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노동의 결과에 따르는 물질적 평가가 필요 없으며 따라서 분배에서도 평균주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아직 사람들이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동노동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사회의 조건에서 평균분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사회발전단계를 뛰어넘어 단번에 공산주의를 실현해보려는 좌경적인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조건에서 평균분배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소련에서 소비에트정권이 수립된 첫 시기에 있었던 품문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실증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만일 사회주의사회의 현실

56) 위의 글, p. 221

과 역사적 경험을 외면하고 노동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 평균주의적으로 분배를 한다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게 되고 일하기 싫어하며 적게 일하고도 많이 분배받으려는 현상이 조장되어 사회주의 건설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⁵⁷⁾

그러면 김정일은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김정일은 정치도덕적 자극이 위주이고 거기에 물질적 자극이 안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징은 어디까지나 그 공산주의적 성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반면에 과도적 성격이 점차 극복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을 반영한 정치도덕적 자극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고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물질적 자극의 역할은 점차 약화된다고 주장한다.⁵⁸⁾ 결국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생산의욕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김정일은 근로인민대중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이며 그것은 정치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기초 위에서만 높이 발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워 전체 근로자들이 주인공의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생산도 잘되고 경제관리도 잘되며 모든 일이 다 잘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⁹⁾

이와 관련하여 북한사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에서

57) 위의 글, p. 222

58) 위의 글, pp. 222~223.

59) 위의 글, p. 22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자기가 일하는 목적과 의의를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 열의를 내어 맡겨진 혁명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은 북한이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킨 중요한 비결은 바로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킨데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하지 않고 돈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서는 대중 속에서 창발성이 나올 수 없으며 집단적 영웅주의가 발양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⁶¹⁾

특히 사회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는 것은 사회의 주인인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한다. 김정일은 황해 제철소의 ‘가화폐’ 실험을 예로 들면서 사람들을 돈에 얽매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방법이며 그렇게 하여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그리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의 이익 속에 자기자신의 이익도 있다는 것을 옳게 깨닫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⁶²⁾

결국 북한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을 노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들이 생산의 주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저절로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노동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조국과 인민

60) 위의 글, p. 223.

61) 위의 글, p. 223~224.

62) 위의 글, p. 219.

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는 것을 숭고한 의무로 여기도록 하고 있다.⁶³⁾ 또한 김정일은 근로자들이 혁명적 열의를 높이려면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평가를 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정일은 근로자들의 로력적 성과를 정치적으로 높이 평가해주고 혁신자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줌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열의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떨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⁴⁾

김정일은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은 반드시 물질적 자극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오래 동안 노동의 차이가 존재하고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게 되는 것만큼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김정일이 반대하는 것은 물질적 자극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사업은 하지 않고 물질적 자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람들 속에 개인이기주의를 조장시키는 것이다.⁶⁵⁾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물질적 자극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물질적 자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노동자들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그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물질적 자극은 노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평가를 통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특히 북한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물질적 대우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렵고 힘든 부문의 노동

63) 위의 글, p. 225.

64) 위의 글, pp. 225.

65) 위의 글, p. 219.

자들에게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보다 높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사람들을 순전히 물질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많은 정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고 자기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⁶⁶⁾

김정일은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옹기 실현하려면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몫이 차례 지고 적게 한 사람에게는 적은 몫이 차례지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동시에 일하기 싫어하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지키지 않고 평균주의를 하여 힘든 일을 하는 사람과 험한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똑같은 보수가 차례지게 한다면 사람들이 생산을 늘이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건달을 부리면서 놀고먹으려고 하는 현상이 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에서 로동정량사업⁶⁷⁾과 로임사정사업⁶⁸⁾은 매우 중요한

66) 위의 글, p. 226.

67) 김일성 로작용어사전에 따르면, 로동정량이란 일정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로동시간 또는 일정한 로동시간에 생산하여야 할 제품량(작업량)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로동정량사업이란 이러한 기준을 올바르게 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로동정량사업은 계획화의 기초로서, 로동에 대한 평가의 척도로서, 로력조직과 로력관리를 개선하고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을 추동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로동정량은 로동의 특성과 그 조건 및 선진적인 작업경험을 고려하여 제정한다.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 194.

68) 사회주의하에서의 로임은 국가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일꾼들의 로동

국가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상금을 비롯한 추가적인 보수지불형태를 이용하여 사회주의분배원칙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⁶⁹⁾

5. 결론을 대신하여: ‘주체의 로동관’과 그 한계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일의 ‘주체의 로동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정일의 주요 문헌을 통해 본 ‘주체의 로동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 사회에서 ‘주체의 로동관’은 노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노동에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것을 삶의 행복으로 여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요컨대 주체의 로동관은 북한사회에 혁명적 노동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사회에서 주체의 로동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근로자들을 주체형 공산주의적 인간의 품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며, 둘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이러한 「주체의 로동관」을 세우기 위

력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리용하는 소비품 분배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로임은 생활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로임의 기본형태로서는 도급로임과 정액로임이 있으며, 보충적 형태로서는 가급급과 상금이 있다.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 198.

69) 김정일,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 선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26

한 과업과 방도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교양사업, 개인주의적 노동관 점과 태도에 대한 사상투쟁의 강화, 숨은 노동 영웅 따라 배우기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사회의 '주체 노동관'은 '사회주의 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자발적 헌신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시에 끊임없는 정치사상교육과 교양사업을 통해 집단주의에 기초한 노동관을 외부에서 주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김정일이 '주체의 노동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창발성과 자주성을 갖고 노동에 참여하고 사회주의 생산활동에 기꺼이 동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연구는 사회주의 노동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또 다른 전제적 노동통제가 사회주의 사회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⁷⁰⁾ 북한 사회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노동의 소외와 강제는 북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노동에 대한 강제와 동의는 항상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와 강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첫째, 도덕적 관념 들(공동 관념), 둘째, 올바른 행위를 했을 때 돌아오는 이익에 대한 현실적 가정들, 셋째, 강제를 거부했을 때의 제재에 관한 현실적 가정 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에서처럼 강제와 징벌의 위협이 노동동기로 작용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자를 사상적으로 설득하거나 물질적으로 유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⁷¹⁾

70) 이러한 연구로서는 Burawoy, Michael.,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London: Verso, 1985);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를 참조.

71)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연구사, 1994), p. 127.

앞에 보았듯이 북한 사회에서도 끊임없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평가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힘든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포상(국가표창, 3대혁명 붉은기, 김정일 위원장 감사, 당중앙위 감사, 노력영웅 등)과 징벌(관리직위 상실, 비판 등) 등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강제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요컨대 시장경제에서 익명적이고 숙명적으로 보이는 시장기구가 노동자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노동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사회주의 북한 사회에서는 정치도덕적 자극 또는 물질적 자극 등과 같은 외생적 부추김을 통해서 노력증대를 고무하거나 포상과 징벌에 의해 노동을 강제한다고 할 수 있다.

분명 외생적 자극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의 강제는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 초기 동안에는 전체 생산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혁명적 열정이 소진되고 점차 안정이고 제도화된 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외생적 자극 메커니즘은 더 이상 노동 유인책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바로 이러한 외생적 자극 메커니즘의 한계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통한 정치도덕적 자극에 기대고 있는 ‘주체의 로동관’이 안고 있는 한계점인 동시에 현재 북한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XIII. 세대 · 가족관

이 우 영(선임연구위원)

1. 서 론

체제나 이념에 상관없이 가족은 사회체제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은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집단으로 사회체제 구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은 하나의 사회제도로써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구조나 성격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에 대한 관심은 항상 가족을 둘러싼 사회체제와 무관할 수 없다.¹⁾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족구조의 분석에는 사회적 이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역으로 가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회체제의 특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가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이해가 전제되어야하고, 북한가족의 성격이나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북한 사회체제의 변동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 예를 들어 사회화의 매체로서 가족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현대사회에서 사회화의 매체로서 가족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핵가족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핵가족은 2세대 동거를 의미하고, 확대가족에 비해서 당연히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배울 대상이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가족화는 산업화의 결과이다. 따라서 현대산업사회화는 사회화의 매체로서 가족의 위상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화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가족내적으로 부모의 권위의 하락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를 강제한다.

특히 북한연구의 주도적 관심이 이념이나 정치체제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가족의 이해는 북한체제 이해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동안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여 오면서 권력이 고도로 집중화되는 등 다른 사회주의체제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사회체제를 형성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가족 구조나 사회적 역할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이념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유일지배체제라는 북한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고지도자의 가족관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가족구조와 같은 사회체제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북한과 같이 고도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 통제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관점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글은 현재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가족관과 세대관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관과 더불어 세대관을 검토하는 것은 세대문제가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새세대'가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²⁾ 즉, 새로운 세대에 대한 입장은 작게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점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생각과도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북한의 새세대 문제에 대해서는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2. 북한 가족의 특성

1. 북한 가족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에나 존재하는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사회학적으로 가족은 다음의 네 가지 특징으로 정의된다.³⁾ 첫째, 가족은 혼인, 혈연 또는 양자라는 유대에 의해 결합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둘째, 가족 구성원은 대체로 한 지붕 밑에 같이 살고 있으며, 단일가구를 형성한다. 셋째, 가족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 형제자매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하고 상호의사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결합체이다. 넷째, 가족은 일반 문화로부터 추출된 공통문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가족이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경제적 공동체이며 사회적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제도가 사회적 요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가족은 개인의 생존 및 전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① 성행위의 규제 ② 사회구성원의 충원 ③ 사회화 ④ 양육과 보호 ⑤ 사회적 정치(定置) 등 몇 가지의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⁴⁾

따라서 특정 사회의 가족 구조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차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가족이 하나의 사회제도로써 사회체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체제의 이념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복지제도의 수준이 높은 체제에서는 양육과 보호의 기능은 축소된다고 볼 수 있고, 따

3) E. W. Burgess & H. L. Locke, *The Famil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45), pp. 7~8.

4) G. P. Murdock,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MacMillan Com., 1949) 참조.

라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계층의 세습이나 사회화의 기능과 같이 가족이 수행하는 사회정치적 역할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 내 인간관계나 역할분업은 일반문화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가부장적인 권위구조가 팽배한 사회체제에서는 당연히 가족 내에서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권위구조가 확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역할 분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혼인관습, 혈연의 중시 여부 등 전통적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교적 전통을 나누고 있지만, 한국은 혈연적 관계를 보다 중시하지만, 일본은 경제적 단위인 가구(家口: household)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족에서 혈연의 의미가 희박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의 수준도 가족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가 진전되어 농업중심에 공업중심 사회로 전환되면 가족은 생산단위에서 소비체로 변화하게 되는 동시에 직장에 따른 사회이동의 편이를 위해서 핵가족화가 진전되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가족정책도 가족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산아제한 정책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며, 상속법 등 가족 관련 제도도 가족의 구조와 특성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변수들을 고려할 때 북한 가족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념체계로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1960년대 이후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사회체제를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체이념과 이를 기초로 구축된 유일지배체제에 부합하는 가족구조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 고유의 문화체제이다. 건국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추구하여왔지만 동시에 주체적인 문화창달에도 노력해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민족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지 발전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⁵⁾ 따라서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가족가치 등이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산업화 수준이다. 발전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은 사회주의를 산업화의 방안으로 채택하였고, 건국 이후 꾸준히 산업화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전쟁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효과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업화는 도시화를 동반하였고 자연적으로 핵가족화라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북한의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46년 남녀평등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남녀평등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성노동력 활용의 필요성에 따라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이와 같은 가족 정책은 가족구조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한 사회체제의 상황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의 지체, 그리고 식량난의 심화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변화, 유일지배체제의 성립과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와 같은 정치적 상황변화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동구의 국가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한 대외적 환경변화, 점증하는 외부문화의 유입과 같은 문화적 환경변화도 북한 가족의 특성과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최고지도자의 가족관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5)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북한 영화분석을 중심으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가족에 대한 생각, 여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세대에 대한 생각들은 북한 가족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주의체제와 가족

사회주의의 가족 이론은 엥겔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에서 일부일처제적 개별 가족제도 및 여성억압의 기원과 본질을 사회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⁶⁾ 엥겔스에 따르면 노동의 발전단계가 미약할수록, 그리고 생산물의 양이 적을수록, 따라서 사회적 부가 제한될수록 사회조직은 혈연적 유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혈연적 유대에 기초한 사회구조 속에서 노동생산성은 점차 증대하고 이에 따라 착취의 가능성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계급적 적대의 기초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혈연적 유대에 입각해 있던 낡은 사회가 새로 발전한 사회계급들간의 충돌로 말미암아 붕괴하는 대신 지배권이 국가에 집중된 새로운 사회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족 제도가 전적으로 소유관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 있다. 엥겔스에 의하면 일부일처제 가족구조와 여성억압의 사회적 기원은 바로 이와 같은 일대 역사적 전환과정이고, 남성들은 사유재산의 보존과 상속을 위해 모계사회 구조를 전복시키고 일부일처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엥겔스에 의하면 가족의 발생과 여성의 억압, 그리고 계급적 착취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기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가 살던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사회적

6) Frederick Engels, *The Origin of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In the Light of the Researches of Lewis H. Morgan, in Volume 2 of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 1969), pp. 468~593.

지배 억압구조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부르주아 가족제도에 대하여 그는 그것이 부부간의 물질적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자산의 상속권을 차지할 수 있는 적법한 상속자를 낳아주는 대가로 단지 숙식을 제공받을 뿐이라는 것이다.⁷⁾

엔겔스에 따르면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철폐되고 사회적 소유가 실현됨으로써 경제적 단위로서 개별 가족의 의미는 상실되고, 사사로운 살림은 사회적 산업으로 그리고 자녀 양육은 공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 선택에서 경제적 요인이라는 부차적 요소가 사라지고 참된 성애가 일부일처제 부부간의 기초로서 공고화된다는 것이다.⁸⁾

레닌의 경우는 엔겔스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가족제도 및 양성관계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여성의 해방이 사회주의 건설에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했다.⁹⁾ 레닌은 여성운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및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레닌은 사회주의적 인간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방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여성을 열등한 상태로 억압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을 폐기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제도적 형식적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었으며, 둘째는 개인적 가사부담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생산노동에 여성을 전면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이었다.

레닌도 엔겔스와 같이 생산수단의 사유재산제가 폐지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파악하였으며, 사유재산제를 붕괴시킴으로써 여성을 가사

7) 전상인, 『북한가족정책의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8~9.

8) 이와 같은 논지는 현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까지 지속되고 있다. 자본주의화 여성의 억압을 강화한다는 논지에 대해서는 Eli Zaretsky, 『자본주의와 가족제도』(서울: 한마당, 1987) 참조.

9) V. I. Lenin, 『레닌의 청년·여성론』, 편집부 편역 (서울: 함성, 1989) 참조.

노예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레닌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여성의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이상과 완전한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마당에서 여성들을 위한 임무가 도처에 깔려 있다고 인식하였다.¹⁰⁾

맑스주의자들은 가족 문제에서도 계급적 갈등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의 확립에 따라 경제단위로서 가족이 기능하여 성적 분업구조와 착취구조가 생겨났다는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구조가 타파되는 즉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성립되어 가족이 생산단위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여성해방과 가족 내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가족정책은 기본적으로 엥겔스에서 레닌에 이르는 맑스주의적 가족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가족정책이나 현실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족 구조는 사회주의 가족 이론과 반드시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실 사회주의에서 가족은 생산 단위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소비단위 및 재생산의 단위로서 작용한다. 가족은 물질 토대이고 사회구성의 기초단위이며 사회의 기본세포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발전을 위한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국가의 가족에 대한 실현·보호·강화의 의무가 제기된다. 현실 사회주의 가족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가족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가족과 혁명적 가족을 지향한다. 따라서 평등관계와 혁명적 동지애를 기초한 가족을 추구한다. 가족의 부양문제에 관해서는 명시적으

10)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p. 11.

11)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8), pp. 34~35.

로 국가에 그 부양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 책임론이 적용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계가문 의식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는 적서차별을 폐지하여 적자와 서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며 남아선호 제도 및 상속권을 폐지한다.

둘째, 가족구조는 원칙적으로 핵가족인 만큼 결혼 후 분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구조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문제로서 결혼과 이혼의 경우 자유 원칙이 강조된다. 결혼의 자유란 결혼 결정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 배우자 선택에서 경제적인 고려가 제거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셋째,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기능에서, 가족을 통한 사회 재생산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인간사회의 조직화는 지양하고 있는 반면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 기능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 이론은 부부 모두가 가족에 대해 정신적·경제적인 책임을 지며,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사회주의 혁명주체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성차에 의한 역할 분업을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주의 가족이 이론과 원칙에 부합하게 구성되고 이루어진다고 보기만을 어렵다. 생산단위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고,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축으로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정치사회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부장적 차별 구조가 완전히 타파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북한의 가족정책

사회주의 혁명정권으로서의 북한은 기존 지배계급과의 정치적 연합

을 모색하는 대신 정치적 동원의 핵심적 대상을 농민과 노동자계급에서 구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산소유의 불평등에 기초한 경제적 하부구조를 와해시키고, 가부장적 전통에 바탕을 둔 상부구조로서의 사회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북한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일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북한정권은 여성해방의 문제에 대해 높은 정책적 관심을 드러냈다. 1946년 5월 9일 김일성은 여성들이 건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¹²⁾

건국사업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을 높임으로써 지주가 없고 농민이 땅의 주인으로 된 새로운 토지소유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농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 여성들이 농업생산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남성들과 같은 지위에 올라서게 할뿐만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여성들의 지위를 개선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김일성은 여성문제의 해결을 통해 남성이장 중심의 봉건적 사회·경제질서를 청산하는 대신 여성을 새로운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통하여 해방 직후 인구의 대량 남하에 의해 초래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파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구체화된 것이 1946년 7월 30일에 공포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9월 14일에 발효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이다. 법령의 1조에는 “모든 령역에

12) 김일성, “여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제1차대표자회에 참가할 공산당원인 녀맹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46년 5월 9일) 『김일성저작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14,

있어서 녀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라고 명기하면서 반가부장적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밖에 여성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2조),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 및 보수권과 아울러 동일한 사회보장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3조), 자유결혼 및 자유이혼의 권리보장(4조,5조), 조혼, 일부다처제, 인신매매, 공창·사창, 기생제도 등 각종 여성인권 유린사례 금지(6,7조),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상속권과 이혼시 여성에 의한 재산 및 토지분배의 권리 보장(8조) 등으로 이 법령은 구성되어 있다. 세칙에는 여성들에게 각종·각급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행 및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관계의 소멸에 대해서는 자유이혼의 원칙에서 인민재산소의 결정에 의한 협의이혼 방식으로 후퇴하였다.

가부장제의 극복과 양성동등을 지향하는 가족 정책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6년도 평양에서는 국가자금으로 운영되는 3·8탁아소가 등장하였으며, 1947년 6월 13일에는 「탁아소 규칙」이, 1948년 12월 2일과 23일에는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과 「녀성상담소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1949년 2월 1일에는 「탁아소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는 등 탁아소 건립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 해방하는 동시에 1945년 11월 18일에 창립된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중심으로 여성운동과 여성열성자의 육성을 강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적 행동도 적극적으로 고무하였다. 또한 1946년 11월에 실시된 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서 여성 몫으로 10~15% 지분을 사전에 할당하였다.

해방 직후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족관계의 혁명적 변화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수십년 이상 걸려서 이를 수 있었던 형식법적 차원의 남녀평등권의 실현이 북한에

서는 권력지도부의 의지로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¹³⁾

북한에서 전통적인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된 계기는 한국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한반도 전역이 전쟁터가 되었고,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호적대장이 대거 유실되어 기존 가족제도의 법적 근거가 크게 미약해졌다. 더구나 대량의 인명손실로 북한의 경우 결손가정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전후 여성가장의 수가 40만 명에 달했으며, 이산가족의 비율도 북한의 경우 25% 가까이 이르렀다.¹⁴⁾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대가족이 붕괴되어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었고, 여성이 사회진출이 강화되었다.¹⁵⁾ 이와 아울러 전쟁의 피해로 농업의 협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것은 농촌 가족도 더 이상 생산단위로서 기능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후 복구시기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6년 3월 5일 발표된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호적제가 폐지되었고, 사유재산의 완전철폐로 자연적으로 상속제도 철폐됨에 따라 가족제도가 혁명화되고 여성의 혁명화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후 복구기의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을 사회주의적

13) 북한의 여성정책 해방직후 몇 년에 걸쳐 대부분 이루어졌다.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한울, 1991), p. 78. 초창기에 김일성이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은 일제하 유격대 활동시기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박명선,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기의 여성정책,” 김남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5: 북한편』(서울: 한길사, 1989) 참조.

14) Hyo-Jae Lee, “National Division and Family Problems,” *Korea Journal*, vol. 25, no. 8, pp. 4~18.

15) 전쟁기간 중에 김일성은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여성들을 “오늘 후방의 주인”이라고 불렀다. 김일성, “전선원호사업은 녀맹원들의 중요한 임무: 녀맹일군들과 한 담화”(1951. 8. 15), 『김일성저작집 6』(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p. 445~452.

근로자로 만드는데 적극적이었던 것도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72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62조에는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실제로 각종 유아교육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자녀양육을 사회화하고, 가정의 기술혁명을 통하여 밥공장의 운영 등 가사노동의 사회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사회주의 원칙에 충실하였던 북한의 가족정책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탈사회주의화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동구의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연방이 해체되는 등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사회정치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을 주장하게 된다. 김정일이 1982년 3월 31일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사람은 육체적 생명체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가진다”고 하면서, 전자가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후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은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더욱 발전하여 일종의 유기체적 가족국가관으로 발전한다.¹⁶⁾ 즉 사회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아버지 수령과 어머니 당 그리고 그 자식으로서의 인민대중이 혈연적인 관계 혹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나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인식론은 전통적이

16) 전상인, 「북한가족정책의 변화」, pp. 56~57.

고 보수적인 유교적인 가치관, 가부장적 가치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념체계에의 변화는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라는 정치적 환경변화, 더욱 심화되는 경제적 침체라는 상황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처한 위기상황은 가부장제의 복원과 같은 복고주의적인 가족정책이 시행되는¹⁷⁾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 북한여성들의 모범으로 미화되면서 어머니, 아내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여성상이 크게 부각되었다. “여성은 꽃이라네”라는 반여성해방론적인 노래가 발표될 정도로 여성의 가정화가 강조되던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90년 10월 24일 「가족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사회주의 성립과 함께 소멸되어야 할 가족관련 법을 공식적으로 제정한 것은 가족에 대한 의미가 과거로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법」 제1조에는 그 제정 목적을 “온 사회를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3조에는 “사회의 기층단위”로서 가족의 사회적 존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동시에 결혼과 이혼 등 가족의 성립과 해체에 대한 국가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11조). 특히 어린이의 양육과 교양을 어머니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6조)은 대표적으로 가부장적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17)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30), pp. 3~6.

18) 조형, “북한 사회체제와 가부장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30), p. 20.

3. 김정일의 가족관 및 세대관

1. 가족의 의미

김정일은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로 맺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족관과 차이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은 기층생활단위입니다. 가정생활이 건전하고 행복하여야 사회생활전반이 명랑하고 활기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혈연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관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도 사회적 관계인 것만큼 가족들사이에는 해당 사회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도덕적 원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과정에 맺어지는 부부사이,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자매사이의 육친적인 사랑을 존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이 참다운 동지적 사랑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¹⁹⁾

그러나 육친적 사랑을 더하여 동지적 사랑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내에서 혁명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육친적 사랑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가족들사이의 육친적사랑을 절대화하여서는 안됩니다.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며 혈연적 관계보다 동지적관계가 더 중요한 것만큼 가족들 사이의 육친적사랑은 어디까지나 동지적사랑에 복종되어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뜨겁게 사랑

19)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 10. 10), 『김정일 선집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67.

하면서도 그들이 다같이 혁명사업에 충실하도록 동지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²⁰⁾

공산주의자들은 안해와의 관계를 단순한 부부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관계로 되게 하여야 하며 안해를 혁명동지로 믿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사이의 진정한 사랑과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온 사회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될 수 있습니다.²¹⁾

김정일이 가족간에서도 혁명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가정이 사회체제의 기본 세포로서 조직사업의 출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단결은 가정의 화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목한 가정을 떠나서 사회의 화목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²²⁾

동사업은 가정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는 직업도 다르고 수준도 서로 다른 각계각층 주민들, 특히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가정부인들을 기본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만큼 힘들기는 하지만 매우 영예롭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동은 우리 사회의 세포인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사회를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동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적지 않게 달려있습니다²³⁾

20)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p. 68.

21) 김정일,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자: 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82. 4. 10), 『김정일선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24.

22) 위의 글, p. 224.

23) 김정일,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1972. 7. 11), 『김정일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397.

김정일이 생각하는 가족관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가족관과 유사하다. 김일성은 가정을 사회적 기본 단위로 보지만, 동시에 사회 혁명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가정이라고 하면 벌써 개인소유의 울타리안에 들어있는 사회의 개별적 단위입니다.²⁴⁾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사회정치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정치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회정치생활을 통하여 혁명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부인은 그가 속한 직장에서 혁명화할 수 있고 남편도 자기 직장에서 혁명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소년단부단에서 혁명화할 수 있으며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은 학교 안의 당세포나 사로청 초급단체에서, 혁명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은 사회주의제도에서 가정혁명화문제는 온 사회의 혁명화와 뗄 수 없는 것입니다.²⁵⁾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가족주의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해치려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²⁶⁾

24) 김일성,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것은 보육원, 교양원들의 영예로운 혁명임무: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한 연설”(1966. 10. 20), 『김일성저작집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534.

25) 김일성,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1970. 7. 6) 『김일성저작집 2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183.

26)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수정주의, 사대주의, 봉건유교사상,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창작가들은 가족주의적인 분과를 형성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인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²⁷⁾

2. 여성관

김정일의 여성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여성들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동시에 혁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사회활동에 널리 인입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나가자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합니다. 수레가 한쪽바퀴만 돌아가서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듯이 남자들의 역할만으로는 사회가 빨리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을 사회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우리 사회의 발전을 더욱 다그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로력구성을 보면 여성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간부는 많지 못합니다.²⁸⁾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데서 여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는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으며 가두여성들이

(1967, 7, 3),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85.

27) 김정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 9. 6), 『김정일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32.

28) 김정일, “여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 4. 30), 『김정일선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83.

적지 않습니다. 가두녀성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다 혁명화한다면 가정혁명화도 잘될뿐아니라 녀성혁명화를 빨리 다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가두당세포들에서는 가정부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가두당세포들에서는 세포안의 당원들부터 먼저 혁명화하고 그들이 모든 가정부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도록 하여야 합니다.²⁹⁾

그렇지만 북한의 현실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부들의 경우는 특히 남편의 몰이해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일꾼들이 이처럼 녀성일꾼들을 홀시하다보니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대학까지 졸업시킨 적지 않은 녀성들도 웅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녀성일꾼들을 홀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의 표현입니다.

가정부인들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자면 남자들이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녀성들은 남편때문에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지 못하며 사업에서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일부 남자들은 자기 안해에게 아이들이나 기르고 자기 뒤바라지나 하라고 요구한다는데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매우 그릇된 사고방식입니다. 당조직들은 남자들에게 대한 교양을 잘하여 그들 자신이 모범적으로 일할 뿐아니라 자기 안해도 혁명에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도록 동지적으로 성의껏 도와주게 하여야 합니다.³⁰⁾

따라서 여성들을 혁명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게 된다.

29) 김정일,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꾼들과 한 담화”, p. 404.

30) 김정일,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p. 98.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혁명적시책에 의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훌륭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공산주의적 시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문제를 3대기술혁명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 탁아소, 유치원들뿐아니라 주 탁아소, 유치원들도 많이 꾸려지고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도 더 잘 갖추어지고있습니다. 당과 국가에서는 많은 힘을 들여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훌륭히 갖추어주고있으나 우리 일꾼들이 여성들에 대한 관점을 옳게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여성간부들이 빨리 늘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³¹⁾

경공업을 발전시켜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³²⁾

김정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업무 영역에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인입하는 것은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나라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합니다. 오늘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어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화되고 점차 힘든 로동이 험한 로동으로, 유해로동이 무해로동으로 바뀌어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대상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작업대상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여성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며 여성들이 일할수 있는곳에 남성로력을 배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³³⁾

31) 위의 글, p. 87.

32) 김정일,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1971. 10. 11), 『김정일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0), p. 320.

33)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로동행정일꾼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1989. 11. 27) 『김정일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26.

여성들은 체질상 특성으로 보아도 관리부문이나 사무부문같은데서 많이 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기술혁명이 완성되지 못하여 어렵고 힘든 일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³⁴⁾

아울러 김정일은 한편으로 여성의 동등성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 일부 여성들속에서는 직장에도 다니지 않고 인민반사업에도 잘 참가하지 않으며 집도 잘 거두지 않고 안일하게 되는데로 사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가정부인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그들을 혁명화할 수 없으며 가정혁명화도 잘할 수 없습니다.³⁵⁾

우리의 여성들속에는 처녀시절에는 한뭉 뚱뚱히 하다가도 일단 시집을 가면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열의가 점차 식어지고 나중에는 가정에 파묻히고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혁명사업도 당적임무도 다 꺾버리고 가정에 파묻혀 남편과 아이들의 시중이나 드는 것으로 세월을 한가히 보낸다면 락후해져서 옷수발이나 하게 되고 리기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자신을 망칠뿐 아니라 아이들과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³⁶⁾

여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주로 전업주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김일성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34) 김정일, “여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p. 85.

35) 김정일,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 p. 404.

36) 김정일, “여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p. 97.

가정혁명화문제는 모든 가정에서 다 나서겠지만 특히 직장에 나가 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밤낮 농작이나 들추며 남편의 시중이나 드는 녀성이 있는 가정들에서 더욱 중요하게 나섭니다. 대체로 보면 직장에 안나가는 가정부인들이 모여앉아 쓸데없는 말공부질을 하고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³⁷⁾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판단은 가사노동이나 가정일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 두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중시하는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히 꾸려나가는데서 가정의 주부인 녀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녀성들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바로하자면 문화정서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녀성들에게 집을 꾸리는 방법, 자녀를 교양하는 방법, 옷과 료리를 만드는 방법을 비롯하여 가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상식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가르쳐주어 그들의 문화정서수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³⁸⁾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먹고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전도에 이르기까지 늘 마음을 쓰며 보살피줍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누구보다 속을 태우면서 열번 백번이라도 타이르며 끝까지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예로부터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훌륭한 제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³⁹⁾

37) 김일성,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p. 183.

38) 김정일, “은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9. 1. 5) 『김정일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22.

39) 김정일,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과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교육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 7. 12), 『김정일선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어린이들을 잘 키우려면 어머니자신이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⁴⁰⁾

3. 세대관

그는 북한의 세대를 다음과 같이 넷으로 구분하면서, 김정일은 세대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1세대: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사리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광복된 조국에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혈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항일혁명은 역사에 류레 없는 준엄하고 시련에 찬 혁명이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투쟁함으로써 일제를 때려 부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업무를 실현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는데 빛나는 공헌을 하였습니다.

2세대: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인민의 조국을 지켜 싸운 영웅전사들입니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싸움에서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 냈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세운 불멸의 업적을 긍지높이 자랑하고 있으며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주의정신으로 새 세대 청년들과 인민들을 교양하고 있습니다.

3세대: 전후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 천리마운동 선구자들은 우리 혁명이 부닥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킨 긍지 높은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후 채데미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짧은 역사적기간에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운 천리마시대

411.

40) 김정일,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 p. 401.

의 영웅들과 혁신자들, 선구자들을 자력갱생의 귀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⁴¹⁾

새세대: 지금 우리의 혁명대오는 우리 당의 투쟁력사와 우리 조국의 역사에 대하여,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새 세대들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새 세대들은 우리 당이 어떻게 오늘과 같은 불패의 대오를 강화발전되었고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왔으며 뒤떨어졌던 우리 조국을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는가 하는데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⁴²⁾

김정일은 특히 ‘새로운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들은 투쟁과 혁명의 역사가 부족한 반면 외부문화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의 1세대, 2세대는 혁명적 립장이 견결합니다. 그들은 착취사회에서 지주, 자본가의 착취도 받아보았고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사회주의체도를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려는 혁명적 립장이 견결합니다. 그러나 혁명의 3세대, 4세대는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흘려 건설하여 놓은 사회주의체도에서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행복하지만 자라다보니 세상이 본래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려는 사상적 립장이 전세대들만 못합니다. 그들속에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애써 일하는 것보다 안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본주의의 《물질문명》에 현혹되어 사회주의원칙을 저버리고 자본주의를 되살리는 길로

41)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 12. 25),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119~120.

42) 김정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 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음악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 2. 25), 『김정일선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9.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하지 않다보니 혁명의 3세대, 4세대가 안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추구하던 나머지 자본주의에 현혹되어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자본주의를 되살리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혁명의 3세대, 4세대가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변질되기를 바라고있습니다.⁴³⁾

사회주의가 변질되고 부르조아자유화바람이 밀려 들면 누구보다 먼저 젊은 세대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고 부패타락의 길을 걷게 되며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최대의 피해자로 되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⁴⁴⁾

김정일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혁명을 승계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중심세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혁명의 1세대, 2세대 청년들이 조국을 광복하고 해방된 조국땅 위에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위훈을 떨친 세대라면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은 그것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 세대입니다.⁴⁵⁾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 서야 할 세대는 다름 아닌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청년들을 사랑하며 미래를 사랑합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도 청년들을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

-
- 43) 김정일, “혁명적 원칙과 입장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 . 26),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28.
- 44)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평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청년절 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준 담화” (1996. 8. 24),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22.
- 45)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첫 청년절을 맞는 전국의 청년들과 사로청일군들에게 보낸 서한” (1991. 8. 26),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

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청년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바치는 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청년들은 커다란 포부와 희망을 안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연대기에 우리 나라를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높이 떨쳐 나가야 합니다.⁴⁶⁾

체제수호와 혁명위업을 계승할 새로운 세대들이 앞 세대 비하여 취약한 정치적 성향을 보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주체의 청년운동에 관한 사상과 이론은 청년학생들의 역할을 대중을 계몽하여 혁명운동에 안내하는 교양자적 역할에 국한시키고 청년들을 혁명의 보조적 역량으로 보던 선행이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상 이론입니다⁴⁷⁾

우리 혁명의 대가 바뀌고 새 세대 청년들이 로동계급대렬속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새 세대 로동계급은 지난날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 속에서 단련되지 못한 것만큼 그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⁴⁸⁾

혁명의 3세대, 4세대들은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고 고생도 해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잘 교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46) 김정일,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9. 9. 29),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67.

47)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청년절 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준 답화”, p. 212.

48) 김정일,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전국직업동맹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 5. 3),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65.

코카콜라를 먹일 것이 아니라 백두산들쭉단물을 먹여야 합니다.⁴⁹⁾

4. 김정일 가족·세대관의 특성

김정일의 가족관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가족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한편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 가사노동을 사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비판하면서, 가족의 혁명화를 강조한 것도 사회주의 가족관과 마찬가지로이며, 동시에 김일성의 가족관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해방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편에게 여성 보호의 의무를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일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차별적인 관점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역할 등 가족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부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고 있는 등 가족내 성적인 분업구조에 대한 생각도 가부장적인 사고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족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이야기도 거

49) 김정일,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92. 11. 12),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14.

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성분의 집단을 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대문제에 대해서 김정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새세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세대가 앞선세대와 비교하여 사상적인 특성이 약한 것을 우려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김정일선집에서 새세대를 언급한 빈도를 정리한 것인데, 가장 최근의 담화가 실린 14권에서의 사용 빈도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1> 김정일 선집에 나타난 ‘새세대’ 빈도

권수	년도	빈도
1	1964~1969	48
2	1970~1972	19
3	1973	9
5	1975~1977	30
6	1978~1980	7
7	1981~1983	35
8	1984~1986	25
9	1987~1989	18
10	1990	33
11	1991.1~7	15
12	1991.8~1992.1	27
13	1992.2~1994.12	37
14	1995~1999	64

김정일의 새세대에 대한 우려는 다음의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이 세대구분을 역사적 경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도 세대구분에서 단순연령 효과(age effect)보다 동기효과(cohert effect)가 중요하다는 것이다.⁵⁰⁾ 이것은 북한도 역사적 격변을 통하여 세대가 구분되며 각 세대별로 의식차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새로운 세대에 대한 우려는 곧 이들이 산업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교육체제가 완비된 이후에 태어나 완벽한 사상교양체제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라는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아 새세대는 탈이념적이고, 개별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최근 들어 새세대에 언급이 부쩍 늘어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세대에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단순히 역사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외부문물에 취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외부문화의 유입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50) 세대 개념은 다음의 네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로 구분하는 것처럼 가계 계승의 원리(kinship descent)로서 세대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로써 사회인류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다. ②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을 함께 이동하는 동시출생집단(cohort)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③ ‘청소년 세대’나 ‘대학생 세대’라고 부를 때처럼 생애주기(life cycle)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이다. ④ ‘전후 세대’나 ‘4·19 세대’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경우로써 역사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다. David I. Kertzer,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983). 이 가운데 북한의 경우는 동시출생집단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한에서도 비슷하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서울: 나남, 1990) 참고.

4. 결 론

북한의 가족구조는 북한의 가족정책이나 최고지도자의 가족관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나 가족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도 가족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단순히 제도만이 아니라 문화를 포함하여 사회전반의 개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별성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에 비하여 가족이 이념이나 지도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전쟁을 통하여 기존 사회제도가 대부분 파괴되었고, 가족구성원의 손실도 컸던 까닭에 비교적 체제이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가족의 특성이 변화하기가 용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전쟁을 경험하면서 비교적 사회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가족구조를 개편하였다고는 하나, 북한의 가족구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적 원칙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체제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강력한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질서라는 전통의 가치를 심분 활용하였다. 더욱이 혈연에 기초한 권력승계를 이룩한 북한에서는 혈연중심의 가족주의가치를 실질적으로 배척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대내외적인 체제위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게 하였고, 이 역시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재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가족관이나 세대관도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적 가치와 유리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성적 차별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족 내 성적 분업구조도 일정한 수준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김일성보다도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김일성이 사회주의 건설기의 지도자로서 과거의 전통적 가족구조를 타파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으며, 김일성이 지배 하였던 시기는 전후 복구기로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려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절실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관이나 가족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김정일의 가족관은 현재의 북한의 사회적 상황과 더하여 다소 보수적인 가족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세대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젊은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일반적인 우려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체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하게 젊은 세대를 포용하는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새세대를 대상으로 강력한 통합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새세대의 특성이 단순히 정책의 소산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결과, 역사적 경험의 결과라고 본다면 통합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XIV. 과학기술관

서재진(선임연구위원)

1. 서론

북한은 최근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진”과 정보기술산업의 발달을 강조하면서 경제난을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정보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단번도약’을 하겠다는 의지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회생의 돌파구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 경제의 발전과 체제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과학기술의 강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이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한 “현존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진”은 1961년 제4차 당대회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에서 행한 김일성의 발언이기도 하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진은 모든 과학부문들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생산력발전에서 과학의 역할은 커가고 있으며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여야만 높은 로동 생산능률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고, 1970년 11월의 제5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의 경제발전 정책의 핵심어도 역시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진”이었다. 40년 전의 정책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경제성장의 방식을 외연적 방식에서 내포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안된다. 지금까지

지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 진전되지 못하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긴요한 과학기술에 대하여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제기된다.

김정일의 과학기술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몇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김정일의 과학기술관은 북한의 정책노선과 정확히 일치하며, 둘째, 김일성의 발언 내용과 김정일의 발언내용에 차이가 전혀 없다. 김일성이 내놓은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많다. 가령,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¹⁾와 같은 발언이 많은 점이다. 제2인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시대상황과 맞지 않은 내용이 자주 있다. 가령, 1973년의 담화문에서 “현시대는 자동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산을 자동화, 원격조종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²⁾와 같은 구절이 있다. 이것은 김정일의 연설문이 김정일 측근의 이데올로기들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의 전개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김정일이 과학기술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 김정일,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1일), 『김정일선집 2권』, p. 322.

2) 김정일, “생산을 자동화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1월 28일), 『김정일선집 3권』, p. 2.

2.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사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경제발전 노선 및 경제계획의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정권 초기에는 소련의 지원으로 일체의 잔존 공업 시설 정비와 가동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1개년계획(1947~1948)과 2개년계획(1949~1950) 기간동안 소련과 체결한 경제문화협정(1949)을 토대로 과학기술자 파견과 산업시설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하는데 초점이 주어졌다. 1차5개년계획(1957~1960) 기간까지는 근대기술 장비가 소련으로부터 대거 구입되던 시기이다.

50년대 말 이후에는 소련과의 갈등 및 중소관계의 갈등 등의 상황 때문에 자립적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게 되었다. 결국 제1차7개년계획(1961~1970) 기간은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직면하였으며 기계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집중육성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이다. 중공업의 집중육성을 위하여 자본과 기술이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1960년대에 북한은 역사상 가장 고립적인 시기이기도 하였다. 중공업은 기본적인 투자비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회임기간도 장기적이고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산업이지만 북한은 공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 앞에는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를 실시하고 일부 부분들에서는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를 실시하며 나라의 전기화를 다그치는 것을 비롯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창안하며 능률이 높은 자동기계들과 자동화기구들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자동화방법들을 연구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³⁾

북한에서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까지는 기술혁명은 기계제작공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계제작은 손노동과 등짐에서 벗어나 기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기술의 개념을 “인민들을 고되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게 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이라고 보았다.⁴⁾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여 높은 이윤을 얻어내는 데만 몰두하였으며 현대적 기계는 좀체로 도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제조소, 광산 할 것 없이 어디가나 조선사람들은 손노동과 등짐으로 일하였습니다. ---기계를 들여대야만 기술에서 일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농촌경리에서도 그렇고 경공업과 수산업에서도 그렇고 건설에서도 그렇고 어느 부문에서나 다 그렇습니다. 공업화와 기술혁명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현대적 기계설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⁵⁾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이 기술혁명의 기초임을 알 수 있다. 기술발전을 위하여 북한은 기술교육을 강조하였고 7개년계획기간(1961~1970)에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였다.⁶⁾

70년대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중공업의 발달에 의한 경공업의 후방 연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발전 노선을 수정하지 않고 중공업 우선의 발전노선을 더욱 강화하였다. 신6개년계획

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61년 9월 11일), 『김일성저작집 15권』, p. 230.

4) 김일성,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0년 8월 11일), 『김일성저작집 14권』, p. 184.

5) 위의 글, pp. 185~186.

6) 위의 글, p. 233.

(1971~1976) 기간동안 기술발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대중동원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3대혁명으로 규정하여 전 주민을 기술혁신으로 동원하고, 1973년부터 이를 지도하는 3대혁명소조를 공업 부문과 농업부문에 파견하였다. 1975년부터는 대중적 기술개조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작하였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공업화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의 새로운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 기술개조운동입니다.⁷⁾

이 기간에 기술발전의 과제를 3대기술혁명으로 제시하였다. 3대기술혁명이란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줄이기,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 줄이기, 여성의 가사노동 해방을 포함한다.

우리는 7개년계획(1961~1970) 기간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개건사업을 전면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을 많이 덜어주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가 남아있고 공업노동과 농업노동 사이에도 차이가 많으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아직 가정적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⁸⁾

7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기술발전을 위하여 안으로는 대중운동을 강조하면서 밖으로는 대외적 경제협력에 대하여 다소 유연한 방향으

7) 김정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 (도당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5권』, p. 243.

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권』, p. 273.

로 정책을 바꾸었다. 자본부족과 기술낙후 및 시설노후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북한경제가 외채상환의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국제적 신용도가 실추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동구 등에 주재하던 북한외교관들이 신분상의 특권을 이용하여 밀수를 벌이다 추방되기도 하였다.⁹⁾

경제성장의 침체가 뚜렷해지는 70년대 말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 더욱 강조되었다. 1978년 2월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각 전문분야별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동원, 과학자기술자돌격대를 조직하여 생산 및 건설 현장에 이들을 파견하고 생산현장에서 직접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주도록 독려하였다.

제2차7개년계획(1978~1984)의 기본과업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에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전반적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험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우고 과학발전에 큰 힘을 넣어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 세워야 한다.¹⁰⁾

이처럼 1970년대 말 이후로 정책적 강조점이 전환되는 시기이다. 공학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기계화에서 자동화로 전환이 강조되었고, 생산방법에서는 외연적 생산방법에서 조방적 생산방법에서 집약적

9) 통일연구원, 「남북한국력추세비교연구」(통일연구원, 1993), pp. 185~186.

10)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계획(1978~1984)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2권」, p. 548.

생산방법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노동력 투입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하여 김일성은 ‘인해전술’의 방식이라고 비판하였다.

지금 일부 공장에서는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 (아직도) ‘인해전술’을 쓰는 방법으로, 다시말하여 로력자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생산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고 로력이 남는 나라라면 몰라도 로력사정이 긴장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생산을 높이려 해서는 안됩니다.¹¹⁾

이것은 북한이 성장체계에서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외연적 생산방법이 한계에 도달하자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¹²⁾

1987년에 설정된 제3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2차7개년계획의 내용을 지속하였다.

현시기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목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전자계산기화하여야 합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계공업과 극소형전자공업, 로봇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이 부분의 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전자, 자동화 요소의 장치들을 완만히 생산보장하도록

11)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강서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3년 3월 14일), 『김일성저작집 28권』, p. 270.

12) 박형준, 김태영, “북한의 과학기술,” 김문조 편, 『북한사회론』(서울: 나남출판, 1994), pp. 133~134.

하여야 하겠습니까.¹³⁾

그러나 1980년대는 북한이 발전전략으로서 대외경제교류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한 연대이다. 그 주된 내용은 대외무역 특히 수출에 대한 강조와 자본조달 및 기술도입에 있어서 대서방 경제협력이었다. 김일성은 1980년 초 이례적으로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1984년 9월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자본의 직접투자를 위한 길을 열기도 하였다.

북한이 1987년 제3차7년계획을 과학기술혁명에 중점을 두면서 계획기간 중 기술자 전문가를 200만 명 선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목표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장애를 기술혁신에 의해 돌파해보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80년대에 중요한 변화는 1984년 김일성의 동구방문 이후 전자공업에 큰 관심이 돌려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1988년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6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발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을 발전시켜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로봇화하고 유연생산체계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다만 기계에 지령이나 주고 단추를 누르면 공장이 저절로 돌아가고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무인조정생산체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것입니다.¹⁴⁾

13)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86년 12월 30일), 『김일성저작집 40권』, p. 225.

14) 김일성,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발전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6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88년 11월 30일), 『김일성저작집 41권』, p. 293.

전자공업, 자동화 공업은 주로 김정일 주도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주도 하에 2차에 걸친 과학기술3개년계획(1차: 1988년 7월~1991년; 2차: 1991년 7월~1994년 6월)을 추진하였다. 이들 계획은 당초 기계공업, 전자, 자동화, 화학공업, 농업 등 경제주요 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으나 성과는 부진하였다.

정보산업 정책의 시동

90년대 이후의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정보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에 관련된 정책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⁵⁾ 북한에서 정보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첫 계기는 1984년 김일성의 유럽순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김일성은 각국의 정보기술 발전상을 보고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순방국가들과 각각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실습생을 유럽 각국에 파견하여 기술을 익히도록 했다. 컴퓨터 관련 인재육성을 위하여 1985년에 4년제 컴퓨터 인력 양성 전문기관인 조선계산기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이어 1986년에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기관인 평양정보센터를, 그리고 1990년에는 조선컴퓨터센터를 설립하였다. 1995년에 기초과학 부문의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는 이과대학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평양시 은정구역을 과학자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대동강 벨리를 형성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 산업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¹⁶⁾ 이런 일련의 적극적인 노력 덕

15)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은 최신림, 「북한의 산업기술: 정보통신산업」(산업연구원, 1999.) 참조.

16) 박찬모, “북한의 정보기술과 남북협력,” 『통일시론』, 1999년 봄호, p. 124.

분에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90년대 후반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정보과학 및 정보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 시작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제1차 과학기술개발 3개년 계획(1988~91)은 15개 종합과제와 44개 대상과제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초대규모 집적회로, 대출력 고내압 반도체 생산의 공업화와 경제 주요부문의 전산화의 일환으로 조선컴퓨터센터를 중심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며 소프트웨어산업과 아울러 하드웨어와 자동화 요소 등의 생산에 비중을 두었다.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94)은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의 전산자동화와 초대규모 집적회로 생산의 공업화를 당면 목표로 했으며, 16메가 초대규모 집적회로 개발과 함께 32비트 초소형 컴퓨터의 공업화와 64비트 초소형 컴퓨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¹⁷⁾

그러나 심화된 경제난으로 이런 목표들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와 그 뒤를 이은 바세나르협정의 규제에 의해 첨단 컴퓨터 장비의 도입 곤란으로 하드웨어 부문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단계로서, 최근 들어 북한이 다시 컴퓨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김정일 정권이 다소 정치적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1998년부터이다. 1998년 2월 8일 김정일이 「전국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시찰할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시킬 것을 지시한 것이 북한 컴퓨터 기술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¹⁸⁾ 이를 계기로 컴퓨터 대학, 컴퓨터 학부, 컴퓨터 학

17) 박찬모, 위의 글, p. 124.

18) 조선컴퓨터센터 최응철 기사장의 발언, 일본의 라디오 프레스, “북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北朝鮮政策動向』, 제14호 No. 310, 2000년 12월 31일; 『KDI 북한경제리뷰』, 2001.1 p. 65에서 재인용.

과, 전공반, 프로그램 센터가 설치되었고 컴퓨터 기술자의 양성, 프로그램 개발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고 한다.

1998년부터 각급 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작한 이후 1999년말 김일성종합대학에 처음으로 컴퓨터과학대학을 설치하였으며, 김책공업대학, 평양전자계산기대학 등 주요 대학에도 프로그램 학과를 설치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정보통신 부문을 전담할 주무부서로서 전자공업성이 설치되었다.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경제발전 전략이 형성된 데는 1998년 8월의 광명성 1호 시험발사가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명성 1호는 8만여 개의 부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조립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뒤이어 있었던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 27조에서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 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 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리자”고 강조하였다.

해마다 신년사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한 문장 정도의 언급이 있었지만 1999년부터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과학기술은 추상적인 차원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을 의미한다. 1999년 신년 공동사설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조국의 부흥 발전이 과학자·기술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과학자·기술자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쏘아 올린 그 본때로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 온 나라에 과학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도처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게 해야 한다.¹⁹⁾

과학기술에 대한 중시는 김정일이 1999년 1월 11일 신년 첫 현지 지도로서 과학원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현지지도 를 계기로 1999년 1월 16일 『로동신문』은 “과학중시 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여 과학 중시 정책을 ‘사상’ 수준으로 격상하였다. 이 논설에서 북한은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을 달려 과학기술 발전에서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부흥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도가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한 바 있다.

200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사상, 총대,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공동사설은 높은 혁명성에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주의의 성공담을 쌓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과학중시 사상을 계기로 과학기술 테크노크라트에 대한 우대정책이 제시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2000년 5월에 김정일 위원장은 18년만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실리콘 밸리인 베이징 소재 中關村을 방문한 이후 정책방향은 점차 구체성을 띄어간 것으로 보인다. 바로 한달 뒤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여 남한과의 관계를 일신하였고, 바로 또 한달 뒤인 7월 4일에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을 내놓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과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은 바로 정보기술산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대외적 정지작업의 일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신년사에서나 공동사설 형식으로 국가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상례인데 북한이 『과학중시 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는 공동사설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이 혁명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

장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의식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혁명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 높은 혁명성 더하기 과학기술, 이것이 사회주의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라고 주장했다.

2000년 8월 1일에는 조선로동당 창건 55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쏘 올린 그 기세로 과학기술 발전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창조해 나가자! 전자자동화 공업과 컴퓨터 공업 발전에 힘을 넣어 21세기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자!”라고 외쳤다.²⁰⁾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타겟은 정보산업이다. 정보기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여 경제를 단번에 희생하고, 나아가 강성대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소위 ‘단번도약’ 전략이다. 중국처럼 점진적으로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러시아와 같은 나라처럼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강성대국에 합류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새로운 사고임에는 틀림없다. 얼마만큼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3. 김정일 과학기술관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노동계급 영도체제의 이념과 관련된 인식

북한의 경제발전관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력주의 또는 성장주의이며, 과학기술의 핵심적 기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 『로동신문』, 2000년 8월 1일.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정일 선집』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인 윤색을 많이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대중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힘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명분을 활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습니다.²¹⁾

특히 생산자동화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생산을 자동화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공정을 개조하기 위한 기술경제적 과업이 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낡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여 근로자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한 우리 당 앞에는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채취공업과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일부 공업부문들에서 근로자들이 중노동과 고열노동, 유해로동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가슴아파하고 계십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얼마 전에도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광복하고 인민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실현하였지만 그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아직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에 반드시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간곡

21) 김정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10월 28일), 『김정일선집 12권』, p. 21.

하게 교시하시었습니다. 나는 수령님의 교시대로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끝까지 완성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²²⁾

기술혁신의 효과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

김정일은 정보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심한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가미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착취하게 되지만 사회주의는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자본가들이 하는 자동화는 사람중심이 아니라 돈중심의 자동화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자본가들은 새로 건설하는 공장은 자동화하지만 낡은 공장은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아무리 심해도 자동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낡은 공장을 자동화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이 고열 앞에서 쓰러지고 숨막히는 먼지와 유해가스 속에서 고통을 당하여도 그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돈주머니를 더 불리겠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새로 건설하는 공장을 현대화, 자동화하는 것도 리윤을 더 짜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로동자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동화는 오히려 로동자들에게 빈궁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불행의 화근입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현대화, 자동화에 의하여 수많은 로동자들이 기형화되고 창조성이 없는 기계적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일자리에서 밀려나 실업자로 되고있습니다.²³⁾

22) 김정일, “생산을 자동화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73년 1월 28일), 『김정일 선집 3권』, p. 1.

23) 위의 글, p. 7.

이러한 인식은 30년 후인 최근에도 되풀이해서 나타나고 있다.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의 개발, 설계, 프로그램 작성, 체계분석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적 노동분야들이 새로 출현할 뿐 아니라 기존산업 부문들에서도 생산과정들에 정보의 수집, 보관, 분석, 처리 등을 하는 다양한 직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의 착취 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계획, 설계, 관리, 판매 등 모든 기업활동과정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고 노동자들의 작업 과정을 컴퓨터를 통하여 하나하나 세밀히 장악하고 노동시간을 분초에 이르기까지 계산함으로써 노동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다. 정보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착취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의 발전은 실업과 빈부의 차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불치의 병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²⁴⁾

‘3대기술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북한이 1970년부터 기술혁신을 대중운동의 방식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채택한 3대기술혁명도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이 매우 강하다. 기술혁신은 생산성 향상과 작업조건의 개선이라는 기능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고 계급이론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술혁신은 중노동자, 농업노동자, 여성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기계혁명을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공작기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공작기계가 많아야

24) “정보산업의 발전과 현대자본주의 모순의 첨예화”, 『로동신문』 2001년 6월 5일.

공업부문의 생산공정을 기계화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단능설비공장을 곳곳에 꾸려놓고 경공업을 발전시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²⁵⁾

4.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

전자공학의 중요성 인식

김정일은 20세기는 기계제산업 시대인데 반하여 21세기를 정보산업의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보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0세기는 기계제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로 될 것입니다. 기계제 산업의 시대에는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데서 주로 육체로동에 의거하였다면 정보산업의 시대에는 더욱더 지능로동에 의거하게 될 것입니다.²⁶⁾

최근 북한이 정보산업 발달을 통하여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뿌리가 90년대 초반부터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있다. 김정일은 1991년에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1991~1993)을 수립하고 그 중심과업은 중요 과학기술 부문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최신과학기술에 의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5) 김정일,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1일), 『김정일선집 2권』, p. 320.

26) 김정일, 과학의 세기, 『로동신문』 2001년 4월 20일.

무엇보다도 전자공학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전자공학은 현대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과학분야입니다. 전자공학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고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전반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울 수 없습니다. 전자공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기초하여 전자공학과 전자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전자계산화, 로봇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새로 개발한 극소형 전자계산기에 쓰이는 전자요소와 전자재료들의 특성을 개선하고 자급률을 높이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전자계산기의 리용분야를 넓혀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집적회로와 특수반도체소자 생산을 늘이고 고급전자일용품생산과 빛섬유통신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²⁷⁾

정보산업을 통한 단번도약의 개념 제시

김정일은 전자공업과 정보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경제발전의 내포적 성장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단번도약’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단번도약이란 추격발전의 개념에 가까운 개념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이 류레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빨리 발전하려면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달려 과학기술발전에서 하루빨리 세계선진수준에 올라서야 합니다.²⁸⁾

27) 김정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p. 199.

28) 위의 글. p. 199.

5. 기술발전이 지체된 원인에 대한 인식

북한의 기술 수준에 대한 인식

김정일은 북한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 정권의 초기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의 1992년 담화에서 “이전부터 우리가 생산하여오는 공작기계 같은 것은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다른 나라에서 사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할 공작기계를 많이 생산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²⁹⁾라고 지적한 대목에서 북한 기술의 낙후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일은 그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 발전의 저해요인: 과학자를 무시하는 직업관

북한이 정책적으로는 과학기술발전을 통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외연적 발전정책을 추구해왔지만 실제 기업수준에서는 생산요소 특히 노동력의 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생산량의 증대를 추구하는 외연적 성장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은 이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29) 김정일,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경제관리연구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4.15에 즈음하여 생산한 경공업제품을 보고 경제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4월 4일), 『김정일선집 13권』, p. 24.

일부 일꾼들은 생산장성의 예비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낡은 설비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거나 갱신하는데서 찾으려 하지 않고 낡은 설비를 그러안고 로력을 늘이는데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꾼들은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설비를 갱신하지 않고 오래동안 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몇십 년 전에 나온 빠스나 자동차를 갱신하지 않고 계속 쓰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평가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일로 볼 수 없습니다.³⁰⁾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김정일은 과학기술자를 마치 잉여노동력 처럼 사용하고 그들을 홀시하는 데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꾼들 속에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현상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일꾼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마치 여유 로력 처럼 생각하면서 연구사업에서 망탕 떼내어 다른 일에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은 정력적인 탐구와 끊임없는 사색을 요구하는 창조적인 사업입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성과는 하루이틀사이에 쉽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이룩될 수 있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을 짬짬이 부업을 하는 식으로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일꾼들이 당면한 문제만 보고 전망적인 문제는 볼 줄 모르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업하여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³¹⁾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서도 김정일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학자 기술자가 되기보다는 당과 같은 권력기관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직업관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 북한 주민들의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0)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246.

31) 위의 글, p. 247.

일군들이 과학기술을 홀시하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바로 서있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아들딸을 과학자, 기술자로 키우기 위하여 애쓰는 부모도 얼마 되지 않으며 어려서부터 과학자, 기술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많지 못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딸을 상급학교에 보내도 자연과학을 전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졸업한 다음에는 과학연구기관이나 공장, 기업소에 가서 일하는 것 보다 당기관이나 국가행정기관에 가서 일할 것을 바라고있습니다.³²⁾

과학기술에 대한 낡은 사상 비판

김정일은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투쟁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에서 북한식의 인식구조를 볼 수 있다.

일군들 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우자면 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을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군들 속에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현상과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³³⁾

32) 위의 글. p. 247.

33) 위의 글, p. 248.

6. 기술혁신의 방식에 대한 인식: 대중동원 방식 선호

시장이 없는 북한에서는 경쟁에 의존하여 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수 없다. 결국 대중운동을 앞세우는 방식 또는 정치사상적 사업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75년부터 위로부터의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캠페인으로서 기업내에서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생산에 접목될 수 있는 기업내 노동과정의 변화는 전혀 없다. 결국, 새로운 기술혁신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정치선전일 뿐이다. 3대혁명이 그 대중동원 방식의 기술혁신 운동이다.

우리가 하는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기술혁명은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고 손로동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문화혁명은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간단히 말하여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녹을 벗기는 투쟁이며 기술혁명은 기계들에 있는 녹을 벗기는 투쟁이며 문화혁명은 사람들의 생활과 살림집, 공장과 마을에 있는 때를 벗기는 투쟁입니다.³⁴⁾

7.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자에 대한 우대정책

김정일은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에 대하여 물질적 우대를 포함한 폭넓은 우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매우 진전된

34)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강서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3년 3월 14일), 『김일성저작집 28권』, p. 276.

사고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은 노동계급 영도론의 시각에서 과학자 기술자 등의 지식인들을 기생적 계층으로 보고 그들은 혁명성이 취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체제 내에 포섭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정책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여주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살림집도 제때에 해결하여주며 문화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고 우대하여 주는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치있는 발명을 하였거나 과학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평가를 잘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평가해주는데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공로에 따라 여러가지 명예칭호와 훈장도 수여하고 사회적으로 내세워주어야 합니다. 가치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연구하였거나 새로운 발명을 한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하여서는 신문과 방송, 잡지를 통하여 널리 소개 선전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도 창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³⁵⁾

김정일의 이러한 인식은 200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나타났다. 2000년 신년공동사설은 높은 혁명성에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주의의 성공담을 쌓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과학중시 사상을 계기로 과학기술 테크노크라트에 대한 우대정책이 제시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35)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256.

과학기술 수입에 대한 입장

김정일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자력갱생과 사대주의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 과학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국의 선진과학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자력갱생, 주체, 사대주의 등의 개념에 매우 융통성 있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면 그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일군들은 다른 나라의 새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요구에 어긋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선진과학기술을 들여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군들은 다른 나라에 갔다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는 말만 하여도 주체가 서지 않았다는니, 사대주의 사상이 있다는니 뭐니 하면서 시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공장이나 기계설비를 보고 와서도 그것을 들여올 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요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주체를 세우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면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됩니다.³⁶⁾

36) 위의 글, pp. 249~250.

과학기술 교류에 대한 입장

과학기술을 발전하기 위하여 인적인 교류까지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면 발전된 나라들과 과학기술교류를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나라들 사이에 서로 교류하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된 나라들과 과학기술교류를 활발히 벌려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최신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강의도 해주고 강습도 주게 하며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상품 및 기술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조직하여야 합니다.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자면 과학기술정보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사업을 잘하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³⁷⁾

합영법 추진의 과학기술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김정일은 선진과학기술을 수입하는 길은 단순히 과학기술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1984년의 합영법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빨리 받아들이자면 현대적인 공장을 들여와야 합니다. 현대적인 공장을 자체로 최신과학기술을 연구하여 건설하자면 연구단계와 시험단계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면 인차 건설하고 그것을 돌리는 과정에 최신과학기술을 습득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현대적인 공장을 들여다 돌리는 방법으로

37) 위의 글, p. 251.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승용차와 텔레비전 수상기, 녹화기 같은 것을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조립공장을 들여다 차려놓고 부분품을 가져다 조립하다가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는 점차 부분품도 다 자체로 생산하여 조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현대적인 집적회로공장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차려놓고 부분품과 자재를 처음에는 사다 쓰다가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는 점차 그것을 다 자체로 생산하여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전자공업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현대적인 공장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전문일꾼들이 모여 경제적 타산과 과학기술적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들여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현대적인 공장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날 다른 나라에서 많은 공장설비를 사왔지만 가격문제를 비롯하여 일부 경제적 측면만 타산하고 과학기술적 문제는 심중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떨어진 공장설비를 사온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현대적인 공장을 일식으로 들여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공장을 본보기로 하여 다른 공장들도 현대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³⁸⁾

기술과 생산의 접목 방식에 대한 인식: 대안의 사업체제

과학기술과 생산이 접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대안의 사업체제’에 고찰하고 있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는 ‘대안의 사업체제’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데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자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명에서 기업조직은 보다 유연해지고 기술적으로도 수직적 분업보다는 수평적 분업이 강조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고 볼 때 북한이 새로운 기술혁명을 기존 조직형태로 추진하려는 것이 과연 생산효율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

38) 위의 글, p. 251.

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적 통제가 체제유지상 불가피한 북한으로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가장 적합한 기업수준에서의 통제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북한이 새로운 질을 갖는 기술혁신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조직형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순조로운 기술혁신의 추진이라는 면에서 북한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³⁹⁾

현대적 생산의 끊임없는 급속한 발전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생산에 제때에 널리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이룩되며 생산지도는 과학기술적 지도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됩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고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일 수 있게 과학기술과 생산발전계획을 유기적으로 맞물리고 적극 추진시켜 나가게 합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소에서 기술을 잘 아는 기사장이 참모장으로 되어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종합적으로 지도하므로 과학기술과 생산을 옹계 결합시킬 수 있게 합니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과학기술과 생산을 결합시키고 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위에 올려세워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는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의 하나가 있습니다.……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새 기술의 창조자, 혁신자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⁴⁰⁾

8.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은 정권초기부터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 노선의 특성상 기술발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술발전을 강조해 왔으며, 김정일도 그에 상응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39) 박형준, 김태영, 앞의 글, p. 154.

40) 김정일, “창립 45돐을 맞는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7월 1일), 『김정일 선집 11권』, p. 358.

매우 크다. 김정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그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매우 전향적이다. 그러나 인식에 있어서의 적극성에 부응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매우 낙후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혁명을 가로막는 북한 사회경제 체제내의 구조적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자력갱생식의 기술개발 전략, 개발된 과학기술이 생산에 접목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 기업 내부에서 생산의 질 보다는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경제관리 방식 등의 구조적 문제가 산적하다.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는 북한이 과학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소련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권도 모두 기술 지체에 빠져 있었으며 기술혁신을 위하여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6년에 있었던 소련공산당 제27차 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시대에 대한 주된 비판을 “경제를 내포적 발전방식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경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심각하고도 긴밀한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 돌리고⁴¹⁾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과학기술의 진보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예를 볼 때, 덩소평이 개혁개방의 시발과 더불어 취했던 조치 중의 하나는 젊은 학생들을 대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유학을 보내어 선진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였던 것이다. 과거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의 엘리트정책에 비해본다면 혁명적인 조치이다.

41) Mikhail Gorbachev, “Political Report of the CPSU Central Committee to the 27th Congress of the CPSU,” *New Times*, Moscow, March 10, 1986.

IT산업을 통하여 단번도약을 하겠다는 김정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IT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북한의 정책은 너무 소극적이다. 아직도 자력갱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의 사업체계를 고수하고 있으며, 목표량 달성 위주의 경제관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60년 부터의 구호인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건’을 2001년의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XV. 역사관

조 한 범(선임연구위원)

1. 서 론

김정일의 역사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북한사회의 중심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며, 따라서 김정일의 역사관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주체사관과 다르지 않다.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의 공식적인 이념의 중심원리이자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북한은 일당독재형태의 정치체제와 수령을 정치적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다. 북한사회에 있어서 주체사상은 정치적 이념이자 주민들을 교육하고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도덕적인 규범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의 문제는 북한적 이데올로기 현상인 주체사상에 의해서 지배된 주체사관으로 귀착되고 모든 역사적 사실들도 이에 준거하여 해석되었다.

경제적 동기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자본주의와 달리 북한사회주의의 건설과정에서 정치와 사상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사해석과 대중적인 교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자신들의 체제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역사 속에서 혁명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혁명이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해석은 학문적 역사연구의 차원을 넘어서 북한사회구성의 중요한 원리로서 해석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을 교양하고 체제에 통합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역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과 사회과학자들의 임무는 사회주의사상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¹⁾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의 역사관은 남한과 상당한 이질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일성가계의 이상화같은 역사적 왜곡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대구분과 같은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남한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역사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단군릉의 발굴과 건설 같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조차도 구체적인 검증과 평가절차 없이 체제정당화와 공고화라는 목적과 연계되어 해석되고 있다.

김정일의 역사관도 이와 같은 북한체제의 전반적인 역사해석의 특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김정일의 역사관은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관인 주체사관, 즉 '사회력사원리'이다. 김정일에 있어 주체사상에 의거하는 역사관인 사회력사원리는 새로운 사회력사관이고 이는 주체사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일에 있어 주체사상과 북한의 역사관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역사해석을 종속시키는 북한과 김정일의 역사관은 역사적인 사안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역사적 인식에 있어 남한과 심각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2. 주체사상과 역사관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성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체사상에 준거하여 모든 것이 해석되고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정치사상이며 사회와 문화의 형식이자 일상생활의 지침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사회를 철저히 통제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이며 국가기구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양성이 배제되는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의식의

1)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 33.

획일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²⁾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근본원리인 것이다.”³⁾ 따라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인식한다.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력사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세계관발전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립되었다면 주체사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 새로운 더 높은 단계으로 발전 완성되었습니다.⁴⁾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유일한 사상적 기준으로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현실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철학적 원리이자 사회력사적 운동을 인식하는 역사관으로서 그리고 세계개조를 위한 활동적인 원칙까지를 포괄하는 체계로서 전일적인 구성”⁵⁾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한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역사관도 주체사상을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주체사상의 형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국제적 요인(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원체제에서 다중심적 체제로의 전환, 스탈린의 사망으로 인한 대북 통제력의 약화, 중소분쟁의 심화)과 국내적 요인(김일성체제의 정통성확보를 위한 권력투쟁, 대중동원을 통한 자립적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체사상이 형성되었다고 파악한다.⁶⁾ 주체사상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흐름을 가지고

2) 전경옥, “북한의 주체사상과 정치사회화”, 김옥렬 편, 『북한의 이해』(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p 206~297.

3) 『김일성저작선집 7권』, p. 260.

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117.

5)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주체사상이 자율성을 지니며 발전했다는 사상 결정론 혹은 관념론적 해석이고 그 반대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주체사상의 형성에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경제환원론적 해석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극단화는 주체사상의 형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분석하는 모델로서 주체사상을 사회경제적 조건과 계급관계 등의 사회구성과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진 당 지도부의 이데올로기구성 노력간의 상호과정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국제적 요인을 추가하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주체사상을 설명한다.

첫째, 북한은 형성초기에 자본과 기술, 생산력의 수준이 낮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가능했던 자원이 인적요소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절실한 요구였다. 따라서 주민들을 사회주의건설에 동원하는 명분이 필요했고 이와 같은 조건은 주체사상이 민중자발성을 강조하는 동원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기본요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주체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지만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북한지도부의 이데올로기적 정향, 구성 등이 주체사상형성에 기여한 역할 등이 주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즉, 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 소련이나 중국의 혁명세력에 비해서 뚜렷한 경력을 가지지 못했던 김일성세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인해 낼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당성획득과정으로 이데올로기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의 사망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체제 등의 상

6) 최완규, “사회주의건설과 주체사상”,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p. 172.

황변화 속에서 개인숭배를 지속하고 탈 스탈린주의를 거부했던 북한으로서 주체사상은 이와 같은 국제적 요인에 대한 적응방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주체사상의 형성이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북한 지도부의 이데올로기구성의 시도, 그리고 당시의 국제적 요인간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라는 보다 분석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⁷⁾

사회주의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점은 이념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동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체제 형성 초기에 소련이나 중국처럼 자체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체제를 도입했던 국가들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이식되었던 국가들에 있어서도 엘리트들에 의해서 제시된 이념은 대중동원에 효과적이었으며, 체제건설에 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사회주의이념이 기존의 농민과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선동적인 명제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엘리트가 제시하는 이념체계는 이상적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실천강령들을 담은 실천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

북한체제에서 이데올로기의 동원적 성격의 이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회주의체제형성 초기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다. 북한처럼 장기간의 식민통치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민족자본의 축적과 생산력의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할 수 있는 물질 자원도 매우 적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현실적으로 인적 자원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사

7)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서울: 풀빛, 1991), pp. 332~334.

8)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4~5.

회주의체제건설과정에서 인민대중의 자발성을 절실하게 요구되는 요건이었다. 주체사상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주체적인 요소로 인민대중과 민족주의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규범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⁹⁾

북한이 가지는 역사적 특수성이외에 사회주의체제라는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체사상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내적인 동기화에 의해서 노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사적소유가 금지되고 거의 모든 것이 국유화되어 있었으며, 경제의 기본적인 기제가 계획체제였기 때문에 노동은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기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극이 필요했다. 사회주의사회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공동체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상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는 노동을 유인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정치·사상사업은 지속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과제였으며, 이데올로기는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었다.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경제체제 자체의 특성에 의한 것이었다. 북한의 주체사상도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정치사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당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은 우리의 혁명사업에서 두개의 측면인 동시에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이며 그 긴밀한 결합은 우리 당 령도 방법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본사업방법입니다.¹⁰⁾

9) 최완규, “사회주의건설과 주체사상”,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pp. 172~17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사회의 건설과정에서 정치와 사상이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고, 역사에 대한 해석과 교양은 실천적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광범하게 수행했다. 특히 자신들의 체제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역사 속에서 혁명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혁명이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주체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북한지도부가 이데올로기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소련이나 중국과 달리 혁명과정에서 북한의 혁명세력의 독자적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혁명투쟁과정에서 뚜렷한 정통성을 확보한 다른 사회주의지도자들과 달리 북한의 지도부는 처음부터 권력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소련과 중국의 영향과 이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북한내의 다양한 세력 등은 권력투쟁과정에서 김일성세력이 극복해야 할 난제였다. 따라서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이데올로기구성을 모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을 강조했고 자신의 항일 빨치산 투쟁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 그리고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한 혁명을 강조함으로써 피식민지 경험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 민족주의 감정을 일으켰고, 이를 자신의 항일투쟁과정과 연결시켰다. 민족주의와 항일투쟁을 접목시킴으로써 민족주의의 중심으로 자신을 이동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의 정통성과 반대세력제거명분의 확보를 의미했다.¹¹⁾

이 과정에서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의 연구나 학문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은 북한사회구성의

10) 김일성, “조선 로동당 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총결보고”, 『김일성 선집』(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3), pp. 545~546.

11) 최완규, “사회주의건설과 주체사상”,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pp. 174~175.

중요한 원리로서 해석되었다. 그것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사에 대한 강조에 중심축을 두고 역사관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확보하려 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관은 사회구성원들을 교양하고 체제에 통합하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과 사회과학자들에게 사회주의사상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공식적인 임무였다.¹²⁾

북한사회의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사회적 변화와 조건은 역사 연구의 내재적인 논리를 제약하는 거부할 수 없는 제한요인이었다. 해방직후 북한에서 역사연구의 방법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지배와 피지배라는 계급투쟁의 원리와 노동계급성의 원리가 역사를 해석하는 중심원리로 등장했다. 이와 같은 초기의 방향성은 1950~60년대 사회주의 건설의 자주적 정책노선과 함께 주체사상이 등장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서 주체사관으로 변화한다.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이 유일지배와 세습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역사연구도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졌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관은 남한과 상당한 이질성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김일성가계의 우상화 같은 역사적 왜곡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대구분과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남한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역사에 대한 태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으며, 체제의 요구가 역사관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역사관의 형성에 있어서 일차적인 요구였고, 이는 역사적

12) 김일성, “조선 로동당 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총결보고”, 「김일성 선집」(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3), p. 33.

인 사안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석된 역사관을 북한주민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한과 심각한 역사관의 괴리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3. 김정일의 역사관: 주체사관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관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주체사관, 즉 ‘사회력사원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주체사상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상이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의 원리가 새롭게 천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주체사상에 의거하는 역사관인 사회력사원리는 새로운 사회력사관이고 이것이 바로 주체사관이라는 것이다.¹³⁾ 따라서 주체사상과 북한의 역사관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북한의 ‘현대조선력사’의 서문도 자신들의 지침이 주체사상과 이에 기반한 ‘사회력사원리’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주체사상, 특히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원리를 역사적 사실들의 평가를 위한 확고한 지침으로, 기준으로 삼았다.¹⁴⁾

즉, 북한사회의 이데올로기구성의 핵심인 주체사상의 내용을 역사 해석의 범주에 적용시키는 것이 북한역사관인 것이다. 김정일의 논문

1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75.

14)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1983년 판)』(서울: 일송정, 1988), p.13.

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대한 해설도 주체사상과 사회역사원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사회력사관은 별개의 사상이 아니며 주체사상 자체가 새로운 사회력사관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주체사관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함께 주체사상의 떼어낼 수 없는 구성부분을 이룬다.¹⁵⁾

따라서 사회력사원리에 대한 분석은 김정일 역사관의 분석과 동일 시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가 이전의 ‘로동계급의 사회역사관’(유물사관)과 구별되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회역사관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역사관이란 사회역사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으로서 주체사상이전의 노동계급의 사회역사관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관계에서 보는 물질중심의 사회력사관인데 반해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역사원리, 즉 주체사관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사회역사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이들의 역할에 의하여 사회역사가 발전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과 입장이 주체사상의 사회역사관이라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의 특징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를 근본원리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하는 새로운 견해와 관점,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의 근본특징이 “사람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적 운동,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⁶⁾

15) 리상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87.

16) 리상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86.

‘사회역사원리’는 노동계급이전의 역사가관들은 관념론적이었고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에게 자본주의 멸망과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회역사 해석에 있어서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유물 변증법적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 노동계급의 사회역사가관이라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사회역사가관은 최초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원리를 확립하고 사회역사과정을 물질적 부의 발전과정으로, 사회경제구성체의 교체과정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유물사가관이 사회역사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점을 밝혀 큰 역사적 공적을 남겼다고 한다. 유물사가관에 대한 평가에서 역사창조과정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가 인류 역사를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하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가 마르크스주의적 유물사가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⁷⁾

북한의 사회역사원리는 가장 중요한 역사발전의 기제로 인민대중을 상징한다. 유물사가관의 원리들은 사회역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의 일반적 법칙을 밝혀 주었으며,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역사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 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역사원리는 새로운 근로 인민대중의 사회역사가관이고 이것이 바로 주체사관이라는 것이다.

17)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7.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¹⁸⁾

따라서 ‘사회력사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본명제를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사회력사원리’는 네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첫째로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다”라는 주장이다. 이 표현은 역사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자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운동도 물질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 운동에는 주체가 있으며,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서 생성 발전한다는 것이다. “사회력사원리”에 따르면 이 사회적 운동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다. 반면에 착취적 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역사를 개척하고 발전시키지만 착취계급은 역사의 전진을 멈춰 세우고 되돌려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노동계급의 영도에 의해서 가능하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혁명과 사회주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하여 수령의 역할론을 정당화하고 있다.¹⁹⁾

둘째로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라는 주장은 인류사회의 역사를 사람들이 사회적 예측과 자연의 구속에

1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71.

1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75~78.

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열된 이후에는 인민대중의 역사는 착취계급으로부터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역사이고 이를 통해서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고 사회가 발전하여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노예폭동과 중세농민반란 등은 모두 인민대중의 자주성확대를 위한 투쟁으로 인식되고 자본주의제도의 철폐와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철폐이고 이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는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주성확보의 노력도 국제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세 번째 언급은 “사회력사적 운동은 창조적 운동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역사를 인민대중에 의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적 활동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은 투쟁을 동반하며, 이는 곧 낡은 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꾸고 인민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여 나가는 계급투쟁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류최고의 이상사회는 공산주의사회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산주의운동은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운동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²¹⁾

마지막으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이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의식성의 발현이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2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78~83.

2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83~85.

사람들의 역할이란 결국 그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즉 사상의식이 혁명과 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급적 성격과 역할을 규제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혁명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 운동은 높은 의식성을 요구하며, 공산주의사회도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창조행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정치 사상적으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것이 혁명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²⁾

그러나 북한의 역사관은 그 자신들이 창조적으로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다. 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에서 파생된 2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요소들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의식의 세계 역시 변화하게 된다. 그 반대인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적 유물론의 명제가 주체사관에 와서는 전도되고 만다. 사회발전에서 인간의 의식, 사상,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북한의 주체사관은 관념론적 입장의 이상이 아니다. 역사발전이 사상, 정신적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역사발전이 어떤 특정한 뛰어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귀착되고 만다. 탁월한 개인이란 바로 ‘수령’이고, 수령에 의해서 창시된 주체사상은 역사발전을 해명한다는 것이다.²³⁾ 다시 말해서 북한의 사회력사관은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와 김일성지배체제의 정당화에 연결되어 있

2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86~89.

23) 하수도, 『김일성 사상 비판-유물론과 주체사상』(서울: 백두, 1988), pp. 120~121.

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체사관의 기원인 사적 유물론은 의미를 상실하게되고 오히려 관념론의 요소들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4. 김정일의 역사관과 체제정당화

북한의 역사관은 북한의 지배체제 특히 수령의 유일영도체제의 정당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김일성의 활동과 관련되는 현대사부분은 북한의 역사관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주체사관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부분은 북한의 현대사인식이다. 그리고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수령’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현대사의 시대구분을 수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1926년으로 하고 있다. 수령의 존재가 현대사의 시대구분의 기점으로 삼을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 개시로부터 막을 올린 우리 인민의 현대역사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된 혁명적 전환의 역사이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 싸운 보람찬 투쟁의 역사, 이 땅 위에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지상낙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장엄한 창조의 역사이다.....최근에 우리는 조선 현대사의 시점문제도 새롭게 해석하였다. 1926년 ‘타도 제국주의동맹’(트·크)의 결성을 우리 나라 현대역사의 시발점으로 규정하였다.....‘트·크’의 결성은 새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었으며 ‘트·크’가 결성됨으로써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성의 원칙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트·크’의 결성이 조선 현대역사의 시점으로 되는 기본근거이다.²⁴⁾

24)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역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스런 40년”, 이병천 편,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 논쟁』(서울: 창작과 비평사) pp. 305~306.

북한이 인식하는 현대사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김일성이 영도해온 혁명투쟁의 역사이고, 주체사상의 구현과정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역사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관인 주체사관을 떠나서는 현대사의 흐름을 똑바로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⁵⁾ 주체사관의 기본원리는 “인민대중을 사회력사의 주체”로 설정하고,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고, “사회력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고 하여 인간과 사상을 역사해석의 기본원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수령의 탁월한 영도력과 사상이 결합되어야만 성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수령론’의 정당화가 역사인식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상·의식을 역사의 중심에 놓는 북한의 역사관은 수령지배체제의 정당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도’라는 개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이들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며, 대중과 지도를 결합하는 것은 혁명운동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중대한 기본원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하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때에만 “사회력사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다그쳐 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를 밝혀준다고 주장한다.²⁶⁾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하여야 합니다. 인민 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

25)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1983년 판)』(서울: 일송정, 1988), p. 13.

26)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4.

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도 문제는 다름 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그를 옹호 운영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²⁷⁾

주체사관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역사발전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수령의 탁월한 영도력과 사상이 결합되어야만 성공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수령론’을 역사인식과 연결시키고 있다. 즉, 역사발전에 있어서 인간의 사상의식이 중요하지만 수령의 지도와 결합하지 않으면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상 대중들을 이끌고 선도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탁월한 수령 김일성’이라는 주장이 역사 속의 다른 대중적인 지도자들과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점을 ‘노동계급의 등장이후’라는 명제를 도입하여 해결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취계급사회에 인민대중은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력사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착취계급사회에서도 력사를 발전시킨 것은 인민대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의사대호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지배계급의 의사에 따라 력사를

2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77.

창조하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인민대중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선진적인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됨으로서 비로소 력사무대에 널리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력사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됩니다. 이때부터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습니다.²⁸⁾

역사의 주체가 인민이지만 이들이 실제적인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출현이후이고 이 역시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과 조직으로 결속될 때에만 혁명적인 주체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에서 주체와 지도의 문제는 노동계급출현 이후의 현존하는 ‘탁월한 수령’ 김일성으로 귀착되고 만다.

지도의 문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여 ‘수령의 지도’로 연결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육체적인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정치적 생명을 가지는가 못 가지는 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생명은 위대한 수령만을 모신 인민만이 지닐 수 있다고 하여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임을 강조한다. 수령이 사상과 투쟁의 무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을 이끌어 준다는 것이다.²⁹⁾ 북한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그리고 대중의 통일체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중은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만 자주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당과 수령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수령을 ‘생명체의 뇌수’라고 하여 실질적인 중심으

28)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320.

29)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충성의 한길에서 영원히 빛내여 나가자”, 『로동신문』, 1976. 2. 14.

로 놓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관한 다음의 언급은 이와 같은 점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 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³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인 수령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그 실현 방법을 명백히 하는 혁명사상을 창출할 것, 당·혁명조직을 건설하고, 인민대중을 단결시킬 것,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 건설사업을 지도할 것, 그리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단결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은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당 조직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리고 수령이 대중을 지도하고 통일의 상징이 된다고 하여 권력과 권위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인 것이다.³¹⁾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수령은 생명체의 활동과 기능을 제어하는 두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역사해석에서 수령의 활동했던 현대사 부분은 수령의 역사적인 역할과 의미들을 부각

30)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320~321.

31) 스톱키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서울: 동화연구소, 1991), pp. 220~221.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전사」의 18권 가운데 7권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무장투쟁사’에 할당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역사에서 김일성의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준다. 또한 「전사」에서 김일성의 교시가 등장하는 회수도 이와 같은 점을 설명해준다. 현대이전을 서술한 15권의 경우 김일성의 교시가 평균 20회 나타나지만 ‘항일무장투쟁사’의 경우는 그 인용회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3권부터 33권까지는 평균 122회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북한의 현대사가 곧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³²⁾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한 수령·당·대중관은 김일성에 대한 수령칭호와 개인숭배 그리고 유일사상화에 대한 정당화이며 이를 생명체 개념으로 논리화한 북한에 특유한 지배구조의 합리화시도였다.³³⁾ 그리고 북한의 역사관은 이와 같은 수령체제의 정당화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5. 결 론

김정일 역사관의 중심적 요소는 주체사상이며, 체제의 형성과 안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역사관은 김일성사후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현 체제의 정당성이 김일성체제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체제라는 세습체제의 특성은 기존의 역사관의 급격한 변화를 현실적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사후 북한에서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강조되는 것은 현 지배체제와 김일성과의 연관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며, 이는 과거

32) 이교덕, 「조선전사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71.

33)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56.

로 부터 주어지는 정통성확보를 추구하는 시도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체제하에서 북한의 역사관은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정치적 해빙이 이루어 지지않는한 역사학계의 교류에 의해서 역사관의 차이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것은 역사관이 체제의 정통성과 유지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의 하나는 북한역사관의 형성과 남북한간의 역사관에 있어서의 이질성의 형성요인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일 것이다. 남북한간의 역사관 차이의 해소방안은 두가지 차원에서 모색될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남북한 체제의 형성과 거리가 멀고, 이데올로기적 오염이 비교적 덜한 부분의 역사해석에서부터 공통점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공동의 연구가 필요한 고대사 등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인식의 공통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역사관의 동질화에 기여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가장 심한 부분 예를 들면 현대사 등은 매우 민감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북한체제의 요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된 부분이 현대사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인식차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이는 역사해석의 오류가 보다 확실하게 규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역사관의 동질화의 노력은 체제의 영향이 비교적 덜한 부분에서 부터 역사인식의 공통성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XVI. 언론관

이 교 덕(선임연구위원)

1. 서 론

언론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이나 시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문헌은 많지 않다. 수적으로 적지만 김정일의 언론관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김정일이 언론분야 종사자들을 만나 언론의 역할이나 언론보도의 방향에 대해 지시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문헌이고 또 하나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언론에 대해 김정일이 언급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담고 있는 문헌이다.

전자로서는 1965년 4월 25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관계자들과 한 담화인 “방송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잘하자”, 1966년 10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관계자 및 기자, 편집원들과의 담화인 “당대표자회 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 1967년 7월 30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인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68년 3월 24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한 담화라는 “방송은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다”, 1971년 6월 14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인 “중앙방송위원회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1972년 2월 26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TV방송 부문 관계자들과 한 담화인 “텔레비죤방송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일 데 대하여”, 1974년 5월 7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의 결론인 “우

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사상적 무기이다”, 1978년 4월 14일 『로동신문사』 간부들과 한 담화인 “로동신문사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1979년 11월 1일 『로동신문사』 기자들과의 담화인 “<로동신문> 기사를 당보의 특성에 맞게 잘 쓸데 대하여”, 1982년 11월 13일 역시 『로동신문사』 간부들과 한 담화인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1990년 11월 1일의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보낸 회답서한”, 1993년 11월 19일의 “조선기자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등이다.

이 가운데 1965년의 “방송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잘하자”, 1968년의 “방송은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다”¹⁾, 1990년의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보낸 회답서한”, 1993년의 “조선기자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은 『김정일 선집』에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북한이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문헌, 즉 언론보도에 대한 김정일의 지시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담은 문헌이 아니더라도 그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문헌으로서, 예컨대 1981년 3월 8일 전국 당 선전관계자회의에서의 결론 ‘당 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등이 있다. 여기에서 김정일은 모든 출판물들을 당이 요구하는 방침대로 잘 만들 것을 독려하면서 제작에서의 강령적 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에서 그는 출판보도물이 종자를 바로 잡고 당의 사상과 정책, 당의 의도를 정연한 논리로 설득력있게 해설한 좋은 글을 많이 써야 한다면서 출판보도물들을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옹계 결합하여 만들며 모든 글을 종류의 특성을 살

1) 북한 언론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문헌의 존재는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년표 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 395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의 내용을 입수하지는 못했다.

러 통속적으로 짧게 쓰도록 지시했다. 또한 기자, 편집원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히는 기본적 방법이 김일성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저작집」과 「김일성 저작선집」을 비롯한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것을 강조했다.²⁾

이러한 문헌 외에도 당의 이론잡지 「근로자」의 논설 가운데 「로동신문」 창간 20주년을 기념한 논설, “혁명의 위력한 무기, 투쟁의 참된 교과서”와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 출판물”,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출판물 전통은 우리 당 출판물이 계승한 역사적 뿌리”,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 방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근로자> 500호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은 혁명적 출판보도활동의 지도적 지침”, “혁명사상의 총서, 투쟁의 위대한 기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 로작 1,000종 발행에 즈음하여-”,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깊이 있게 진행하자 -<근로자> 창간 40돐에 즈음하여-” 등은 김정일의 언론관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하는 문헌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을 통해 언론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이나 지시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것이 당시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967년 5월 4~8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제동을 건 박금철과 리효순 등 소위 ‘갑산파’들에 대한 비판과 숙청을 단행한 회의였고 여기에서 김정일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

2)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 당선전일군회의에서 한 결론, 1981년 3월 8일),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41.

다. 이 회의 직후부터 김정일의 위상은 급부상했고 그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 확립에 주력하게 된다.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선전선동의 중요 수단인 문화예술 분야와 출판보도 분야를 직접 지도했다.³⁾ 따라서 김정일이 1967년 7월 30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인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주로 이 때의 시대적 요청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1974년 5월 7일의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사상적 무기이다”가 발표된 시기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되고 그 실현에 모든 역량이 동원되기 시작한 때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당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들을 공산주의혁명 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할 출판물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잘 만들어 낼 것을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하던 때였고⁴⁾, 그래서 김정일은 이 문헌에서 당 출판물의 성격과 사명, 그 임무를 제시하면서 출판혁명을 일으킬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2. 언론의 기능

북한에서 언론은 “사회정치활동에서 말이나 글로써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것”이며 주로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한다.⁵⁾ 따라서 북한이 언론을 정의하는 내용은 우

3) 탁진·김광일·박홍제, 「김정일 지도자 1」(동경: 동방사, 1984), pp. 143~146.

4) 강신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출판혁명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 「력사과학」, 1997년 제4호, p. 19.

5)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445.

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은 우리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언론의 역할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옹호선전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레닌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언론은 “집단적 선전자이며 선동자일 뿐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⁶⁾ 북한의 언론은 이 레닌의 가르침에 따라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는 집단적 조직체로 존재한다. 김정일은 언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신문, 통신,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은 광범한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입니다.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가 대중속에 침투되고 국내외 정세와 사회주의건설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출판보도물이 없이는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고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잘 할 수 없습니다.⁷⁾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김정일은 북한의 언론이 대중들을 교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에 충실해 조직적으로 혁명투쟁에 나서게끔 하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신문학 이론서인 『신문리론』도 북한의 언론이 선전선동자적 기능, 조직자적 기능,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6) 레닌 저, 김민호 역,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운동의 긴급한 과제-』 (서울: 거름, 1988), p. 173.

7) 김정일, “당대표사회결정 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 및 기자, 편집원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28일),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8.

선전선동자적 기능이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이론,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제기된 혁명과업 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것을 말하며⁹⁾ 조직자적 기능은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 수행을 위하여 당원들과 대중들을 한 곳으로 단합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결집해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그리고 문화교양자적 기능이란 근로자들을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높은 기술을 소유한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뜻한다.¹¹⁾ 물론 이 세 가지 기능은 사상교양을 통한 당정책의 철저한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상호 독립된 것이 아니다.¹²⁾

요컨대 북한은 언론을 철저히 대중의 ‘정치사회화를 위한 도구’로 파악하고 있는 셈인데, 이 때문에 언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이다.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사상교양을 통해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 인간

8) 『신문리론』, pp. 48~57. 북한의 배순재와 라두림이 공저한 『신문리론』은 김영주와 이범수가 공동으로 편집한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서울: 나남, 1991)에 전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신문리론』은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에 전재되어 있는 것이다. 『신문리론』과는 달리 『조선전사』에서는 언론의 기능을 사상교양자적 기능, 경제조직자적 기능, 문화교양자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9』(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pp. 372~378.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688.

10) 『신문리론』, p. 52.

11) 『신문리론』, p. 55.

12) 예컨대 선전선동자적 기능이 태도형성 및 태도변화 차원에 머문다고 한다면 조직자적 기능은 행위유발 및 행위변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기능이 머리와 가슴의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후자의 기능이 몸과 수족의 차원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김영주, “북한언론의 성격과 그 체계,” 김영주·이범수 공편,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서울: 나남, 1991), p. 29.

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일찌기 김일성은 “우리의 출판물, 라디오, 문예작품을 비롯한 모든 교양수단이 당의 사상으로 대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며 모든 사업단위들에서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것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까”고 교시한 바 있다.¹³⁾

여기서 말하는 인간개조사업이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선진과학기술지식, 높은 문화수준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것이 노리는 실질적인 목표는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 강화이다. 김정일은 출판보도물의 근본사명이 “모든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¹⁴⁾

그리고 이같은 목표의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당의 지도이다. 이 때문에 북한 언론은 당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다. 북한에서 당은 근로대중의 다른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형태의 조직으로서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고 대중을 공산주의 위업 실현에로 이끌어 나가는 정치적 영도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당은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도록 지도하는 역사적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인민대중에게 투쟁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며 투쟁과정 전반을 장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지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령도예술’이라는 개념인데, ‘령도예술’은 다음과

1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일성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95.

14)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p. 27.

같은 뜻이다.

령도예술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창발성을 내어 일하도록 적극 고무해 주며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령도예술입니다.¹⁵⁾

곧 ‘령도예술’이란 인민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으로서 당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방법, 묘술의 총체를 뜻한다.¹⁶⁾ 이 ‘령도예술’은 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시에 근거하여 구현되며 그 골간은 김일성의 사상이고 그것의 구현체는 당이다.

그런데 인민대중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선전사업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되는 것은 김일성의 소위 ‘고전적 로작’과 당 문헌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뿐 아니라 그들이 당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당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헌신적으로 투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래서 북한은 당 이론선전과 주체사상 선전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김정일은 당 이론선전사업을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의 사상리론을 깊이 체득시키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¹⁸⁾ 이 점에서 자

15)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 령도예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

16) 위와 같음.

17)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자 -<근로자>창간 40돐에 즈음하여-” 『근로자』, 1986년 제10호, p. 29;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근로자> 500호발간에 즈음하여-” 『근로자』, 1983년 제12호, p. 18.

1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출

연히 당 이론선전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매체의 일차적인 임무는 김일성과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언론의 임무와 사명이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사회를 개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중앙은 우리 출판보도물이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개조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 나가는 데 그 기본임무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밝혀주었다.---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 실천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것은 당적 출판보도물의 기본기능이다.¹⁹⁾

북한은 언론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²⁰⁾ 첫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비롯한 모든 원리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깊이있게 체득하고 그 보편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출판보도물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을 깊이있게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본질과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고 강조했다.²¹⁾ 둘째, 당 정책이란 주체사상을 기초로 수립될 뿐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이고 또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곧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당정책, 특히 당경제정책에 대

판사편, 『김정일선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15.

19) 김덕현,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근로자』, 1974년 제9호, pp. 36~37.

20)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자,” pp. 30~32.

21) 김정일, “당대표사회결정 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 p. 170.

한 이론선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해 반동적 부르조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 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노력이다.

3. 언론매체별 역할

김정일은 당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인민대중을 영도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첫 걸음은 어디까지나 원리를 “타이르고 깨우쳐 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타이르고 깨우쳐 주는 설복과 교양의 방법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연계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²²⁾

즉 인간개조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양방법은 해설과 설복이며, 해설과 설복만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의 진리를 깊이 체득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언론의 세 가지 기능 가운데 선차적인 것은 선전선동자적 기능인데, 이 기능의 수행에 있어 언론매체별 역할은 다소 상이하다.

2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 203.

1. 신문, 잡지

북한은 여러가지 언론매체 가운데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을 중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출판물이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²³⁾라고 인식한 때문이지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출판물이 광범한 대중에 신속히 침투할 수 있는 대중성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구두선전과 연예공연 등도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 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이지만…모든 사람이 다 구두선전을 들을 수 없고 연예공연을 볼 수 없는 조건에서…혁명적 출판물과 같은 사상적 무기를 가져야만…구성된 혁명정세와 혁명임무에 따르는 투쟁구호를 광범한 대중속에 기동성있게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그런데 인쇄매체의 경우 그 맑은 일차적인 역할은 선전사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전이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이론, 당의 방침을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사상교양”으로서 무엇보다도 “취급되는 내용을 원리적으로 깊이 납득시킬 것”이 요구되는데, 인쇄매체는 앞서 언급한 해설과 설복이라는 교양방법에 의한 선전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사상과 이론의 정당성 및 진리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여야 그것을 신념화할 수 있는데²⁵⁾ 순서상 제일 먼저 원리를 해설하여 납득시키는 것이 바로 이론선전사업의

2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년 4월 23일),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일성저작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96.

2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p. 267.

25) 김용학, “이론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당사상사업 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과업,” 『근로자』, 1991년 제10호, p. 33.

임무인 것이다.

당의 이론잡지인 「근로자」 창간 40주년을 기념하는 논설도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리론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커다란 성과에는 당리론선전의 일익을 맡고있는 「근로자」의 업적이 깃들어 있으며…「근로자」가 걸어온 역사적 과정은 우리 당리론선전사업이 심화발전하여 온 빛나는 로정의 중요한 일환이었다”고 찬양하고 있어²⁶⁾ 「근로자」가 당 이론선전사업의 중요한 수단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당 이론선전의 역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과 이론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집행자로 만드는 데” 있고²⁷⁾ 그 목표가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²⁸⁾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김정일은 인쇄매체, 특히 「로동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문헌에서 몇 가지 주목할만한 내용을 지시한 바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동신문」이 당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당에서는 신문의 개선과 발전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⁹⁾ 즉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

26)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자 -<근로자>창간 40돐에 즈음하여-” 「근로자」, 1986년 제10호, p. 27.

27) 위의 논설, p. 28.

2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근로자> 편집일군들에게,” 「근로자」, 1986년 제12호, p. 18.

29)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신문의 사명과 근본목적은 조선혁명에 복무하고 조선혁명의 리익을 옹호고수하는데 있습니다. 당보 <로동신문>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

서는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시되면 그것을 『로동신문사』 관계자들에게 먼저 전달하고 『로동신문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지시했다.³⁰⁾

둘째,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데 선차적으로 힘을 넣는 것은 당의 일관한 방침”이므로 모든 가정에 『로동신문』이 배포되고 그 내용이 풍부해지도록 부수와 면수를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³¹⁾

셋째, 김일성의 선전과 이상화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김일성의 현지 지도에 대한 보도의 경우 1면에 원색 사진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³²⁾

넷째, 기사 가운데 사설은 ‘당의 지시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사설을 통하여 매 시기 제기되는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 때에 알려주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방향과 과업, 당면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그 수행방도를 명백히 제시해 주며 인민대중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도록 호소하고 선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당은 당보를 통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정책을 알려주고 행동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신호를 줍니다”고 말했다. 김정일,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11월 13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85.

30) 김정일, “<로동신문> 기사를 당보의 특성에 맞게 잘 쓸데 대하여,” (로동신문사 기자들과 한 담화, 1979년 11월 1일), 『김정일선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50.

31) 김정일, “로동신문사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4월 14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65~66.

32) 위의 논문, pp. 66~67.

“당의 지시를 알리고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형식도 당보의 사설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³³⁾

다섯째, 논평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논평원의 글이 남발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므로 남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논평원의 글은 직접 당중앙위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므로 특별히 의의를 부여하는 중요한 문제에 한해서 『로동신문』에만 게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논평원의 글은 편집에서 다른 기사와 차이내고 격을 높여 주로 신문의 2면 상단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³⁴⁾

여섯째,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쓸 것을 주문했다.³⁵⁾ 그 이유는 북한 사회에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지배적이며 결함에 대한 비판자료보다 긍정자료가 대중교양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⁶⁾

일곱째, 신문편집과 기사자료의 취사선택에서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당이 언론을 꾸준히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며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이므로 기사자료에 대한 평가와 취사선택의 기준이 혁명발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닉슨이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사임하였을 때 그 보도를 작게 취급했다. 닉슨의 후임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미제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과 조선침략정책에는 달라질 것이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별로 영향을 미칠 것이 없으므로 그런 자료는 신문에 크게 취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닉슨의 사임사건이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하여 덮어

33) 김정일, “<로동신문> 기사를 당보의 특성에 맞게 잘 쓸데 대하여,” pp. 345~346.

34) 위의 논문, pp. 346~348.

35) 위의 논문, pp. 348~349.

36) 김정일,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p. 292.

놓고 크게 취급하는 것은 편집을 흥미분위적으로 하는 신문들에서나 할 일”이며 자료에 대한 평가기준을 주로 사람들의 흥미나 호기심을 얼마나 끌 수 있는가 하는 데 두고 있는 자본주의국가 신문들과는 달리 북한의 신문에서는 “제기된 문제가 혁명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데 따라 크게 취급할 것과 작게 취급할 것을 가려내어 옳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⁷⁾ 김정일의 이러한 지시는 북한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성격이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잡지의 경우 「근로자」 창간 4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축하문’은 북한의 잡지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관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³⁸⁾

첫째는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을 원리적으로 해설하는 무게있는 론설들과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을 리론적으로 전개하는 품위있는 글들을 더 많이 편집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의 정치적 량식을 끊임없이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해설선전하며 당경제정책 선전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넣음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선전을 힘있게 벌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공고히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7) 위의 논문, p. 289.

3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근로자> 편집일군들에게,” pp. 18~19.

사실 위의 임무들을 요약해 보면 첫째의 임무는 주체사상 교양을 축으로 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당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교양 등의 사상교양이며, 둘째의 임무는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소를 점령”하기 위해 “특히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의 임무는 “남조선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 방침과 자주적 조국통일 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고…미일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에 전체인민을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³⁹⁾

이러한 역할부여는 신문과 동일하며, 따라서 「로동신문」, 「근로자」와 같은 출판물에서의 기사, 논설 대부분은 바로 이것들을 기본주제로 하고 있다.

2. 방송, 통신

방송, 통신의 경우도 언론매체의 한 종류인 한, 그 전체적인 임무와 사명은 신문, 잡지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선전과 선동을 구분할 때 그 구체적인 역할은 언론매체의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선전이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이론, 당의

39) 김덕현,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pp. 37~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근로자> 편집원들에게,” 「근로자」, 1976년 제11호, pp. 2~4;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출판물 전통은 우리 당 출판물이 계승한 역사적 뿌리,” 「근로자」, 1976년 제11호, pp. 15~16;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자,” pp. 29~3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근로자> 편집일군들에게,” pp. 17~18; 김용학, “리론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당사상사업 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과업,” pp. 36~37.

방침을 리론적으로 하나하나 깨우쳐 주는 사상교양을 말하며 선동이란 군중의 기세를 돋우고 그들을 당면한 혁명과업 수행에로 직접 불러 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선전사업에서는 취급되는 내용을 원리적으로 깊이 납득시키며 교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심화시킬 것을 요구하며 선동사업은 당면한 혁명과업 수행에로 대중을 추동하는 정치사업인 것만큼 구체적인 시간과 조건, 혁명임무에 맞게 그리고 해당시기에 나서는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기동성있게, 전투적으로 진행하며 강한 호소성과 높은 전투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은 그 내용과 조직진행 방법에서 일련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은 사람들의 인식과정에 작용하는 역할로 하여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 선전은 주로 사람들의 론리적 사유를 계발시키는 방법으로, 선동은 주로 사람들에게 강한 충동과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사상의식 발전에 작용한다.”⁴⁰⁾

따라서 사람들의 논리적 사유 계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쇄매체가 선전에 더 적합하다면 방송은 상대적으로 선동에 적절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방송이 주력해야 할 사업에 관해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은 신문 등의 인쇄매체와 대동소이하다. 첫째, 김일성의 사상과 위대함에 대한 선전이다. 그는 “방송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선전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올바른 지도사상이며 공산주의 미래를 대표하는 과학적인 혁명사상입니다...중앙방송위원회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는 것을 제일차적 임무로 여기고 이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널리

4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3』, p. 688.

선전함으로써 방송의 권위를 높여야 합니다”고 지시했다.⁴¹⁾

둘째, 당정책에 대한 선전을 통해 주민들을 혁명투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중앙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을 통하여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방송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먼저 끓어야 온 나라가 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언제나 당이 의도하고 해결하려는 문제에 모를 박고 여기에 선전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방송에서는 정치선전과 밀접히 결합하여 경제선전, 경제선동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선전의 실효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고 강조했다.⁴²⁾

셋째, 혁명교양이다. “방송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방송편집사업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우리는 전진운동을 막아나서는 온갖 반동적 사상 조류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⁴³⁾

넷째, 남한 주민들에 대한 선전사업의 강화이다. 김정일은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을 교양하기 위한 방송선전사업과 함께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방송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지금 형편에서 남조선에 우리의 출판물을 보급하기는 어렵지만 방송선전 사업은 잘 할 수 있

41) 김정일, “중앙방송위원회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71년 6월 14일),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정일 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269.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내각 직속의 방송기구로 북한의 모든 방송을 총괄한다. 형식상으로는 내각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지휘를 받고 있다.

42) 김정일, “중앙방송위원회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pp. 269~270.

43) 김정일, “중앙방송위원회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p. 270.

습니다. 방송은 남조선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서 위력한 수단으로 됩니다. …평양방송에서는…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을 잘 하여야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남조선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 줄 수 있으며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화국 북반부의 발전상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도 잘하여야 합니다. 공화국 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건설 성과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총포성이 울리지 않을 때에는 전파전이 기본입니다. 우리 방송에 대한 적들의 방해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도 불을 걸어 전파전에서 적을 압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⁴⁴⁾

다섯째, 방송에서의 주체확립이다. 주체확립이란 방송편성에서 우리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황금시간대에는 정치선전물을 편성하고 보도회수도 늘일 것을 지시했다. 즉 “방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무엇보다도 방송편성을 우리 식대로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방송을 많이 듣는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땅히 정치선전물을 위주로 하여 방송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요 방송시간에 다른 나라 음악작품 같은 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음악을 중요 방송시간에 내보내도록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보도편성도 주권이 없이 교조주의적으로 남이 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에서는 다른 나라 방송에서 보도를 적게 한다고 하여 보도회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보도를 하루에 열

44) 김정일,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7년 7월 30일),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92~293. 남한의 라디오 방송이 대부분 중·소출력인데 반해 북한의 라디오 방송은 대남선전 때문에 대부분 고출력이다.

번, 스무 번이라도 하여 인민들에게 국내외 소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 방송에서 보도를 적게 한다고 하여 우리 방송에서도 그것을 본따서 보도를 적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이다.⁴⁵⁾ 요컨대 방송부문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방송을 당의 전략적 요구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잘 편성하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체적인 방송화술의 사용도 강조된다. 김정일이 강조하는 방송화술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것이다. 그는 “방송원들의 말은 쇠소리가 나와 합니다. 그런데 몇몇 방송원을 내놓고는 화술에 기백과 특색이 없으며 호소성과 전투성이 약합니다. 방송원들이 방송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화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할 때와 일반기사를 읽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덕성과 남조선문제, 국제문제를 취급한 기사를 읽을 때의 화술이 다 달라야 하겠는데 지금은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고 비판한다.⁴⁶⁾ “방송화술은 대외적으로 민족의 기상을 대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있고 혁명하는 나라의 방송화술은 그 나라 인민의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화술로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지금 방송을 들어보면 방송원들이 전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의 방송원들이 하는 화술을 본따서 맥이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순수 기교 일면만을 추구하는 무사상적인 화술기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을 단죄하는 데서 날을 세우지 못하고 점잔을 빼는 것은 기교로 될 수 없습니다.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송원들의 화술은 마땅히 방송의 성격과 사명에 맞는 가장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화술로 되어야 합니다”고 지시했다.⁴⁷⁾

김정일은 특히 TV방송을 중시한다. “텔레비죤방송은 오늘 우리 당의

45) 김정일,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288.

46) 김정일, “중앙방송위원회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pp. 267~268.

47) 김정일,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p. 289~290.

위력한 선전수단으로서 사람들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고무추동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⁴⁸⁾

TV방송에서 김정일이 강조하는 것은 방송편성에서의 사상성, 예술성, 문화성의 보장이다. 방송편성에서 사상성과 예술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TV방송이 사람들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상성이다. ‘높은 정치사상성’이 방송편성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문제”라는 것이다. “텔레비존방송에서 내보내는 모든 편집물은 어느 것이나 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우리의 텔레비존방송에서는 자본주의사회의 텔레비존방송처럼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광고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흥미본위적인 것들을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텔레비존방송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심심풀이나 하게 하는 무사상적인 것들을 내보내면 텔레비존방송이 당의 사상교양수단으로서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고 강조한다.⁴⁹⁾ 따라서 김일성의 위대함과 당정책에 대한 선전은 빠질 수 없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널리 선전하는 것은 텔레비존방송앞에 나서는 선차적 과업”이고, “보도편집물과 일반편집물, 문예편집물들의 내용과 형식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설득력있게 해설하고 선전하는 것”되어야

48) 김정일, “텔레비존방송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텔레비존방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8월 22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419.

49) 김정일, “텔레비존방송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p. 420.

한다고 역설한다.⁵⁰⁾

그러나 김정일은 TV방송이 그 특성상 예술성도 있어야 한다고 지시한다. “텔레비존방송에서 사상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예술성을 홀시하거나 방송을 딱딱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텔레비존방송은 사상교양 수단인 동시에 위력한 문화교양 수단이며 여러가지 예술적 형상 수법을 널리 리용하는 것은 다른 선전교양 수단과 구별되는 텔레비존방송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텔레비존방송이 자기 특성을 살리고 문화교양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면 편집물들의 예술적 형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화면구성과 음향의 이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텔레비존방송의 모든 편집물은 화면과 함께 음성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만큼 화면의 내용과 음성을 일치시키며 음악과 음향효과를 잘 리용하여야 합니다. 화면과 말, 음악과 음향효과들이 세련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야 화면과 음성이 배합된 생동한 선전수단으로서의 텔레비존방송의 우점과 특성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는 것이다.⁵¹⁾

같은 이유에서 김정일은 TV방송이 문예물의 비중을 높이고 방송프로그램도 다양화하며 문화성도 갖춰 북한 주민들의 흥미를 끌 것을 지시했다.

텔레비존방송에서 사상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방송내용이 당의 정책적 요구로 일관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정치선전물을 많이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존방송편성에서 문예편집물의 비중을 높여 방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여야 텔레비존방송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시청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텔레

50) 김정일, “텔레비존방송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pp. 42 1~422.

51) 김정일, “텔레비존방송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pp. 42 2~425.

비존방송에서 문화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존방송은 라디오방송과 달리 화면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나라의 발전모습과 인민들의 문화수준, 정신도덕적 풍모를 직관적으로 소개합니다.…텔레비존방송에서는 공장이나 농촌을 하나 보여주어도 문명하고 발전된 우리 나라의 면모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며 출연자들의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에서도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높은 문화수준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텔레비존방송편성에서 방송프로를 사람들이 즐겨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게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존방송프로를 잘 짜지 못하면 아무리 내용이 좋은 편집물을 내보내도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며 인식교양적 효과를 높일 수 없습니다. 텔레비존방송프로를 짜는 데서 중요한 것은 군중의 요구를 제때에 알고 잘 구현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존방송프로는 시청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데 기초하여 군중의 심리에 맞게 짜야 합니다.⁵²⁾

위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김정일은 TV방송이 일반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들의 선호에 맞는 특성을 가져야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신의 경우 김정일은 통신이 전형적으로 대외적인 매체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그 임무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입장을 적시에 대외에 천명하고 김일성의 사상을 해외에 널리 선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⁵³⁾ 또한 중앙통신사는 당과 정부의 눈, 입, 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앙통신사에서 내보내는 보도는 당과 정부의 입장을 대외에 천명하는 것이므로 글 한자,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신중해야 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오는 중요한 통신자료와 세계정세 자료를 받아 김일성에

52) 김정일, “텔레비존방송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pp. 42~427.

53) 김정일, “조선중앙통신사의 기본임무,” (조선중앙통신사 일군들과 한담화, 1964년 6월 12일),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8.

게 보고해 김일성이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⁵⁴⁾

4.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김정일은 언론을 당의 정책, 혁명과업 수행을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과 계급에의 봉사’와 ‘현신’이라는 사회주의국가 언론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언론보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획일적일 수밖에 없으며 혁명완수에 이바지할 때만 그 가치가 인정된다. 언론의 이런 성격 때문에 북한에서 소위 ‘언론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헌법 제67조는 공민이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그 자유는 김일성·김정일의 위대함과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인민들에게 전파·주입시키는 자유이다. 곧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며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복무”⁵⁵⁾하는 것에 국한된 자유인 것이다.

이 제한된 자유속에서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들은 당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김일성·김정일의 개인숭배와 주체사상, 당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주입시켜 왔다. 60년대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추진되고 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실현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김정일은 선전선동의 중요한 수단인 언론을 강화했고, 언론은 김정일 후계체제가

54) 김정일, “조선중앙통신사의 기본임무,” p. 9.

55) 사회과학출판사, 『력사사전 II』(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 1307.

확고히 구축된 80년대 들어서는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에 매진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추대되면서 더욱 그의 절대적 영향하에 놓이게 된 언론에는 80년대 초부터 소박하지만 오락성이 가미되기 시작했다. 1983년 12월부터 만수대TV가 외국영화를 방영하기 시작했고 1989년부터 평양FM방송이 개시되었다. 이런 변화는 방송에서의 문화성을 강조한 김정일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이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당의 유력한 선전 선동 매체로서 요구되는 사상성을 제일의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1990년대 들어와 외부사조 유입을 차단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무장 강화와 주민결속에 역점을 두는 한편,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 고취를 통해 그의 권력기반을 굳건히 하는 데 앞장 서왔다. 최고권력자에 대한 찬양과 현 지지도 내용 등이 보도의 핵을 이루고 방송이 시간마다 당의 정책을 반복 선전하며 전투적인 화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언론관이 현실에서 반영된 결과이다.

XVII. 환경관

손 기 웅(선임연구위원)

1. 서 론

환경문제는 오늘날 지구적인 문제이다. 어느 국가도 환경의 오염과 파괴에 의해 비롯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환경은 지구상에 인간이 편의로 구분해 놓은 국가간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좀 더 좋거나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간 삶의 터전인 우리의 자연환경은 하나이며,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이다.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존속이 그것의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이 모든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각국의 정치, 사회, 학계에 성숙되어가고 있으며, 국가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가고 있다.

북한도 이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환경손상과 공해를 모르는 인민의 지상낙원을 이룩하였다는 북한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에도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문화위생적인 자연조건과 생활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복무한다는 북한당국도 대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고,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에도 동참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남한의 경우에도

경제의 질적 도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외적 차원에서의 환경협력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한민족 공통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존함은 물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사전작업으로 김정일의 환경관 분석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인식에 바탕한 김정일의 환경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북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인 어려움은 자료수집이다. 현지 조사와 참여관찰이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관련 정보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위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연설이나 담화가 교시로 받아들여져 국가정책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도적인 지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정일이 여러 형식으로 발표한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건들을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포함하는 환경정책의 특징과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환경관련 법규정과 논문, 영화 등을 참고한다.

김정일의 공표물을 참고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김정일의 실제 저작물이 아닐 수도 있으며, 그의 말이 그대로 정책화된다거나 더구나 실천으로 전개되어지지 않는 형식적·선언적인 성격을 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에 관한 김정일의 사고와 행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현실에서 김정일 환경관의 전반적인 윤곽과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 북한의 1차 자료를 활용하는 이 글의 접근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북한에서는 「환경」, 「환경오염」, 「환경보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선 환경은 사전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위의 자연적 및 사회적 조건이나 정황”으로 규정하여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¹⁾ 다만 일상적으로 환경이란 말이 자연적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은 우리와 같다. 또한 환경오염은 “환경물질의 농도가 사람들과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²⁾

그리고 환경보호란 인간이 자기의 운명과 생활을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서, 인간생활의 물질적 원천인 자연과 인간이 살며 활동하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한편, 불리한 자연환경을 유리한 자연환경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의 목적은 병없이 오래 살려는 인간의 염원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다 훌륭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 주며 후대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물려주려는데 있다고 한다.³⁾ 환경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 물, 토양의 정결도를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공기와 물, 토양은 유기체존재의 필수적인 3대 구성요소로서 그것들의 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발육, 생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⁴⁾

1)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서울: 도서출판 백의, 1988), p. 2447.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5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p. 858.

3) 김일성,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392~393; 안천훈, 「환경보호법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 법전」, 「근로자」, 제7호(평양: 근로자사, 1986), p. 25.

2. 김정일의 환경문제 기본인식

김정일의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사회 일반이 주장하였던 내용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즉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산업화와 공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며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해를 주는 여러가지 공업배설물과 유해가스, 배기가스와 방사성물질, 각종 소음과 진동 등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염과 파괴의 위험은 공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공업이 발전한다고 하여 반드시 있게 되는 동반현상이 아니라,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 착취계급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있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주의사회의 입장이다.

북한은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최대이윤과 생산이익이란 관점에서만 환경을 보고 “이윤만 얻을 수 있다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일을 꺼리낌없이 하며 공해산업도 마구건설”하는 반면에 “비생산적 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해방지를 비롯한 환경보호사업에 자본가들은 자기의 돈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자금과 설비를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획득을 위한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 가져온 결과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이다.⁵⁾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생산수단이 소수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고 돈이

4) 안천훈(1986), p. 28.

5) 안천훈(1986), pp. 25~29 참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제도 자체가 낳은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반동통치배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은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 본질을 가리우기 위하여 공해로 인한 인간환경의 파괴는 현대산업 건설에 반드시 뒤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떠벌이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⁶⁾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보호사업은 한갓 선언과 기만에 불과하다고 본다.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어 있고 모든 경영활동이 개인의 주관적 욕망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사업은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영리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은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추진되는 환경보호사업과 관련 법규정의 마련은 사회적 여론과 압력에 못이겨 채택하는 실현담보가 없는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 여러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환경의 혹심한 파괴와 오염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사람들의 생존과 활동에서는 “엄중한 후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공업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산업공해와 도시경영의 불합리, 도시주민의 지나친 밀집에 의한 도시공해의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 생활환경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인류의 재부는 수없이 탕진되고” 있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해는 이미 《핵무기에 비길만한 인류의 적》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은 남한에서는 환경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공해병에 걸려 불행을 겪는 참혹한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⁸⁾

6) 전대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산력배치에 관한 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근로자』, 제12호(평양: 근로자사, 1973), p. 54.

7) 전대영(1973), p. 55.

따라서 북한은 진정한 환경보호와 공해방지는 “생산수단이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에게 독점되어 있고 모든 것이 리윤추구에 복종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으며, 그것은 오직 자본주의제도 자체를 뒤집어 엮고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일치함으로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직하고 진행하며 인민대중은 이 사업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라고 강조한다.¹⁰⁾

8)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 1986년 4월 7일 북한 부주석 리종욱이 행한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에 담긴 다음과 같은 내용은 대남선전측면에서 북한의 환경관이 담당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을 잘 보여준다. “공해기업체들에서 마구 내뿜는 독한 연기와 유독성폐수로 인하여 서울뿐아니라 남조선의 모든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심히 오염되고 산림과 물고기를 비롯한 동식물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공해 때문에 멸종의 위기에 직면한 동식물이 257종이나 되며 예로부터 경치아름답고 수산자원이 풍부하기로 이름났던 남해바다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써도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적인 책동으로 공해현상이 얼마나 참혹한 지경에 일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민주주의의 폐허지대》일 뿐 아니라 생명체들이 제대로 존재할 가능성마저 말살되어가고 있는 가장 흑심한 공해지대입니다. 공해가 심한 자본주의나라들의 가혹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온 나라가 말 그대로 하나의 아름다운 큰 공원속에 있는 우리 조국의 찬란한 모습은 공화국정부의 환경보호시책이 얼마나 정당하며 우리 인민이 이룩해 놓은 모든 성과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자랑높은 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로동신문」, 1986.4.8.

9) 전대영(1973), pp. 49~55 참조.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더하여 사회주의에서도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 창조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였다는 「북한식 사회주의제도」가 인민대중을 위한 환경보호사업을 철저히 실행하는 가장 우월한 체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람과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대하는 것을 근본관점”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업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철저히 복종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¹¹⁾

그리고 이 체제를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으로 이끈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예지있는 환경보호정책”에 의해 오늘날 북한은 공해없고 녹음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되었다고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첫째가는 국가적 관심이 돌려지고 예견성 있는 모든 대책이 취해짐으로써 공해없는 공업화를 실현하고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경제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수많은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한 결과 “환경보호의 기본지표들인 공기, 물, 토양의 위생기준이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이르러 북한 전역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옛 선조들이 한갓 꿈으로만 생각하던 《장생불로의 낙원》이 산 현실로 펼쳐지고 세상사람들이 것처럼 부러워 말하는 《공해없는 나라》, 《공원속의 도시》,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¹²⁾ 그리고 “인민들은 공해라는 말조차 모르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속에서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북한은 주장한다.¹³⁾

10) 김일성(1993), p. 393.

11) 안천훈(1986), p. 27.

12) 『로동신문』, 1986.4.8.

김정일의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다음의 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해는 오늘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 도시들에서는 물과 공기 오염, 여러가지 소음으로 하여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건강이 심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보다 돈을 귀중히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제도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해현상을 미리막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사실상 공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우리 인민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입니다.”¹⁴⁾

북한의 선전영화 「금수강산 내조국 노래부른다」, 「사계절 아름다운 나라」, 「새로운 경치를 찾아서」, 「오랜 문화의 나라」, 「국토건설의 새 력사」, 「폐허우에 솟아난 조선」, 「조선의 새모습」, 「전진하는 조국」, 「평양의 모습」, 「우리가 본 평양」, 「평양을 찾아서」, 「조국기행 개성시」, 「조국기행 함경남도」, 「조국기행 함경북도」, 「조국기행 강원도」, 「조선지리 함경북도」, 「조선지리 함경남도」, 「백두산」, 「금강산」, 「금강산으로 가자」, 「금강산, 조선의 명산 묘향산」, 「묘향산」, 「오가산」, 「지하의 명승 석화궁, 창광원, 송도원」 등과 북한의 과학교육영화 「천연기념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동굴, 식물, 마양송어」, 「우리나라 노루와 사슴」 등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결같이 반복하고 있다.¹⁵⁾

13) 김일성(1993), p. 395.

14) 김정일, 「평양시를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3월 30일」, 「김정일선집 제8권」, pp. 361~362.

15) 자연환경과 관련된 이상의 북한영화는 통일연구원의 특수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실은 김정일 자신의 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연이은 홍수피해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식량난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김정일은 그 원인이 폭우란 자연재해와 더불어 그 동안 국토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던 행정사업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환경보호에 소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식량난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한 집짐승기르기 운동이 산림훼손을 야기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당에서는 국토관리사업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10여년전에 전국국토관리부문 일군대회를 소집하고 국토관리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 주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토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의 국토관리정책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들에서는 원료기지를 꾸린다느니 뭐니 하면서 산에서 나무를 망탕 찍어 내어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더기비가 내리기만 하면 사태가 나고 강하천제방뚝이 터져 나라의 귀중한 토지가 물에 잠기거나 류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은 레년에 없던 큰 비가 내린데도 원인이 있지만 주요하게는 나무를 많이 찍어 내고 제때에 심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사방야계공사를 잘하였더라면 큰 비가 내려도 피해를 얼마 입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에서 나무심기를 전 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하여 계속 강조하였으나 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실속 있게 집행하지 않았으며 심은 나무도 관리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였지만 산림은 별로 늘어 나지 못하였습니다. 강하천정리와 포전정리, 도로정리와 도로관리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전망계획과 당면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쌓는 식으로 강하천정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겠는데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에서 그런 사업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더기비가 오면 강물이 넘쳐 나 도로와 부침땅이 못 쓰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구장지구에 가보니 강바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방에 나가보면 도로 관리도 잘하지 않고 포전정리도 잘하지 않은데가 적지 않습니다.”¹⁶⁾

“풀 먹는 짐짐승을 많이 기르자면 풀판조성을 잘하여야 합니다... 풀판을 조성한다고 하여 나무를 망탕 찍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뽕기밭을 일구느라고 나무를 망탕 찍어 벌거숭이가 된 산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일꾼들은 나무를 찍는 것을 보고도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으며 지어 일꾼들 자체가 나무를 망탕 찍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꾼들에게 향토애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것 같습니다.”¹⁷⁾

한편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없는 지상낙원을 이루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¹⁸⁾ 북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간에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3자는 서로 역사법칙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항거하는 개인의 방위수단으로서 인권이란 개념조차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그들의 인권에 관한 기본인식에 따른 것이다.¹⁹⁾

다만 1992년 4월 29일 그들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57조에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란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16)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6년 8월 11일」, 「김정일선집 제14권」, pp. 203~204.

17) 김정일, 「풀 먹는 짐짐승을 많이 기르는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26일」, 「김정일선집 제14권」, pp. 299~300.

18) 한국은 헌법 제3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19) 법무부, 「북한법연구 6: 노동법」(서울: 법무부법무실, 1987), p. 19.

인민을 위해 시혜적 차원에서 건전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줌을 밝혔다. 1998년 9월 5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기존의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고 전7장 166조의 이른바 「김일성헌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제57조를 수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건전한 환경조성을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 반사적인 혜택을 입을 따름이다.

3. 김정일의 환경정책

북한은 김정일이 일찌기 196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탁월한 강령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영화 「새로운 경치를 찾아서」에서는 김정일이 60년대부터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영화 「국토건설의 새력사」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쟁으로 불타버린 산들의 록음이 우거지게 하시려고 청산에서 전후 산림조성의 봉화를 지펴주셨습니다. 청산에 뿌리내린 나무들은 오늘도 조국의 일목일터에 부여 주신 숭고한 그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1968년에는 김정일이 “삼지연에서 백두산으로 가는 길을 잘 닦고 답사자들이 휴식할수 있는 장소와 시설도 꾸려놓아야 합니다. 답사자들에 대한 교양을 잘하여 그들이 백두산에 있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조약돌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백두산에 오를 때 주변을 어지럽히고 천지의 물을 오염시키거나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백두산일대는 수림이 울창한 것만큼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불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²⁰⁾라고 환경보호에 관한 원칙을 교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전들은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가시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매체를 통해 적극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사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대응을 요구하는 환경문제에 김정일이 일찌감치 의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하는, 권력후계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김정일이 일찍부터 보여주었다는 정치선전적 차원에서 이들의 주장을 평가해볼 수 있다. 즉 북한이 1940년대 항일투쟁시부터 김일성이 환경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선전하면서 그의 권력의 카리스마를 확립하는데 이용하였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허리치는 눈무지속을 뚫고온 행군의 휴식참에도 한대의 나무, 한포기의 풀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나무대신 가랑잎과 삭정이로 피운 우등불에 대원들의 언땀을 녹여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면서 이 시기부터 김일성이 조국산천에 “나무숲이 들어차게 할데 대한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혀 나가시였다”고 선전하였던 것이다.²⁰⁾ 권력의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김일성이 시작한 환경정책을 김정일이 덕성과 영도력을 바탕으로 지속함은 물론,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데 열의를 보여 줌으로써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활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제시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84년 11월 19일 전국국토관리부문 활동가대회의 참가자에게 보낸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란 편지가 김정일이 환경

20) 김정일,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 량강도 책임일군 및 항일혁명투사들과 한 담화 1968년 7월 21일」, 「김정일선집 제1권」, p. 385.

2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전국목화의 위대한 구상」(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p. 13.

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계기라고 추정된다. 이 글에서 그는 김일성이 “해방직후 친히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와 삼질한 때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사업은 내외 계급의 적에 반대하는 피투성이의 투쟁과 심각한 사회적 변혁을 수반한 곤란하고도 복잡한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 왔으며,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과 현명한 지도의 결과 “만년대계의 창조물이 수없이 건설되고, 경작지와 산림, 유용한 동식물과 수산자원이 증식되고, 하천과 도로, 연안은 정연하게 꾸며져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살기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일은 이어서 국토관리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있어서 항구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제까지의 투쟁은 첫 걸음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할 것”을 강조하였다.²²⁾

김정일은 구체적으로 첫째, 1980년대의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국토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하고 둘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따른 국토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할 수 없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수행하는 의의를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토관리사업의 개선을 위해 공장과 주택지건설시에 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한다는 원칙, 토지관리를 잘하여 토지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원칙, 산림의 조성과 보호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 하천관리를 잘하여 홍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 연안과 영해의 관리를 잘하여 폐수나

22)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국토관리부문 일군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11월 19일」, 「김정일선집 제8권」, pp. 145~147 참조.

해일에 의한 피해를 막고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을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화를 위해서는 전자계산기나 항공 및 우주사진기술 등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이용한 산림과학연구활동, 중요도시나 산업지구에서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없애고 분진이나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과학기술 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기술연수회, 기술혁신토론회, 경험발표회 등의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국토관리설계에서도 과학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요구하였다.²³⁾ 환경정책에 있어서 과학화의 요구는 이제껏 국토관리사업의 일부로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중운동적 환경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그 이상의 처방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토관리의 개선강화를 위해 김정일은 국토관리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법규범과 규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고 완성시켜 국토관리에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각 “검사취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토관리에 대한 법규범이나 규정의 준수실행사항을 일상적으로 검사하고, 허가등록 결재제도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국토관리에 대한 규정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무엇보다 당원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등 사상교육활동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제 요구는 결국 이미 이 시기에 북한에서 환경오염과 파괴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1986년 4월 9일 채택된 환경보호법은 이러한 김정일의 환경정책의 평가,

23)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8권」, pp. 145~164 참조.

요구, 제안 등이 법제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80년대 김정일의 관련 주요 언급으로서는 1986년 「평양시를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의 도시 평양을 가꾸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밝힌 글을 들 수 있다.

“평양시에 공원과 유원지를 더 많이 꾸려야 하겠습니다... 공원과 유원지가 많아야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즐기면서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도시의 풍치도 돌볼 수 있습니다... 평양시 록화에서 가로수를 잘 조성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가로수는 거의 풍치를 돌고 공기를 맑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양시에서 공해현상을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²⁴⁾

1990년대 김정일의 말과 글에서 파악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정책의 내용은 1984년의 문건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1992년 「림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해당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제시하였고²⁵⁾, 1996년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

24) 김정일, 「평양시를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8권』, pp. 358~361 참조.

25) “산림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산림보호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산불과 병충해를 철저히 막는 것입니다. 산불과 송충을 비롯한 해로운 벌레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칠길주변을 비롯하여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산림지대에는 산불막이선을 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무를 망탕 베어내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무는 반드시 제정하여준 림지에서만 베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한 대의 나무도 망탕 베지 못하도록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의 산림과 학술림으로 정하여 놓은 원시림은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라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땅찾기를 한다고 하면서 산림을 못쓰게 만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림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림업로동자질 30 뜻을 맞는 전국의 림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8월 10일」, 『김정일선집 제13권』, p. 141.

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는 1984년 국토관리일꾼들에게 보낸 문건 이후 국토관리분야에서 나타났던 제반 현상을 평가함과 동시에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토관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하였다.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사업은 토지와 산림, 도로, 강하천, 연안, 령해를 비롯한 나라의 전 영토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전 령토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인 것만큼 국토관리부문 일꾼들에게만 맡겨서는 잘될 수 없습니다. 공화국의 령토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와 협동농장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총 동원되어야 국토관리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책임일꾼들이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떨쳐 나가야 국토관리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 시, 군당책임비서들을 비롯한 당책임일꾼들이 나무심기와 강하천정리, 도로관리 같은 모든 국토관리사업을 직접 틀어 쥐고 당적 사업으로 힘 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자기 단위의 국토관리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도록 방법론을 잘 세워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해마다 나무심기와 강하천정리, 도로정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과제를 구체적으로 주고 그 수행정형을 단단히 총화하여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봄과 가을나무심기철을 총 동원기간으로 정해 놓고 그 기간에 나무도 심고 도로정리와 강하천정리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마다 농사철에 전국이 총 동원되어 농촌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국토관리사업도 그런 식으로 조직하고 내밀어야 합니다.”²⁶⁾

연 이은 홍수피해 직후 발표한 1996년의 문건 이후 북한은 이를 근거로 동년 9월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회의’를 처음 개

26)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4권』, pp. 203~206 참조.

최하였으며, 이후 매년 초 동 회의를 열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새롭게 설정(매년 3~4월을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월간”으로, 10~11월을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월간”으로)하여 나무심기와 도로 및 강·하천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북한이 추진중인 국토관리사업의 내용은 크게 자연재해로 인해 황폐화된 국토의 복구 및 재건, 환경보호, 관광사업을 겨냥한 국토관리 등 세가지이며, 그 중에서도 국토의 복구 및 재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1994, 1995년의 홍수, 한발 등 자연재해는 김정일이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국토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11월 27일에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을 통해 김일성이 국토관리사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내무성을 설치하고 국토관리의 방향 등을 제시했다는 1962년 10월 23일을 기린다는 차원에서 매년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매년 국토환경보호절을 맞아 각지 일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로보수·정비 등 국토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99년 3월 12일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해마다 자연보호와 관련하여 “나무심기월간”(3월), “강·하천정리월간”(3월), “약초재배월간”(4월), “이로운 새보호월간”, “이로운 산짐승보호기간”, “수산자원보호월간”, “해양월간”(7~8월)²⁷⁾ 등을 설정해놓고 자연보호사업을 강화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1999년 3월 2일 우리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식수절」을 4월 6일에서 3월 2일로 변경하였다. 김일성이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 올라 나무를 심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은 4월 6일을 식수절로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펼쳐왔다. 최종건 당시 도시경영 및 국토

27) 김일성이 1969년 해마다 7월 12일을 “해양의 날”로, 7월과 8월을 “해양월간”으로 정했다고 한다.

환경보호상이 1999년 3월 2일 『중앙방송』을 통해 밝힌 식수질의 변경사유는 1946년 3월 2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이 모란봉에 올라 일제에 의해 파괴된 모란봉을 바라보며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교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의 시대를 의식, 식수질을 김정일과 연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의 분위기 고취를 위한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이 시작하는 3월부터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할 판에 식수질이 뒤늦게 4월 6일인 것은 분위기 조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자 김정일의 환경보호 관련 언급은 거의 대부분 식량난의 해소와 관련하여 발표되고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강하천과 호수들에 물고기떼가 육실거리게 하려면 환경보호사업을 잘하여 강하천과 호수들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강하천과 호수, 저수지들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줄어들 뿐아니라 거기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잘 자라지도 않고 여러가지 병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강하천과 호수, 저수지오염을 철저히 막으며 거기에 공업폐수 같은 것이 흘러들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²⁸⁾

“지금 세계적으로도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거름을 많이 내어 수확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일부 일군들은 화학비료를 치지 않고서는 수확고를 높일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나는 화학비료를 많이 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화학비료를 쳐서 농사를 지으면 땅이 산성화되고 생태환경이 파괴되게 되며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더우기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여 별방지대에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조

28) 김정일, 「양어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룡연군종합농장 룡정분장 양어장을 돌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6월 30일」, 『김정일선집 제14권』, p. 338.

건에서 감자농사는 화학비료를 쳐서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거름을 많이 내어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 량강도 같은데서는 속성거름을 많이 생산하는 것과 함께 축산을 잘하여 물거름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름이 나올데가 없습니다.”²⁹⁾

4. 김정일 환경관의 특징

1. 경제성

김정일 환경관의 전반적 특징은 크게 그것의 경제성과 정치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환경관의 경제성이란 김정일이 환경을 보는 기본입장이 환경자원을 보호·증식하여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제적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환경 혹은 환경자원의 생명성을 인식하여 보호하며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만을 이용한다는 환경자원에 대한 관리적 자세(管理的 姿勢)가 아니라, 환경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보호·증식하여 그것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지배적 자세(支配的 姿勢)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³⁰⁾ 따라서 김정일

29) 김정일,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량강도 대흥단군을 현 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7(1998)년 10월 1일」, 「김정일선집 제14권」, pp. 432~433.

30) 환경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관리적 자세와 지배적 자세에 관하여는 Gi-Woong Son, *Umweltnilitarismus. Sozio-Militarismus und Öko-Militarismus* (Münster/Hamburg, 1992), pp. 275~280 및 Andrew Dobson, “Ecologism”, in: Roger Eatwell/Anthony Wright (eds.),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 216~238; Klaus M. Meyer-Abich, “Bedingungen des Friedens mit der Natur”, in: Jörg Calließ/Reinhold E. Lob (eds.), *Praxis der Umwelt- und Friedenserziehung, Bd. 1* (Düsseldorf, 1987), pp. 710~717 참조. Arne Naess는 이를 「Deep Ecology」와 「Shallow Ecology」로 구분하였다.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16(1973)

이 교시하는 환경정책의 핵심도 환경의 경제성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다.

환경을 이해하는 기본입장으로서 경제성의 강조는 인간중심적인 환경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환경을 대하는 기본관점이 인간은 환경의 일부임과 동시에 인간과 환경이 상호의존적인 공생공영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환경을 이루어 간다는 조화관에 기초하여 환경을 “동반세계”(Mitwelt)로 보는 것이 아니다. 김정일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환경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복과 투쟁의 대상으로, 그리고 인간의 욕구충족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변형과 개조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인간중심적인 환경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중심적 환경관의 사상적, 철학적 기초는 주체사상이다.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³¹⁾,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 것만큼 마땅히 사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³²⁾에서 보여주듯이 주체사상은 철저한 인간중심적 사고관이다.

이러한 세계관과 환경관은 김정일의 말과 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다음의 글들은 주체사상이 기존의 세계관, 철학, 사상과 다른 점을 밝히는 가운데 자연환경이 인간을 위해 복무해야 할 지배와 정복의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31)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2; 전대영(1973), p. 49에서 재인용.

3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제7권」, p. 153.

“주체철학과 선행철학의 근본적차이는 결국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리해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맑스주의철학은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하면서도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옳게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선행리론이 사회적 운동원리를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한 것은 바로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해명하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고유한 특성은 주체철학에 의하여 처음으로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되었습니다.”³³⁾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하였습니다.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의 운동에 의하여 변화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밝혔습니다. 세계는 사람에게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 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것만큼 마땅히 사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며 세계에는 사람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오직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입장입니다.”³⁴⁾

33) 김정일,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리론잡지 《근로자》에 준 담화 1996년 7월 26일, 『김정일선집 제14권』, p. 196.

3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 p. 153.

환경에 대한 정복관과 지배관은 이러한 인간중심적 환경관에 기초한 주체사상의 당연한 귀결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그것이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본분이며 일본새입니다.”³⁵⁾라면서 자연과의 투쟁을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임무의 하나로, 주체혁명위업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 제시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인 것만큼 노동계급의 당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보람찬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김정일의 글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입니다. 사람이 살며 발전해나가려면 반드시 자연에 작용하여 물질적 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여야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은 오랜 세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힘을 키우고 지식을 쌓으며 생산력을 발전시켜왔으며 자신의 사상의식수준,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인류사회가 도달한 현대과학과 기술, 선진사상과 문화는 모두 인민대중이 벌려온 역사적인 투쟁의 결실입니다.... 사회생산력의 발전력사는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힘이 장성하여온 역사이며 사회혁명의력사는 사회를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능력이 강화되어온 역사입니다.”³⁶⁾

“생활이란 바로 자주성을 위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 활동이며 투쟁이다... 사람은 자연에 작용하여 그것을 개조하고 정복하여야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주적인

35) 김정일,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20일」, 『김정일선집 제 13권』, p. 448.

3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 pp. 159~167 참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해나갈 수 있다.”³⁷⁾

“로동은 사람이 자기의 생활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별리는 자연 개조활동입니다... 로동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자연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입니다.”³⁸⁾

이상에 알 수 있듯이 김정일 환경관의 특징인 경제성은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적 환경관과 그것에 근거한 환경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현재 북한에서 정책전반의 방향과 골격을 형의 교시속에 나타나는 환경관련 언급중 거의 대부분이 경제 관련 담화성하는 지도적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일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³⁹⁾

37) 김정일, 『미술론. 1991년 10월 16일』, 『김정일선집 제12권』, pp. 22, 52 참조.

38)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로동행정일군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김정일선집 제9권』, p. 406.

39) 환경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과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관련법에서도 인간중심적 환경관과 정복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종합적인 국토관리계획 속에 담겨진 환경관련 법규정의 하나로 자랑하는 『토지법』(1977년 4월 29일 채택)의 제5조에는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 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일성 (1993), p. 270.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인 법전으로 선전되고 있는 『환경보호법』(1986년 4월 9일 채택)에서는 법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환경보호법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서 이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환경보호법이 “무엇보다도 그것이 규제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내용들이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다거나, “공화국환경보호법은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환경보호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비롯한 전반내용들을 규제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환경보호법이 규제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내용들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회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혁

2. 정치성

김정일 환경관의 두번째 큰 특징은 그것의 정치적 성격이다. 북한 체제를 유지, 지속, 통합하는 기본적인 토대는 주체사상이다.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출발한 주체사상은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한 이후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그후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주의화를 거쳐 1992년 신헌법의 채택을 통해 맑스-레닌주의의 틀을 벗어나 오늘날 주체사상은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 그 동안 주체사상은 김일성 및 김정일체제의 유지, 체제의 정당성구축과 정통성확보, 혁명과 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대남혁명과 통일노선의 합리화, 대외정책의 외교적 기조로서의 역할은 물론, 권력 계승의 정통화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보완, 변모, 체계화되어 오늘날 북한체제의 유일사상으로 정식화되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사회주의건설 혁명투쟁의 기반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무장된 인민대중의 집단적 대중운동에 두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상적 측면에서는 유일사상에 의해 획일화된 인민대중을, 사회관계적 측면에서는 조직화된 대중집단화를, 그리고 사회운동적 측면에서는 대중적 혁명운동으로서 군중노선을 추구하여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체제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유도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력갱생에 기반한 생산증대와 건설을,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통제와 집단화를,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군사력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김정일 환경관의 정치성이란 그의 환경관련 말과 글이 이와 같은 주체사상과 그 세부정책에 수렴되어 기능하고 있음을 말한다. 환경보

명적인 법전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등의 자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천훈(1986), pp. 26~27.

호를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노력동원의 명분으로 활용하여 건설사업과 대중운동에 인민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자발성을 촉발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산림조성과 보호운동, 제방공사, 도시복구건설, 국토관리사업 등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보호사업으로 선전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사상교육의 강화와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각인시키는 사상교육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제에 대한 충성과 지지가 유도되고, 인민대중에 대한 집단화와 통제가 진행되어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관의 정치성은 다음의 글들에서 확인될 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청년들을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부대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역량으로 규정하시였습니다. 청년들은 새 것을 지향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하자고 결심하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내는 투지와 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질로 하여 청년들은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투쟁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부대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적극적인 선봉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⁴⁰⁾

“평양시를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모든 시민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를 잘 꾸리는 것은 수도시민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애국심의 표현입니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평양의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평양시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

40)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청년절 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준 담화 1996년 8월 24일, 「김정일선집 제14권」, p. 211.

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⁴¹⁾

“최근 국토관리사업에서 엄중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한 기록영화와 록화물도 만들어 중앙과 지방의 당, 행정경제일군들에게 다 보여 주도록 하였는데 일군들이 그것을 보고 가책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일군들이 국토관리사업에 무관심한 것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 애국주의사상이 없는 표현입니다. 모든 일군들은 국토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무관심성이 가져 온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똑똑히 알고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한결같이 달라붙어야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자면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국토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인식시켜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며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리려는 것이 당의 의도이고 결심입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의도를 깊이 해설선전함으로써 모두가 다 국토관리사업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여 수령님께서 물려 주신 조국강토를 더욱 훌륭하게 꾸리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⁴²⁾

김정일 환경관의 정치성은 바위새김글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다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던 김정일은 그러나 정치적 구호를 위한 바위새김글은 장려하고 있다.

“자연바위에 글을 새기는 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선전선동부에서 자연바위에 글을 새기는 사업을 바로 지도하지 못하다보니 자연바위에 글을 새기고 년월일을 밝히지 않은 것이 적지 않습니다. 자연바위에 글을 새기고 년월일을 밝히지 않으면 몇백년이 지난

41) 김정일, 「평양시를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8권」, p. 362.

42)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4권」, pp. 204~205.

다음 그 글을 언제 새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자연바위에 글을 새기고 년월일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글을 언제 새겼는지 똑똑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바위에 로동당시대를 칭송하는 글을 새기고 년월일을 밝히지 않아 후대들이 그 글을 새긴것을 전설처럼 생각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연바위에 글을 새긴 다음에는 반드시 년월일을 밝혀 언제 새긴 글이라는 것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⁴³⁾

5. 결 론

김정일의 환경관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한다는 주체사상은 필연적으로 환경을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정복과 투쟁의 대상으로, 인간의 욕구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변형과 개조의 대상으로 파악하게 하는 철저한 인간중심적, 자연지배적 환경관을 낳았다. 그 결과 환경 혹은 환경자원은 가능한 한 많이 보호·증식되어 경제적으로 이용되어질 대상과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인간다운 삶, 질적으로 개선된 삶의 영위를 위해 형성되어져야 할 바람직한 환경문화는 환경에 생명성을 부여하여 존중하는 바탕위에 환경을 인간과 더불어 공생공영하는 동반세계로 인식하면서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부분만을 사용한다는 환경조화적이고 환경관리적인 환경관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모든 주민이 환경친화적인 행태를 일상화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남북한주민이, 그리고 그 후세들이 살아가야 할 공동의, 유일한 삶의 터전임을 직시한다면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바람직

43) 김정일, 『선전선동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9월 25일』, 『김정일선집 제3권』, p. 445.

한 환경문화의 형성을 위한 노력은 남북한 모두가 긴급히 대처해야 할 공통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환경조화적인 환경관의 정립이 남북한주민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행태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내 바람직한 환경문화의 형성을 위해 현 시점에서 힘을 쏟아야 할 방향은 남한 내에서 주민들이 환경조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친화적인 행태를 일상화하도록 노력하는 다른 한편으로 환경분야에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색해보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에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기, 강·하천 및 해양오염이 남한에만 피해를 주고 북한을 피해갈 수는 없다. 중국에 의한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이, 동해에 폐기된 소련/러시아의 방사성물질이 남한에만 해를 미치고 북한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문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북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을 초월한 공통의 문제인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협력은 “Zero-Sum”이 아닌 “Non Zero-Sum”분야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상호협력이 “Win-Lose”관계가 아닌 “Win-Win”관계임을 깨닫고 남북한이 서로 협력할 때 이념에 의한 대립이 종식된 탈냉전의 시기에 아직도 냉전이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에 최소한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바람직한 환경문화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XVIII. 문학예술론

임 순 희(선임연구위원)

1. 서 론

1960년대 후반이래 북한의 문예부문 활동은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었다. 문예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단일지도체제화는 그가 1960년대 후반이래 ‘문학예술혁명’¹⁾을 주도하면서 본격화된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해 김정일은 ‘영화예술론’²⁾을 비롯한 문예이론 저술들과 담화 발표,³⁾ 문예작품 창작에 대한 지도 등을 통해 문학예술혁명을 주도하였으며,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옹기 혁명소설, 혁명영화의 출현과 <피바다>식 가극, <성황당>식 연극의 탄생을 문학예술혁명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였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대내외적으로 공식화된 이래,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문예부문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지적’이 빈도 수를 더하게 된다. 이는 문예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단일 지도체제 구축 및 공고화를 뜻하

1) 문학예술혁명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문학예술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사상이 구현된 새로운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64.

2) 김정일, “영화예술론,” 『김정일선집 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30~404.

3) 김정일이 1964년 4월부터 1973년 사이에 발표한 전체 저작의 76%(83편)가 사회문화 관련문건이며 이 가운데 68편이 문예관련 문건으로 이 시기 전체 저작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49~50 참조.

는 것으로, 이후 김정일의 문예부문 지도, 또는 지적이 곧 당의 문예 정책과 문예창작의 기본원리로 절대화되기에 이른다.

위에서와 같이 1960년대 중반이래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 온 김정일의 문예부문 지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이어 발표된 그의 저술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는 바, 「무용예술론」(1990),⁴⁾ 「미술론」(1991),⁵⁾ 「음악예술론」(1991),⁶⁾ 「주체문학론」(1992)⁷⁾ 등이 그것이다. 이 저술들은 무용, 미술, 음악, 문학 등 예술의 각 장르를 주체사상과 주체미학에 입각하여 재구성한 이론서들이며, 특히 「주체문학론」은 1980년대 후반이래 급속하게 전개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북한 문예의 모든 분야가 견지해야 할 주체 문예 창작의 기본과제 및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표적 문예 이론 저술이다. 「주체문학론」에 대해 북한은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여 놓으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와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집대성하신 백과전서적인 불멸의 문학총서”⁸⁾ 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론은 김정일의 저술 「주체문학론」을 중심으로 주체의 문예관,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 주체사실주의, 주체문학의 기본과제, 문예창작의 기본원칙과 방도 등의 순으로 서술해 나가기로 한다.

4) 김정일, “무용예술론,” 「김정일선집 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05~439.

5) 김정일, “미술론,” 「김정일선집 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5~195.

6) 김정일, “음악예술론,” 「김정일선집 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79~582.

7) 김정일, “주체문학론,” 「김정일선집 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11~597.

8) 최길상,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가치,” 「조선문학」(1997. 1), p. 6.

2. 주체의 문예관

주체의 문예관이란 “지난날 사회물질경제적관계를 중심에 놓고 문학 예술을 대하던 선행로동계급의 문예관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중심의 문예관”⁹⁾이다. 또한 주체의 문예관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이 정립된 문예관이며, 문학예술을 통한 주체사상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는 력사의 새 시대이다. … 력사의 새 시대는 새로운 문예관을 요구한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주체의 문예관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주체의 문예관은 사람을 가장 진실하게 그리며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문예관이다.

둘째, 주체의 문예관은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

9) 리수립, “자주시대문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저작 <주체문학론>,” 『조선문학』(1992. 10), pp. 23~24.

10)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4~5.

11) 위의 책, pp. 3~13 참조.

하고 있다.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역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 앞에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이룩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가 전면에서 나르고 있는 바,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한 문예관을 튼튼히 세워 현 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요구에 올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셋째, 주체의 문예관은 문학예술에 대한 관점과 입장에서 노동계급적 성격을 체현 하고 있다. 부르조야문예관은 착취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문학예술을 부르조야계급의 향락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반동적 작용을 하는데 반해, 노동계급의 문예관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 데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성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넷째, 주체의 문예관은 문학예술에서 민족적 특성을 구현할 것을 요구한다.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그 나라 인민의 민족성과 민족생활을 옹기 반영하였는가, 형상에 민족적인 맛이 있는가 하는 것과 많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아무리 종자가 좋고 사회적 문제성이 있는 작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 민족의 구미에 맞게 형상 되지 못한 것이라면 쓸모가 없다.

다섯째,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본다.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새형의 문학을 말한다.

여섯째, 주체의 문예관은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에서 보고 대하며 그럴 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문예관의 견지에서 아름다운 것이란 자주적 인간의 생활과 투쟁을 뜻한다.¹²⁾

12) 아름다운 것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은 이른바 ‘주체의 미학관’을

일곱째,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창작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을 중시한다. 먼저 주체의 문예관은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사색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을 혁명사업으로 여기는 작가, 예술인이라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본다.

주체의 문예관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는 역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이라는 데에 근거하여 역사적 의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주체의 문예관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와 체제수호를 위한 문예부문의 사상 결속 및 통제의 일환책으로서 고안된 이론적 방편이라고 하겠다. 주체의 문예관이 정립, 구체화된 1990년대 초는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의 독창적 혁명이념성이 강조되고,¹³⁾ 김정일 후계체제가 보다 더 강화되는 시기였으며, 또한 1980년대 말 이래 급속하게 전개된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 탈이데올로기적 국가

토대하고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적관점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체의 미학관은 자연의 아름다운 것보다 사회생활에서 아름다운 것을 기본으로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미학관은 자연미보다 사회생활의 미, 투쟁의 미를 더 귀중히 여기고 인간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개척해나갈 것을 요구하며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도 그것의 사회적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pp. 13~14 참조.

- 13) 1972년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으나, 1992년 개정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다.

간 화해·협력 등 국제정세가 북한에 대해 불리하게 조성됨에 따라 북한내부에 체제위기감이 감도는 시기였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와 사회주의 수호를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내부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심화 되었는데, 문예부문에서의 사상 결속 및 통제의 일환책으로서 주체의 문예관을 정립, 구체화해 나갔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주체문학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말살하고 부르조아문학예술을 퍼뜨리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우리의 문학예술은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적원칙성과 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가고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역사적흐름을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 하여야 한다.¹⁴⁾

3. 주체의 문예이론

1.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

김정일의 저술 「주체문학론」에서 새롭게 공식화된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 방침은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¹⁵⁾ 먼저 민족문화유산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후대들이 계속 이어 받아야 할 유산, 보존해두기만 할 유산, 없애버려야 할 유산 등이 그것이며, 이 가운데 계속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 전통을 이룬다. 다음으로로는 민족문화유산과 이른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관계 설정이다. 민족문

14)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3~4.

15) 위의 책, pp. 59~90; 김정일,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3), pp. 52~60.

화유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 속에서 창조된 혁명적 문화유산과 그 이전 시기 선조들이 이룩한 고전문화유산이 있는데 혁명적문학예술전통도 민족문화유산 속에서 보아야 하며,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민족문화유산의 핵이며 중추를 이룬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질적 내용에서나 그 가치와 생활력에서도 민족문화유산의 최고 봉을 이루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옹호고수 및 계승발전이 주체적 문학예술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당의 일관된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

김정일이 『주체문학론』에서 새롭게 공식화한 또 하나의 방침은 민족고전문학예술 유산에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은 현대적 미감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이 강조되어 있다.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개개의 유산을 해당 시기의 사회역사적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 공정하게 분석 평가해야 하며, 유산 계승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시대적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산의 계승발전에서는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민족문학예술유산을 계승한다는 구실 밑에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 원칙을 저버리고 지난날의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미화 분석하는 복고주의와,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고 과소 평가하는 민족허무주의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며 민족고전문학예술작품을 주체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문학론』에서는 위에서와 같은 주체적 입장에서의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이라는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카프 문학, 신경향파 문학 등 과거 진보적 문학과 계몽기문학을 포함한 근대문학, 실학파문학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한편, 고대와 중세, 근대와 현대의 저명한 작가, 예술인들의 작품과 <춘향전>, <홍부전>, <심청전> 등과 같은 작자미상의 작품도 많이 찾아내어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체문학론』에서는 문학뿐만 아니라 민요를 비롯한 민족음악유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궁중음악, 궁중무용 등 궁중예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¹⁶⁾

2. 주체사실주의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 시대,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체사상을 세계관적 기초로 하고 주체적 문예사상을 사상미학적 기초로 하여 창시”¹⁷⁾되었다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방법”¹⁸⁾이다.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 주체사실주의가 공식화되기 전까지 북한의 문예창작방법이었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주체사실주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가장 올바른 창작방법이라

16) 북한의 월간 문학잡지 최근호는 김정일 위원장이 “광복 전에 유행했던 대중가요들은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은 있으나 총체적으로 볼 때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요소가 많으며 민족적 정서가 짙게 구현된 민족문화유산”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밝히고 있다. 리동수, “광복전 대중가요와 민족문화유산,” 『조선문학』(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8), p. 56.

17) 장형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문예사적 의의,” 『조선문학』(1997. 4), p. 12.

18) 리수립, 앞의 글, p. 25.

는 데에 문예사적 의의가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종래의 진보적인 창작방법을 비판적으로 총화하고 한 계단 발전시킨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며, “선행한 창작방법 가운데서 가장 선진적인 창작방법”¹⁹⁾이나,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 시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투쟁을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게 더욱 원만히 형상 할 수 있는 창작방법을 요구 하였는 바, 여기에 부응하여 나온 새로운 창작방법이 바로 주체사실주의라는 것이다.

또한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하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고무 추동한다는 면에서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과 같은 계열에 속하며, 두 방법 모두 현실을 사실주의적 원칙에서 반영하고 진실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시대적 요구 및 역사적 과제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정에 오른 역사적 시기에 자본주의제도를 타파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것으로서 자본의 철쇄와 제국주의 예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하는 데 복무하는 것을 역사적 과제로 제기한 창작방법이다. 이에 대해 주체사실주의는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19) 장형준,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창작방법, 최고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다,” 『조선문학』(1993. 5), p. 19.

것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복무하는 것을 역사적 과제로 제기한 창작방법이다.

둘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에 기초한 진보적인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나,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한 최고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다.

셋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는 사람을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제약되는 사회적 존재,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리지만 주체사실주의에서는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보고 그리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김정일은 위에서와 같이 시대적 요구와 세계관적 기초가 다른 두 창작방법 가운데 주체사실주의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창작방법이라고 한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문학예술에 대해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제기하고 이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방법을 요구하며 창작방법은 시대의 산물인 것만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바,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창작방법은 주체사실주의라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은 세계를 변화 발전하는 물질적 존재로서 과학적으로 인식 가능케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완벽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며, 이 때문에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자주적·창조적·의식적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과 사람에 의하여 지배, 개조되는 세계의 면모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하는 제한성을 드러냈으나, 주체사실주의는 세계에서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함으로 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제한성을 극복하였으며, 이와 같이 주체사실주

의가 세계관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 사람 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근본특징이 있다고 한다. 또한 『주체문학론』에서 주장하는 바, 주체사실주의는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와 역사를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²⁰⁾이라는 점에서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보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창작방법이라고 한다.

위에서와 같이 김정일은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공통성을 계급적 이념과 사실주의적 형상방법에서 찾고 있으며, 차이점을 시대적 요구 및 역사적 과제, 철학적 기초, 사람에 대한 관점 등에 근거해서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통성과 차이점을 토대로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의 관계를 ‘독창성을 기본으로 한 계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체사실주의의 발생발전은 지난날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주체사실주의를 지난날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단순한 계승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주체사실주의는 지난날의 모든 사실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과 체모를 갖춘 새로운 사실주의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의 독창성과 혁신적의의가 있다. 주체사실주의와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관계에서는 독창성을 기본으로 보면서 계승성을 결부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²¹⁾

주체사실주의가 공식화되기 이전까지 북한이 문예창작의 기본원리로서 표방해 왔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20)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역사 발전을 그린다는 것은 인민대중을 사회역사 발전의 주체로, 사회역사적 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으로 보고 그린다는 것을 말한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02.

21) 위의 책, p. 96.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방법”을 의미한다.²²⁾ 주체사실주의 역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문학예술 창작방법이다. 실제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에서 말하는 ‘민족적 형식’은 일치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민족적 형식이란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문화예술형식”²³⁾을 뜻하며, 주체사실주의에서도 민족적 형식이란 “자기 민족의 미감과 요구에 맞고 자기 민족이 좋아하는 형상 수단과 수법, 형상기교”²⁴⁾를 뜻한다. 그러나 두 방법은 ‘사회주의적 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혁명적인 내용, 다시말하여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투쟁,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이 잘살도록 하는 투쟁 같은 내용을 담는 다는것”²⁵⁾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체사실주의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내용, 인간의 제일생명은 정치적생명이며 사람의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내용, 주체의 혁명관과 인생관, 집단주의적생명관을 세워나가는 내용을 비롯하여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발양시키고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내용이 포괄”²⁶⁾되어 있고, 특히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체사실주의가 강조하는 사회주의

22)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581.

23)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7.

24)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14.

25) 김일성, 앞의 글, p. 27.

26)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08.

적 내용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김정일은 문학예술이 작품이 담아야 할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자주적인 인간,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전형을 통하여 실현되는 바, 주체사실주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체사실주의가 창조한 자주적 인간의 가장 숭고한 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 견결한 혁명가”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실주의 방법에 의거한 작품창작의 궁극적인 의의와 목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구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문학예술 창작의 기본과제

1. 수령형상 창조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합리화의 이론적 근거인 ‘수령관’에 따르면 수령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적 복무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 속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정치적 영도자이며,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 사상을 창조한 당의 최고영도자이다.²⁷⁾ 또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수령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수뇌이며, 정치적 생명의 어버이로서 인민대중에게 영생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이므로 그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²⁸⁾ 김정일은 『주체문학론』에서 이와 같은 수

27) 『정치사건』, p. 324.

28)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32~471 참조.

령의 존재를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최고전형”²⁹⁾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 하고 있는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북한 문학에서 수령형상 창조란 위와 같은 수령의 존재를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³⁰⁾에 따라 잘 형상 하는 것을 말하며, 수령형상 창조의 기본수칙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집약된다.³¹⁾ 첫째, 걸출한 사상이론가, 정치가, 전략가, 영도의 예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잘 형상 해야 한다. 둘째,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형상 해야 한다. 특히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 하고 있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 품모를 형상 해야 한다. 셋째, 수령의 형상은 반드시 수령, 당, 대중의 3위 일체의 원칙에서 당과 대중과의 연관 속에서 그려야 한다. 이는 3위 일체의 관점과 입장에 서서 수령을 형상 해야만 수령을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 정당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인민 속에서 활동하는 수령의 품모를 그리는 것이다. 넷째, 수령의 위대성은 체계적·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 해야 한다. 수령의 혁명역사는 가장 탁월한 영도자, 가장 위대한 인간의 영광 찬란한 역사로서 그와 관련된 어느 한 사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계별로 체계적·전면적으로 형상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서 형식의 장편소

29)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26.

30) 생리란 형상을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이 서로 조화시키고 살아숨쉬게 하며 생활을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진실하게 재현하는 원리를 말하며, 작가의 주관적 의도는 작품의 생리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 위의 책, p. 140.

31) 위의 책, pp. 140~151 참조.

설 창작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수령을 직접 형상하지 않는 작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³²⁾ 여섯째, 수령형상 작품에서는 수령에 대한 최대의 정중성과 충성심을 반영해야 하며, 작품의 양상은 밝고 숭엄해야 한다. 또한 「주체문학론」에서는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수칙 외에 수령의 후계자형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³³⁾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노동계급의 수령을 형상 하는 것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를 잘 형상 해야 하는 바, 이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는 데서 수령의 후계자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령의 후계자 형상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품모와 업적을 전면적으로 형상 해야 하며, 특히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 해야 한다. 후계자는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뛰어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이며, 선행한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후계자이지만 인민과의 관계에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후계자의 형상을 창조할 때에는 수령형상 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그러나 북한 문헌에 따르면, 김일성 사후에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 모두를 수령으로 칭하고 있는 바, 따라서 문학에서의 ‘수령형상창조’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업적을 수령형상작품에 고유한

32)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 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 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81.

33)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138~139.

34)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수령의 후계자의 형상은 수령형상의 모든 내용을 다 갖추면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형상의 핵으로 한다는 데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39 참조.

생리에 따라 잘 형상 하는 것을 뜻한다.³⁵⁾

북한 문학에서 수령형상창조의 의의와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에 있다. 노동계급의 문학예술에서 수령형상창조의 목적은 예술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세워주려는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 수령관을 정립케 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도덕화, 양심화, 생활화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의도는 문예부문에서의 수령형상 창조를 강조하기 시작한 처음에³⁷⁾ 김정일이 행한 한 담화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오늘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말하면서 수령형상 창조문제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수령형상 창조문제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기때문입니다.³⁸⁾

북한은 수령형상 창조를 통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라는 문학예술의 선전선동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령형상 창조를 기본으로 하

35) 김려숙,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형상을 부각하는 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 『조선문학』(1997. 2), p. 63.

36) 윤기덕, 『수령형상문학』(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168.

37) 1966년 김정일은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한 문학을 의미합니다”라고 밝힘으로써 문예창작에서의 수령형상 창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11~121.

38) 김정일,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권, pp. 241~250;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창작사업과 창조활동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김정일,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1권』, pp. 251~260.

는 창작집단을 설립하였는 바, 문학부문에서의 ‘4.15문학창작단’과 영화부문에서의 ‘백두산창작단’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형상창조 전문 창작집단 설립은 수령형상 창조사업을 당의 유일적 지도 밑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졌다.

2. 당의 위대성 형상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 역량”³⁹⁾이다. 또한 북한에서 노동당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과는 다른 또 다른 생명의 모체(母體)이기도 하다. 당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주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늘 보살피 주는”⁴⁰⁾ ‘어머니 품’이며,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어머니로 되여야 한다는 것은 당활동의 원칙”⁴¹⁾이다. 이와 같은 당의 의의와 역할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 조직을 통하여 수령과 조직 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⁴²⁾

북한의 문예창작에서 ‘당의 위대성 형상’은 위에서와 같은 조선노동

39)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당이다,” 『조선중앙년감』(1983), p. 170.

40) 국토통일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3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536.

41)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김정일선집 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53.

4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67.

당의 의의와 업적을 형상 하는 것을 말하며, 당의 위대성 형상에서도 몇 가지 기본수칙이 있다.⁴³⁾ 첫째, 당의 특성을 정확히 형상하여 세상에서 조선노동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잘 그려야 한다. 특히 ‘인민을 힘있고 존엄 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키운 당의 업적’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 놓은 당의 업적’에 대해 깊이 있게 형상해야 한다. 셋째, 수령, 당, 대중의 3위 일체의 원칙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내야 한다. 당의 형상은 수령을 유일 중심으로 하여 대중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당으로서 그려야 한다.

3.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란 자주적인 인간의 사상의식과 정신 도덕적 품모를 가장 원만히 체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를 일컫는다.⁴⁴⁾ 또한 「주체의 인간학」에 따르면, “가장 아름다운 성격, 고상한 품모를 지닌 인간”인 “주체형의 인간의 아름다운 성격에서 핵을 이루며 그의 고상한 품모를 규정하는데서 기본이 되는 것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⁴⁵⁾ 북한 문학작품에서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란, 위와 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닌 품성을 잘 형상 하는 것을 뜻한다.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에 있어서도 기본수칙이 있다.⁴⁶⁾ 첫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43)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152~160 참조.

44) 위의 책, p. 113.

45)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153~164 참조.

가 지닌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형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해 나가는 과정과 결부시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둘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 당, 대중의 3위 일체의 원칙에서 형상 해야 하며, 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니고 있는 대중적 영웅주의를 형상 해야 하며, 특히 대중적 영웅주의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며 조직의 지도와 집단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해야 된다. 넷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닌 숭고한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정치성과 결합하여 형상 해야 하는 바, 주체의 인간학에서는 주인공의 인간성을 타고난 천성으로 그릴 것이 아니라 주체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성품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에서는 특히 1990년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새 시대 인간의 새로운 정신 도덕적 풍모를 옹기 그려야 하며, 특히 수령, 당, 대중 앞에 지닌 사회적 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헌신성을 잘 형상 해야 된다.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운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5. 문학예술 창작의 기본원칙

1. 종자론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의 작품 창작에 있어 전 과정에 걸쳐 전일적

46)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165~176 참조.

으로 작용하는 근본교리인 종자론은 1970년대 들어서 북한 문예계에 도입된 문예창작 이론체계로서 1973년에 김정일이 발표한 저술, 「영화예술론」에서 정식화되었으며⁴⁷⁾ 1992년 발간된 「주체문학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⁴⁸⁾

「영화예술론」과 「주체문학론」을 통해 본 종자의 의미는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뜻한다. 종자란 현실과 생활에서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생활의 씨앗이며, 작품에 반영된 생활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체현 하고 있는 사상적 알맹이이기 때문에 작품의 핵으로 된다. 둘째, 종자는 작품의 사상, 주제 및 소재와 구별된다. 작품의 사상은 종자로부터 나오며 종자에 의해 규정되고, 주제 및 소재도 종자에 의해 규제된다. 사상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작품의 사상은 곧 작가가 종자의 구현 과정을 통하여 밝히려는 자신의 주장, 생활에 대한 평가, 인물의 운명에 대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종자는 생활에 체현 되어 있는 사상적인 것을 뜻하며,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대상 속에 생동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제는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로서 종자가 체현 되어 있는 생활 속에서 제기된 것이며, 종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는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주제가 종자에 의해 제약된다.⁴⁹⁾ 또한 소재가 종자에 의해 규제

47) 김정일, “영화예술론,” pp. 44~55.

48) 문예작품 창작에서 종자의 의의와 중요성은 1960년대 후반에 발표된 김정일의 여러 담화에서도 강조되어 있다. 김정일, “대작창작에서 제기 되는 몇가지 문제,” 김정일, 「김정일선집 1권」, pp. 340~374; 김정일,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정일선집 1권」, pp. 479~494 참조.

49) 한 예로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 주제는 ‘나라 잃은 민족의 운명문

되는 것은 소재는 작품 형상의 바탕인 생활자료, 사실자료이며 종자는 형상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기 때문이다. 주제 및 소재와 종자는 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종자는 사상과 주제 및 소재를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다. 또한 종자를 중심으로 한 사상, 주제, 소재의 유기적 연결 및 통일은 곧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의미한다.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본 요인이며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이고,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⁵⁰⁾

문학작품 창작에서 종자 선택은 ‘작품 창작의 출발점이며 작품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이며, 올바른 종자 선택이란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종자를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종자의 실체는 당과 수령의 의도 내지 요구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종자론에 의거한 북한의 문예 작품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도, 그리고 당의 문예정책 구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 문헌을 통해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오늘 우리 문학에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 당정책이 곧 작품의 종자로, 내용으로 되고 있으며 장군님의 의도와 당의 요구가 곧 작품의 문제성으로 되고 령도자가 키우고 내세워준 인민이 바로 작품의 주인공으로, 전형으로 되고 있다.⁵¹⁾

제, 압제자에게 수난당하는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이며 종자는 ‘자위단에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것’이다. 김정일,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2권』, pp. 18~25 참조.

50) 『철학사전』, p. 650.

51) 최길상,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가치,” p. 8.

2.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

김정일에 따르면,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문예작품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바,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은 문학예술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수적인 요구⁵²⁾이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켜야만 문학예술의 인식교양적 역할을 높일 수 있다.

사상성은 예술 작품의 가치 규정에 있어 유일하고 정당한 기준이며 문학예술 작품의 본질적 내용을 표현하는 사상적 경향성을 뜻한다.⁵³⁾ 예술성은 예술에 고유한 생활 반영의 특성 또는 예술작품의 사회적 의의를 규정하는 질의 높이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문학예술의 형상성과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⁵⁴⁾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에서 핵은 사상성의 최고표현인 정치성이다. 문학예술은 정치에 복무하는 것이므로 문예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데서는 정치성을 뚜렷이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사상성의 구현이라는 것과 종자 선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사상성이 목적이라면 예술성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말해 주고 있다.⁵⁵⁾ 문학예술에서 예술성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성을 예술적으로 감명 깊게 형상함으로써 문학예술로 하여금 사상교양적 기능을 강화하고 인민 대중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며 혁명위업에 보다 훌륭히 이바지하게 하려는데 있다는 것이다.⁵⁶⁾

52) 김정일, 『주체문학론』, p. 36.

53) 『정치사전』, p. 406.

54) 위의 책.

55) 김정일, “혁명적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1권』, pp. 122~137.

56)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33.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는 문예작품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과 형식의 통일,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 정치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통일, 철학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의 통일, 사상과 정서의 통일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작품창작은 곧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형식에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을 담는 주체사실주의 창작을 뜻한다.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기 위해 김일성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해야 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한 예술,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조해야 한다. 순수예술을 주장하는 것은 예술지상주의, 수정주의를 범하는 것이며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을 뜻한다.

3. 속도전식 창작

‘속도전’이란 1974년 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공식화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원칙이다. 속도전은 “집단의 전 성원들이 혁명적 열정을 높이고 일을 짜고들어 자기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전격전·섬멸전으로 전개, 속도를 높이는 가장 우월한 혁명적 전투원칙”⁵⁷⁾을 말한다.

속도전 개념이 북한 문예부문에 도입된 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창작사업의 특성으로부터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김정일에 의해서다. 그에 의하면 속도전은 모든 작품창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인 요구이다.⁵⁸⁾

57) 『로동신문』, 1974. 2. 18.

문예창작에서 속도전이란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자각과 창작적 열의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당 사상사업의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관철해 나가는 혁명적인 창작원칙이며 창작전투의 기본형식”⁵⁹⁾을 말한다. 속도전이란 단지 일을 빨리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에 맞추어 단기간 내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해 내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속도전 원칙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북한 문예창작에서는 ‘집체창작’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창작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단기간 내에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조하려면 작가, 예술인들이 집체적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바, 문예작품 창작에서 ‘집체성의 원칙’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속도전은 창작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창작전투이다. 따라서 일단 전투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된 전투목표와 계획을 함부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제정된 일과를 어길 수 없다.⁶⁰⁾

4. 당의 영도

북한 문예창작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는 당의 영도이다. 문예창작

58) 김정일, “영화예술론” pp. 365~376.

59) 위의 글, p. 366.

60) 위의 글, pp. 372~373; 1996년의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속도전과 함께 실력전을 벌릴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실력전이란 “말그대로 실력을 겨루는 것이며, 실력전을 벌린다는 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재능과 정열을 다 발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예술적 생명력이 있는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가진 명작을 창작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정일,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김정일선집 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176~180.

에 대한 당의 영도란 작가, 예술인들이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⁶¹⁾ 김정일은 「주체문학론」에서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 창작과 건설에 대한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혁명적 문예창작에 있어서 당의 영도를 생명선으로 견지하며, 당이 제시하는 문예창작과 건설의 방향 및 방도를 따름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작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영도, 당적 통제는 당의 유일적 지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당의 유일적 지도란 곧 수령의 영도를 뜻한다. 문예창작을 비롯한 문예 전반에 대한 당의 방침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의 유일적 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영도라는 것이다. 문예부문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는 문학예술의 혁명적 원칙성과 사상적 순결성을 보장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문예창작 과정은 혁명화, 노동계급화 과정으로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이며 결정적 담보가 당과 수령의 영도라고 한다. 북한 문예부문에 대한 당의 영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작가를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가로 준비시키고 그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주체문학론」에서는 작가를 일컬어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 문예노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라고 하며,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지닌 작가들이 본분을 다할 때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 문예전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이 이른바 주체형의 혁명적 문예전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제는 ‘당성’ 단련이다.

61) 김일성,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554.

당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것은 당과 수령이 주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작가, 예술인들의 당성 단련을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당 생활에 대한 당조직의 지도 강화와,⁶²⁾ 작가, 예술가들의 조직 생활 적극 참가를 통한 사상 투쟁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에 따르면, 당의 지도 밑에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세워진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는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이며 또한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집체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이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란 “당의 유일적 지도 밑에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에서 혁명적 균중노선을 구현하여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는 지도체계”를 뜻하며, 주체적인 창조체계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전과정을 우리 식으로 조직화, 규범화한 창조체계”를 뜻한다.⁶³⁾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영도는 문예창작에서 당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가는 작품의 소재와 주제를 선택할 때 철저히 당의 정책에 의거하여 사상 이론적 문제의 내용과 본질을 파악해 편향을 극복하고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야 한다.

62) 문화예술부문 당조직들의 사업에서 기본은 작가, 예술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 내도록 하는 데에 있다. 김정일, “주체적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정일선집 7권』, pp. 53~54.

63)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p. 101.

6. 결 론

문학예술이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한 이래 북한 문학예술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북한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문예 창작에 있어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고수하고 있으며, 기존의 문예관과 문예이론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이론상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문예작품 창작에 있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령형상창조, 당의 위대성 형상,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 등 이른바 문학의 3대 기본과제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북한 문학예술 작품들에서는 다소 변화의 징후들을 엿볼 수 있다. 변화 양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전반적으로 정치성·사상성이 약화되고 대중성 및 서정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북한의 보통사람들의 생활과 현실을 주제 및 소재로 한 소설작품들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둘째, 작품의 소재 및 주제가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신·구세대간 의식격차 문제, 도시·농촌간 생활격차 문제, 육체노동에 대한 직업적 차별의식 문제, 새 세대의 연애와 결혼 문제, 여성의 자아정체성 문제, 이혼문제,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 모성애, 고아를 키우는 처녀들의 미담 등 체제·수령 홍보 외에도 보통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사회적 미담들을 다룬 작품이 많아졌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상성·혁명성을 핵으로 하며 주체사상이라는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상교양 및 대중선동의 유력한 수단이다. 또한 북한의 문학예술은 최고지도자의 '지도'와 당 문예정책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문학예술이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되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한다면 북한 문학예술의 이질성만을 부각시키며 비판적 시각을 고수하려 하기보다는 북한 문학예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상호 접촉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문학예술을 정치사상 및 이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의 문학예술을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분석, 평가하기보다는 남북한 문학예술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북한의 문학예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 필자소개(집필자순)

● 김성철(金聖哲)

미국 캘리포니아대(얼바인)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북한 지식인정책의 변화』
『북한 이해의 길잡이』공저

● 최진욱(崔鎭旭)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신시내티대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북한의 인사행정』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 전현준(全賢俊)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 박형중(朴洞重)

독일 마부룩 대학 정치학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적 현상의 연구」

「'90년대 북한의 위기와 변화」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 조민(曹敏)

고려대학교 노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민족주의 연구」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 김창근(金彰瑾)

단국대학교 정치학박사
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 이해의 길잡이」(공저)
“북한의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변화수용 방식 연구”
“북한 당·정·군 권위관계의 변화”

- 박영호(朴英鎬)

미국 신시내티대 정치학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미국 허드슨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공저)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 김수암(金壽岩)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인권백서」(공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국제사회의 인권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허문영(許文寧)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정책방향」

「김정일시대의 북한」(공저)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 오승렬(吳承烈)

한국외국어대학 졸업
홍콩중문대학 경제학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경제 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대형 남북경협 사업여건과 추진방향」

- 임강택(林崗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올바니) 경제학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경제정책」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경제재건」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 이종선(李鍾璇)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동 대학원 사회학박사
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 통일에 대비한 국가상징 선양방안」(공저)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와 경제」(공역)

- 이우영(李宇榮)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동 대학원 사회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 서재진(徐載鎭)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주민의 가치의식 변화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식량난에서 IT산업으로: 변화하는 북한

- 조한범(趙漢凡)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연구』
『남북한 학술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 이교덕(李敎憲)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전사해제」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방안」

- 손기웅(孫基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방안」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 임순희(林順姬)

숙명여대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북한주민의 정신문화체계연구: 종교관을 중심으로」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